2024.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V)

보 건 복 지 위 원 회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보건복지부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9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

Ⅱ. 사업별 검토 ····· 12

【일반회계】 ····· 12

<세 입> ····· 12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 예산 과소계상 및 수납 노력 저조 등 · 12
2. 과태료·과징금 및 가산금: 수납실적 저조 ····· 18
3. 기타민간이자수입: 징수결정 실시 필요 ····· 21

<세 출> ····· 24

4. 의료급여: 과도한 불용 발생과 그에 따른 누적 적립금 운용의 적절성 검토 필요 ····· 24
5. 자활사업: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 근거 구체화 필요 ····· 33

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모집률 제고 필요 등 ····· 39
7.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집행현황을 고려한 추계 필요 ····· 44
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변경 필요 47
9.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펀드 운용계획 조정 검토 필요 ····· 51
10.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교부 등 ····· 53
11.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 59
1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범사업 결과 분석 철저 필요 ····· 63
13.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종료):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 66
14.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종료): 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용 부적정 ····· 69
15.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내역 사업 추진 부적정 등 ····· 72
16.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예산 집행의 계획성 필요 ····· 76
17.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 제고 및 미수납금 징수방식 개선 등 ····· 79
18.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연례적 사업의 이월 및 재이월 방지 필요 ····· 84
1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결산상 잉여금 규모 축소 필요 ····· 86
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별도 사업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3

<세 출> ····· 93

21.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신규):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9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96

<총 괄> ····· 96

22.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과소계상 및 초과승인 사업의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96

<세 출> ····· 101

23.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 집행의 계획성 미흡으로 인한 예산변경 과다 등 ···· 101

【국민연금기금】 ····· 107

<지 출> ····· 107

24.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107

【국민건강증진기금】 ····· 112

<지 출> ····· 112

25.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미흡 ····· 112

2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예산의 통합 사용 부적정 ····· 115

27.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필요 ····· 119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2

Ⅰ. 개 관 ····· 122

1. 결산 개요 ····· 12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26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7

Ⅱ. 사업별 검토 ····· 128

【일반회계】 ····· 128

<세 입> ····· 128

1.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 수납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필요 ····· 128

【일반회계】 ····· 132

<세 출> ····· 132

2.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 외 운용의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대상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32
3. 교통시설 확충 - 사업의 집행부진 방지 필요 ····· 137
4.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 교부 필요 ····· 139
5.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철저한 예산 집행관리 필요 ····· 141
6.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계획성 있는 전용과 조정 필요 ····· 144
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방지 조치 마련 필요 ····· 147
8.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적근거가 미흡한 사업의 추진 문제 ····· 150

❖ 질병관리청 ····· 152

Ⅰ. 개 관 ····· 152

1. 결산 개요 ····· 15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56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7

Ⅱ. 사업별 검토 ····· 158

【일반회계】 ····· 158

<세 입> ····· 158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과소계상 및 수납 노력 저조 158

<세 출> ····· 163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종료): 백신 활용도 제고 필요 및 일부 사업의 국회 감액 사업 증액 집행 부적정 ····· 163

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실제 집행가능성과 소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등 ····· 170

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추진단계를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 ·· 175

5.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종료): 사업 집행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용 과다 등 ····· 178

6.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사업단 운영비와의 중복 지원 부적정 ····· 183

7.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필요 186

8.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계획성있는 전용 및 세목조정 필요 ····· 191

9.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시험연구비 비목의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전환 필요 등 ····· 194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198

<총 괄> ·····198

10.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 198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본계정)】 ·····203

<세 출> ····· 203

11.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20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 환경부 ····· 209

Ⅰ. 개 관 ····· 209

1. 결산 개요 ····· 20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15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6

Ⅱ. 사업별 검토 ····· 217

【총 괄】 ····· 217

1.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미집행 금액 과다 및 준공사업 정산 필요 등 ····· 217

【일반회계】 ····· 224

<세 입> ····· 224

2. 기타경상이전수입: 물관리 일원화 이후 하천사업 보조금 정산액 등 세입 계상 필요 ····· 224

<세 출> ····· 226

3.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신규): 연내 착공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226
4.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 댐 시설안전시스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쇄적 용역 준공 지연 방지 필요 ····· 230
5.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지자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한 환경부 차원의 적극적 조정 노력 필요 ····· 234

【환경개선특별회계】 ····· 237

<세 입> ····· 237

6.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237

<세 출> ····· 243

7.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먹는 물 불안 해소 위한 환경부 대책 마련 필요 ····· 243

8.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필요 ··· 246

9. 녹색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당초 예산 편성과 다른 외부검토비용 집행 부적정 ····· 252

10.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융자 사업: 이차보전 실적 저조·사업 목적 달성 미흡 및 관리기관비용 간접 충당 부적정 ····· 257

11. 조기폐차 사업: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실적 제고 필요 ····· 262

12.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부적정 ····· 265

13.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신규): 법 개정을 전제로 시범사업 예산 편성 이후 사업내용 변경 부적정 ····· 26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72

<세 출> ····· 272

1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 및 정산관리 강화 필요 ····· 272

15. 수소차 보급사업: 연례적 과다불용 부적정 및 예산편성시 적정물량 반영 필요 ····· 27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81

<세 출> ····· 281

16.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신규): 연내 착공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81

❖ 기상청 ····· 285

Ⅰ. 개 관 ····· 285

1. 결산 개요 ····· 28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89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89

Ⅱ. 사업별 검토 ····· 290

【총 괄】 ····· 290

1.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의 연례적 조정 부적절 ····· 290

【일반회계】 ····· 295

<세 출> ····· 295

2.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사업: 사업자 재선정으로 인한 집행부진 295
3.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본예산 미편성 이후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 부적절 ····· 298
4.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사업: 전용 등을 통한 공사비 조달 부적정 ····· 301
5.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운영 사업: 대국민 기상만족도 향상 위한 노력 필요 ····· 304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연례적 인건비 미집행 잔액 이월 부적정 ····· 307
7.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연례적 인건비 미집행액 관리 필요 · 31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314

<세 출> ····· 314

8.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연례적인 예산 미집행 부적절 ····· 314

❖ 고용노동부 ·····317

Ⅰ. 개 관 ····· 317

1. 결산 개요 ····· 31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323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25

Ⅱ. 사업별 검토 ····· 326

【일반회계】 ·····326

<세 출> ····· 326

1. 사업성과평가 및 워크넷 모니터링 등 : 계획적인 사업 추진 필요 ····· 326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 실적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329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엄밀한 고용유지율 추계 노력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332
4. 청년일경험지원: 비수도권지역 청년 참여기회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337
5.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유형 운영 필요 ····· 340
6.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ODA):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 343
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 지원금의 엄밀한 수요 추계 필요 ····· 346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49

<세 출> ····· 349

8.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정·현원 차이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349

【고용보험기금】 ····· 352

<지 출> ····· 352

9. 고용보험기금 총괄: 실업급여계정의 연례적인 법정 적립배율 미준수 문제 개선 필요 ····· 352

1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 355

1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부정수급액 징수 기준 마련 필요 ····· 358

【근로복지진흥기금】 ····· 361

<지 출> ····· 361

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목표인원의 엄밀한 추계 노력 필요 361

【임금채권보장기금】 ····· 364

<지 출> ····· 364

13.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회수 실적 제고 필요 ····· 36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367

<지 출> ····· 367

14.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 처리 지연 개선 필요 ····· 367

15. 취약계층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37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 국토교통부 ····· 375

Ⅰ. 개 관 ····· 375

1. 결산 개요 ····· 37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380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82

Ⅱ. 사업별 검토 ····· 384

【총 괄】 ····· 384

1. 세입: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수납실적 제고 노력 필요 ····· 384
2.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 과다: 건설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 390
3. 주택도시기금 재무건전성: 여유자금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대책 마련 필요 ····· 397
4.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대규모 변경 최소화 필요 ····· 405
5. 배상금(310-02목): 관련법령 준수 및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한 소송발생 최소화 필요 ····· 412
6. 신규 SOC(철도, 도로) 건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415

【일반회계】 ····· 421

<세 출> ····· 421

7.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운영 사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재신청요건 명확화 및 홍보강화 필요 ····· 421
8.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업: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426
9.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당초예산 대비 전용 과다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430
10.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 적정 인건비 반영을 통한 인건비 부족 문제의 재발방지 필요 ····· 434
11. 주택공급 통계 오류: 재발방지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필요 ····· 437
1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인력운용 구조 개선 필요 ····· 440
13.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조성 사업: 투자실적 제고 노력 필요445
14.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등 ····· 448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451

<세 출> ····· 451

15. 도로 건설 사업: 사업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 451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455

<세 출> ····· 455

16. 철도 건설 사업: 세수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455
17.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직통열차 등 요금 현실화를 통한 국비 보조예산 최소화 필요 ····· 460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465

<세 출> ····· 465

18. 신공항 건설 사업: 추가적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465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470

<세 출> ····· 470

1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47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475

<세 출> ····· 475

20.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부담금의 법정 활용비율 폐지 또는 개정 필요 475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 479

<지 출> ····· 479

21.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479

22. 이차보전 지원 사업: 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방식으로 적정규모 검토 필요 ····· 484

23.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과도한 수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감) 부적정 ·· 489

24. 공공임대(융자) 사업: 당초 계획에 없던 공공리츠 사업 추진 부적정 ····· 49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495

Ⅰ. 개 관 ····· 495

1. 결산 개요 ····· 49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499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00

Ⅱ. 사업별 검토 ····· 501

【총 괄】 ····· 501

1. 국비 건립시설의 지자체 무상양여: 지자체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의 검토 필요 ····· 5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507

<세 출> ····· 507

2. 기본경비 사업: 경상적 경비 이월규정의 제한적 적용 필요 ····· 507
3.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사업: 정부청사 체육관 운영주체의 조속한 확정 필요 ··· 510
4. 세종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신규): 공동캠퍼스 운영방안의 조속한 확정 필요 ····· 514
5.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신규): 신속한 사업추진 및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가능성의 지속 점검 필요 ····· 516

❖ 새만금개발청 ····· 518

Ⅰ. 개 관 ····· 518

1. 결산 개요 ····· 51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522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23

Ⅱ. 사업별 검토 ····· 524

【일반회계】 ····· 524

<세 출> ····· 524

1.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부적절한 이월 주의 필요 ····· 524
2.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신규):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 528
3.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 ····· 530

여 성 가 족 위 원 회

❖ 여성가족부 ····· 535

Ⅰ. 개 관 ····· 535

1. 결산 개요 ····· 53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540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41

【일반회계】 ····· 542

<세 입> ····· 542

1. 기타경상이전수입 : 보조사업 정산관리 강화 필요 ····· 542

<세 출> ····· 545

2. 돌봄수당 사업: 시간제 돌봄서비스 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집행실적 제고 필요 ····· 545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 ····· 548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과다한 불용 방지 필요 ····· 551
5.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금의 국고환수 조치 필요 등 ····· 5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 561

<세 출> ·····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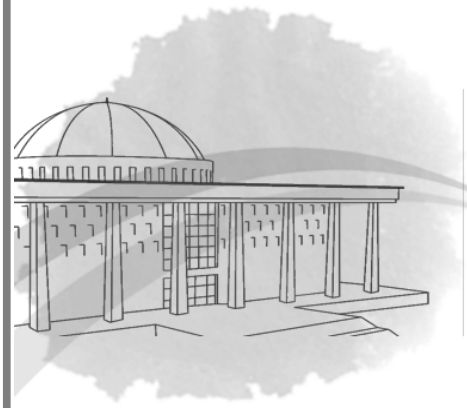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6. 가족센터 건립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교부 필요 ····· 561

【양성평등기금】 ····· 564

<지 출> ····· 564

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 필요 ····· 56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7조 8,143억 5,300만원(9.2%)이 많은 92조 9,180억 4,70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39억 800만원(1.2%)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76,102	576,102	1,090,993	514,891	573,403	573,403	1,180,496	607,093	89,503
기 금	76,828,925	76,828,925	90,713,146	13,884,221	84,530,291	84,530,291	91,737,551	7,207,260	1,024,405
총수입	77,405,027	77,405,027	91,804,139	14,399,112	85,103,694	85,103,694	92,918,047	7,814,353	1,113,908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조 7,799억 7,900만원(1.6%)이 많은 110조 9,629억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690억 5,900만원(5.3%)이 증가함.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2,272,875	66,206,183	66,785,526	579,343	68,144,706	68,144,706	67,117,671	△1,027,035	332,145
기 금	35,203,801	38,765,227	38,608,352	△156,875	41,038,252	41,038,252	43,845,265	2,807,013	5,236,913
총지출	97,476,676	104,971,409	105,393,878	422,469	109,182,958	109,182,958	110,962,937	1,779,979	5,569,059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199억 8,400만원으로, 1조 8,918억 8,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3,443억 500만원이 수납(수납률 71.1%)되고 52억 7,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5,423억 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13,152	513,152	-	513,152	1,642,994	1,103,344	4,040	535,6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96	796	-	796	4,336	3,292	-	1,044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796	796	-	796	4,336	3,292	-	1,04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2,116	3	1,235	878
- 투자계정	-	-	-	-	2,116	3	1,235	8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046	17,046	-	17,046	40,398	37,628	-	2,770
- 지역지원계정	17,046	17,046	-	17,046	40,382	37,612	-	2,770
- 지역자율계정	-	-	-	-	16	16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61,730	61,730	-	61,730	66,889	66,818	-	72
- 손익계정	55,950	55,950	-	55,950	60,018	59,946	-	72
- 자본계정	5,780	5,780	-	5,780	6,872	6,872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정신건강센터)	46,734	46,734	-	46,734	48,030	47,182	-	848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 손익계정	45,413	45,413	-	45,413	46,700	45,853	-	848
- 자본계정	1,321	1,321	-	1,321	1,329	1,329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8,150	18,150	-	18,150	20,775	20,558	-	217
- 손익계정	17,013	17,013	-	17,013	19,606	19,389	-	217
- 자본계정	1,137	1,137	-	1,137	1,169	1,169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23,609	23,609	-	23,609	25,955	25,410	-	545
- 손익계정	22,066	22,066	-	22,066	24,361	23,816	-	545
- 자본계정	1,543	1,543	-	1,543	1,594	1,594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22,028	22,028	-	22,028	22,782	22,567	-	215
- 손익계정	20,565	20,565	-	20,565	21,024	20,810	-	215
- 자본계정	1,463	1,463	-	1,463	1,757	1,757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16,739	16,739	-	16,739	17,612	17,502	-	110
- 손익계정	15,206	15,206	-	15,206	15,768	15,658	-	110
- 자본계정	1,533	1,533	-	1,533	1,844	1,844	-	-
합 계	719,984	719,984	-	719,984	1,891,887	1,344,305	5,275	542,30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8조 7,280억 1,200만원으로, 이 중 67조 5,007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263억 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2,009억 2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6,737,992	66,737,992	25,957	-	167,554	66,931,503	65,743,891	23,422	1,164,1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00,789	1,600,789	-	-	-	1,600,789	1,580,815	353	19,621
- 지역지원계정	1,123,684	1,123,684	-	-	-	1,123,684	1,103,710	353	19,621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 지역자율계정	472,221	472,221	-	-	-	472,221	472,221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166	1,166	-	-	-	1,166	1,166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718	3,718	-	-	-	3,718	3,718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61,730	61,730	1,681	3,738	-	67,150	61,009	821	5,320
- 손익계정	55,950	55,950	689	3738	-	60,377	58,144	281	1,951
- 자본계정	5,780	5,780	992	-	-	6,773	2,864	540	3,36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정신건강센터)	46,734	46,734	330	430	-	47,493	43,299	414	3,780
- 손익계정	45,413	45,413	320	430	-	46,163	42,118	300	3,745
- 자본계정	1,321	1,321	10	-	-	1,331	1,182	114	3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8,150	18,150	-	22	-	18,172	16,614	-	1,558
- 손익계정	17,013	17,013	-	22	-	17,035	15,500	-	1,535
- 자본계정	1,137	1,137	-	-	-	1,137	1,114	-	2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23,609	23,609	49	120	-	23,778	22,329	39	1,410
- 손익계정	22,066	22,066	-	120	-	22,186	20,813	-	1,373
- 자본계정	1,543	1,543	49	-	-	1,592	1,516	39	3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22,028	22,028	-	69	-	22,097	20,086	363	1,648
- 손익계정	20,565	20,565	-	69		20,634	19,120	-	1,514
- 자본계정	1,463	1,463	-	-	-	1,463	966	363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16,739	16,739	211	80	-	17,029	12,693	962	3,375
- 손익계정	15,206	15,206	-	80	-	15,286	11,954	-	3,332
- 자본계정	1,533	1,533	211	-	-	1,744	739	962	43
합 계	68,527,771	68,527,771	28,228	4,459	167,554	68,728,012	67,500,736	26,374	1,200,90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58조 8,394억 6,300만원으로, 196조 3,425억 5,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5조 8,482억 2,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7%)되고 30억 8,4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4,912억 5,000만원은 미수납됨.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기금	153,527,010	153,527,010	190,660,334	190,638,590	517	21,226
국민건강증진기금	4,739,455	4,739,455	4,982,456	4,523,804	2,566	456,086
응급의료기금	572,998	572,998	699,764	685,827	-	13,938
합 계	158,839,463	158,839,463	196,342,554	195,848,221	3,084	491,25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58조 8,645억 5,200만원으로, 이 중 195조 8,482억 2,100만원이 지출(집행률 123.3%)되고 106억 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71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민연금기금	153,527,010	153,527,010	17,765	153,544,775	190,638,590	7,953	70,060
국민건강증진기금	4,739,455	4,739,455	4,700	4,744,155	4,523,804	2,254	105,792
응급의료기금	572,998	572,998	2,623	575,621	685,827	395	1,274
합 계	158,839,463	158,839,463	25,089	158,864,552	195,848,221	10,602	177,12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은 전년 대비 145조 7,285억 8,100만원이 증가한 1,041조 3,905억 400만원, 이는 유동자산이 60조 7,099억 5,500만원 증가하고 투자자산이 84조 2,725억 9,200만원 늘어난 데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472억 4,500만원 증가한 5조 9,337억 3,800만원으로 유동부채 5,813억 6,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45조 1,81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035조 4,567억 6,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9조 5,688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2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1조 8,416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692억 7,2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041,390,504	895,661,923	145,728,581	16.3
		유동자산	279,684,123	218,974,168	60,709,955	27.7
		투자자산	757,709,188	673,436,596	84,272,592	12.5
		일반유형자산	3,202,064	2,426,466	775,598	32.0
		무형자산	128,340	134,768	△6,428	△4.8
		기타비유동자산	666,791	689,924	△23,133	△3.4
	부 채		5,933,738	5,386,493	547,245	10.2
		유동부채	957,656	376,295	581,361	154.5
		장기차입부채	4,711,198	4,737,519	△26,321	△0.6
		장기충당부채	52,179	52,278	△99	△0.2
		기타비유동부채	212,706	220,402	△7,696	△3.5
	순자산		1,035,456,766	890,275,430	145,181,336	16.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9,568,843	69,273,604	295,239	0.4
	재정운영순원가		44,845,779	41,723,683	3,122,096	7.5
	재정운영결과		41,841,675	38,672,403	3,169,272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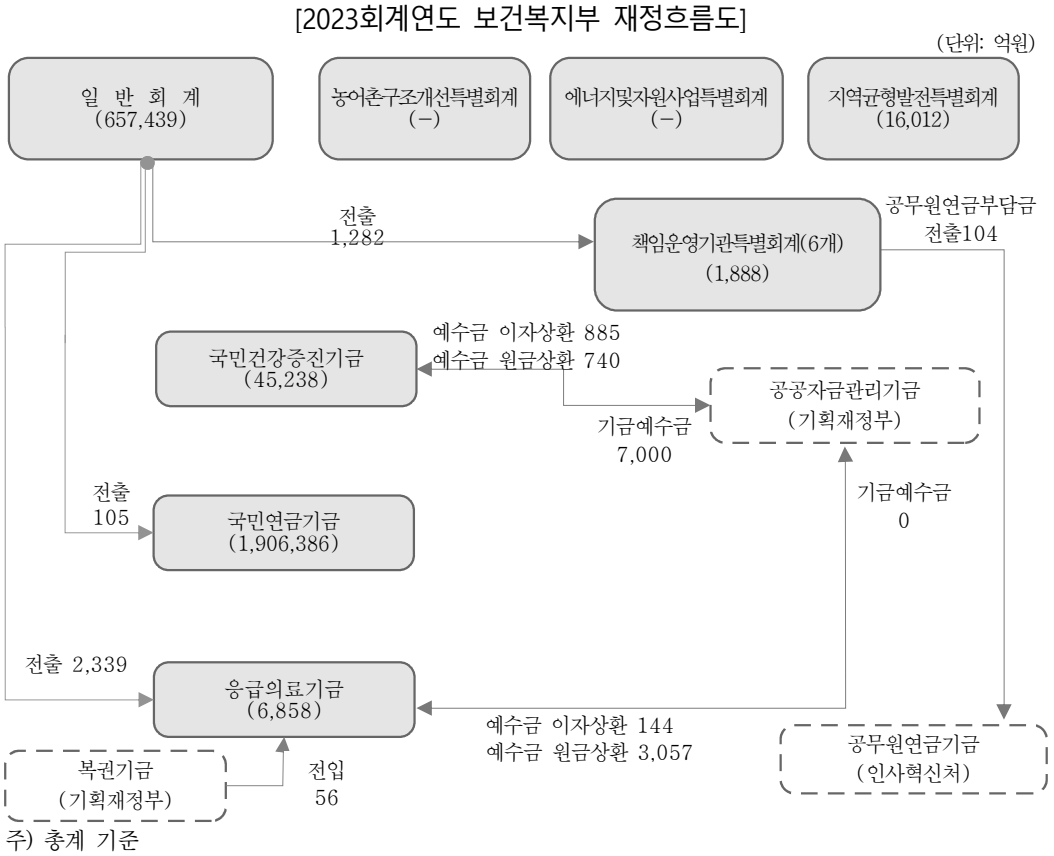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282억원, 국민연금기금으로 105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2,339억원이 각각 전출되었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04억원이 전출되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7,000억원이 예수되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740억원, 이자 885억원이 상환되었음. 또한 복권기금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56억원이 전입되었으며, 응급의료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3,057억원, 이자 144억원이 상환되었음.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정흐름도]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과 합리성 제고, 원활한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생활 보장,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발전가능 사회 구현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지원, 국민의 평생건강 지원, 의료보장 확대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집행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수입 측면에서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 과태료·과징금 등의 수납률이 저조하고, 미집행된 보조금이 반납되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비목은 징수결정하였으나 미집행된 보조금 관련 이자가 반납되어야 하는 기타재산이자수입 비목에서는 징수결정되지 않거나 두 비목을 혼합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목의 징수결정을 하지 않는 등 수입 예산의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지출 측면에서는 첫째, 의료급여 사업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7.7%인 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의료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이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봄.

둘째, 자활근로 사업의 경우 예산 확정 시 인상한 단가를 3월에 바로 추가로 인상조정하면서 전용(증)하였지만 실집행과정에서 전용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활기금의 운영·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집행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금의 집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의 계획 대비 모집률이 저조하므로 모집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의 신속한 반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넷째,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K-글로벌 백신펀드의 경우 당초 사업 목적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대상 선정에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중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예산의 집행상황과 사업 추진 계획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하여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에서는 기지원된 개산급의 정산을 신속하

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봄.

일곱째,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을 위해 예산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없던 홍보관를 신규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여덟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 사업과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 사업에서는 사업의 계획성이 부족하여 많은 전용 및 조정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이 요구됨.

아홉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중도해지에 따른 미수납금의 징수결정을 모두 실시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열째, R&D 출연 사업에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의 사업단을 추가로 구성하여 R&D를 관리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사업 간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단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임.

마지막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사업에서는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회계와 기금을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와 다른 집행 방식으로 보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 예산 과소계상 및 수납 노력 저조 등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액 4,745억 400만원 대비 3.26배인 1조 5,455억 3,6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이 중 1조 662억 4,700만원이 수납(수납률 69.0%)되었으며, 4,792억 8,800만원이 미수납됨.[2)]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치이자 수입 및 연구성과에서 창출된 기술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예산액 97억 9,200만원 대비 3.4배인 징수결정액은 323억 9,700만원으로 이 중 206억 2,300만원이 수납(수납률 63.7%)되고 117억 7,400만원이 미수납됨.[3)]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예산액
	예산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이전수입	474,504	474,504	474,504	1,545,536	1,066,247	479,288	-	903,336
기타재산이자수입	9,792	9,792	9,792	32,397	20,623	11,774	-	12,312

2)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3)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2배 가량의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액을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계상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납실적과 추이를 고려한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하게 계상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예산액 편성 시 지출할 수 있었던 사업들의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2021년의 1.6배에 비해 2023년에는 2.25배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납률 증가를 반영하여 2024년은 예산액을 높여 계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및 2023년의 수납액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3년간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474,516	474,516	474,516	1,120,275	760,852	160.3	67.9	359,424	-
2022	474,500	474,500	474,500	1,284,044	933,437	196.7	72.7	350,607	-
2023	474,504	474,504	474,504	1,545,536	1,066,247	224.7	69.0	479,288	-
2024	903,336	903,336	903,336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기타재산이자수입 또한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이 많을 뿐 아니라 2022년 및 2023년부터 2배 이상의 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보다 25.7% 정도 증가된 수준에 그침.

[연도별(2021-2023) 기타재산이전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9,792	9,792	9,792	28,129	22,872	233.6	81.3	5,257	-
2023	9,792	9,792	9,792	32,397	20,623	210.6	63.7	11,774	-
2024	12,312	12,312	12,312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도의 미수납액 규모가 2024년도 예산액 규모보다 크고 2023년도 보조사업의 실집행실적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과소계상은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수납액 규모와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둘째,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60~70%대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징수율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상기 표에서 두 비목의 최근 3년간 수납현황을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은 2022년 72.7%를 나타낸 후 2023년에는 더욱 낮아진 69.0%에 그치고 있으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 또한 2022년에 비해 2023년이 더 저조하였음.

두 비목이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반납조치가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납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편성 등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반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세부 내역을 보면, 2007년 지원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2020년 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119건에 달함.

[2020년 이전 사업에 대한 미정산 건수 및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구분	건수	미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119건	14,856
기타재산이자수입	57건	50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계리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여 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국고 예산의 낭비로 귀결되므로, 지자체 등에 대한 수납 독려와 계속적인 통보 등을 통하여 조속히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셋째,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현황을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징수결정하였으나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잔액의 보관에 따른 이자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비목에서 당연하게 발생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수입내역을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는「국고금 관리법」제10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4)]

2020년 이전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해 징수결정을 실시한 사업 중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징수결정되었으나,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는 징수결정되지 않은 예]

(단위: 원)

건명	징수결정일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596-000) 2017년 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광주)	2023-12-21	101,538,430	101,538,430
(596-000) 2018년 아동수당 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전남)	2023-12-18	1,498,828,100	1,498,828,100
(596-000) 2019년 아동수당 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전남)	2023-12-18	192,223,560	192,223,560
(596-000)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반납(감사에 따른 환수)(서울)	2022-02-23	26,651,670	26,651,670
(596-000) 2020년 아동수당 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전남)	2023-12-18	277,450,730	277,450,730
(596-000) 2020년 아동수당 지급(지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2021-06-11	21,360,340	21,360,340
(596-000) 2020년 아동수당급여 집행잔액 반납	2021-06-11	536,013,540	536,013,540
(596-000) 2020년 장사시설설치 집행잔액 반납	2023-05-23	56,271,650	56,271,650
(596-000) 2020년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2021-06-03	164,516,000	164,516,000
(596-000) 2020년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산 반납	2023-06-12	249,641,990	249,641,99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사업 등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 잔액을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징수요청할 때 일부 누락이 있어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징수결정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국고금 관리법」제10조는 수입징수관은 수입의 징수 시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입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징수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고의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5)]

따라서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 결산 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정산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 결정 시 반드시 이자수입도 함께 징수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수입징수관 또한 징수 결정된 금액이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넷째,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비목의 성격상 차이가 있음에도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을 혼용하여 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납 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국고보조금 등의 이자수입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은 집행잔액으로서 두 비목은 성격상 차이가 있고,「국가재정법」제21조는 제3항에서 세입예산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음.[6)]

그런데 복지부의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세부 내역을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할 수익금이나 집행잔액의 수납이 기타재산이자수입에 수납되거나,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할 이자 수납이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비록 금액 자체가 전체 수납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비목에

5)「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 · 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6)「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 ·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 관 · 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적합한 세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세입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징수결정 등에 있어서 누락이 없는 세입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목에 맞게 세입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관과 항이 전혀 다른 세입 과목으로 두 비목을 혼용하여 수납하는 것은 동 법에 부합되지 않는 수납 방식으로, 향후 세입의 수납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7)]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을 혼용하여 수납한 예]

(단위: 원)

비목	건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기타재산이자수입	(546-000) 2020년 아동양육한시지원 집행잔액 반납	847,005,180	847,005,180
	(546-000) 2022년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집행잔액 반납	2,018,330	2,018,330
기타경상이전수입	(596-000) 2021년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이자 반납	15,140	0
	(596-000) 2021년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이자 반납(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530	1,530
	(596-000) 2021년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이자 반납(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920	920
	(596-000) 2021년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이자 반납(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21,590	0
	(596-000) 2021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이자 반납	107,190	107,190
	(596-000) 2022년 국가시험원운영 이자 반납	6,662,620	6,662,620
	(596-000)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이자 반납	300	300
	(596-000) 2016년 장사시설설치 이자 반납	684,150	684,150
	(596-000) 2022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부산)	56,900	56,90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7)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관(11)-항(54)-목(546)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관(12)-항(59)-목(596)으로서 「국가재정법」상 관과 항이 전혀 다른 항목임.

2. 과태료·과징금 및 가산금: 수납실적 저조

가. 개 요

‘과태료’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예산액 2억 2,100만원 대비 5.0배인 11억 2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이중 4,700만원만이 수납(수납률 4.3%)되고 10억 5,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8)]

‘과징금’ 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요양급여 적용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하는 비목으로, 예산액 261억 2,900만원 대비 2.1배인 542억 7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이중 151억 1,600만원이 수납(수납률 27.9%)되고 390억 9,100만원이 미수납됨.[9)]

‘가산금’ 의 경우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부과하는 비목으로, 당초 예산액은 없었으나, 6,6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그 중 500만원이 수납(수납률 7.6%)되고 6,100만원이 미수납됨.[10)]

[2023년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과태료	221	221	-	221	1,102	47	1,055	-	221
과징금	26,129	26,129	-	26,129	54,207	15,116	39,091	-	26,129
가산금	-	-	-	-	66	5	61	-	-

8) 일반회계 - 과태료(56-563)(운영지원과)

9) 일반회계 - 과징금(56-565)(운영지원과)

10) 일반회계 - 가산금(58-581)(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매우 저조하여 과도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 정책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비목의 성격상 부과 후 제대로 수납하지 않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국가 공권력 집행의 효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 등 비목들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우 낮아 과도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한데도 별도의 대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과태료의 경우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7%~4.4%에 불과함.

[과태료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221	221	221	1,111	19	8.6	1.7	1,092	-
2021	221	221	221	1.120	19	8.6	1.7	1,096	-
2022	221	221	221	1,078	47	21.2	4.4	1,030	-
2023	221	221	221	1,102	47	21.3	4.3	1,055	-
2024	221	221	221	1,056	-	-	-	-	-

자료: 보건복지부

과징금은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6~38.8%에 그쳐 매년 350억원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과징금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26,129	26,129	26,129	51,792	15,677	60.0	30.3	35,118	997
2021	26,129	26,129	26,129	46,809	2,798	10.7	6.0	43,977	34
2022	26,129	26,129	26,129	58,197	22,595	86.5	38.8	35,293	308
2023	26,129	26,129	26,129	54,207	15,116	57.9	27.9	39,091	-
2024	26,129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가산금 또한 수납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3.2% 및 7.6%로 매우 저조함.

[가산금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	-	-	-	-	-	-	-	-
2021	-	-	-	-	-	-	-	-	-
2022	-	-	-	63	2	-	3.2	61	-
2023	-	-	-	66	5	-	7.6	61	-
2024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미수납액의 발생에 대하여 과태료와 가산금의 경우 폐업 및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고, 과징금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계류 및 압류 중, 회생 파산절차진행 중 등의 사유로 수납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함.

동 비목들의 경우 주소불명 또는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수납이 급격하게 높아지기는 어려운 항목이기는 하나, 모두 보건복지 정책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비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과 후 수납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보건복지 정책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보건복지부는 현장 실태 점검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연도별 수납률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징수방안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동 비목들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과 함께 적극적인 수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3. 기타민간이자수입: 징수결정 실시 필요

가. 개 요

‘기타민간이자수입’은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없음.[11]

[2023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기타민간이자수입	-	-	-	-	-	-	-	-	-

민간전대차관은 1970년 말부터 1990년 초까지 의료취약지역 등의 의료기관(168개소)에 국가 차관을 지원한 사업으로, 지원된 의료기관의 부도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2005.12.7. 시행, 2008.12월 한시법)을 제정하여 2020년까지 상환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연 2회씩 2020년 12월까지 상환 완료를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음.

동 특별법 적용 및 상환기한연장계약에 따른 차관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그 세입 예산과목은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①당초 융자원금 분납에 따른 세입(20-77-774), ②특별법 적용 당시 연체된 이자의 분납에 따른 세입(11-53-534), ③ 융자원금 및 이자의 납입 시 융자원금 및 이자 잔액에 대한 이자(연 2%) 및 상환기한 도과시의 연체이자(11-54-544)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기타민간이자수입 비목은 2023년도 결산상 존재하지 않는 비목으로, 민간전대차관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비목의 상환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이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목에 대한 징수결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임.

11) 일반회계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운영지원과)

동 비목인 기타민간이자수입은 민간전대차관의 원금과 이자수입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원금과 이자수입의 상환기한 도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임.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비목에 대해서는 각각 예산을 계상하여, 두 비목 모두 2023년도 예산액은 없이 각각 62억 7,500만원, 20억 3,0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모두 수납되지 않고 미수납 및 불납결손되었음.

[2023년도 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및 민간전대차관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차관원금 회수	-	-	-	-	6,275	-	3,291	2,984	-
차관이자 수입	-	-	-	-	2,030	-	974	1,056	-

자료: 보건복지부

상환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기타민간이자수입의 비목이 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비목과 함께 존재하여야 하는데도 결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동 융자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점에서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회수의 잔액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실시하면서도 동 비목에 대한 징수결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동 비목들이 실제로 수납되지 않고 행정적으로만 존재하는 비목들로 존재해왔고 불납결손을 통해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체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에 누락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차관의 회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차관병원의 부도나 거소 불명 등으로 융자원금과 이자수입의 회수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불납결손 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일응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국고금관리법」제5조 및 제10조[12]에서는 수입을 징수하거나 수납하도록 되

12)「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어 있고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 비목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과 배치되는 수납 방식으로 보임.

종합하면, 수입의 징수결정은 당해 수입을 수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이자 의견표명이라는 점에서 징수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징수결정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봄.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 · 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세 출>

4. 의료급여: 과도한 불용 발생과 그에 따른 누적 적립금 운용의 적절성 검토 필요

가. 개요

‘의료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령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9조 983억 6,800만원에서 이·전용 등으로 360억 4,700만원이 감액된 예산현액 9조 623억 2,100만원 중 8조 3,622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3%)되고 7,000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3년도 의료급여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의료급여	9,098,368	9,098,368	-	△36,047	9,062,321	8,362,283	-	700,038	8,937,713

나. 검토의견

첫째, 의료급여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 대비 7.7%인 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법적 급여로서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하는 성질의 비용이므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추계가 구체적이고 정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2023년도 의료급여 사업의 불용액 규모는 7,000억 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3) 일반회계- 의료급여(1132-302)(복지정책관)

액 대비 7.7% 수준으로, 이·전용 등 감액 360억 4,7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대비 집행되지 않는 금액은 8.1% 규모에 달함.

7,000억원이라는 규모의 불용액은 동 사업의 예산액 대비 비율로서는 높은 편은 아니나, 불용액의 규모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 편성되었다면 많은 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봄.

동 사업의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및 진료비 단가 상승 추세와 예산 부족 시 미지급금 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의료 수요에 비해 실제 의료이용이 감소하여 미지급금 지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다소 높은 수준의 불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결국 동 불용액의 발생은 의료이용 추계 예측에 오류가 있었고, 특히 미지급금의 방지를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된 3,384억원이 미집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미지급금 현황 및 결산내역을 보면, 미지급금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는 점, 최근 5년간 집행액의 증가추세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지급금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낮았다고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미지급금 현황 및 결산내역]

(단위: 국비 기준, 백만원)

연도	미지급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C)
		본예산	추경(A)					
2018	669,543	5,346,603	5,373,249	70	-	233,500	5,606,819	5,606,641
2019	189,851	6,391,530	6,437,402	151	120,000	320,972	6,878,525	6,878,452
2020	55,296	7,003,762	7,003,762	61	-	-	7,003,823	7,003,747
2021	11,493	7,680,461	7,680,461	-	△30,000	-	7,650,461	7,650,439
2022	-	8,123,234	8,123,234	16	△239,183	-	7,884,067	7,884,031
2023	-	9,098,368	9,098,368	-	△36,047	-	9,062,321	8,362,283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지급이 예정되지 않은 예비비적 성격의 미지급금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대규모의 불용이 나타난 것은 예산 추계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동 사업이 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나, 동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을 통해 조성되는 의료급여기금인 점에서, 국고가 집행되더라도 지방비의 매칭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집행되기 어렵고, 의료급여기금 자체의 실집행잔액 또한 매년 1,300억원 이상 발생한다는 점에서 미지급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022년 및 2023년도 의료급여 집행내역(2024.4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내역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잉여금)
2022	7,882,254	7,689,034	193,220
2023	8,360,015	8,222,287	137,728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 미지급금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둘째, 의료급여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용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잔액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누적적립금을 고려한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임.

의료급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예산을 교부하면 시·도에서 시·도/시·군·구의 매칭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이후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시·도가 단순히 국고지원액과 지자체 매칭액을 한꺼번에 건보공단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한 후 건보공단에 이를 예탁·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고 계속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고 있음.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보면, 교부된 예산현액 8조 3,600억 1,500만원 전액이 실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의료급여기금의 연도별 실집행잔액을 보면, 매년 1,3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고 있음.

[2022년 및 2023년도 의료급여 집행내역(2024.4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내역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잉여금)	시도의 매칭날짜
2022	7,882,254	7,689,034	193,220	매월
2023	8,360,015	8,222,287	137,728	매월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금의 누적 적립금 현황을 보면, 시·도 전체적으로 7,503억 2,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2,512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245억 2,800만원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6억 3,6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누적적립금 규모를 나타냄.

[2023년도 말 현재 의료급여기금 누적 결산잉여금(2024.4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적립액	2023년도 적립액	2023년도 말 현재 누적 결산 잉여금
합계	193,220	137,728	750,321
서울	30,715	15,193	124,528
부산	23,574	13,321	49,599
대구	9,429	5,977	17,170
인천	18,439	△48,332	71,105
광주	8,917	△4,125	13,464
대전	1,435	△2,990	15,214
울산	3,195	673	7,392
세종	598	△377	636
경기	33,353	101,338	251,288
강원	20,999	△25,791	10,115
충북	6,634	△23,944	9,838
충남	5,908	△18,129	14,063
전북	13,955	13,603	28,791
전남	5,951	5,956	21,862
경북	9,644	28,008	24,522
경남	△995	82,544	87,383
제주	1,469	△5,198	3,346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에도 시·도의 의료급여 집행 잔액이 1,932억 2,000만원이었고, 2023년에도 시·도의 적립금이 1,377억 2,80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었음을 감안하면, 의료급여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동 사업이 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하나「의료급여법」제25조제2항제6호의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

정을 근거로 기금 운용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금의 재원 자체가 보조금이고, 기금 운용의 취지가 급여비용 재원의 충당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누적 적립금을 과도하게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적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의료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적립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14)]

그러나 과거에는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기금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의 집행잔액 및 이·전용 감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의료급여기금의 누적 적립금을 과도하게 운용할 소요는 크지 않다고 생각됨.

[최근 5년간 미지급금 현황 및 결산내역]

(단위: 국비 기준, 백만원)

연도	미지급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2018	669,543	5,346,603	5,373,249	70	-	233,500	5,606,819	5,606,641
2019	189,851	6,391,530	6,437,402	151	120,000	320,972	6,878,525	6,878,452
2020	55,296	7,003,762	7,003,762	61	-	-	7,003,823	7,003,747
2021	11,493	7,680,461	7,680,461	-	△30,000	-	7,650,461	7,650,439
2022	-	8,123,234	8,123,234	16	△239,183	-	7,884,067	7,884,031
2023	-	9,098,368	9,098,368	-	△36,047	-	9,062,321	8,362,283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도별 잉여금의 발생가능성과 사업의 집행가능성 및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된 누적적립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

14)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셋째, 의료급여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지자체별 집행현황을 보면, 일부 지자체의 의료급여기금은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지자체의 기금에서는 재원 부족이 발생하였는데, 지자체 교부에 있어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집행가능성과 규모를 고려한 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시·도에서 운용하는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국회 및 중앙 정부의 통제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데,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의 배분에 있어 실제 집행가능성과 청구 여부를 고려하여 교부 규모를 수정함으로써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음.

2023년도 의료급여의 수입 및 집행세부내역을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음수(△)의 잔액이 발생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집행 잔액이 타 지자체의 잔액 규모보다 크게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음.

[2023년도 의료급여 수입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수입액	집행액										잔액
		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 출산비	장애인 보조 기기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지급분)	본인부담 보상·상한등	재가 의료 급여	위탁 수수료 등	소계	
합계	8,360,015	8,101,613	24,030	835	19,720	32,030	15,914	3,431	1,765	22,950	8,222,287	137,728
서울	889,065	860,597	2,699	55	2,419	3,819	1,874	490	3	1,915	873,872	15,193
부산	931,791	906,963	2,532	68	1,824	3,215	1,361	331	142	2,034	918,470	13,321
대구	584,199	570,211	1,651	41	1,662	2,195	856	233	21	1,352	578,222	5,977
인천	517,832	557,737	1,686	88	1,517	2,546	1,063	305	32	1,190	566,164	△48,332
광주	323,793	322,864	961	74	647	1,206	615	137	169	1,246	327,918	△4,125
대전	256,604	255,533	762	39	747	1,243	459	117	43	651	259,594	△2,990
울산	145,767	143,138	416	14	249	679	221	50	2	325	145,094	673
세종	23,932	23,992	62	2	46	71	48	8	0	81	24,309	△377
경기	1,586,869	1,463,758	4,490	157	3,567	6,251	3,074	474	461	3,299	1,485,531	101,338
강원	255,943	274,845	976	23	576	1,454	792	136	173	2,757	281,734	△25,791
충북	236,280	256,473	840	28	535	1,043	599	85	11	609	260,224	△23,944
충남	310,870	324,486	953	28	835	1,077	709	106	14	788	328,999	△18,129
전북	488,726	467,534	1,302	52	1,462	1,807	833	186	308	1,639	475,123	13,603
전남	433,770	422,044	1,131	44	901	1,009	837	176	82	1,590	427,814	5,956
경북	600,985	565,169	1,545	53	1,252	1,902	1,193	202	81	1,581	572,977	28,008
경남	682,726	592,033	1,700	47	1,260	2,119	1,113	309	22	1,579	600,182	82,544
제주	90,862	94,236	322	21	221	393	269	85	202	311	96,060	△5,198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집행의 발생 이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사전 예측에 비해 의료 급여 청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수입 대비 지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음의 잔액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을 통하여 집행함으로써 기금의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편성 대비 교부현황을 보면, △483억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인천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6,215억 2,000만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5,178억 3,200만원으로 감액 교부되었으며, 결국 483억 3,2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음.

가장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당초 예산액 1조 5,867억 4.300만원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조 5,868억 6,900만원이 교부되어 결국 1,013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6,827억 2,600만원이 교부되어 결국 825억 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이외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음수(△)의 잔액이 발생한 시도는 모두 당초 예산액 대비 교부액이 감소한 시도로서 예산 관리가 적절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2023년도 지자체별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당초 예산액(A)	예산현액(B)	교부액	차액(B-A)	잔액	누적 적립액
서울특별시	952,678	889,065	889,065	△63,613	15,193	124,528
부산광역시	993,627	931,791	931,791	△61,836	13,321	49,599
대구광역시	629,719	583,120	583,120	△46,599	5,977	17,170
인천광역시	621,520	517,832	517,832	△103,688	△48,332	71,105
광주광역시	357,330	323,793	323,793	△33,537	△4,125	13,464
대전광역시	278,300	256,604	256,604	△21,696	△2,990	15,214
울산광역시	165,707	145,767	145,767	△19,940	673	7,392
세종특별자치시	26,670	23,932	23,932	△2,738	△377	636
경기도	1,586,743	1,586,869	1,586,869	126	101,338	251,288
충청북도	304,521	255,943	255,943	△48,578	△25,791	9,838
충청남도	276,104	236,280	236,280	△39,824	△23,944	14,063
전라북도	337,380	310,870	310,870	△26,510	△18,129	28,791
전라남도	494,178	488,726	488,726	△5,452	13,603	21,862
경상북도	451,030	433,770	433,770	△17,260	5,956	24,522
경상남도	606,124	602,064	602,064	△4,060	28,008	87,383
제주특별자치도	682,656	682,726	682,726	70	82,544	3,346
강원특별자치도	100,245	90,862	90,862	△9,383	△5,198	10,115
미배정액	231,535	700,000	-	-	-	-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예산 교부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예산 교부에 있어 사업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봄.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 사업의 사례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인력 채용이 미흡하여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의 발전 방안 모색과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인력 채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원을 17인으로 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료급여를 지원받은 자들의 서비스 등 관리 및 타 지자체 등의 우수 사업 공유 등) 운영 및 사업평가,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및 홍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도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교부된 13억 5,800만원의 예산 중 9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 사업의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민간경상보조	1,358	1,358	1,358	-	1,358	978	-	380	72.0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전체 17명의 정원 대비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충원되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임.

[2023년 말 기준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단장 (2급)	팀장 (3급)	과장 (4급)	수탁지원직				비고
					소계	과장	대리	주임	
총계	17/12	1/1	2/2	2/2	12/7	4/3	4/2	4/2	결원5명(다1,나2,가2-육아휴직)
6팀(사례관리 지원팀)	8/6	-	1/1	1/1	6/4	2/2	3/2	1/0	결원2명: 나1명, 가1명(육아휴직)
7팀(재가의료 급여지원팀)	8/5	-	1/1	1/1	6/3	2/1	1/0	3/2	결원3명: 다1명, 나1명, 가1명(육아휴직)

자료: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지원단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지원단 인력의 부족은 결국 의료급여의 개선방안 도출과 원활한 사업 평가 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률 제고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례관리지원단 인력 채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자활사업: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 근거 구체화 필요

가. 개 요

‘자활사업’ 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6,935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과 이·전용 증액 106억 5,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7,042억 7,800만원 중 7,042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만원이 불용됨.[15)]

[2023년도 자활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자활사업	693,573	693,573	50	10,655	704,278	704,226	50	2	749,864
자활근로	609,393	609,393	-	10,662	620,055	620,055	-	-	659,462

내역사업인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위하여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의 지역자활센터에서 별도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근로빈곤층을 고용하고 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임.

[2023년도 자활근로 유형]

구 분		내 용	사업유형	자활급여 일당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집수리, 청소, 세탁, 방역·소독, 카페·식당, 식기세척 등	61,930원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시설·자활업무 행정도우미 등	54,200원 ~ 61,930원
	사회서비스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돌봄,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등	54,200원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등	31,800원

자료: 보건복지부

15) 일반회계 - 자활사업(1137-300)(복지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자활근로 사업은 예산 확정 시 인상한 단가를 연도중인 3월에 바로 조정하면서 전용(증)하였는데, 전용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자활사업의 참여자 추이를 보면, 2021년 60,476명에서 2023년 58,633명으로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진입형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참여자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44,647	41,050	41,617	48,903	55,436	60,476	58,902	58,633
시장진입형	7,598	7,374	6,762	7,419	8,291	9,398	13,401	13,626
인턴・도우미형	3,731	3,149	2,854	2,933	3,473	3,811	3,627	3,297
사회서비스형	24,724	23,252	25,029	31,079	35,783	39,265	34,853	34,792
근로유지형	8,595	7,276	6,972	7,472	7,889	8,013	7,021	6,918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시장진입형의 경우 60,4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의 경우 52,890원, 근로유지형은 31,02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확정되었음.

[2021-2023년 자활근로 사업 단가 인상 내역]

(단위 :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2.1월	2022.8월	2023.1월	2023.3월
시장진입형	56,950	58,660	60,300	60,420	61,690
사회서비스형	49,850	51,350	52,770	52,890	54,000
근로유지형	29,240	30,120	30,900	31,020	31,670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의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16] 2023년 3월 자활근로사업 단가를 예산 편성 단가보다 추가로 인상하였는데, 사업의 효과와 자활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단가의 인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확정 후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년 3월에 바로 단가를 인상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내역과 상이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연도 중 단가 인상으로 인해 예산 부족이 예상되자 2023년 9월 18일에는 전용을 통해 106억 6,200만원의 예산을 전용(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자체 실집행 단계에서 전체 교부액 6,200억 5,500만원 중 5,996억 4,500만원이 집행되고 204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을 전용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2023년도 동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A)	추경								
2023	609,393	609,393	620,055	620,055		620,055	599,645		20,410	96.7

자료: 보건복지부

전용은 당초 계획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예외적인 행위로서, 구체적이고 면밀한 집행계획에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자활참여 중도 종료자 증가 및 신청자의 감소로 인하여 전용 후 결국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예산 집행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사업의 추진 추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변경하는 등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자활근로사업 매출액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집행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목적과도 다른 기금의 집행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차보

16)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난 경감을 위해 긴급민생대책 과제의 일환으로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전, 신용보증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방 기금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에 규정된 자활기금의 적립과 위탁 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자활기금를 운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금의 적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실제 기금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17)]

그러나 동법 제18조의7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활지원사업이 아닌 용도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또한 법률에 그 대강의 집행기준을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집행 용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재원・운용주체 및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18)]

---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

이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사업도 있고, 직접적인 자활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집행되는 등 자활사업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경우 동 기금의 명칭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면서, 자활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장애인복지지원사업 또는 그밖에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으로 써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지원 사업이나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타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자활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존재함.[1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제2항제13호에서는 기금을 통하여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자활사업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운동의 지원까지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20]

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2. 노인복지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자활계정) ①(생 략)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동 기금의 운용 목적이 자활사업의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보임.

또한, 동 사업이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러한 보조금을 통해 설립·운영하는 사업단의 매출액을 재원의 대부분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의 적립·재원 및 용도에 대한 기준이 엄격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활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사업의 집행내용이 사업의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 운영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2. 자활사업 연구 · 개발 · 평가 등을 위한 비용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 ·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모집률 제고 필요 등

가. 개 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276억 4,600만원에서 700만원 전용(감)된 예산현액 2,276억 3,900만원 중 2,162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113억 5,800만원이 불용됨.[21)]

[2023년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27,646	-	△7	227,639	216,281	-	11,358	270,706

동 사업의 경우 기존의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5개 유형을 2022년부터 3개 유형별 통장으로 통합하여 신규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음.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기존 자산형 성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Ⅰ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생계·의료수급가구)가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희망키움통장Ⅱ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가 꾸준히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3년 동안 교육·사례관리 이수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참여자가 3년 이내에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 또는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1:1 매칭) 지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청년(생계수급가구, 만 15세~39세)이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청년저축계좌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청년(주거, 의료수급 및 차상위가구, 만 15세~39세)이 꾸준히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3년 동안 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신규 자산형 성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시 1:3 정부지원금 매칭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 1:1 정부지원금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대상 정부지원금 1:1~1:3 매칭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21) 일반회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1137-309)(복지정책관)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업 개요]

구 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50만원 자율 저축			
정부지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저축액에 1:3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인원 대비 실 가입인원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동 사업 중 신규자산형성지원사업의 편성 인원 대비 실제 가입 인원 현황을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차상위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그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복지부는 이러한 모집률 저조에 대하여 2022년 신규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청년내일저축은 가입 대상층 범위가 커 실제 모집인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2-2023년 연도별 예산 편성 대비 실제 모집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예산 편성 인원			실 가입·유지 인원			(B/A) (%)
		기존	신규	합계(A)	기존	신규	합계(B)	
2022	희망저축계좌Ⅰ	-	5,013	5,013	-	3,444	3,444	68.7
	희망저축계좌Ⅱ	-	11,406	11,406	-	5,451	5,451	47.8
	청년내일저축계좌	-	104,000	104,000	-	42,464	42,464	40.8
	차상위 이하	-	6,000	6,000	-	28,374	28,374	472.9
	차상위 초과	-	98,000	98,000	-	14,090	14,090	14.4
2023	희망저축계좌Ⅰ	4,040	4,417	8,457	3,247	2,915	6,162	72.9
	희망저축계좌Ⅱ	10,197	7,276	17,473	5,304	5,173	10,477	60.0
	청년내일저축계좌	95,680	75,200	170,880	42,301	47,970	90,271	52.8
	차상위 이하	5,520	6,000	11,520	28,298	23,878	52,176	452.9
	차상위 초과	90,160	69,200	159,360	14,003	24,092	38,095	23.9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희망저축계좌Ⅰ·Ⅱ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 인원 대비 실 가입·유지 인원의 비율이 각각 72.9% 및 60%로 그 예측률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계획 대비 실제 인원의 규모 차이가 다소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됨.

이러한 예산 편성 인원과 실 가입·유지 인원의 차이로 인하여 동 사업의 실집행실적 또한 높지 않았는데, 예산액 2,269억 600만원 대비 86.1%인 1,954억 6,800만원만이 실집행되었음.

향후 예산 편성 인원과 실제 가입·유지 인원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원을 예측하여 집행률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3년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의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지자체	226,906	226,906	215,560	215,560	-	215,560	195,468	-	20,092	86.1

자료: 보건복지부

둘째, 국비와 지자체의 매칭액을 예탁금으로 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사업의 집행잔액이나 이자수입에 대한 정산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한 보조금 잔액과 이자수입의 신속한 반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개별 지자체에 교부하고, 개별 지자체는 시·도비와 시·군·구비를 매칭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금을 위탁하는 절차로 진행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 내 자산형성계좌 관리 기능을 통해 예탁금을 관리하고, 지자체의 개별 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또는 환수 통보가 있을 시 가입자 계좌에 대한 적립 또는 해지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을 시·군·구에 반납처리하고 있는데,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국고에 반납하면 이 비용들이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징수되고 있음.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를 거쳐 다시 예탁금으로 개발원에 지원되고,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는 개발원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반납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반납이 지연되고 있음.

2024년 5월말 현재까지 2023년 사업의 시·군·구가 시·도에 반납한 현황에 따르면, 전체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4.0%인 103개의 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2016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보건복지부에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이 수납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1년에 4차례 시·도에 공문을 보내 사업비의 미반납현황을 공유하고 반납을 독려하고 있으나,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이러한 반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만 집행잔액 등의 반납을 지자체에 독려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반납 지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예산 반납의 체계에 의한 구조적인 개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결국,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국고로 들어오는 체계로 집행잔액 등의 예산 반납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대한 독려를 실시하는 동시에, 예산 잔액 등의 반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2020년 이전 지원된 동 사업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현황]

(단위: 천원)

시도명	건명	예산액	미수납액
서울특별시	2016년 지원	510,000	510,000
서울특별시	2017년 지원	10,381,410	10,381,410
강원특별자치도	2017년 지원	80,000	80,000
경기도	2017년 지원	3,329,080	3,329,080
부산광역시	2017년 지원	29,920	29,920
서울특별시	2018년 지원	24,222,000	24,222,000
울산광역시	2018년 지원	1,383,000	1,383,000
강원특별자치도	2018년 지원	5,247,900	5,247,900
충청남도	2018년 지원	7,301,200	7,301,200
경상북도	2018년 지원	6,726,400	6,726,400
경상남도	2018년 지원	9,997,530	9,997,530
경기도	2018년 지원	31,066,160	31,066,160
부산광역시	2018년 지원	13,949,720	13,949,720
전라남도	2018년 지원	12,907,500	12,907,500
서울특별시	2019년 지원	26,471,400	26,471,400
울산광역시	2019년 지원	20,478,180	20,478,180
강원특별자치도	2019년 지원	53,925,810	53,925,810
충청남도	2019년 지원	73,317,940	73,317,940
경상북도	2019년 지원	101,994,840	101,994,840
경상남도	2019년 지원	86,602,020	86,602,020
경기도	2019년 지원	166,997,590	166,997,590
전라북도	2019년 지원	125,641,720	125,641,720
부산광역시	2019년 지원	160,695,710	160,695,710
전라남도	2019년 지원	86,326,870	86,326,870
울산광역시	2020년 지원	53,127,100	53,127,100
강원특별자치도	2020년 지원	126,426,880	126,426,880
충청남도	2020년 지원	145,717,300	145,717,300
전라남도	2020년 지원	175,742,900	175,742,900
경상북도	2020년 지원	226,217,600	226,217,600
경상남도	2020년 지원	230,614,700	230,614,700
전라북도	2020년 지원	286,304,900	286,304,900
부산광역시	2020년 지원	369,075,260	369,075,260
경기도	2020년 지원	435,475,190	435,475,190

자료: 보건복지부

7.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집행현황을 고려한 추계 필요

가. 개 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568억 8,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7,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570억 6,300만원 중 2,555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6,500만원이 불용됨.[22)]

[2023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발달장애인 지원	256,886	177	-	257,063	255,563	732	765	357,738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173,504	173,504	-	173,504	173,504	-	-	197,963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53,703	53,703	-	53,703	53,051	-	652	55,704

내역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지원하여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35억 4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37억 300만원 중 530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6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의 실제 이용실적을 보면, 양 내역사업 모두 계획 대비 이용 시간이 적고 실제 단가 또한 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22)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장애인정책국)

으므로, 실제 이용실적 및 바우처 가격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의 활동서비스 유형별 실제 이용실적을 보면,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예산편성 근거 보다 이용시간이 매우 적고, 시간당 실제 단가 또한 예산 대비 적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2023년도 두 사업의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집행실적을 보면,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예산 편성 시 10,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수행한 결제자 수는 8,241명이며, 결제금액은 월평균 예산액 239억 7,800만원 대비 71.4%인 171억 3,100만원에 그쳤음.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더욱 심각한데, 10,000명의 예산편성 기준 대비 결제자 수는 5,981명이며, 결제금액은 월평균 예산액 102억 7,600만원 대비 45.6%인 46억 8,200만원에 불과하였음.

[2023년도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명, 시간)

구분		2023 예산 편성 기준(월 평균)	실제 집행 현황(월 평균)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수(A)	10,000	11,334
	결제자수(B)	10,000	8,241
	총이용시간(C)	1,540,000	1,154,156
	1인당 평균 이용시간(C/A)	154	101.8
	1인당 평균 이용시간(C/B)	154	140.8
	총결제금액(D, 단위 : 백만원)	23,978	17,131
	시간당실제단가(D/C, 단위 : 원)	15,570	14,831
	국비지원액 (단위 : 백만원)	14,459	11,477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수(A)	10,000	10,787
	결제자수(B)	10,000	5,981
	총이용시간(C)	660,000	328,343
	1인당 평균 이용시간(C/A)	66	30.4
	1인당 평균 이용시간(C/B)	66	54.9
	총결제금액(D, 단위 : 백만원)	10,276	4,682
	시간당실제단가(D/C, 단위 : 원)	15,570	14,258
	국비지원액 (단위 : 백만원)	4,475	3,137

자료: 보건복지부

두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실집행실적은 저조하여, 2023년도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79.4%,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70.9%를 기록하였음.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연도별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주간활동 서비스	2020	43,417	43,417	43,417	43,417	43,417	24,511	-	18,906	56.4
	2021	91,304	91,304	76,319	76,319	76,319	42,571	-	33,748	46.6
	2022	140,786	140,786	128,295	128,295	128,295	82,407	-	45,888	58.5
	2023	173,504	173,504	173,504	173,504	173,504	137,731		35,773	79.4
방과후 활동 서비스	2020	33,059	23,059	19,406	19,406	19,406	6,093	-	13,313	26.4
	2021	44,637	44,637	35,710	35,710	35,710	11,357	-	24,353	25.4
	2022	47,136	47,136	41,728	41,728	41,671	18,599	-	23,055	39.5
	2023	53,703	53,703	53,051	53,051	53,051	37,642	-	15,409	70.9

자료: 보건복지부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것은 결국 당초 사업의 예측이 과다하고, 실제 가격보다 높게 예산을 책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실제 이용실적과 바우처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추계를 할 필요가 있음.

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변경 필요

가. 개 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거주시설·주간보호시설·의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등의 기능보강,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과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64억 1,500만원 중 263억 1,600만원이 집행되고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6,415	26,415	-	△15	26,400	26,316	-	84	28,732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경북장애인 가족 복합힐링센터 등의 사업이 있음.

[202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

내역사업 명	집행액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999백만원 -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소방, 안전 등) , 공동생활가정,단기거주시설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280백만원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기능보강	1,950백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242백만원 -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9,450백만원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지원	1,192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건립	광주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경북장애인 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경북 장애인 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지원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126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3) 일반회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1536-300)(장애인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자체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사업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집행실적이 저조함.

[2023년도 내역사업별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6,000	6,000	5,999	-	5,999	3,958	1,626	415	66.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	2,356	2,356	2,280	146	2,426	1,264	1,003	13	53.7
·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기능보강	1,950	1,950	1,950	-	1,950	272	-	-	13.9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242	242	242	-	242	239	-	3	98.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458	9,458	9,450	-	9,453	7,577	-	2	80.1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1,192	1,192	1,195	-	1,197	1,195	-	2	99.8
·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건립	4,001	4,001	4,001	6,773	10,774	-	10,661	-	-
· 공립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1,000	1,000	1,000	500	1,500	17	1,483	-	-
· 사업운영비	126	126	126	-	126	126	-	-	100

자료: 보건복지부

시설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실집행률이 66.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률은 53.7%, 충북 재활원 마리아의 집 기능보강 등의 사업에서 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이러한 실집행부진은 시설 건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인데, 시설 건립 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은 사전 사업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기능보강사업의 신축, 증개축 단가가 2016년부터 동결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실집행부진의 주요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과 공립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극히 부진한데,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의 경우 2019년 시작된 사업이 아직 건축공사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복합힐링센터의 경우 22년 사업이 23년 12월에서야 설계공모에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예산 집행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요구됨.

둘째, 사업의 성과지표 중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증가율의 산출 방식이 성과지표 산출방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보강 사업에 맞는 성과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성과지표 중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매출증가율의 경우 연례적으로 성과지표 달성도가 저조한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가 80% 이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2022년 대비 성과목표를 4.3%p 낮게 설정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였음.

[2020~2024년도 동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소규모거주 시설 비율(%)	목표	81.2	82.0	82.7	82.7	82.7	전년 평균수준의 만족도 유지	(소규모(30인 이하) 거주시설 개소수 / 거주시설 총개소수)*100
	실적	81.8	80.4	80.7	80.8	-		
	달성도	100.1	98.0	98.4	97.7	-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매출증가율 (%)	목표	32.2	22.3	22.3	18	20	최근 2년 실적(2022년, 2023년) 비교	= (A-B)/B×100 A: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당해년도 매출액 B: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전년도 매출액
	실적	25	11.2	15	19	-		
	달성도	77.6	50.2	62.3	105	-		

자료: 보건복지부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목표를 전년대비 4.3%p 낮추는 것은 사업의 목표 달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동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 간의 차이를 전년도 매출액으로 나누어 지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해연도 매출액에 비해 전년도 매출액이 높아 산식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음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자,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각 재활시설의 증가율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산식을 변경하여 실적을 산출하였음.

[2022년 및 2023년 매출액 현황]

(단위: 원, %)

2022년도 매출액(A)	2023년도 매출액(B)	차이(B-A)	(B-A)/B
105,987,903	58,936,815	△47,051,088	△79.8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보건복지부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면 실제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하나의 시설의 매출액 하락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만약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하였다면, 사업의 성과지표를 우선적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여야 할 것인데,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그대로 두고 성과지표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유사한 방식의 성과지표 측정 시 이러한 방식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사업 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봄.

9.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펀드 운용계획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민간 재원을 모집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0억원이 전액 한국벤처투자에 출자(집행률 100%)되었음.[24)]

[2023년도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사회서비스투자펀드 조성	10,000	10,000	-	-	10,000	10,000	-	-	5,000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2023년부터 140억원 규모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고 현재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운용사로 하여 보건복지부가 68.9%인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31.1%인 45억원을 모집하여 총 145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음.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현황]

계정명	운용사	펀드결성일	펀드규모	자펀드명	투자기간	존속기간	투자현황 (2023년말 기준)
중진 (복지)	가이아벤처 파트너스	2023/10/05	145억원	가이아사회 서비스 투자조합	2023/10/05 ~ 2027/10/04	2023/10/05 ~ 2031/10/04	23억원/4개사 (2023/12)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사업의 투자를 위한 적정 대상 선정이 필요하며, 정책펀드의 출자율보다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이 낮아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24) 일반회계- 사회서비스투자펀드 조성(2635-316)(사회서비스정책관)

있으므로, 향후 정책펀드의 출자율을 하향하거나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을 상향하는 등 펀드운용계획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의 조성이 완료된 후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4년간 투자가 예정되고 있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4개 기업에 23억원이 투자되었음.

주목적 투자비율은 펀드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액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됨.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①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하거나 혁신적으로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업과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임.

[공고문 상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 기간 내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단,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해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①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보건의료·환경 제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말한다.(이하 같음)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

동 사업의 경우 정책펀드의 출자율이 69%(당초 계획은 72%)로서 타 펀드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은 약정총액의 60%에 불과하여 실제 정부의 재원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 투자될 우려가 있음.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는 펀드의 조성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펀드의 조성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보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출자율을 하향하거나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을 높게 설정하여 주목적 투자 대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0.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교부 등

가. 사업개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유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치료병상 확충, 인건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지원, 거점 전담병원 운영지원,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9,530억 7,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2,400만원과 이·전용 증액 15억 1,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556억 1,500만원 중 9,074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0%)되고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80억 6,700만원이 불용됨.[25)]

[2023년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953,079	953,079	1,024	1,512	955,615	907,458	90	48,067	12,610
긴급치료병상 확충	257,300	257,300	-	-	257,300	257,210	90	-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93,532	693,532	600	-	694,132	648,079	-	46,053	12,610

내역사업인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위기 시 사망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중증환자 및 응급·분만·투석·소아 환자 등 특수환자의 치료를 위한 상시 병상 1,700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사업 목적을 코로나19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990개의 병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2,573억원 중 2,572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

또다른 내역사업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정확한 피해를 산출하지 않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후 향후 금액의 다과에 대하여 심사하여 정산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941억 3,200만원 중 6,480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4%)되었음.

25) 일반회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중앙사고수습본부)

나. 검토의견

첫째,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자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 계획 변경 여부 또는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병원과의 매칭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 추진을 위탁하여 공단은 위탁비용으로 3억원을 지급받아 예산을 교부하고, 대상 병원을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됨.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 교부는 모두 이루어졌지만, 2023년 12월말 현재 위탁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액 전부가 미집행되었으며, 2024년 4월말 현재에도 실집행실적은 3억 4,6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은 0.21% 수준에 그침.

[2023년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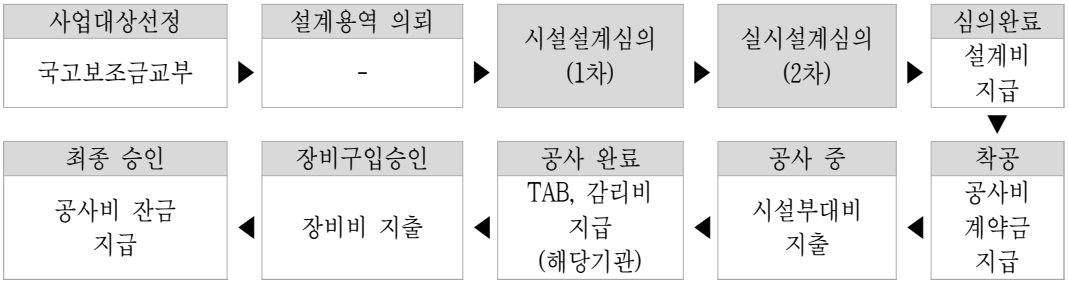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계획			2023. 12월말 실적 (교부기준)			2024. 4월말 현재 실적 (전체기준)			실집행률 (B/A)
	병상수	단가	예산액 (A)	병상수	단가	실 집행액	병상수	단가	실 집행액 (B)	
중환자	600	210	126,000	203	210		308	210		
준중환자	800	85	68,000	177	85	-	408	85	346	0.13
특수병상	300	210	63,000	35	210		94	210		
위탁사업비	-	-	300	-	-	210	-	-	210	0.7
합계	1,700	-	257,300	415	-	210	810	-	556	0.21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추진 내역을 보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시설의 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설계비를 지급하고, 공사계약이 되면 공사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장비구입이 승인되면 장비비와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됨.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최종사업계획이 승인된 의료기관에 예산을 교부하였는데,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건축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병원이 많아 설계비 집행조차 2024년 연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인 곳도 다수 존재함.[26)]

[수행기관별 국고보조금 실집행 현황(2024. 4월말 현재)]

(단위: 천원)

수행기관명	국고보조금 지급액	집행액			실 집행률	교부 일자
		계	국고	자부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89,436	-	-	-	-	2023.10.1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647,423	-	-	-	-	2024.1.1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6,530	-	-	-	-	2024.1.3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205,000	88,100	88,100	-	1.54	2023.11.23
서울대학교병원	1,764,000	-	-	-	-	2023.12.26
삼성서울병원	4,704,000	-	-	-	-	2024.1.11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일산병원	1,617,000	149,519	149,519	-	2.07	2023.10.13
세종충남대학교병원	396,455	-	-	-	-	2023.11.23
(의)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1,158,485	-	-	-	-	2023.11.23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419,510	17,900	8,950	8,950,000	1.76	2023.11.23
(학)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1,532,440	-	-	-	-	2023.11.23
동아대학교의료원	2,352,000	-	-	-	-	2023.12.13
을지대학교병원	882,000	-	-	-	-	2023.12.19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1,175,090	-	-	-	-	2023.12.19
강릉아산병원	1,547,000	-	-	-	-	2023.12.26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535,500	-	-	-	-	2023.10.13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710,500	-	-	-	-	2023.11.23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624,694	-	-	-	-	2023.11.23

26)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치료역량을 갖춘 기관에 음압격리병상을 구축하기 위해 시설설계심의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 설계 심의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국고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 병상 구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사례도 상당수 변경 접수되어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음.

수행기관명	국고보조금 지급액	집행액			실 집행률	교부 일자
		계	국고	자부담		
원광대학교병원	294,000	-	-	-	-	2023.11.23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1,234,975	-	-	-	-	2023.11.23
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265,370	-	-	-	-	2023.12.26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679,910	-	-	-	-	2023.11.23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7,000	-	-	-	-	2023.11.23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60,200	-	-	-	-	2023.11.23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1,176,000	-	-	-	-	2023.11.23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 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3,237,500	-	-	-	-	2023.12.13
혜민병원	294,000	-	-	-	-	2023.12.13
노원을지대학교병원	441,000	-	-	-	-	2023.12.13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654,500	-	-	-	-	2023.12.13
영남대학교의료원	1,358,000	-	-	-	-	2023.12.19
가천대학교길병원	1,620,112	-	-	-	-	2023.12.19
(의)안동병원	147,000	-	-	-	-	2023.12.19
목포한국병원	709,881	-	-	-	-	2023.12.26
아주대학교의료원	1,506,505	-	-	-	-	2023.12.26
(의)한마음의료재단여수제일병원	2,723,000	-	-	-	-	2023.12.26
건양대학교병원	588,000	-	-	-	-	2023.12.26
(학)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441,000	-	-	-	-	2023.12.26
의료법인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361,539	-	-	-	-	2023.12.26
은성의료재단좋은강안병원	583,520	-	-	-	-	2024.1.10
남양주한양병원	626,414	-	-	-	-	2023.12.26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울산병원	836,433	-	-	-	-	2024.1.10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208,355	-	-	-	-	2024.1.10
(의)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710,148	-	-	-	-	2024. 4.11
KS병원	1,386,000	-	-	-	-	2024.1.10
(의)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584,920	-	-	-	-	2024.1.31
삼육부산병원	2,366,000	100,000	100,000	-	1.64	2024. 2.1
성가롤로병원	1,316,571	-	-	-	-	2024. 2.1
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735,000	-	-	-	-	2024.1.11
의료법인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833,000	-	-	-	-	2024.2.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43,470	-	-	-	-	2024.2.2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588,000	-	-	-	-	2024.5.3
합 계	51,104,386	355,519	346,569	8,950		

자료: 보건복지부

국고 예산의 경우 공사의 설계부터 착공, 완공, 장비비 지급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동 사업이 설계 완료 후, 공사 계약 후, 공사 완료 후, 장비 구입 후 등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한번에 교부함으로써 국고의 낭비를 가져온 것은 상당히 부적정한 집행으로 보임.

또한, 동 사업은 당초 1,563개 병상이 신청접수되었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중증 호흡기질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기관 위주로 확충하기로 하였고 일부 기관에서는 병원 측의 자부담 분으로 인하여 신청 병원이 감소함에 따라 선정 병상 규모가 축소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동 사업이 2023년 종료 사업으로서, 차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병상수 축소에 대한 검토안이 2024년 1월에 만들어진 후 최종 결정이 2024년 4월 말에 이루어져 이를 수정하지 못하고 2023년도 예산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사업 방향 전환 등의 내부요인 및 의사집단행동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교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으로 봄.

또한 2024년 현재 810개의 병상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사 집단 휴진 등으로 인하여 병원의 재정부담이 악화되면서 병원의 사업 포기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병상수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종합하면, 예산 집행 시 집행가능성과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집행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교부된 예산의 환수에 있어 국고가 허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환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둘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에서 지원되는 개산급의 경우 예산 집행의 예외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신속한 개산급 정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집행액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으로 인하여 2023년도 집행액은 전년도 집행액 4조 4,603억원 대비 14.5% 수준인 6,481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연도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집행액]

(단위: 억원)

연 도	2020	2021	2022	2023
금 액	9,399	29,010	44,603	6,481

자료: 보건복지부

이렇게 개산급으로 지급된 집행액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로 이루어진 별도의 정산 절차를 통해 다시 금액을 확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정산 절차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의료기관에 안내하면,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손실보상 심사를 실시한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과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절차로 구성됨.

개산급으로 지원된 의료기관의 전체 지원개소 대비 정산 개소수를 보면, 2024년도 6월말 현재 477개소(변동없는 기관 포함)로 전체 지원 의료기관인 620개소 대비 77% 수준이며, 전체 지원금액 8조 6,582억원 대비 37.4%인 3조 2,407억원에 불과함.

[전체 지원개소 및 금액 대비 연도말 기준 및 2024.6월말 현재까지의 정산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체 지원(의료기관)	2023. 12월 기준		2024. 6월말 기준	
		추 가 지 급	환 입	추 가 지 급	환 입
개 소	620	179	162	220	195
금 액	8,658,279	40,600	25,403	50,187	27,393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개산급의 지원 후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재정의 결손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국 국고 예산의 낭비로 귀결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

11.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사업은 국내 신약 및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7)]

[2023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제약산업 육성·지원	44,570	44,570	-	△25	44,545	44,510	-	35	32,691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10,000	10,000	-	-	10,000	10,000	-	-	-

나. 검토의견

K-글로벌 백신 펀드는 당초 조성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펀드 조성을 위하여 투자 대상을 바이오헬스 전반으로 확대한 것은 제약 산업의 육성을 위한 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목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K-글로벌 백신 펀드는 당초 5,000억원을 2개 펀드를 나누어 운용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백신 펀드로,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 벤처투자 등 2개 운용사를 선정하였으나, 이 중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민간투자 유치 어려움을 사유로 철회하게 되었고, 2023년 8월 1,500억원을 목표액으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운용사로 추가 선정되었음.

이렇게 민간투자의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는 당초 목표액 2,500억원 중 1,000억원을 반납하여 2,500억원을 1,500억원으로 목표액을

27) 일반회계 - 제약산업 육성·지원(3039-300)(보건산업정책국)

변경하였고, 프리미어 파트너스 또한 1,500억원을 목표로 펀드를 모집하였음.

펀드의 미결성액 2,00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신규로 공고를 실시하였는데, 2024년 4월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하여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에 펀드 조성 공고를 실시할 예정임.

2023년 12월에는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하여 1,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료하였고,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1,500억원을 조성 목표로 2023년 12월말 기준 70% 수준인 1,146억원 규모로 펀드를 우선 결성한 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4년 6월에 1,566억원 규모로 펀드를 최종 결성하였음.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현황]

구분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파트너스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결성목표액	2,500억원→1,500억원	1,500억원	1,000억원
결성 현황 (2024.6월말 현재)	1,500억원 (복지부 300억원, 국책은행 300억원, 민간자금 900억원)	1,566억원 (복지부 350억원, 국책은행 250억원, 민간자금 966억원)	조성 중 (복지부 150억원, 국책은행 250억원 포함)
전 망	■ 2023.12월 결성(60%), 2024년 투자 개시 예정 ■ 60% 결성에 따른 보건복지부 불용예산(20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출자사업 공고 중	■ 2023.8월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선정 후, 2023.12월 우선 결성(70%) 및 투자 개시 ■ 2024.6월 1.566억원 규모로 최종 결성	■ 2024. 4월 운용사로 선정된 후 펀드 조성 중 ■ 2024.7-8월 70%이상 펀드 조성되면 우선 결성 후 투자 개시 예정

주) 복지부 출자금은 2022년도 예산액 500억원 및 2023년도 예산액 100억원과 기존 펀드 회수자원을 사용(출자금 공고 전 복지부와 기재부 사전협의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말 기준 투자현황을 보면,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는 펀드의 결성이 늦어짐에 따라 아직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12월 19일 결성된 후 2023년 말 현재 3개 기업에 130억원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2024.7월 기준으로는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는 1개 제약기업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제약기업 2개사에 95억원, 의료기기 기업 2개사에 110억원을 투자하여 총 4개사에 205억원의 투자를 집행함.

그런데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출자사업자로 선정된 펀드의 공고(2023.8월)시부터 주 투자분야를 당초 사업의 목적이었던 제약·백신 분야가 아닌 바이오헬스 분야로 확대하였는데, 바이오헬스로의 투자분야 확대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운용사별 투자 현황 및 투자 분야 현황]

구분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파트너스	엘에스케이 인베스트먼트
'23년 말 기준 투자내역	'23.12.28. 결성, '23년 말 기준 투자내역 없음	'23.12.19. 결성, '23년 말 기준 총 3개사 130억원 투자	-
'24년 7월 기준 투자내역	'23.12.28. 결성, '24년 7.10. 기준 제약 분야 투자 1건, 50억원	'24.6.14. 최종결성, '24년 7.10. 기준 총 4개사 205억 원 투자 (제약 2건, 95억원, 의료기기 2건 110억원)	-
공고문 상 투자분야	제약·백신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자료: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분야는 제약백신 이외에 의료기기나 로봇, 헬스케어, 바이오 인공장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는 국고로 이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 자체의 투자로도 성장 중에 있으며, 타 모태펀드(중진 계정의 초격차 분야 등)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중복 우려도 존재함.[28]

[공고문 상 글로벌 백신 펀드의 출자 분야 및 주목적 투자 대상]

○ 아래 ①, ② 모두 충족
① 제약(백신) 등 바이오 헬스 全 분야 - 주1)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② 백신 관련 혁신 기술 및 공정 기술개발 - 주2) 등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10% 이상투자
※ ①, ② 모두 부합할 경우, 주목적 투자실적 중복 인정
주1)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치료제, ICT 기반서비스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의미
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발간) 중 건강·진단(E) 분야(식품류는 제외), '新성장 4.0 전략' 미래의료 핵심기술 분야 및 바이오혁신 분야
2. 관세율표(관세청) 제30류 및 제90류 등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식품류는 제외)
3. 기타 바이오헬스 분야
※ 운용사 투자 대상이 1~3호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출자자들(모태펀드 및 'Ⅰ. 개요-2. 출자분야별 출자 계획'의 공동출자자)이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세부 절차는 규약 협의 시 결정
주2) 운용사 투자 대상이 백신 관련 혁신 기술 및 공정 기술개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출자자들(모태펀드 및 'Ⅰ. 개요-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의 공동출자자)이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세부 절차는 규약 협의 시 결정

자료: 한국벤처투자 공고문 중 발췌

28) 동 펀드의 품목별로 보면,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생산시스템, 바이오 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혁신형화장품,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장내미생물치료, 경피약물전달, 치료용항체, 개량신약, 혁신신약, 핵산기반 백신 및 치료제, 나노 약물전달체, 동반진단. 액체 생체검사, 의료 진단, 유전자 진단예측, 가상현실기반 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모바일헬스, 안과용레이저, 수술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함.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민간 자체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모태펀드 조성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음.

공고 내용을 보면, 주목적 투자대상의 범위가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 분야로 되어 있고 동 분야에 60% 이상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당초 목표인 제약과 백신에 특화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K-글로벌 백신 펀드의 운용 목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백신과 신약 분야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된 사업이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세부사업 아래의 내역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업이 아닌 타 분야로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특히,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당초 펀드 결성 목표대로 운용사당 2,500억원의 출자금을 조속히 모집 결성하여 K-글로벌 백신펀드 내 자금이 실제 임상 3상 단계의 백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채택하였는데, 동 펀드의 투자가 당초 펀드 결성 목표대로 모집되고 임상 3상 단계의 백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직결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 범위에서 백신의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펀드의 운용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동 펀드의 투자가 임상 3상 단계의 백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1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범사업 결과 분석 철저 필요

가. 개 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04억 3,300만원 중 105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99억 500만원이 불용됨.[29)]

[2023년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한국형상병수당 시범사업	20,433	20,433	-	-	20,433	10,528	-	9,905	14,605

한국형 상병수당은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 시범사업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단계 시범사업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소득 5분위 이하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4개 지역에 2개 모형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상병수당 1·2단계 시범사업 개요]

- (개요) 1단계 6개 지역,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2단계 4개 지역, 2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지원대상) 1단계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2단계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소득 5분위 이하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사업모형)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모형 구분, 모형별 정책 효과성 평가

	1단계 (22.7~)			2단계(23.7~)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근로활동불가	근로활동불가	입원 및 관련외래	근로활동불가	입원 및 관련외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 (보장수준) (2022)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 (2023) 일 46,180원(최저임금의 60%)

자료: 보건복지부

29) 일반회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건강보험정책국)

나. 검토의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연도별 실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1·2단계 사업의 결과와 내용을 점검하여 3단계 시범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의 1단계 사업(22.7~)과 23년(23.7~)의 2단계 사업 모두 집행이 극히 부진하였는데, 2022년의 경우 109억 9,000만원 대비 29억 7,3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204억 3,300만원 중 66억 2,200만원이 실집행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10,990	10,990	-	△2,494	8,496	8,351 [2,973]	76.0	98.3	-	145
2023	20,433	20,433	-	-	20,433	10,528 [6,622]	51.5	51.5	-	9,905
2024	14,605	14,605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집행부진은 지역을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행 초기로서 사업의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과 함께 당초 대상자 선정 자체가 과다하게 추계된 측면이 크다고 봄.

2022년에는 예상 신청자 11,936명으로 소요재정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3,876건에 불과하였으며(목표 대비 신청률 32.5%), 2023년에는 예상 신청자 27,034명으로 소요재정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7,277건(목표 대비 신청률 26.9%)에 그쳤음.

[2023년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명, 백만원)

지급 대상	2023년 지원 계획			2023년 지원 실적			
	인원	단가	예산액	신청인원	지원인원	단가	총 지원액
상병수당 지급액	27,034	47,560원(1일)	19,744	7,277	6,850	47,560원(1일)	5,975
사업 운영비	1식	-	689	1식		-	647
합 계			20,433				6,622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것은 아직 상병수당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의 추진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활용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하여 진행될 예정인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예산 집행 규모에 대한 적정 추계와 함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13.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가. 개 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9억 7,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0]

[2023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32,059	32,059	532	-	32,591	32,492	98	84	29,143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2,970	2,970	-	-	2,970	2,970	-	-	5,800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의 장비 구매가 지연되어 실제 사용이 연말에 시작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 목적인 시뮬레이터 구입과 관련없는 물품을 구매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은 간호대학 학생들에 대하여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별 집행 사례를 보면, 장비의 구매가 지연되어 연말에 사용이 개시되거나 차년도에 실제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별 현황을 보면, 가톨릭 대학교의 경우 교부액을 모두 집행하였으나, 실제 물품의 구입이 2023년 12월 29일로 늦어짐에 따라 2024년 4월 24일에야 구입한 물품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가톨릭상지대학교 또한 2023년 9월 14일에 구입하였으나 실제 물품의 사용은 23년 12월 27일로 2023년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30)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보건의료정책관실)

[대학별 2023년도 예산을 통한 물품 구입현황]

(단위: 백만원)

대학명	재료/물품/장비명	교부액	집행액	구매일	사용개시일
가톨릭대학교	성인시뮬레이터(중환자) 등	400	400	2023.12.29.	2024.4.24.
가톨릭상지대학교	응급재난환자시뮬레이터 등	400	400	2023.09.15	2023.12.27
나사렛대학교	성인시뮬레이터 등	400	282	2023.12.22.	2024.03.04
대구대학교	성인 시뮬레이터 등	400	275	2023.10.12.	2023.12.11
부산가톨릭대학교	모성시뮬레이터 등	400	400	2023.11.21.	2023.12.19
인하대학교	성인 시뮬레이터 등	400	212	2023.11.29.	2023.12.06
충북대학교	성인여성 시뮬레이터 등	400	353	2023.9.1.	2024.1.1
합 계		2,800	2,32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비 구입이 꼭 당해연도에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향후 장비 보강을 통해 실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부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물품이 미리 공급되었다면 한 학기라도 먼저 실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2023년도 사업이 2024년을 위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물품이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한편, 동 사업의 기본 목적은 간호실습에 필요한 시뮬레이터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습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시뮬레이터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을 집행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사업 목적과 다르게 구입한 물품의 예]

(단위: 원)

물품명	물량	단가	구입액
침대옆 탁자	8	160,000	1,280,000
환자감시장치	1	3,400,000	3,400,000
TV	1	1,500,000	1,500,000
전자칠판 외 5종(스크린, 모니터, 무선마이크, 시스템장비용랙)(디브리핑룸1,2, 301호, 304호)	1	6,769,000	14,942,030
	1	8,281,000	
데스크탑 2대(디브리핑룸1,2, 301호, 304호)	2	1,645,000	3,263,520
전자칠판 외 5종(모니터, 책상)(디브리핑룸3, 309호)	1	9,628,790	9,628,790
사무용책상	2	530,000	1,060,000
트레드밀	2	1,100,000	2,200,000
인바디	2	3,000,000	6,000,000
상담카우치	1	1,200,000	1,200,00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학별 집행내역을 보면, 침대 옆 탁자나 TV, 트레드밀이나 인바디, 사무용 책상,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는데,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시뮬레이터 구입을 통해 실습을 지원하고 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도 있음.

동 사업 예산은 간호대학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간호대학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터 지원 등 실습 비용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지원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4.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종료): 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용 부적정

가. 개 요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은 코로나 우울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대응인력 및 일반국민 대상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5억 2,000만원에 2억 9,300만원이 전용(증)되고 1억 3,300만원이 조정(감)된 예산현액 6억 8,000만원 중 6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됨.[31)]

[2023년도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14,121	14,121	146	1,105 △330	15,239	15,190	-	48	19,979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520	520	-	293 △133	680	678	-	2	-

나. 검토의견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에서는 심리상담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연도중 전용을 통하여 ISP 추진을 실시하였으나, 사업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024. 5월에서야 ISP수립 계획이 체결된 것을 감안하면,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하여야 할 것임.

동 사업에서는 신규 정보시스템인 심리상담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ISP 수립을 실시하고자 연도 중인 2023년 11월 1일 전용(증)된 예산 2억 9,300만원과 기존의 고위험군 심리상담을 위한 예산 3,600만원을 합한 3억 2,900만원으로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재원을 마련하였음.

31) 일반회계-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정신건강정책관)

[심리상담시스템 구축 ISP 수립 비용을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3.11.1.)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3345-302)	210-01	133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3345-302)	320-01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비용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330-03	160		320-01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비용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ISP 추진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초기 기존시스템(행복이음, 전자바우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의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전용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32)]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23. 11월 전용 증액을 실시한 후 예산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였는데, 동 사업은 연내 전용을 통해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전액이 실집행 과정에서 이월되는 결과로 나타났음.

[2023년도 심리상담시스템 ISP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국민건강보험공단	-	-	329	329	-	329	329	329	-	-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절차(정보화사업 실무위원회,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정보화 추진위원회, 일상감사 등) 및 조달청의 입찰 계약(최소 2.5개월 소요) 등 관련 절차의 진행으로 4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결국 2024년 5월 8일에야

32) 우울증 100만명 돌파(’ 22), 최근 5년간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 18년 99,796명 → ’ 22년 194,322명), 사회·경제적 비용 : 총 진료비 6.5조원(’ 21), 치료비·노동력 손실 86.5조원 규모 추정(보건복지부 자료)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에서 ISP 수립 완료 이전에는 예산의 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된 측면도 있다고 보임.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ISP 수립이 진행 중인 상황임.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시스템 구축 예산이 기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P 구축이 완료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국가재정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예외적인 규정으로 사업 간의 유사성과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동 전용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용을 실시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33)]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전용에 있어 집행가능성과 필요성 등 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33)「국가재정법」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5.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 내역 사업 추진 부적정 등

가. 개 요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운영,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오송 국제 K-뷰티 스쿨 설립, 남원 천연물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54억 7,700만원에 7억 6,400만원을 전용 증액한 162억 4,100만원 중 162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3년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15,477	15,477	-	764	16,241	16,238	-	3	14,724
국내 K-뷰티체험홍보관 상설 운영	1,084	1,084	-	764	1,848	1,848	-	-	2,134
오송 국제K-뷰티스쿨 설립	4,501	4,501	-	-	4,501	4,501	-	-	1,300

내역사업인 **‘국내 K-뷰티 체험 홍보관 상설운영’** 사업은 K-뷰티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문화융성 코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 명동과 홍대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개장하여 홍보 마케팅, 뷰티 클래스 및 뷰티 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8억 4,800만원 전액이 집행됨.

또 다른 내역사업인 **‘오송 국제K-뷰티스쿨 설립’** 사업은 오송에 뷰티스쿨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34) 일반회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3039-303)(보건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 운영 사업은 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의 홍보관을 구성하였는데,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 운영 사업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보조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당초 명동에서 홍보관을 개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중 홍대에 체험홍보관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음.

2023년도 동 홍보관 상설 운영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는 명동에서의 공간임차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신규 공간 임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약 8억원 증가하였음.

[2023년도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 운영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 내역]

당초 예산내역	실제 집행내역
○ 1,084백만원 - (본예산) 1,084백만원 - (기존)공간 임차 등: 520백만원 - (기존)프로그램 운영: 314백만원 - (기존)기타 운영비: 50백만원 - (기존)사업관리비: 200백만원	○ 1,848백만원 - (기존) 1,084백만원 - (기존)공간 임차 등: 520백만원(12개월x43.3백만원) - (기존)프로그램 운영: 314백만원(12개월x26.2백만원) - (기존)기타 운영비: 50백만원(12개월x4.2백만원) - (기존)사업관리비: 200백만원(12개월x16.7백만원) - (이 · 전용) : 764백만원 - (신규)공간 임차 등: 80백만원(2개월x40백만원) - (신규)공간 구성: 500백만원(1식x500백만원) - (신규)프로그램 운영: 20백만원(1개월x20백만원) - (신규)소모품 및 사무기기 구입 등: 40백만원(2개월x20백만원) - (신규)기타 운영비: 116백만원(2개월x58백만원 - (신규)사업관리비: 8백만원(2개월x4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체험홍보관의 경우 기존 사업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인 점에서 동 규정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35)]

35)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2개월간 실시된 단기 사업으로 단년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관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체험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다름이 없고, 국회에는 한 곳에 체험·홍보관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여 예산을 확정한 이후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한 것은 국회의 심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오송 국제K-뷰티스쿨 설립'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94억 7,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 예산액 10억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2년에는 이월된 설계비 중 4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재이월되었음.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획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국비기준)	19,471	'21~'25	1,000	-	4,513	456	4,501	490	2,000	7,483
■ 공사비	16,356		-	-	4,475		4,176	3	800	6,905
■ 건설보상비			-	-	-		-	-	-	-
■ 설계비	1,000		1,000	-	-	456	21	487	-	-
■ 감리비	311		-	-	38		278	-	-	-
■ 시설부대비	1,804		-	-	-		26	-	1,200	578

자료: 보건복지부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2022년도에 계상된 공사비 및 감리비 예산 44억 7,500만원은 설계 지연으로 2022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2023년에는 300만원만이 집행되고 전액 재이월되어 2024년에 집행 예정에 있음.

연례적으로 사업의 이월과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이 한번 교부되면 반납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 및 교부에 있어 면밀한 집행 상황 점검 후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16.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예산 집행의 계획성 필요

가. 개 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의 타운인력과 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95억 7,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과 이전용 증액 67억 5,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63억 7,500만원 중 448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1,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36)]

[2023년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	39,575	39,575	45	6,755	46,375	44,838	517	1,020	40,285

나. 검토의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조정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목은 이·전용 감액되었다가 후에 다시 증액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집행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7.1%인 67억 5,500만원이 이·전용 및 조정 증액되었는데, 이·전용 등의 증액과 감액의 총계 기준으로는 총 83억 600만원이 이용·전용 또는 조정되었음.

이·전용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런데 이·전용등의 내역을 보면, 일부 비목에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되고, 다시 감액되는 등의 반복되는 증·감액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집행은 집행 상황과 향후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36) 일반회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3035-300)(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재료비(210-11목)의 경우 3월 13일 임차료 예산의 부족으로 1,300만원을 세목조정 감액하고, 10월 25일에도 3,800만원을 세목조정감액 하였다가, 12월 7일 예산 부족으로 9,000만원의 세목조정 증액을 실시하였음.

[2023년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의 이용, 전용 및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3. 13.)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관리운영 (3035-300)	**210-11**	13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관리운영 (3035-300)	210-07	임차료 가용예산 부족
자체전용 (8. 20.)		420-03	100		210-0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430-01	100			
		220-01	32			
자체이용 (8. 20.)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 (7006-100)	110-01	350		210-0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9. 14.)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4934-300)	320-09	6,400		210-0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세목조정 (10. 25.)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관리운영 (3035-300)	**210-11**	38		**210-09**	시설장비유지비 가용예산 부족
		210-15	92			
세목조정 (11. 15.)		210-05	18		210-01	일반수용비 가용예산 부족
세목조정 (11. 23.)		**210-11**	57		**210-09**	시설장비유지비 가용예산 부족
		210-15	36			
세목조정 (12. 7.)		210-01	22		**210-11**	재료비 가용예산 부족
		210-09	68			
세목조정 (12. 12.)		**210-11**	2		**210-09**	시설장비유지비 가용예산 부족
세목조정 (12. 19.)		210-15	3		**210-09**	시설장비유지비 가용예산 부족
			51		**210-11**	재료비 가용예산 부족
자체이용 (12. 22.)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7022-200)	210-12	4		210-0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50-02	1			
자체전용 (12. 22.)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관리운영 (3035-300)	110-03	201		210-02	
		110-04	19			
		420-02	111			
		420-03	530			
세목조정 (12. 22.)		210-08	58		210-02	
총 계			8,306			

자료: 보건복지부

시설장비유지비(210-09) 비목의 경우에도 10월 25일 예산 부족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산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재료비 재원으로 12월 7일 세목 조정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후 12월 19일에는 다시 300만원을 증액하였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으로 예산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집행상황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요금의 경우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간격이 며칠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집행에 신중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특히, 이러한 이·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전 면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2020~2023년 이·전용 건수 및 증감액 현황을 보면, 매년 이·전용 등의 증감 총계가 늘어나고 있으며, 건수도 14건 이상을 기록하여 예산의 변경이 지속적이고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0-2023년간 이·전용 건수 및 증감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건수(금액 기준)	이·전용 등 증감 총계	이·전용 등 증감 순계
2020	14	2,369	△486
2021	32	3,176	48
2022	39	5,426	3,564
2023	23	8,306	6,755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예산의 이·전용 등 변경은 상황 변화로 인하여 피치 못할 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예산 집행 가능성과 예산 여건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이·전용이 반복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7.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 제고 및 미수납금 징수방식 개선 등

가. 개 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취약계층(보호대상아동·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수급가구 아동) 아동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하면, 아동이 적립한 월 5만원 내의 금액에 대해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정부지원 월 10만원 한도)하는 계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99억원 중 476억원이 집행(집행률 95.3%)되고 23억원이 불용되었음.[37)]

[2023년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아동발달지원계좌	49,900	49,900	-	-	49,900	47,600	-	2,300	126,733

나. 검토의견

첫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하고 실집행실적도 높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실적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추계할 필요가 있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가입아동수 및 월평균 적립액을 보면, 전체 대상아동 수 87,847명 중 63,200명만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2023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아동수 및 월평균 적립액]

연도	구 분	가입대상아동	가입아동 (18세미만, 명)	월평균 적립액(원)	월 평균 매칭금(원)
2023	계	87,847	63,200	72,820	79,726
	보호대상아동(서울)	3,668	3,295	147,545	84,710
	보호대상아동(지방)	23,491	20,039	99,280	84,169
	기초수급아동	60,688	39,866	53,343	77,081

자료: 보건복지부

37) 일반회계 - 아동발달지원계좌(1335-302)(인구아동정책관)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을 보면, 2018년 82.9%에서 2019년에 92.0%까지 증가하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대상아동 대비 가입아동수의 비율이 75.9%로서 연례적으로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

연도	대상아동 수	가입아동 수	가입률
2018	67,357명	55,844명	82.9%
2019	60,555명	55,728명	92.0%
2020	56,837명	49,855명	87.7%
2021	55,744명	43,812명	78.6%
2022	52,530명	40,904명	77.9%
2023	52,530명	39,866명	75.9%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자금 마련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의 핵심적 부분임에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동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뿐 아니라 만 18세 미만 가입 아동 수 또한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입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문제점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사업대상아동 가입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5.0	83.2	만 18세 미만 가입 아동 수/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수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수)
	실적	89.6	84.8	80.5	79.4	-	
	달성도	-	-	-	93.4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가입률 저조에 대하여 일반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인상되어 동 사업으로 저축할 유인이 낮아졌고, 장기저축이 강제되는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가입과 저축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간 정부는 2020년 정부지원 기준 금액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정부의 매칭 비율을 확대(1:1 → 1:2, 아동 적립금 5만원 대상 월 최대 10만원)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가입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0-2023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아동수 현황]

(단위: 명, 원)

구 분	가입대상아동	가입아동 (18세미만, 명)	월평균 적립액
2020	83,342	74,685	65,013
2021	80,729	68,481	66,034
2022	78,938	64,791	76,308
2023	87,847	63,200	72,820

자료: 보건복지부

결국 이러한 현상은 동 사업의 대상인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에 비해 다른 방식의 자산 형성 방안이 동 계좌를 통한 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업 추진 방식과 자산 형성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을 통해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둘째,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중도해지에 따른 미수납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도해지로 발생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금액 모두에 징수결정하여 환수할 필요가 있음.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중도해지에 따른 미수납금 현황을 보면, 지원된 매칭지원금 중 중도해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하는 1억 6,800만원 중 3,666만원만이 징수결정되고 환수되고 있음.

[2020년~2023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에 따른 미수납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매칭지원금*	징수결정액**	환수액***	미수납액	비고
계	168,604	65,774	65,774	102,830	189건
2020	35,566	17,022	17,022	18,538	53건
2021	33,286	11,633	11,633	21,653	41건
2022	42,076	16,477	16,477	25,599	38건
2023	57,676	20,642	20,642	37,034	57건

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된 국비 중 중도해지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
**지자체에서 징수결의를 하고 반납고지서를 제출한 금액
***환수가 완료된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매칭지원금으로 지급된 국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한 금액에 비하여 지자체가 반납고지서를 제출한 금액인 징수결정액의 규모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인데, 징수결정을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부적정한 수납방식으로 보임.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의 환수에 있어서 징수결정 대비 환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칭지원금으로 지급된 국비 중 중도해지로 환수해야 할 금액 모두를 징수결정하지 않고, 실제 환수된 금액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징수결정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실시하고 있음.

징수결정은「국고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징수에 대한 조사 결정을 통해 납입 고지를 하는 것으로, 사유가 발생한 지원금에 대해 회수 대상이 발생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동 법률의 규정과 배치되는 수입 징수 방식이라 할 것이며,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수조차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환수된 금액에 맞추어 징수결정을 실시하는 수납 방식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미인출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의 강구가 요구됨.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미인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 말 미인출 계좌 잔액이 2020년 말에 비해 2배 가량의 수준이며, 특히 만 24세 이후의 경우에는 130억 3,2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임.

[2020~2023년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인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총 미인출 인원 (만 18세 이상)			미인출 계좌 잔액		
		만18~24세 미만	만24세 이후		만18~24세 미만	만24세 이후
2020년 말 기준	38,671	35,003	3,668	104,472	100,283	4,189
2021년 말 기준	43,714	39,859	3,855	144,382	138,418	5,964
2022년 말 기준	45,400	40,260	5,140	194,215	181,327	12,888
2023년 말 기준	42,777	38,734	4,043	200,657	187,625	13,032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이 만 18세부터 만 24세까지의 경우에는 아동의 자립 목적을 소명하면 인출이 가능하며 만 24세 이후에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24세 이후에도 적립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동 사업의 종료에 대한 통보나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만기에 도달한 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통보나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한편, 미인출 금액에 적용되는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더욱 낮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음.[38]

[만기 후 금리적용방식]

구 분		2022	2023	2024
만기 (만 18세) 후 기간	1개월 미만	1.70%	2.30%	2.25%
	6개월 미만	1.10%	1.60%	1.575%
	2년 미만	0.60%	1.00%	1.00%
	4년 미만		0.80%	0.80%
	6년 미만		0.60%	0.60%
	6년 이상(만 24세이상)	0.10%	0.1%	0.1%

자료: 보건복지부

만 18세 후 만 24세까지 실질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아동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립목적이 소명되지 않으면 본인이 적립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동의 신규가입이 낮아지는 이유일 수 있음.

취약계층 가입아동의 신규가입을 유도하고, 가입된 아동이 중도해지하지 않고 실질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리적용 방식을 변경하거나 금리를 상향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8) 202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는 만기(18세)위탁금융기관의 적용금리(1개월미만 2,3%, 6개월 1.6%, 6년 이상 0.1% 등)가 일반적인 저축성 금융상품 평균이자율(3.83%)보다 저조하므로 아동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금리 상향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18.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연례적 사업의 이월 및 재이월 방지 필요

가. 개 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9)]

[2023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000	1,000	-	-	1,000	1,000	-	-	982

나. 검토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월 및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교부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부산에 1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이러한 실집행실적 부진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부산·충남 및 전북 등 3개 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각각 91억원, 30억원, 27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20년 지원된 재원이 2024년에야 모두 집행되었음.

동 사업은 예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 매년 이월과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39)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3135-353)(보육정책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교부년도	시도	시군구	국비 교부액	국비 실집행 현황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3.14. 기준	불용액	
2020년	부산	강서구	1,000	160	840	-	-	-	-	이월
	부산	금정구	1,000	-	14	986	-	-	-	재이월
	인천	-	1,000	323	643	34	-	-	-	재이월
	광주	서구	200	68	119	-	-	-	-	이월
	강원	강릉시	468	468	-	-	-	-	-	-
	충북	영동군	1,000	56	574	370	-	87	-	재이월
	충남	-	1,000	16	374	351	172	-	-	재재재이월
	충남	서산시	500	-	280	220	-	-	-	재이월
	전북	부안군	1,000	97	71	832	-	-	-	재이월
	전북	남원시	1,000	-	300	700	-	-	-	재이월
	경남	창원시	1,000	19	392	589	-	-	-	재이월
합계			9,168	1,207	3,607	4,082	172	87	13	-
2021년	부산	서구	1,000		-	-	1,000	-	-	재이월
	부산	남구	1,000		-	330	670	-	-	재이월
	전북	전주시	1,000		-	5	995	-	-	재이월
합계			3,000		-	335	2,665	-	-	-
2022년	부산	영도구	1,000			1	459	482	-	재이월
	충남	당진시	1,000			-	1,000	-	-	이월
	전북	김제시	700			-	260	-	-	재이월
합계			2,700		-	1	1,719	482	-	-
2023년	부산	동구	1,000				-	-	-	이월

주) ▨ 표시는 해당연도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의 이월과 재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는 뜻으로, 예산 교부 시 사업 집행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예산 교부 규모가 대부분 10억원으로 교부되는 50% 보조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1차년도에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의 수행으로 인해 50%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0억원으로 예산 교부액을 규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를 구분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결산상 잉여금 규모 축소 필요

가. 개 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북한·재외동포·외국인 및 해외긴급구호 등의 보건의료지원사업과 재단의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22억 6,300만원 전액이 집행됨.[40)]

[2023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12,263	12,263	-	-	12,263	12,263	-	-	12,17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출연금과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ODA), 사업 보조금, 후원금 및 이자수익 등의 수입을 바탕으로 기관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사업과 의료자원 지원사업, 이종욱 기념사업, 정책기반구축, 기관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2023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세부 내역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보건 의료 지원	80	80	-	-	80	80 [41]	-	-	-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1,070	1,070	-	-	1,070	1,070 [951]	-	-	1,152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530	530	-	-	530	530 [294]	-	-	671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140	140	-	-	140	140 [14]	-	-	178
·의료자원 지원	590	590	-	-	590	590 [343]	-	-	610

40) 일반회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기획조정실)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종욱 기념사업	246	246	-	-	246	246 [245]	-	-	246
·정책기반 구축	885	885	-	-	885	885 [834]	-	-	402
·인건비	6,825	6,825	-	-	6,825	6,825 [6,711]	-	-	6,996
·경상운영비	1,897	1,897	-	-	1,897	1,897 [1,883]	-	-	1,915
합 계	12,263	12,263	-	-	12,263	12,263	-	-	12,170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사업비의 52.2%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집행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140억원 이상의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2022년으로부터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의 규모가 출연사업비의 52.2%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	'21년 실적	'22년 예산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실적
정부지원금 계(A)	54,224	54,225	56,451	56,451	50,357	50,357
- 출연금	50,066	50,066	47,411	47,411	50,217	50,217
·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37,436	37,436	36,338	36,338	37,954	37,954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지원사업	12,630	12,630	11,073	11,073	12,263	12,263
- 보조금	4,159	4,159	9,040	9,040	140	140
자체수입 계(B)	15,610	19,281	21,746	24,165	26,255	28,791
- 이자수익 등	-	3,170	38	1,411	-	826
- 이월금	14,110	14,110	20,783	20,783	26,255	26,255
- 후원금	1,500	2,000	925	1,971	-	1,710
수입 총계(A+B)	69,834	73,506	78,197	80,616	76,612	79,148
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B/(A+B))	22.4	26.2	27.8	30.0	34.3	36.4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22년으로부터의 이월액 262억 5,500만원 중 출연사업 이월액은 141억 4,700만원으로 외교부 보조금(물자공여사업)으로 인해 잉여금에 104억 4,300만원이 단년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 출연금 기준의 잉여금 규모는 28.2%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잉여금은 수입의 과소계상 또는 지출의 과다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수입의 예산이 실제 수납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임.

자체수입 중 이자수익 등과 후원금 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실제 수납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자수익 등의 경우 예산을 거의 계상하지 않고 있고, 후원금 또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출 측면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지원되는 출연금의 집행현황을 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의 이월액은 1억 2,9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사업출연금에서 예산현액 대비 각각 62.5% 및 80.3의 실집행률을 나타냄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출연금의 집행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비목	2023년도 부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실집행 (B)	이월액	실 집행률 (B/A)
한국국제 보건의료 재단지원 (7035-305)	기관운영 출연금 (350-01)	8,722	8,722	8,722	165	8,887	8,758	129	98.5
	사업출연금 (350-02)	3,541	3,541	3,541	3,816	7,357	4,600	2,757	62.5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ODA) (7035-306)	사업출연금 (350-02)	37,954	37,954	37,954	10,168	48,122	38,631	9,491	80.3

자료: 보건복지부

결국 세입예산의 과소계상으로 인한 계획 대비 수입 예산의 증가와 지출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액은 결국 당해연도 예산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귀결되고 이는 차년도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 잔액 등의 정산없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출연금의 이월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당해연도에 모두 교부되지 않아도 될 비용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교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자수익 등이나 후원금 수입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집행이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엔데믹 이후 국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산상 잉여금의 크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협력사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예산의 집행률 개선 및 결산잉여금 축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2023년 말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규모가 2022년 대비 하락한 것을 볼 때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납득할만하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2023년 말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해왔고, 출연금으로 동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된 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기간만큼 이자액의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설명을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연도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잉여금	사용내역
2018년 말	14,374	정관 및 시행령 근거, 차년도 예산 편성하여 활용 (사고이월 충당,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
2019년 말	13,750	정관 및 시행령 근거, 차년도 예산 편성하여 활용 (사고이월 충당,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
2020년 말	14,110	정관 및 시행령 근거, 차년도 예산 편성하여 활용 (사고이월 충당,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
2021년 말	20,783	정관 및 시행령 근거, 차년도 예산 편성하여 활용 (사고이월 충당,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
2022년 말	26,255	정관 및 시행령 근거, 차년도 예산 편성하여 활용 (사고이월 충당,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
2023년 말	15,163	정관 및 시행령 근거, 차년도 예산 편성하여 활용 (사고이월 충당,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

자료: 보건복지부

향후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예산의 교부에 있어서 예산집행 상황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차후 전년도 이월액과 잉여금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별도 사업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조사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32억 1,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41]

[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13,210	-	-	13,210	13,210	-	-

나. 검토의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개의 출연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하여 과제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기획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출연하는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R&D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 동 사업 과제 선정부터 관리까지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기획평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출연연구개발 사업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

41) 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3031-384)(보건산업정책국)

진흥원 외에 과제 선정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42)]

2023년 말 현재 다부처 사업 7개 및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13개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총 20개의 사업단을 운영 중으로,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4~44인(평균 12인)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단에는 출연사업별로 운영비가 출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출연연구개발사업으로 운영 중인 별도 사업단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사업단명	총 연구기간	2023년 예산	2023 사무국 운영인력
1	다부처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단	2023.01~2027.12	7,200	8
2	복지부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	2020.4~2029.12	14,650	10
3	복지부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 사업단	2020.07~2024.02	3,250	4
4	복지부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단	2022.04~2024.12	14,433	15
5	다부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2020.07~2028.12	29,642	13
6	복지부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2020.01~2023.12	10,900	10
7	복지부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사업단	2022.01~2026.12	27,711	10
8	다부처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	2023.04~2027.12	5,024	3
9	복지부	수요자중심돌봄로봇및서비스실증연구개발사업단	2023.01~2027.12	4,350	5
10	복지부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사업단	2023.04~2027.12	3,070	4
11	다부처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	2022.01~2024.08	16,500	5
12	복지부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사업단	2021.07~2024.12	16,139	7
13	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단	2020.5~2029.12	18,275	7
14	복지부	혁신성장피부건강기반기술개발사업단	2023.01~2027.12	7,132	6
15	복지부	환자-의사가함께하는의사결정모형개발및실증연구사업단	2023.04~2027.12	3,700	8
16	복지부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	2019.09~2027.03	28,879	21
17	복지부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단	2020.5~2024.12	8,452	5
18	다부처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2020.3~2025.12	209,111	33
19	다부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2021.07~2030.12	58,300	23
20	다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2021.01~2030.12	119,465	44
평균					12명
평균(* 3개 범부처사업단 제외)					8.3명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2)「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과 체결하는 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⑦ (생 략)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한 사업에 있어서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크지 않고, 이는 결국 기획평가관리비와의 운영비 중복 지원 문제, 보건산업진흥원을 거쳐 예산을 집행함에 따른 집행 시차의 발생, 사업단의 별도 인력 고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상존한다고 보임.

그리고 사업단에 출연하여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분야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제의 선정 시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혹은 서로 누락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보건복지부는 사업단과 진흥원의 역할이 중복되지는 않으며, 향후 사업단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사업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단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사업단의 운영으로 특수한 분야의 과제 선정 및 연구 개발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한 보건의료기술 전체의 전문기관이고, 출연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전문성을 오히려 더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범부처가 함께 구성한 사업단의 경우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일정 부분 포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사업단 구성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현재 전문기관 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부처는 과학기술부,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4개 부처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규정에도 전문기관 이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단 운영이 법령의 위임을 통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하여 별도의 사업단 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민하고, 특히 보건복지부만으로 운영 중인 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단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21.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신규):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은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등에 대한 일상돌봄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급기관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12억 500만원 중 80억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37.8%)되었고, 120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43)]

[2023년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875	-	-	26,875	14,820	-	12,055	39,266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205	-	-	20,076	8,021	-	12,055	35,675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질병·부상·1인 가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및 동거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13-39세)에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및 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개인이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임.

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사회서비스정책관)

취약지 지원사업은 취약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해 취약지 인근지역의 기관을 ‘거점 제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육성·지원(인센티브·출장비 및 운영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임.

나. 검토의견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많은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계정에서 실시하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동 사업의 예산 대비 실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200억 7,600만원 중 32.8%인 65억 8,100만원만이 집행되는 데 그쳤는데, 사업의 집행이 매우 부진한 측면이 있음.

[2023년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지자체	20,076	20,076	8,021	8,021	-	8,021	6,581	-	1,440	32.8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집행부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을 도입함에 있어 수행지역 선정이 지연되었고 지방비 매칭 등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 대비 교부에 차질이 있었으며,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로 서비스 이용자 모집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고, 7월에 사업 공모를 실시하면서 실제 이용은 10월경에야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도 크게 감소한 측면도 존재함.

또한, 당초 예산 편성 시 인원과 기관수, 집행단가에 대한 예측이 면밀하지 못하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력 모집이 저조하고 대상 기관 수가 적어졌으며, 집행단가의 차이 또한 큰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도 보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대비 집행 내역]

(단위: 명, 개소,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		2023년도 집행	
	인원/기관수	단가	지원 내역	단가
일상돌봄서비스	32,160	145	2,807	660
취약지 지원	45개소	12,000	13개소	7,015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실제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대비 집행내역을 보면, 일상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수가 계획 대비 8.7% 수준에 불과하고, 취약지 지원 기관 수도 계획 대비 29%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이용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하여 수요예측이 다소 과다했던 측면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일상돌봄서비스의 단가가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취약지 지원의 단가는 58%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일상돌봄서비스의 경우 예산편성 시 일상돌봄이라는 사업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고 타 사회서비스와 같이 시설의 이용실적 등을 차용하여 편성하였다가 돌봄서비스를 위한 연구모델을 마련하면서 지원 내용 등이 변경되어 예산 집행 단가가 상승한 것임.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단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실질적 지원모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의 단가가 크게 변동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동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예산액 대비 지나치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계획 수립과 관리 또한 치밀하고 완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홍보강화 및 정확한 사업 추계 등을 통해 예산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총 괄>

22.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과소계상 및 초과승인 사업의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수입대체경비’는 책임운영기관에 편성되는 교육비·수수료 및 실습비 등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지출 경비로 6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세입과 세출 경비로 편성되어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6개임.

세입예산을 보면, 국립재활원은 5억 1,40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706.2%인 36억 3,000만원이 수납되었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예산액 3억 6,900만원 대비 162%인 6억 100만원이 수납됨. 또한 국립나주병원은 예산액 2억 4,600만원 대비 60.2%인 1억 4,800만원이 수납되고, 국립부곡병원은 예산액 5,900만원 대비 138.9%인 8,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립춘천병원은 예산액 3,300만원 대비 3배인 9,900만원이, 국립공주병원은 예산액 8,600만원 대비 88.4%인 7,600만원이 수납됨.

[2023년도 6개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대체경비	2023								2024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국립재활원	514	514	-	514	3,630	3,630	-	-	524
국립정신건강센터	369	369	-	369	601	601	-	-	369
국립나주병원	246	246	-	246	148	148	-	-	253
국립부곡병원	59	59	-	59	82	82	-	-	59
국립춘천병원	33	33	-	33	99	99	-	-	34
국립공주병원	86	86	-	86	76	76	-	-	94

자료: 보건복지부

세출을 보면, 국립재활원의 경우 예산액 2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1,700만원과 초과지출 승인액 37억 3,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1억 5,300만원 중 36억 8,800만원(집행률 89.8%)이 집행되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에도 예산액 6,200만원 대비 4억 3,000만원의 초과지출승인된 4억 9,200만원 중 4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2,500만원이 불용됨.

국립나주병원은 예산액 8,000만원에 초과승인액 1억 2,000만원을 합한 2억원의 예산현액 중 1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53.5%)되고 9,300만원이 불용되었고, 국립부곡병원은 예산액 3,400만원에 초과승인액 6,900만원을 합한 1억 300만원 중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2%)되었으며, 국립춘천병원은 예산액 2,200만원에 초과승인액 8,500만원과 전용 감액 600만원을 합한 1억 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5%)되었음.

국립공주병원은 예산액 5,900만원에 초과승인액 2,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100만원 중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1%)되었고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6개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출 예산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297	297	117	4,677 △939	4,153	3,688	-	465	224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62	62	-	430	492	466	-	25	62
(국립나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80	80	-	135 △15	200	107	-	93	59
부곡병원 수입대체경비	34	34	-	69	103	63	-	40	49
국립춘천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22	22	-	85 △6	102	77	-	25	100
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59	59		22	81	60		22	59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모든 병원에서 수입 예산액을 지출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지출 예산액에 비해 많은 수입액을 초과수입 승인액으로 하여 지출 규모를 높이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출 규모와 수입 규모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수입대체경비는 초과지출 승인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세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직접 지출에 집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 지출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경비로, 「국가재정법」 제53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임.[44]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책임운영기관들은 세입 예산액에 비해 세출 예산액을 과소편성함으로써 세입 예산액의 초과 수입분보다 많은 규모의 초과지출승인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세입예산액은 실제 수납액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세출예산액은 과거 세출예산액을 기준으로 계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출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액의 증가와 달리 세출예산액은 최근 4년간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의 불일치를 가져오고 초과지출을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수입예산의 초과분보다 과다하게 승인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음.[45]

예를 들어, 2023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세입예산액을 3억 6,900만원, 세출예산액을 6,200만원으로 계상하고, 6억 100만원의 수납이 발생하자 이 중 4억 3,000만원을 초과지출 승인하였는데, 실제 수입보다 초과된 금액은 2억 3,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4억 3,000만원을 승인한 것으로, 규정보다 과다한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한 것임.

이러한 초과지출의 과다 승인에 대하여 국회는 2022년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은 초과수납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채택하였음.

---

44)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는 「국가재정법」제53조의 규정 해석 상 초과수입 분에 대해서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초과수입되는 예산 규모를 초과한 초과지출승인은 부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2028년도 중기사업계획에서는 수입과 지출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액은 그 세출로 직접 집행되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이며, 당해연도 수입의 예상액인 세입예산액은 결국 모두 집행된다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사업계획 뿐 아니라 향후 2025년도 이후의 예산 편성 시에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2019~2023년도 수입대체경비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			세출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세입결산	세출예산	초과지출승인액	예산현액	집행액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212	5,627	5,627	62	5,519	5,581	5,526
	2020	261	2,601	2,601	62	2,530	2,592	2,509
	2021	85	2,554	2,554	62	2,427	2,489	2,418
	2022	358	579	579	62	371	433	401
	2023	369	601	601	62	430	492	467
국립춘천병원	2019	28	47	47	22	18	40	35
	2020	45	25	25	22	-	22	22
	2021	49	34	34	22	9	31	26
	2022	33	132	132	22	99	121	98
	2023	33	99	99	22	80	102	77
국립재활원	2019	380	1,965	1,965	298	1,762	2,060	1,964
	2020	349	2,119	2,119	297	2,014	2,311	2,080
	2021	298	2,508	2,508	298	2,453	2,771	2,520
	2022	406	2,854	2,854	298	2,850	3,151	2,723
	2023	514	3,630	3,630	297	3,738	4,153	3,688
국립나주병원	2019	80	250	250	80	196	276	250
	2020	80	127	127	80	146	226	109
	2021	80	367	367	80	285	365	286
	2022	177	506	506	80	401	481	387
	2023	246	148	148	80	120	200	107
국립공주병원	2019	105	105	103	59	39	98	96
	2020	59	43	43	59	15	74	42
	2021	59	40	37	59	7	66	40
	2022	92	68	68	59	23	82	59
	2023	86	76	76	59	22	81	60
국립부곡병원	2019	52	110	110	34	102	136	86
	2020	100	33	33	34	71	105	27
	2021	100	55	55	34	28	62	47
	2022	57	22	22	34	24	58	15
	2023	59	82	82	34	69	103	63

자료: 보건복지부

둘째, 초과지출승인을 통하여 집행한 세부 내역을 보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초과지출승인을 통해 지출한 내역은 당초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당초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을 초과지출 승인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확인됨.

국회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 사업을 초과지출 승인으로 추진하면, 국회가 사업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혀 심의할 수 없고, 사업이 차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실제로 초과지출승인액을 통해 집행한 내역을 보면, 수입대체경비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초과지출승인을 통해 집행할 성질이 아닌 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초과지출 승인액을 통해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신규 사업을 추진한 현황46)]

(단위: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초과지출 승인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국립나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운영	-	33	31	2	-
	국가연구개발 협약과제 수행	-	11	10	1	-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	19	2	17	-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	12	8	4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	10	10	0	-
국립춘천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	14	11	3	-
	직업재활훈련시설(카페) 운영	-	66	65	1	-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운영	-	22.7	22.7	-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	67	67	-	-
	정신건강간호사 2급 수련	-	64	64	-	-
	병원학교 운영	-	15	15	-	-
	대관시설 운영	-	7.8	7.8	-	-

자료: 보건복지부

46) 국립재활원은 자료 미제출

<세 출>

23.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 집행의 계획성 미흡으로 인한 예산변경 과다 등

가. 개 요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 사업은 청사의 시설관리, 조제투약, 구호 및 교정비, 병원관리, 장애인 체력증진과 건강검진 등을 위하여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38억 7,2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6,800만원과 이·전용 증감액 8억 5,000만원을 합한 147억 9,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45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6,600만원이 불용됨.[47)]

[2023년도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	13,872	13,872	68	1,613 △763	14,790	14,519	105	166	14,087

나. 검토의견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 사업의 전용 및 조정 내역을 보면, 하나의 비목에서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여 계획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동 사업의 전용 및 조정 내역을 보면, 하나의 비목에서 조정 감액 후 다시 조정 증액하고, 전용 감액하였다가 다시 조정 증액하는 등 예산 집행에 면밀한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4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1831-311)(국립재활원)

일반수용비(210-01)의 예를 들면, 2023.1월 25일 조정증액하였다가, 2월 8일 바로 조정 감액하였으며, 3월 10일 및 13일에 전용 감액하였다가 3월 29일에 조정 증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집행은 연도중 계속되고 있음.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경우도 유사한 집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 11월 27일 조정 감액하였다가, 11월 29일 바로 세목변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며, 다시 12월 1일에는 500만원을 전용감액하는 등 예산이 계획적이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음.

[2023년도 병원관리 및 운영 사업의 조정 및 전용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일)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3.1.25.)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1831-311)	210-11	3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1831-311)	**210-01**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지급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2.8)		**210-01**	1		210-07	간호과 중간관리자 워크숍 임차료 부족분 세목변경
전용 (2023.3.10.)		**210-01**	15		260-01	장애인 체력인증평가실 운영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전용
전용 (2023.3.13.)		**210-01**	22		260-01	그린 리모델링 사전기획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전용
조정 (2023.3.13)		210-01	11		210-07	정부미술품 대여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3.29.)		210-11	4		**210-01**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지급 부족분 세목변경
전용 (2023.4.10.)		**210-01**	55		260-01	음압격리병실 구축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전용
조정 (2023.4.24.)		**210-01**	1		210-16	간호과 인증대비 포상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6.21.)		**210-01**	4		210-04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일반용역비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7.12.)		210-11	5		**210-01**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지급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8.3.)		**210-01**	50		**210-02**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8.10.)		**210-01**	100		**210-02**	공공요금 및 피복비 예산 부족분 세목변경
			5		210-03	
조정		**210-01**	20		210-02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세목변경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8.23.)						
조정 (2023.9.6.)		**210-01**	2		210-07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임차료 부족분 세목변경
		210-13	6			
조정 (2023.9.14.)		**210-01**	7		210-07	사회복귀(방문재활) 세미나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9.15.)		**210-01**	1		210-16	면접위원수당 집행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9.26.)		**210-01**	28		210-14	장애인 건강권 온라인 교육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분 세목변경
		210-16	4		210-07	미션·비전 개정 및 재활서비스 향상 등 자문을 위한 임차료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0.5.)		**210-01**	5		210-14	일반용역비 예산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0.17.)		**210-01**	4		210-03	직원 근무복 구매 비용 및 과운영비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0.25.)		**210-02**	13		**210-01**	장애인운전재활교육 탁송료 등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1.27.)		**210-09**	3		**210-01**	하반기 혼합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세목변경
		210-01	2		210-07	재활전문간호 컨퍼런스 및 워크숍을 위한 임차료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1.29.)		**210-02**	5		**210-09**	내용연수 경과차량 수리비 증가 등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2.1.)		**210-01**	0.2		210-03	직원 근무복 구매비용 부족분 세목변경
		210-03	1.6		**210-01**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재위촉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세목변경
		210-09	4			
		210-14	1			
조정 (2023.12.5.)		**210-01**	1		210-07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 교육장소 임차료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2.7.)		**210-01**	6		210-16	포상금 및 채용 심사수당 등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2.12.)		**210-01**	2		210-16	포상금 및 채용 심사수당 등 부족분 세목변경
조정 (2023.12.19.)		**210-01**	21		**210-02**	공공요금 예산 및 직원근무복 구매비용 부족분 세목변경
					210-03	
조정 (2023.12.22.)		**210-01**	1		210-16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부위원 수당 부족분 세목변경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10-09	17		**210-01**	인쇄비 및 강사수당 등 일반수용비 및 연결통로 안전조치 일반용역비 부족분 세목변경
			13		210-14	
조정 (‘23.12.27.)		210-15	38		**210-01**	물품 구매 비용, 직원 근무복 구매 비용, 수도보수비용 등 부족분 세목변경
			4		210-03	
			18		**210-09**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전용 및 조정 등의 예산 변경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11억 8,900만원의 예산변경 증액과 10억 3,900만원의 예산변경 감액이 있었으며, 2022년에는 10억 6,300만원의 예산변경 증액과 8억 6,300만원의 감액이 발생하였음.

[2020-2023년도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2,672	12,672	-	1,189 △1,039	-	12,822	11,972 [11,972]	94.5	93.4	214	637
2021	13,279	13,279	214	772 △772	-	13,493	12,727 [12,727]	95.8	94.3	218	548
2022	13,563	13,411	218	1,063 △863	-	13,829	13,504 [13,504]	100.7	97.6	68	257
2023	13,872	13,872	68	1,613 △763	-	14,790	14,519 [14,519]	104.7	98.2	105	166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의 전용 및 조정은 중장기적인 집행 계획에 따라 최소한도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둘째, 국립재활원의 기타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금성 경비의 집행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므로, 포상금성 경비는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으로 집행하고, 기타운영비는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립재활원의 기타운영비(210-16) 집행을 보면, 예산액 2,100만원 전액을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음.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비서실 및 과운영비, 시험관리비, 축·조의금 및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타운영비는 현재 비목에 남아있는 유일한 현금성 경비라는 점에서 집행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여야 함.

그러나 국립재활원은 기타운영비를 통해 부서 및 직원의 격려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동 지침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원에 대한 상품권 구매나 직원 격려용 귤 구매, 정기적인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등 특별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는 단순한 격려금을 통한 포상금 지급을 과다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48)]

[2023년도 국립재활원 기본경비(손익) 및 병원관리 및 운영 사업 기타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포상 사유	포상액
2024년 1분기 우수직원 및 우수 의무기록 전공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800
2024년 2분기 우수직원 및 상반기 우수연구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	800
개원 37주년 기념 장관 및 원장 표창 온누리 상품권 구매	3,000
하반기 베스트직원 및 하반기 우수연구원 및 우수 의무기록 전공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1,800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직원 격려용 상품권 구매	3,452
직원 격려용 귤 구매	900
새 미션·비전에 대한 우수 캐치프레이즈 문구 공모자에 대한 포상	1,165
소통·협력의 조직문화 조성 및 서비스질 향상, 기관 사업성과 제고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선정 및 포상	950
홍보 우수부서 포상	1,000
간호과 인증 대비 포상	1,000
2분기 근접오류 최다보고 직원 포상	50
3분기 근접오류 최다보고 직원 포상	50
4분기 근접오류 최다보고 직원 포상	50
QI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	1,700
지표 및 환자안전 활동 우수직원 또는 팀 포상	1,200
지표 및 환자안전 활동 우수직원 또는 팀 포상	1,110
지표 및 환자안전 활동 우수직원 또는 팀 포상	290
고객만족도 개선활동 추진 우수부서 포상	1,300
합 계	20,717

자료: 보건복지부

48) 동 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는 격려라 하더라도 별도의 편성되지 않은 포상금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행해지는 것이 적절하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포상금 비목을 편성한 후 사업의 추진에 성과가 있는 직원 및 부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기타운영비로 직원과 부서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국립재활원은 기타운영비로 격려금을 집행하는 것에 지침상의 제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적절한 집행이고, 코로나19 상황 및 국립재활원 업무를 통해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운영비는 포상금과 달리 법령의 근거가 없는 현금성 경비라는 점에서 최소한으로 행해지는 것이 적합하고,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격려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 부처 및 사업에서도 직원에 대한 격려금은 포상금으로 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집행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기타운영비로 격려금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 원칙상 적정하지 않고,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은 사실 포상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포상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민연금기금】

<총 괄>

24.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전체 기금운용규모 대비 0.03%인 585억 8,200만원으로 다소 적은 규모였으나, 2022년도에는 4.1%인 7조 1,045억 4,600만원, 2023년도에는 전체 기금운용규모 대비 3.0%인 5조 7,478억 3,4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였음.

[연도별(2021~2023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기금운용규모(A)	변경 내역			변경률 (B/A)
		변경 증액	변경 감액	총 변경액(B)	
2021	191,246,715	29,291	△29,291	58,582	0.03
2022	175,235,042	3,552,273	△3,552,273	7,104,546	4.1
2023	190,638,590	2,873,917	△2,873,917	5,747,834	3.0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국민연금기금의 사전 예측 미흡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연례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한 적절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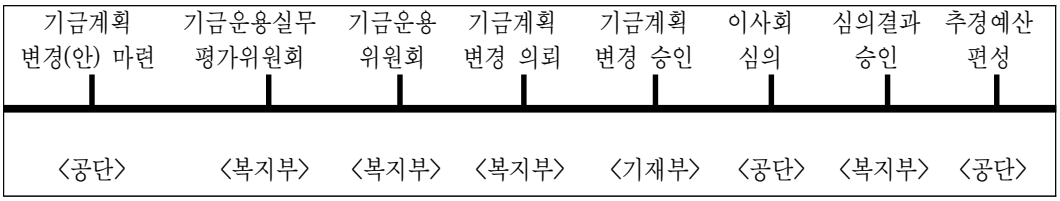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규모 대비 4.2% 미만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회 제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수준임.

그러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와 같은 한정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사전 예측의 미흡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빈번하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봄.[49)]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보면, 공단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기획재정부가 다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승인한 후 다시 공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여 예산에 편성되는 절차를 거치게 됨.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개월에서 3개월로, 심의 도중에 예산의 규모나 내용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의 경우 2022년도 계획액 대비 11.5%인 3조 5,188억 3,100만원, 2023년도 계획액 대비 7.9%인 2조 8,571억 8,1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국민연금 급여 지급의 추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2020년 및 2021년에는 기금운용계획의 큰 변경없이 계획액을 집행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에는 당초 계획액의 약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

49)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최근 4년간(2020~2023)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26,603,440	26,601,911	-	26,601,911	25,654,071	96.4	96.4	-	947,840
2021	29,172,591	29,172,591	-	29,172,591	29,136,791	99.9	99.9	-	35,800
2022	30,608,472	34,127,303	-	34,127,303	34,020,076	99.7	99.7	-	107,227
2023	36,228,728	39,085,909	-	39,085,909	39,040,227	99.9	99.9	-	45,68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기재정전망에 비하여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경기 회복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인하여 계획보다 급여액 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집행실적을 보면, 2021년도 이후 매년 5조원 규모의 집행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과 평균 소득 월액 등 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5년간 부처안 대비 정부안의 계획안 편성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부처안이 정부안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계획안 자체의 추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각적인 집행 추계를 통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의 부처안 대비 정부안의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처안	23,289,300	27,003,440	29,511,643	31,078,333	36,228,728
정부안	23,289,300	27,003,440	29,511,643	30,908,472	36,228,728

자료: 보건복지부

②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사업에서는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에는 공단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 직무평가 보수체계에 대한 외부 컨설팅 추진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계획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2023.10.17.에는 '연금개혁집중지원단' 개소 및 지사 임차 사무실 고정지출 비용 증가 등 사무실 운영경비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6억 400만원을 계획변경하였음.

[2023년도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3.6.28.)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40	· 공단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 직무평가 및 보수체계에 대한 외부 컨설팅 추진
	여비	국내여비		△160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200	
자체변경 (‘23.7.21.)	인건비	상용임금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61	·청년인턴 사업규모 확대 및 채용기간 연장을 위해 인건비 부족예산 확보
	인건비	일용임금		761	
자체변경 (‘23.10.17.)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27	·연금개혁집중지원단* 개소 및 지사 임차사무실 고정지출 비용 증가 등 사무실 운영경비 부족예산 확보 * 제5차 재정계산 수행지원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60	
	운영비	특근매식비		△20	
	운영비	임차료		164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207	
	운영비	일반용역비		△188	
	운영비	관리용역비		233	
	여비	국외업무 여비		△86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52	
	업무추진비	관서업무 추진비		△24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47	

자료: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집중지원단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제5차 재정계산’에 대하여 2022년 8월부터 정부가 작업에 착수하여 사전에 충분히 사업의 추진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신규 조직을 구성하고, 세종시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국민연금 조사연구’ 사업에서는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연구용역 실시를 위하여 7억 7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였는데, 이는 격년제로 본조사와 부가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적정 규모로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가조사 규모로 축소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는데,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 시 사업 방향에 맞는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국민연금 조사연구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변경 내역		
	예산세목	변경액	변경 사유
국민연금 조사연구	일반수용비	11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관련 회계처리 정확도 제고
	공공요금 및 제세	△11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관련 회계처리 정확도 제고
	일반연구비	707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자료: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조사연구 사업에서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관련 회계처리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1,1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증액하였는데, 실제 일반수용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3,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남.

[2023년도 국민연금 조사연구 사업의 일반수용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정규연구과제 수행 -일반연구비	775	760	-	760	730	-	30	786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 일반수용비	10	36	-	36	31	-	5	10
합 계	785	796	-	796	761	-	35	796

자료: 보건복지부

이상의 경우를 종합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면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의 부재, 집행과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25.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미흡

가. 개 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 대상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액 78억 4,100만원 중 59억 9,900만원이 지출(지출률 76.5%)되고 18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50]

[2023년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당초	수정(A)						
모자보건사업	13,396	13,396	-	13,396	11,489	27	1,880	24,450
고위험 임산부 지원	7,841	7,841	-	7,841	5,999	-	1,842	12,171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은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과 산모·태아·영아기 대상의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임.

[2023년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세부 집행내역
고위험 임산부 지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2,761백만원 - 37,880명 x 35.4%(수혜율) x 429천원(평균지원단가) x 48%(국비지원율) ■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 : 3,062백만원 - 보건소 사업비 : 2,678백만원 - 중앙 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 384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50)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인구아동정책관)

나. 검토의견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은 계획 인원 수 대비 적은 인원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수도 계획 대비 적은 수준이므로, 사업의 집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봄.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보면, 민간보조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지원된 금액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지원된 사업은 계획액 74억 5,700만원 대비 76.5%인 56억 1,500만원이 교부되었고, 그 중 50억 5,500만원이 집행(67.8%)되고 5억 6,0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당초	수정 (A)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60	260	260	260	-	260	260	-	-	1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24	124	124	124	-	124	124	-	0	99.9
지자체	7,457	7,457	5,615	5,615	-	5,615	5,055	-	560	67.8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당초 계획 의료비 지원 인원과 지원단가가 과다하게 추계되었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신규 보건소의 추가가 부족하였기 때문임.

[2021-2023년 연도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내역	계획			실적(2024.4월말 기준)			실집행률 (B/A)
		인원수/ 개소수	단가	예산액 (A)	인원수/ 개소수	단가	실집행액 (B)	
202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822명	462.5	3,068	12,291명	429	2,680	87.4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50개소	-	3,014	29개소	-	2,070	68.6
	합계			6,082			4,750	78.1
202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629명	469	3,068	12,829명	423	2,638	86.0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50개소	-	3,959	39개소	-	2,659	67.2
	합계			7,027			5,297	75.4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410명	429	2,761	12,041명	415	2,377	86.1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5개소	-	5,080	59개소	-	3,062	60.3
	합계			7,841			5,439	69.4

자료: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23년의 계획 인원수 13,410명 대비 적은 12,041명에 대하여 41만 5,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생애초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계획된 보건소 75개소 대비 16개소 적은 59개소의 보건소에만 예산을 지원하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집행 추이를 보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은 축소되고 있고, 지원 단가 자체도 당초 계획보다 적은 수준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집행은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가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음.

이 중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전국 사업 확대를 위하여 보건소에 대한 지원 개소수를 크게 증가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대상 개소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보건소의 여건이 사업 계획 당시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이 당초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예산의 통합 사용 부적정

가. 개 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인건비·운영비 및 건강증진개발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90억 3,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1]

[2023년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당초	수정(A)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19,032	19,032	-	19,032	19,032	-	-	18,559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 정책개발 및 지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건강증진 평가 및 연구사업,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인식 확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사업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 등의 보조사업과 ‘지역사회총합건강증진사업’ 등으로부터의 일반용역 사업을 수행 중임.

[2023년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추진 사업의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비목 (000-00)	2023년도 부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	예산현액	집행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한국건강증진개발원운영 (3343-301)	민간경상보조 (320-01)	19,032	19,032	19,032	-	19,032	18,478	-	554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3335-301)	일반용역비 (210-14)	70	70	70	-	70	17	53	-
	민간경상보조 (320-01)	8,997	8,997	8,997	-	8,997	8,951	-	59
음주폐해예방관리 (3340-300)	민간경상보조 (320-01)	921	921	921	-	921	915	-	6

51) 국민건강증진기금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건강정책국)

세부사업 (내역사업)	비목 (000-00)	2023년도 부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	예산현액	집행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333-300)	일반용역비 (210-14)	97	97	97	-	97	97	-	-
	민간경상보조 (320-01)	375	375	375	-	375	375	-	-
의료 및 분만취약지지원 (2750-300)	민간경상보조 (320-01)	200	200	200	-	200	199	-	1
모자보건사업 (2535-302)	민간경상보조 (320-01)	124	124	124	-	124	124	-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민간경상보조 (320-01)	395	395	395	16	395	399	-	1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 (7011-246)	일반용역비 (210-14)	25	25	25	-	25	25	-	-
구강건강관리 (3333-301)	민간경상보조 (320-01)	690	690	690	-	690	690	-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3340-307)	민간경상보조 (320-01)	400	400	400	-	400	400	-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3347-301)	일반용역비 (210-14)	196	196	196	-	196	196	-	-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여러 세부사업 또는 회계/기금에서 하나의 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연말 계약 체결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3년 방문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2023년 음주폐해예방 홍보 운영’, ‘2023년도 인증 및 평가사업 관련 행사 운영’, ‘2023년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합동 성과대회 운영’ 등 여러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하나의 계약을 통합 발주하거나 심지어 일반회계 사업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 재원이 민간경상보조와 일반용역비로서 별도의 계리를 통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않고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한 것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체결한 일부 계약의 예]

(단위: 천원)

계약 명	계약액	구분	세부사업 명
2023년 방문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50,000	회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
2023년 음주폐해예방 홍보 운영	99,875	기금	음주폐해예방관리(3340-300)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
2023년도 인증 및 평가사업 관련 행사 운영	60,000	회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3340-307)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
2023년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합동 성과대회 운영	19,000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3333-300)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
2023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인식 조사	18,900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
		기금	음주폐해예방관리(3340-300)
건강증진 인증 평가 관련 인식 조사 통합 운영	84,500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
		회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3347-301)
2024년도 디지털 건강관리 사업 안내서 개정 및 배포	35,239	회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같이 하나의 계약 체결을 위해 여러 사업의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한다면, 예산의 혼용이 필연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임.[52)]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용 등의 예산 변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이동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여러 회계·기금 및 세부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나의 기관에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다른 사업의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동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회계와 기금을 구분하고 각 회계와 기금의 지출의 목적을 규정한

5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취지와 차이가 있고,[53] 이러한 예산 혼용은 결국 재원별 회계 책임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집행에 있어 회계와 기금의 재원을 통합하여 지원하거나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53)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7.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업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액 5,339억 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7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5,340억 2,700만원 중 5,333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54)]

[2023년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당초	수정(A)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533,930	533,930	97	534,027	533,330	-	697	2,494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현재 위치에서 미군 공병부대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조 6,272억원, 사업기간 2014년부터 2027년(실제 완공시기는 2028년 예상)까지 진행되는 사업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개요]

구분		현 재	이전 후			
			계	본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위치		중구 을지로 6가 18-79	중구 방산동 19번지 일대			
면적	부지	27,573㎡ (8,341평)	42,276.7㎡(12,789평)			
	연면적	49,008㎡ (14,825평)	184,810㎡	94,763㎡	79,592㎡	10,455㎡
규모		496병상	776병상	526병상	150병상	100병상
사업비 (재원)		-	1조 6,272억원	4,128억원 (부지포함 1조1727억원)	4,293억원	25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기부금	응급의료기금
사업기간		2014년 ~ 2027년 (실제 완공시기는 2028년, 기본설계 완료후 사업기간 조정 예정)				
사업주체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자) 국립중앙의료원				

자료: 보건복지부

54)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2701-301)(공공보건정책관)

미 공병단 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상관리전환하는 협의를 2021.6월에 진행하여 2023년.12월까지 총 5차에 걸쳐 7,599억원의 부지대금을 납부하였음. 동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현재 토양환경정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5.5월 종료 후 관리전환을 예정하고 있음.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추진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획	계획	계획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1,172,674	2014~2027	79,398	18,872	216,283	214,863	533,203	533,203	2,364	14,032	154,852	233,488
■ 부지매입비	759,934		18,000	18,000	210,000	210,000	531,934	531,934	-	-	-	-
■ 공사비	274,168		-	-	-	-	-	-	-	-	109,667	164,501
■ 시설부대경비	29,498		61,398	872	6,283	4,863	1,269	1,269	2,364	14,032	2,542	3,556
- 설계비	19,865		58,141	642	6,003	4,862	1,269	1,269	1,097	11,995	-	-
- 감리비	9,084		169	-	-	-	-	-	1,236	1,943	2,362	3,543
- 시설부대비	549		3,088	230	280	1	-	-	31	94	180	13
■ 기타투자비	2,467		-	-	-	-	-	-	-	-	-	2,467
■ 예비비	106,607		-	-	-	-	-	-	-	-	42,643	63,964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매년 국회의 결산심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 병원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하였음에도 2023년에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지매입비의 집행은 2023년 완료되어 설계 공사를 진행 중인데, 부지매입을 제외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여전히 집행실적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임.

2023년도에는 교부액 12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9억 7,400만원을 합한 71억 9,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8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8,600만원이 이월, 11억 9,000만원이 불용됨.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사업의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부처		국립중앙의료원							
	계획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교부 현액	집행액 (C)			
국립중앙의료원	1,269	1,269	5,924	7,193	4,817	1,269	83	1,186	1,190	6.6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설계 공모를 거쳐 설계 착수까지 2022년 연내에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총사업비 조정이 2022년 12월에야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 9월에야 설계가 착수 되는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동 사업은 토양환경정화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진행되는 설계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2029년 초 시운전 및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면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동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토양환경정화						
◦ 도시관리계획 변경						
◦ 설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 실시설계						
-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 공사(32M)						
◦ 건설사업관리(설계, 시공)						
◦ 시운전 및 개원						★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어왔기 때문에 매년 국회의 결산 심의 후 채택된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서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봄.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5억 2,200만원(△6.5%)이 적은 36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300만원(4.3%)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0,145	50,145	34,692	△15,453	38,707	38,707	36,185	△2,522	1,493
총수입	50,145	50,145	34,692	△15,453	38,707	38,707	36,185	△2,522	1,493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9억 9,100만원(△1.3%)이 적은 6,675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억 4,700만원(4.0%)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64,027	660,643	641,572	△19,071	676,510	676,510	667,519	△8,991	25,947
총지출	664,027	660,643	641,572	△19,071	676,510	676,510	667,519	△8,991	25,947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87억 700만원으로, 426억 7,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61억 8,500만원이 수납(수납률 84.8%)되고 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64억 8,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8,689	38,689	-	38,689	42,453	35,962	3	6,48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8	18	-	18	10	10	-	-
- 구조개선사업계정	18	18	-	18	10	1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213	212	-	1
- 지역지원계정	-	-	-	-	210	209	-	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3	3	-	-
합 계	38,707	38,707	-	38,707	42,676	36,185	3	6,488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858억 8,400만원으로, 이 중 6,675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36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7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70,370	670,370	9,374	2,501 △2,501	-	679,744	661,394	3,604	14,74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99	2,299	-	-	-	2,299	2,285	-	14
- 구조개선사업계정	2,299	2,299	-	-	-	2,299	2,285	-	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41	3,841	-	-	-	3,841	3,841	-	-
- 지역지원계정	3,730	3,730	-	-	-	3,730	3,730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1	111	-	-	-	111	111	-	-
합 계	676,510	676,510	9,374	2,501 △2,501	-	685,884	667,519	3,604	14,760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산은 전년 대비 28억 2,200만원이 증가한 2,913억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42억 4,800만원, 무형자산이 5억 1,800만원 각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83억 2,2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억 7,300만원 증가한 8억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3억 4,800만원 발생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4억 5,000만원이 증가한 2,905억 1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229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527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 3,3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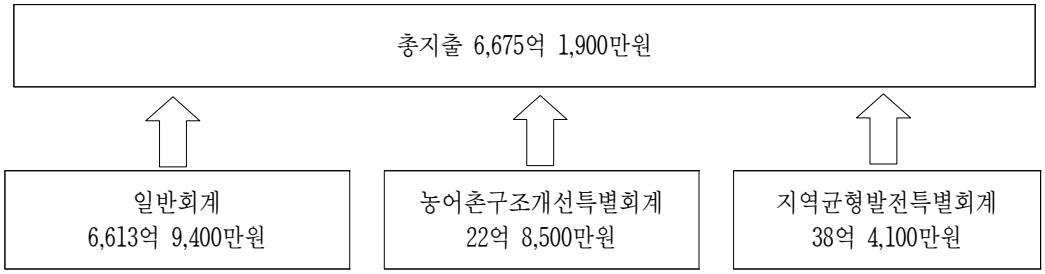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91,300	288,478	2,822	1.0
		유동자산	13,486	17,734	△4,248	△24.0
		투자자산	1,330	1,555	△225	△14.5
		일반유형자산	245,947	237,625	8,322	3.5
		무형자산	24,910	25,428	△518	△2.0
		기타비유동자산	5,628	6,136	△508	△8.3
	부 채		800	427	373	87.4
		유동부채	433	427	6	1.4
		장기차입부채	348	-	348	-
		장기충당부채	19	-	19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90,501	288,051	2,450	0.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22,923	402,553	20,370	5.1
	재정운영순원가		652,727	618,494	34,233	5.5
	재정운영결과		652,727	618,494	34,233	5.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결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2023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일반회계 10개 프로그램, 117개 세부사업에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및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 등을 수행하고, 특별회계 2개 프로그램, 3개 세부사업을 통해 ‘수입수산물 검사’ 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집행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함)는 국회의 2020년도 및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에서 지적되었던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실적 미흡 문제가 2023년에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교통시설 확충사업은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하였는데,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셋째,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액을 교부함으로써 많은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봄.

넷째,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예산 집행에 있어 하나의 비목에서 전용 등의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등 집행에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민간투자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의 법률 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마지막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연간 지출이 안정적이고 신규 적립금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금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확대 및 요율 인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부담금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 수납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필요

가. 개 요

‘과태료’ 는 식품의약품 등의 식품의약분야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 7,700만원 대비 4.46배인 16억 8,0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이중 6억 2,700만원만이 수납(수납률 37.3%)되고, 10억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0만원이 불납결손됨.[2)]

‘과징금’ 은 식품의약분야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예산액 39억 2,300만원 대비 1.90배인 74억 7,3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이 중 28억 8,500만원이 수납(수납률 38.6%)되고 45억 8,800만원이 미수납됨.[3)]

‘가산금’ 은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여 추가 징수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예산액 600만원 대비 3,367%인 2억 2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이 중 3%인 600만원만이 수납되었으며, 1억 9,500만원이 미수납됨.[4)]

---

2) 일반회계 - 과태료(56-563)(운영지원과)

3) 일반회계 - 과징금(56-565)(운영지원과)

4) 일반회계 - 가산금(58-581)(운영지원과)

[2023년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목명	2023								2024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과태료	377	377	-	377	1,680	627	1,050	2	426
과징금	3,923	3,923	-	3,923	7,473	2,885	4,588	-	3,923
가산금	6	6	-	6	202	6	195	1	6

나. 검토의견

과태료와 과징금 및 가산금은 연도별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여 국회의 2020년도 및 2022년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에도 2023년의 수납률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수납률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봄.

동 비목들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우 낮아 과도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과태료의 최근 4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2.5%~39.4% 수준으로 수납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임.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370	370	-	370	1,060	345	93.2	32.5	698	18
2021	370	370	-	370	1,081	371	100.2	34.3	703	7
2022	370	370	-	370	1,427	562	152.0	39.4	864	1
2023	377	377	-	377	1,680	627	166.3	37.3	1,050	2
2024	370	370	-	-	-	-	-	-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4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4%~64.8% 수준이며, 2021년 64.8%를 기록한 후 최근 2년간은 30%대의 수납률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최근 4년간 과징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2,167	2,167	-	2,167	5,136	2,351	108.5	45.8	2,769	16
2021	2,279	2,279	-	2,279	9,768	6,333	277.9	64.8	3,435	-
2022	2,351	2,351	-	2,351	7,552	2,567	109.2	34.0	4,985	-
2023	3,923	3,923	-	3,923	7,473	2,885	73.5	38.6	4,588	-
2024	3,923	3,923	-	-	-	-	-	-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의 수납저조에 따라 가산금의 수납도 저조한 상황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대에 그쳤음.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6	6	-	6	129	4	66.7	3.1	119	7
2021	6	6	-	6	177	5	90.7	3.1	167	4
2022	6	6	-	6	174	1	21.4	0.7	172	1
2023	6	6	-	6	202	6	100.0	3.0	195	1
2024	6	6	-	-	-	-	-	-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러한 미수납액의 발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태료와 가산금의 경우 체납자들이 영세업자들로 폐업 및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고, 과징금의 경우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으로 사업자의 재력부족 및 대표자 구속 등으로 수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전자압류 및 체납자 재산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해 왔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이 비목들에 대하여 2020년도 및 2022년도 결산 심사시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납률이 저조하고 현저한 징수율의 상승이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의 징수를 위한 대책들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음.

특히, 동 비목들이 식품의약안전 분야 여러 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의 역할을 하면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실하게 법령을 이행한 자들과 성실하게 납부한 자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결과로 나타나 납부를 기피하게 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자들과 납부를 성실하게 실시한 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 이행에 대한 반감이 납부 거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 비목들의 수납를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세 출>

2.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 외 운용의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대상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인건비, 기본운영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청사이전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5억 6,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됨.[5)]

[2023년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63	4,563	-	-	4,563	4,563	-	-	3,330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지원	999	999	-	-	999	999	-	-	-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90	90	-	-	90	90	-	-	90

내역사업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지원’** 사업은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억 9,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희귀의약품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5) 일반회계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2032-301)(의약품안전국)

[2023~2024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 및 전체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내 역		2023년		2024년	
		지원 예산	전체 사업비	지원 예산	전체 사업비
인건비(보조금)		1,802	1,802	1,847	1,847
운영비(보조금)		1,069	1,069	924	924
사업비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보조금)**	90	90	90	90
	의약품 유통관리시스템 선진화(보조금)	-	-	469	469
	청사이전(보조금)	603	603	-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보조금, 회전운용)	999	999	-	999
	의약품구입비(보조금, 회전운용)	-	5,328	-	5,328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일반용역)	92	92	92	92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 목록 재정비 및 지정 관리 체계 고도화(일반용역)	40	40	40	40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 (출연연구)	1,000	1,000	1,000	1,000
합 계		5,695	11,023	4,462	1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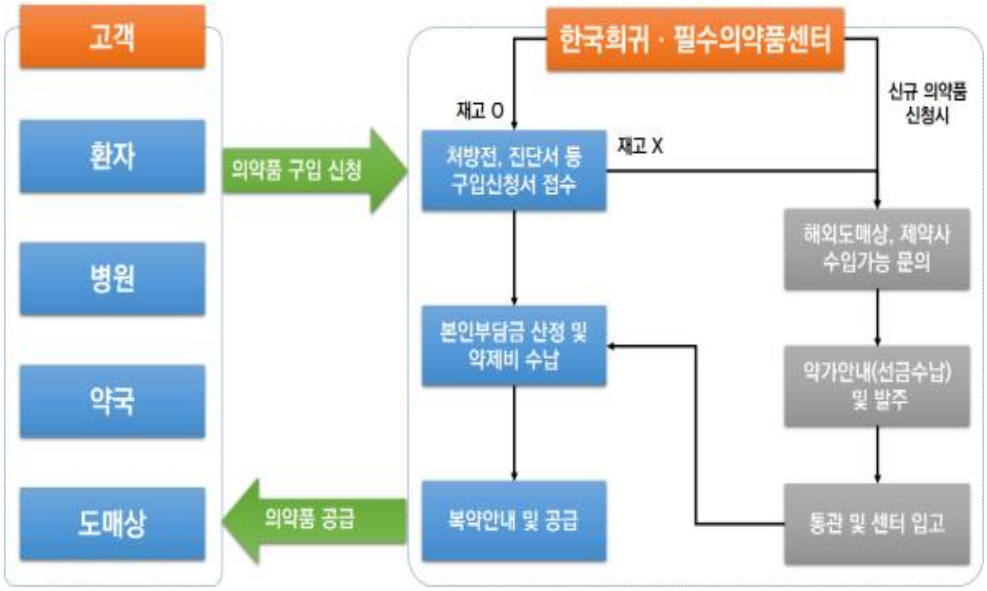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지원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구매하는 의약품 구입 비용이 별도의 근거없이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지원된 비용을 회전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희귀의약품 등 수입 및 공급 절차를 보면, 센터가 해외 도매상·제약사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후 이를 환자나 병원, 국내 도매상에 공급하면, 공급을 받은 자가 실제 구입 비용을 센터에 납부하고, 센터는 이 비용으로 다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절차로 구성됨.

[희귀의약품 등 수입 및 공급 사업 추진 절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국고로 지원(2000~2005 : 11.13억, 2020 : 42.15억)받아 운용하고 있고, 2023년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명목으로 9억 9,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반납 없이 의약품을 구입·공급한 후 회수한 대금을 재투자하는 회전자금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희귀의약품 등 수입 및 공급 관련 회전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내역	2000-2005	2020	2023	합 계
의약품구입비	1,113	4,215	-	5,328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지원	-	-	999	99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 사업은 한번 국가가 지원한 비용으로 많은 의약품을 구매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한번 지원한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회전 운용 방식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과는 배치될 우려가 있음.[6)]

6) 「국가재정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사업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보조사업 완료시까지 집행잔액의 반납 없이 회수된 판매대금을 활용하여 차년도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약품 구입비의 최근 3년간 집행·회수 실적을 보면, 268억원에서 374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국가예산으로 지원된 적립액 53억원 대비 5-7배 정도의 의약품 구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의 집행 효과는 존재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지원 사업 및 의약품구입비 집행·회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지원	집행액	-	-	647
	회수액	-	-	291
의약품 구입비	집행액	26,813	34,501	37,428
	회수액	23,890	34,893	34,50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희귀의약품 등 수입 및 공급’ 사업을 통한 집행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동 사업의 목적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희귀 의약품의 구입을 대행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참고로, 회전자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의 경우 「정부기업예산법」에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재부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7]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사업은 2023년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는데, 사업의 목적과 달리 중위소득 125%인 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으므로,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지원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센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자가치료용의약품)한 환자 중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을 수혜자로 선정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가치료용의약품의 약가 상승과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125% 이내인 자를 포함하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위소득 125%이내인 자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278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46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589만원, 4인가구의 경우 월 716만원 등의 수준임.

사업 목적이 저소득계층의 의약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30명에 대해 평균 300만원 규모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위소득 125%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2023년부터 대상을 조정한 것은 기존의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에 비해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실제로 2023년도 사업의 지원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757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중위소득 125%이하인 대상자에게 거의 절반인 49.4%가 지원되었음.

[2023년도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내역]

(단위: 만원, %)

구분	인원수	지원액	지원비율	1인당 평균 지원액	지원일
수급자	15	3,757	41.7	250	12.7.
차상위	2	800	0.9	400	12.7.
중위소득 125%	15	4,442	49.4	296	12.7.
합 계	32	9,000	100		12.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위소득 125%에게까지 확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저소득계층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저소득계층에 지원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교통시설 확충: 사업의 집행부진 방지 필요

가. 개 요

‘교통시설 확충’ 사업은 식약처 청사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9억 7,100만원 중 8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44.7%)되고 9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도 교통시설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청사관리운영	2,403	2,403	-	118 △118	2,403	1,313	979	111	11,939
교통시설 확충	1,971	1,971	-	118 △118	1,971	882	979	110	9,794

나. 검토의견

교통시설 확충사업은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하였는데, 향후 식약처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액 대비 44.7%의 집행률에 그쳐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이는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2023년 11월에 완료되고 건축허가 협의가 2023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공사비와 감리비가 이월된 것에 기인함.

공사 진행 현황을 보면, 건축, 통신, 소방, 전기 금차년도 공사가 2024년 2월 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총공사 계약기간 2024.2.5.~2025.1.25.)으로, 연말인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금차년도 계약금액 9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고,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인 2024년 2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요되는 공사를 위한 관급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예산액 3억 1,5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을 우선 집행하였음.

8) 일반회계 - 청사관리운영(7036-310)(운영지원과)

[교통시설 확충 사업의 공사계약 진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공정	계약일자	공사기간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집행내역
건축	2023.12.07.	2024.02.05. ~ 2024.03.31.	1,086	571	-	식약처 교통시설 건립공사 계약이행 기간('23.12.~ '25.1.) 미도래로 이월(979) 등
통신	2023.12.18.			50	-	
소방	2023.12.07.			100	-	
전기	2023.12.08.			50	-	
관급 (철근)	2023.12.16.	2024.02.05. ~ 2024.12.31.		315	252	관급자재(철근) 구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통영향평가 심의나 건축허가 협의는 주차타워 공사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업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나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9)]

9)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공사가 2024년 7월 현재 공정율 40%로서, 2025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4.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 교부 필요

가. 개 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경상남도에 천연물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구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62%)으로, 2023년도 예산액 44억 6,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0)]

[2023년도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	5,022	5,022	-	22 △6	5,038	5,014	-	24	4,986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4,469	4,469	-	-	4,469	4,469	-	-	4,469

나. 검토의견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액을 교부함으로써 많은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봄.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의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1년 예산안 편성 시 국고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후 지자체 재원분담비율 확정 및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함에 따라 2021년도 예산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후 2022년도에는 설계가 연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비 8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3년에는 공사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및 감리용역 계약 등으

10) 일반회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131-301)(바이오생약국)

로 공사계약이 지연되어 6월에야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공사비 예산이 이월되었음(계약기간 2023.6.20. ~ 2024.4.14.)

[2021-2023년도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1년	-	257	257	-	257	-
2022년	1,320	1,577	1,320	670	897	10
2023년	4,469	5,366	4,469	2,294	3,072	-

주) 2021년은 국비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국고 수준에서는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례적으로 예산의 실집행 과정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준비를 면밀하게 한 후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산 불용 시에는 총사업 예산이 감축되어 시설규모가 축소되거나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낭비와 사업차질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다고다고 설명함.

2024년에는 1차 공사의 완료 후 2차 공사와 관련한 조달청 계약이 2024. 6월에야 완료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등 향후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5.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철저한 예산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사업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함)에 인건비·운영비 및 정보원이 수행하는 여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9억 7,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1]

[2023년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5,970	5,970	-	-	5,970	5,970	-	-	7,388
인건비	2,542	2,542	-	-	2,542	2,542	-	-	2,710
기본경비	218	218	-	-	218	218	-	-	207

정보원은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사업은 국고수입과 자체수입을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의 혼용으로 인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비가 정산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정보원에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의 제반 비용으로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하고,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11) 일반회계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3032-300)(의료기기안전국)

그런데 정보원의 경우 자체수입을 통해 인건비가 집행되는 인력과 위탁사업으로 인건비가 집행되는 인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구분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정보원은 국고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 받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여 2023년에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직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자체수입과 통합하여 예산 총액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탁사업 등 자체수입액이 결정되지 않는 상반기에는 국고 지원액을 우선 집행하고, 이 후 수탁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위탁사업비로 교부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액 집행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2023년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사업의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년도 부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5,970	5,970	5,970	5,970	5,946	-	24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485	485	485	485	476	-	9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1,030	1,030	1,030	1,030	1,030	-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수집·분석 및 평가)	1,416	1,416	1,416	1,416	1,404	-	12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신속제품화 기술지원)	142	142	142	142	140	-	2
(의료기기 안전관련 정책수립 조사·연구)	22	22	22	22	22	-	-
(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확인 지원)	70	70	70	70	69	-	1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45	45	45	45	45	-	-
(인건비)	**2,542**	**2,542**	**2,542**	**2,542**	**2,542**	-	-
(기본경비)	**218**	**218**	**218**	**218**	**218**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이 반납되어야 함에도, 정보원은 국고 예산을 전액 집행 완료한 것으로 하고 자체수입액의 집행 후 남은 결산잉여금을 기재부와의 협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차년도로 이월하는 상황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연도별 결산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잉여금 금액	사용내역	사용근거
2018년	315	2019년도 자체수입 계상: 315	기재부 협의 이사회 의결
2019년	298	2020년도 자체수입 계상: 298	기재부 협의 이사회 의결
2020년	340	2021년도 자체수입 계상: 340	기재부 협의 이사회 의결
2021년	318	2022년도 자체수입 계상: 318	기재부 협의 이사회 의결
2022년	706	2023년도 자체수입 계상: 318 2023년도 자체수입 계상: 78(경평성과급) 2024년도 자체수입 계상: 310	기재부 협의 이사회 의결
2023년	449	2024년도 자체수입 계상: 319 기재부 사용협의 예정 : 130	기재부 협의 이사회 의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2023년도부터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민간위탁사업비의 성격에 맞는 예산 조정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의 비목이 변경됨에 따라 비목의 성격에 맞게 기관의 사업 추진방식도 함께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위탁사업비로 사업 비목을 변경한 것은 보조사업과 다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변경된 비목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향후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원받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기관의 자체수입 예산과 혼용하지 않고 구분계리하고 관련 비용의 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6.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계획성있는 전용과 조정 필요

가. 개 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 의 취급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 가정내 마약류 회수 폐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4억 7,900만원 중 33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1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3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3,479	3,479	-	377 △377	3,479	3,366	-	114	7,615

나. 검토의견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예산 집행에 있어 하나의 비목에서 전용 등의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등 집행에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소통 사업 수행과 마약류 간담회 운영,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T/F) 신설 등에 따른 감시 증가 등의 소요로 인하여 연도 중 예산액의 10%가 넘는 전용과 세목조정이 발생하였음.

특히,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국외여비의 경우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번갈아가면서 발생하였는데, 사업의 향후 집행가능성과 집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국외여비의 경우 3월 28일 및 6월 21일 마약위원회 등의 회의 참석을 위해 6,700만원의 세목조정 증액과 9월 15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의 MOU 체결을 위한 전용 증액을 실시한 후 12월 20일에는 국내여비 증액을 위한 세목조정 감액을 실시하였음.

12)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231-301)(마약안전기획관)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2023년 6월 8일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를 1억 7,500만원 세목조정 증액하였다가 7월 17일에 미국 마약중독재활센터 MOU 체결 등을 위하여 세목조정 감액하고, 9월 15일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증액을 위하여 다시 전용 감액하였다가 12월 7일에는 홍보비 잔금 집행을 위하여 다시 전용 및 세목조정 증액을 실시하였음.

일반용역비의 경우에도 일반수용비의 홍보비 지원을 위하여 6월 8일 세목조정 감액한 후 다시 7월 17일 세목조정 증액하였고, 다시 12월 7일에는 세목조정 감액하였음.

국내여비 또한 3월 28일 및 6월 21일에 세목조정 감액하였다가 9월 15일에 세목조정 증액하였고, 다시 12월 12일에 전용 감액하였다가 12월 20일에 세목조정 증액하는 등 감액과 증액이 반복되고 있음.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전용 및 세목조정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목-세목 코드	금액	~으로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세목조정 (2023.3.28) (2023.6.21)	국내여비 (220-01)	67	국외여비 (220-02)	마약위원회,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등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
세목조정 (2023.6.8)	일반용역비 (210-14)	175	일반수용비 (210-01)	마약류 안전강화 소통강화 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를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세목조정 (2023.7.17)	일반수용비 (210-01)	21	일반용역비 (210-14)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재활지원 자료제작 및 미국 마약중독재활센터 MOU체결 및 간담회운영 등 일반용역비 부족
전용 (2023.9.15.)	일반수용비 (210-01)	54	국내여비 (220-01)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TF)신설에 따른 기획 및 합동감시 증가
		12.4	국외여비 (220-02)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국외 출장 증가
세목조정 (2023.12.7)	임차료 (210-07)	19	일반수용비 (210-01)	마약류 오남용 예방 소통사업 잔금지급 일반수용비 부족
	일반용역비 (210-14)	3.6		
전용 (2023.12.12.)	국내여비 (220-01)	24	일반수용비 (210-01)	마약류 오남용 예방 소통사업 일반수용비 부족
세목조정 (2023.12.20)	국외여비 (220-02)	1.6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러한 집행에 사전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MOU 체결이 갑자기 추진되었고 홍보 내용과 방식 등이 추가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홍보비 잔금 집행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였다가 일주일 후 바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세목변경 증액한 것은 당장의 예산 집행 편의성만을 고려한 집행이라고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전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임.

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방지 조치 마련 필요

가. 개 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은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운용,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운영 및 사업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34억 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3)]

[2023년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13,403	13,403	-	-	13,403	13,403	-	-	13,65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으로 적립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연간 지출이 안정적이고 신규 적립금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금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확대 및 요율 인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부담금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용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별도의 부담금으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13) 일반회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의약품안전국)

피해구제 부담금은「약사법」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 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담금(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및 수입금액의 0.1%)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작용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전년도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25%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및 수입금액의 1% 중 작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14)]

부담금 부과요율은 동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정운용위원회(의약품안전관리원) 및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3년 단위로 조정하여 부과요율을 정하고 있음.

2023년에는 0.022%의 부과요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적용된 요율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과요율 0.027%에서 하향한 수치이며, 2024년부터 2026년에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도별 의약품 피해구제부담금의 수입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1년 수납실적	'22년 수납실적	'23년 수납실적	예산 산출 내역
피해구제부담금수입	4,646,239	5,006,499	5,449,464	품목별 생산액 등 × 품목별 계수 × 부과요율
피해구제부담금지출	2,139,837	2,213,588	2,250,088	해당연도 '지급' 결정된 급여지급액 등의 합산액
운용 잔액	2,506,402	2,792,911	3,199,376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
이자 수입금	303,290	203,858	588,266	해당연도 발생한 이자수입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4)「약사법」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 ·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부과 · 징수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작용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기본부담금: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
2. 추가부담금: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그 의약품의 전년도 생산액 · 수입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 ·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2항제1호의 기본부담금의 징수금액을 피해구제 예상비용, 부담금 운용 수익금, 정부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그런데 피해구제부담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피해구제부담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운용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잔액은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적립되고 있음. 2023년에는 54억원이 신규로 적립되고, 22억 5,300만원이 지출되어 2023년도 말 현재 총 321억 9,000만원의 부담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입지출의 차이로 인하여 피해구제부담금의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185억 3,900만원에서 2023년 말에는 321억 9,000만원으로 4년 만에 1.73배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남.

[연도별 의약품 피해구제부담금의 적립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초 적립금 누적액	14,828,476	18,539,151	22,461,046	25,025,380	28,151,619
(결산상 잉여금)	-	-	-	-	-
연간 적립금 운용 수익	354,100	311,565	178,353	331,982	838,329
신규 적립	5,119,191	5,468,960	4,646,239	5,006,499	5,449,464
지출액	(1,762,617)	(1,858,631)	(2,259,039)	(2,215,053)	(2,253,123)
기말 적립금 누적액	18,539,151	22,461,046	25,026,599	28,151,619	32,190,01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매년 지출액이 22억원 내외로 안정적이고, 신규 적립액은 50~55억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금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부담금 운용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의약품 안전관리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부담요율을 0.018%로 하향 조정하여 적립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 재원은 부담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피해구제 급여 지급에 영향이 없도록 안정적인 부담금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역할이 의약품부작용의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예기치않게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부담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초의 목표와는 다른 운용 방식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담금 수입 측면에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부담금 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부담금 지출 측면에서는 동 부담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의 인정률이나 인정방식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적근거가 미흡한 사업의 추진 문제

가. 개 요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식품 위생과 급식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행정전자화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9억 1,300만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되었음.[15)]

[2023년도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13	1,913	-	-	1,913	-	-	-	-

나. 검토의견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민간투자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4월 정부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고시함에 따라 추진된 사업임.

이 사업은 공공부문 몫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19억 1,300만원을 우선 투자한 후 2023~2024년 민간에서 200억 1,600만원의 구축비를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정부는 임대료 224억 2,300만원과 운영유지비 연 40억원을 2025~2029년까지 지급(지급총액 203억 3,500만원)함으로써 투입 비용을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음.

15) 일반회계-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7032-510(기획조정관)

그러나 동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 제출 시 동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고를 진행하고 있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의 국회제출 및 심의·의결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을 위하여 사업이 보류되어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음.[16)]

2024. 6월말 현재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법」만이 법률 개정으로 2024.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은 결국 개정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되었음.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

구분	조항	현재 상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 제40조의3 신설)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0조의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이하 생략)	개정 (2024.1.23.) 시행 (2024.7.24.)
국가재정법 (제9조의2 개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중간 생략)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임기만료 폐기
국회법 (제84조의4 개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임기만료 폐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결국 임대형 민간투자형(BTL)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관련 법률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사업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16) 당시 정부는 소프트웨어 BTL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관련 법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질병관리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445억 400만원(691.2%)이 많은 6,232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46억 8,000만원(156.9%)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9,258	39,258	257,858	218,600	78,776	78,776	623,280	544,504	404,680
총수입	39,258	39,258	257,858	218,600	78,776	78,776	623,280	544,504	404,680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6,440억 8,700만원(27.0%)이 많은 3조 271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조 7,817억 9,200만원(△74.4%)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243,046	12,443,419	11,808,963	△634,456	2,383,084	2,383,084	3,027,171	644,087	△8,781,792
총지출	5,243,046	12,443,419	11,808,963	△634,456	2,383,084	2,383,084	3,027,171	644,087	△8,781,792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87억 7,600만원으로, 8,157억 6,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6,232억 8,000만원이 수납(수납률 76.4%)되고 1,924억 8,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1,311	31,311	-	31,311	765,065	573,284	-	191,781
마산병원 특별회계	20,750	20,750	-	20,750	23,672	23,173	-	498
- 손익계정	14,268	14,268	-	14,268	16,977	16,478	-	498
- 자본계정	6,482	6,482	-	6,482	6,695	6,695	-	-
목포병원 특별회계	26,715	26,715	-	26,715	27,024	26,822	-	202
- 손익계정	11,303	11,303	-	11,303	10,117	9,915	-	202
- 자본계정	15,412	15,412	-	15,412	16,907	16,907	-	-
합 계	78,776	78,776	-	78,776	815,761	623,280	-	192,481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2,140억 2400만원으로, 이 중 3조 605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2%)되고 654억 6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79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368,937	2,368,937	795,430	498,857 △498,857	-	3,164,366	3,029,314	65,463	69,586
마산병원 특별회계	20,750	20,750	170	234 △234	-	21,532	20,041	-	1,491
- 손익계정	14,268	14,268	-	234 △234	-	14,880	13,436	-	1,444
- 자본계정	6,482	6,482	170	-	-	6,652	6,605	-	47
목포병원 특별회계	26,715	26,715	1,410	43 △42	-	28,126	11,241	-	16,883
- 손익계정	11,303	11,303	-	43 △42	-	11,304	9,471	-	1,831
- 자본계정	15,412	15,412	1,410	-	-	16,822	1,770	-	15,052
합 계	2,416,402	2,416,402	797,010	499,134 △499,133	-	3,214,024	3,060,596	65,463	87,960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질병관리청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3,430억 9,600만원이 감소한 2조 864억 8,0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33억 3,600만원 증가했음에도, 유동자산이 1조 2,957억 6,2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709억 2,100만원 감소한 875억 9,900만원으로 유동부채 4,684억 9,5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721억 7,500만원이 감소한 1조 9,988억 8,1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조 9,083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584억 5,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조 2,857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조 8,475억 4,6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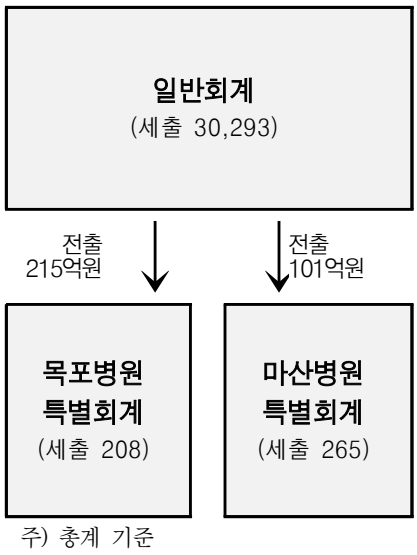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086,480	3,429,576	△1,343,096	△39.2
		유동자산	1,793,882	3,089,644	△1,295,762	△41.9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60,574	310,584	△50,010	△16.1
		무형자산	29,497	26,161	3,336	12.8
		기타비유동자산	2,527	3,187	△660	△20.7
	부 채		87,599	558,520	△470,921	△84.3
		유동부채	50,611	519,106	△468,495	△90.3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556	4	552	13,800
		기타비유동부채	36,433	39,410	△2,977	△7.6
	순자산		1,998,881	2,871,056	△872,175	△30.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908,343	10,166,797	△6,258,454	△61.6
	재정운영순원가		3,287,745	10,134,634	△6,846,889	△67.6
	재정운영결과		3,285,772	10,133,318	△6,847,546	△67.6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마산병원 특별회계, 목포병원 특별회계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마산병원 특별회계로 100억 7,800만원, 목포병원 특별회계로 214억 5,200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2023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규제를 완화하여 일상회복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추진함.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집행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국회에서 감액한 예방접종 홍보 사업과 추진단 운영사업의 예산을 연도중에 세목 변경 증액하여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예산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봄.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사업은 편성된 예산 2,151억원으로 신규 구매계약을 하지 않고 각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기계약물량을 신규백신으로 전환 도입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도입된 백신의 폐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도 백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입 측면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는 징수결정하였으나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징수결정하지 않는 등 수납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넷째,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권역별 실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2023년도 예산현액 전액을 교부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과소계상 및 수납 노력 저조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액 290억 200만원 대비 7,584억 7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이 중 5,677억 3,700만원이 수납(수납률 74.9%)되었으며, 1,906억 7,000만원이 미수납됨.[2)]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치이자 수입 및 연구성과에서 창출된 기술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예산액 5억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1억 2,300만원으로, 이 중 50억 3,400만원이 수납(수납률 82.2%)되고 10억 9,400만원이 미수납됨.[3)]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목명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이전수입	29,002	29,002	758,407	567,737	190,670	-	200,975
기타재산이자수입	500	500	6,123	5,034	1,094	-	500

2)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3)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3배 ~ 19배 상당 규모의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액을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계상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납실적과 추이를 고려한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하게 계상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예산액 편성 시 지출할 수 있었던 사업들의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예산의 과소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최근 예산액 대비 수납현황을 보면, 2021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8.7배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31배, 2023년에는 19.6배를 나타냄. 이러한 수납률 증가를 반영하여 2024년은 예산액을 높여 계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및 2023년의 수납액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3년간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002	2,002	2,002	34,479	17,448	871.5	50.6	17,032	-
2022	4,920	4,920	4,920	213,022	153,115	3,112	71,8	59,907	-
2023	29,002	29,002	29,002	758,407	565,737	1,958	74.8	190,670	
2024	200,975	200,975	-	-	-	-	-	-	-

주) 2024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에는 2023년도 예산액과 같은 290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크게 증액됨.
자료: 질병관리청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예산액 대비 3배 이상, 2022년 및 2023년에는 약 10배 이상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연도별(2021-2023) 기타재산이전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100	100	100	393	350	350	89	44	-
2022	100	100	100	1,586	1,210	1,210	76.3	375	-
2023	500	500	500	6,128	5,034	1,006	82,2	1,094	-
2024	500	500	-	-	-	-	-	-	-

자료: 질병관리청

이렇게 과소계상이 2022년과 2023년에 큰 규모로 발생한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원되었던 보조사업들의 집행 잔액 반납이 202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부터 보조사업의 집행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의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의 미수납액 규모가 2024년도 예산액 규모보다 크고 2023년도 보조사업의 실집행실적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과소계상은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따라서 국가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통한 세출 예산 집행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납액 규모와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둘째,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70~80%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징수율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상기 표에서 두 비목의 최근 4년간 수납현황을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은 증가추이를 보이나 2023년 74.8% 수준에 그쳤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률은 2021년 89%를 나타낸 후 2023년에는 82.2%에 머물렀음.

두 비목이 코로나19 시기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반납조치가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납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편성 등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반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결정되었으나 미수납된 세부 내역을 보면, 2018년 전라남도에 교부된 감염병예방관리(시도지원단) 사업에서 미수납이 발생하였고, 2020년 서울특별시에 교부된

예산에서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질병청의 수납 노력 또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2020년 이전 교부된 국고보조금 중 수납되지 않은 내역 일부]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명	지자체명	교부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202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서울특별시	20,000,000	1,180,140	-	1,180,140
2019	감염병예방관리 (시도지원단)	전라남도	306,000,000	27,900	-	27,900
2018	감염병예방관리 (시도지원단)	전라남도	153,000,000	23,571,190	-	23,571,190

자료: 질병관리청

셋째, 하나의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징수결정되었으나,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징수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타재산이자수입 비목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 잔액과 최종 정산까지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서, 교부된 예산의 집행 잔액이 존재하는 한, 두 비목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2022년도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발생 현황을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7개 시도 모두에 대하여 지원된 보조금 집행잔액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세종·울산·인천 및 충북 등 4개 시도에 대해서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징수결정을 실시하지 않았음.

집행잔액을 징수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있으면,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필수적으로 존재함에도 이자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관리라고 보임.

[2022년도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발생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지원대상	지원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2022년 감염병 예방관리 (격리입원치료비)	강원도	18,285,218	2,589,015	2,589,015	52,134	52,134
	경기도	129,352,662	19,730,678	-	426,698	
	경상남도	35,136,388	5,198,656	5,198,656	47,457	47,457
	경상북도	26,803,830	1,205,190	1,205,050	7,395	
	광주광역시	17,565,573	7,231,341	7,231,341	78,506	78,506
	대구광역시	20,599,556	453,323	-	49,330	
	대전광역시	16,956,182	6,374,992	-	17,530	
	부산광역시	41,636,306	9,542,852	-	8,769	
	서울특별시	123,585,359	1,752,241	1,752,241	20,706	20,706
	세종특별 자치시	2,550,682	95,829	-	-	
	울산광역시	12,198,607	3,108,127	-	-	
	인천광역시	34,381,371	-	-	-	
	전라남도	19,974,544	2,180,400	-	29,496	
	전라북도	19,928,236	202,517	-	2,501	
	제주특별 자치도	4,959,111	175,322	-	439	
	충청남도	20,219,417	878,002	878,002	6,113	6,113
	충청북도	12,376,587	1,316,386		-	

자료: 질병관리청

「국고금 관리법」 제10조는 수입징수관은 수입의 징수 시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입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4)]

따라서 향후 보조사업 결산 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정산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향후 집행잔액에 대한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 결정 시 반드시 이자수입도 함께 징수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수입징수관 또한 징수 결정된 금액이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 · 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세 출>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종료): 백신 활용도 제고 필요 및 일부 사업의 국회 감액 사업 증액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코로나19 면역력 지속 확보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하여 백신 구매 및 접종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4,564억 6,5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6,615억 2,400만원과 이·전용 등 감액 2,822억 3,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357억 5,500만원 중 7,613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1%)되고 160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83억 3,500만원이 불용됨.[5)]

[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56,465	456,465	661,524	△282,234	835,755	761,344	16,076	58,335	-
코로나19 백신 도입	215,078	215,078	658,757	△214,699	659,136	602,049	-	57,087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599	150,599	-	△29,882	120,717	120,717 [60,163]	-	-	-
이상반응 관리	69,515	69,515	491	△42,654	27,353	10,723	15,870	760	-
백신유통관리	18,492	18,492	452	4,008	22,952	22,952	-	-	-
예방접종 홍보	300	300	-	792	1,092	1,092	-	-	-
추진단 운영지원	228	228	-	70	298	239	-	58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도입’** 사업은 코로나19 면역력 확보 등을 위하여 백신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591억 3,600만원 중 6,020억 4,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3%)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원하기 위해 비용의 50%(서울 30%)를 국고로

5) 일반회계-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6434-300)(의료예방안전국)

보조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07억 1,700만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내역사업인 **‘이상반응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73억 5,300만원 중 107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39.2%)되었음.

내역사업인 **‘예방접종 홍보’** 사업은 백신 불안감 해소와 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억 9,200만원 전액(집행률 100%)이 집행되었음.

내역사업인 **‘추진단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9,800만원 중 2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2%)되고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코로나19 백신 도입사업은 편성된 예산 2,151억원으로 신규 구매계약을 하지 않고 각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기계약물량을 신규백신으로 전환 도입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으나, 도입된 백신의 폐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도 백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백신 도입 사업의 2023년도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으로 2,150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587억 5,700만원의 집행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편성된 규모의 예산과 거의 비슷한 규모인 2,146억 9,9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었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액 6,587억원 중 571억원이 불용된 것은 질병청이 각 제약사와 협의하여 도입예정 백신 계약물량 중 일부를 미도입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며, 이·전용이 발생한 것은 당초 2023~2024절기 접종에 활용할 신규백신 1,500만 회분을 2023년도 예산으로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질병청이 각 제약사와 협의하여 2022년 도입예정인 기계약물량을 2023년으로 공급일정을 조정하고 신규백신으로 전환·도입하기로 하여 절감된 재원을 치료제 구매 부족분 등을 위해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6,587억원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고, 매년 구입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입고되지 않은 백신을 신규 백신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음을 감안하면, 백신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

었음에도 정부는 예산안을 7,166억 9,500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5,016억 1,700만원이 감액된 것임을 감안하면, 질병관리청의 예산 집행 추이에 대한 예측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됨.[6)]

백신 사용현황을 보면, 전체 도입된 2억 1,679회분의 도입 물량 중 1억 4,083만회분이 사용되고, 2023년도 말까지 약 3,049만회분이 폐기된 상황임. 2023년도 말 현재 잔여물량으로 3,523만회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등으로 인한 20% 정도의 폐기율을 고려하면 이의 폐기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상황이 2022년 말 경에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 백신 폐기에 대한 우려가 2022년 중반부터도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 백신의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한번 도입된 백신은 반품 등이 불가능하고 결국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절하게 계상할 필요가 있음.[7)]

[2021-2023년 비축 백신 폐기 현황]

(단위: 회분)

구분	도입 물량	접종기관 사용량[2)]	해외 공여	폐기량							잔여물량	
				유효기간 경과	백신온도 일탈	백신용기 파손	사용가능 시간 경과	접종과정 오류	접종종료에 따른 미활용	소계	접종기관 잔여량	물류센터 재고량
계[1)]	216,789,550	140,828,183	10,245,680	30,232,753	39,599	9,398	24,985	2,302	179,599	30,488,636	2,400,212	32,826,839
화이자[3)]	127,914,690	89,826,872	1,396,380	6,430,283	20,393	4,296	18,564	1,960	162,092	6,637,588	2,196,372	27,857,478
모더나	54,484,490	30,098,898	618,000	19,808,433	3,554	3,232	5,620	157	10	19,821,006	96,215	3,850,371
노바백스	3,436,470	1,026,273	-	1,591,062	2,342	180	451	-	11,807	1,605,842	107,625	696,730
스카이코비원	609,300	49,110	-	131,320	1,210	40	190	20	5,150	137,930	-	422,260
얀센	3,411,000	1,384,020	-	2,026,125	270	30	10	5	540	2,026,980	-	-
아스트라제네카3)	26,933,600	18,443,010	8,231,300	245,530	11,830	1,620	150	160	-	259,290	-	-

주 1) 2021년~2023.12월말 기준 자료
2) 사용량 = 도입량 - 해외 공여 - 폐기량 - 잔여물량
3) 코백스를 통해 도입한 화이자 백신 42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3만 회분 포함
자료: 질병관리청

6) 질병관리청은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규 구매없이 기존 백신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500만 회분 신규 구매를 위한 선금만 반영하였으나, WHO 권고(23. 5.18.) 등에 따라 XBB.1.5 변이 대응 백신 구매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기계약물량을 신규백신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면 잔금 지급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만큼 추가확보가 필요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7) '안 먹고 안 맞는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폐기 우려 커진다(조선 비즈, 2022.09.17.)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집행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집행 추이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을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질병관리청은 백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물량축소·미도입, 해외공여, 유효기간 연장, 신규백신 전환도입, 대조·연구용 백신 제공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백신의 구입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백신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백신 활용도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안정화로 인하여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및 '이상반응 관리' 사업의 예산집행도 저조하였는데,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집행 관리가 요구됨.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1,505억 9,900만원 중 1,207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교부된 예산액 1,207억 1,700만원 중 601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05억 5,4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39.9%를 기록하였는데, 코로나19의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향후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상반응 관리 사업도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예산액 695억 1,500만원 중 426억 5,4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었으며, 예산현액 중 107억 2,3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쳐 158억 7,000만원이 이월되고 7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이상반응 관리 기타보전금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획			실적		
		인원	단가	예산액	인원	단가	2023년 총 지원액
피해 보상금	사망	25	482	12,050	6	416	2,499
	장애	-	-	-	-	-	-
	진료비 및 간병비	35,873	0.19	6,816	2,442	0.51	1,257
의료비	중증	41	5.6	230	23	5.2	120
	경증	418	1.2	502	1,061	0.47	483
사망자 위로금	사망위로금	340	100	34,080	2	100	200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881	10	8,810	13	9.38	121
합계		37,578	599	62,488	3,547	531.6	4,681

자료: 질병관리청

이상반응 관리 기타보전금의 지급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경증 의료비를 제외한

피해보상금, 중증 의료비, 사망자위로금 지원의 모든 내역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예상에 비하여 보상 지원 대상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보상 외에도 지원제도의 확대(2023. 9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사인 불명인 경우 위로금 지원 등)를 통해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으나, 예상에 비해 보상·지원 대상자가 적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 및 피해보상 신청·심의 건수 또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상반응 관리 사업은 2022년에도 예산의 집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의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봄.

[2022년도 이상반응 관리 사업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분		계획			실적		
		인원	단가	예산액	인원	단가	2022년 총 지원액
피해보상금	사망	4.2	459	1,920	15	430	6,460
	장애	11.4	241	2,737	-	-	-
	진료비 및 간병비	11,520	0.3	3,456	18,640	0.18	2,960
의료비	중증	1,944	6.33	12,304	59	3.97	234
	경증	4,536	1	4,536	38	2.73	212
사망자 위로금	사망위로금	84	50	4,200	8	100*	700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	40	10	400
합계		18,100	757.6	29,163	18,800	635	10,966

자료: 질병관리청

셋째, 예방접종 홍보, 추진단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연도 중 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방접종 홍보 사업은 예방접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액 3억원에 이·전용등 7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억 9,2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고, 추진단 운영지원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2억 2,800만원 대비 7,000만원 조정 증액된 2억 9,800만원 중 2억 3,900

만원이 집행되고 5,800만원이 불용됨.

이 두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시 각각 7억원(당초 예산안 10억원)과 5억 1,500만원(당초 예산안 7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023. 1월과 3월에 7억 9,200만원과 7,000만원의 세목조정 증액을 통해 집행하였음.[8)]

[예방접종 홍보 및 추진단 운영지원 사업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세목조정(2023.1.5.)	15	■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6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독려 메세지 확산 등 지속적인 홍보컨텐츠 생산을 위한 홍보대행사 계약
세목조정(2023.1.19.)	724	■ 동절기 접종 종료, '23년 접종 지속을 위해 홍보비 부족소요 충당 필요
세목조정(2023.3.15.)	7	■ '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환수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지출 소요
세목조정(2023.3.21.)	7	■ 피해보상 관련 심층자문단 운영 및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및 보상센터의 공기청정기 렌탈요금 지급 필요
세목조정(2023.6.3.)	5	■ '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 대상자들에 최종안내문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 지출 소요
세목조정(2023.11.4.)	20	■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행사 용역

자료: 질병관리청

8) 홍보예산의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 사업의 경우 2월 예방접종, 추가접종 등의 독려를 위한 홍보 및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홍보부스 관련 홍보대행사, 드라마 및 방송 프로그램 협업, 라디오 광고, 지하철·열차 광고 등을 통한 홍보에 예산을 집행하였음.
'추진단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공기청정기 렌탈 요금을 위한 임차료 전용, 오지급금 환수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지출, 코로나 백신 관련 회의 개최, 여비 기준 금액 상향에 따른 여비 충당 등에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예방접종 홍보 예산의 집행내역]

(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지출결의건명	자금이체금액
2023-02-23	2023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홍보사업	292,500,000
2023-03-07	2023 설연휴 동절기 추가접종 옥외광고 집행대금	115,734,990
2023-03-22	23년 1월 홍보대행사 용역	15,000,000
2023-04-12	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옥외광고 집행대금	120,000,000
2023-11-08	코로나19 예방접종 라디오 광고 집행대금 지급	60,000,000
2023-11-16	코로나19 예방접종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집행대금 지급	37,066,700
2023-11-30	코로나19 예방접종 열차내 영상 광고 집행대금 지급	40,000,000
2023-12-07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송 프로그램 협업 광고 대금 지급	91,960,000
2023-12-08	코로나19 예방접종 드라마 프로그램 협업 홍보에 대한 집행대금	48,400,000
2023-12-13	코로나19 예방접종 유튜브 영상 협업 홍보	30,000,000
2023-12-14	2023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홍보부스 관련 홍보대행사	20,000,000
2023-12-21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광고 집행대금	100,000,000
2023-12-21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사업 잔금 지급	121,890,000

자료: 질병관리청

헌법상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예산의 심의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유사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실제 집행가능성과 소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조 4,379억 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85억 2,200만원과 이·전용 증액 2,559억 4,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7,824억 6,800만원 중 1조 7,714억 6,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94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5,800만원이 불용됨.[9)]

[2023년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437,999	1,437,999	88,522	255,947	1,782,468	1,771,465	9,445	1,558	185,345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21,560	121,560	-	△54,160	67,400	66,812	1,038	-	-
유급휴가비	75,390	75,390	-	△75,390	-	-	-	-	-

내역사업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사업은 코로나 19 격리 등에 대하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74억원 중 668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었음.

9)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5232-330) (감염병위기대응국)

나. 검토의견

첫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중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전액이 이·전용 감액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 집행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집행가능성과 소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는 기타보전금 사업으로, 2023년도 편성된 예산액 753억 9,000만원이 2월 2일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전액 타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으로 이전용되었음.

[2023년도 유급휴가비의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3-02-0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621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20-02
자체전용 (23-02-1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557	검역관리 (6233-304)	220-01
자체전용 (23-03-09)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516	검역관리 (6233-304)	220-01
자체전용 (23-04-1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5,536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30-01
자체전용 (23-06-0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5,81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500		210-14
자체전용 (23-06-16)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528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4
			1049		330-01
자체전용 (23-08-0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25,2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자체전용 (23-08-0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8,34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30-01
자체이용 (23-08-09)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20,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자체전용 (23-10-19)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10-04	6,73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330-01
합 계			75,390		

자료: 질병관리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동 사업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위탁 실적을 보면, 2022년에 교부된 2,591억 3,900만원 중 9.5%인 246억 4,900만원만이 실집행되었으며, 이 중 집행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국민연금공단에 2,344억 9,000만원 남아있기 때문임.

[2023년도 유급휴가비 실집행현황]

(단위: 천원, %)

지자체(기관명)	교부액 (기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국민연금공단	- (259,139)	- (24,649)	- (234,490)	- (-)	- (9.5)

자료: 질병관리청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실집행되지 않고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전액 이·전용 감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자체가 사업 계획이나 추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수립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므로, 예산 계상 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유급휴가비 사업은 기타보전금 비목으로 위탁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재이월하였는데, 재이월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 번 이월한 예산은 가급적 이월하지 않도록 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유급휴가비 사업은 기타보전금(310-04) 비목으로 편성되어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보전금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보상금 등으로서, 해당법령에 위탁사업비의 근거가 없었음에도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일부 사업에서 추진한 예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였음.

질병관리청은 위탁 사업 추진 당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사와 감사원 등의 자문을 받아 2020년부터 기타보전금 비목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였고, 이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위탁을 진행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8조는 사고이월의 재이월을 금지하면서, 명시이월비·공익사업의 시행보상비 또는 경상경비 등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의

재이월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0)]

동 사업에서 위탁사업자인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예산액 2,591억 3,900만원 중 246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인 2,344억 9,000만원을 다시 차년도로 재이월하였는데, 기타보전금의 집행에 있어 한번 이월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재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질병관리청은 동 보전금을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 유급휴가비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예산의 재이월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가 모호하여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재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관련 근거의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나 건설·건축에 관한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11)]

---

10)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 ⑦ (생 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3. (생 략)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그 외의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이라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상의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다음으로 예산의 이월 규모에 비하여 재이월규모가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동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591억 3,900만원 중 246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90.5%인 2,344억 9,000만원 다시 차년도로 재이월하였는데, 2024년도 세입 예산 부족으로 과도한 예산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의 재이월을 실시한 것은 예산 전체적인 측면에서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또한 예산 재이월 후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재이월된 예산의 집행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고 봄.

따라서 향후 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법 규정 부합 여부,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집행 방식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궤도(軌道)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砂防) · 방풍(防風) · 방화(防火) · 방조(防潮) · 방수(防水) · 저수지 · 용수로 · 배수로 · 석유비축 ·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시설 ·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추진단계를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

가. 개 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및 독립적 감염병동 설치·운영을 위한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86억 9,700만원 중 59억 7,100만원이 전용 감액된 예산현액 127억 2,600만원 전액이 집행됨.[12)]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 (충청권) 충청남도, 순천향대천안병원, (호남권)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경북권) 대구광역시,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경상남도, 양산부산대병원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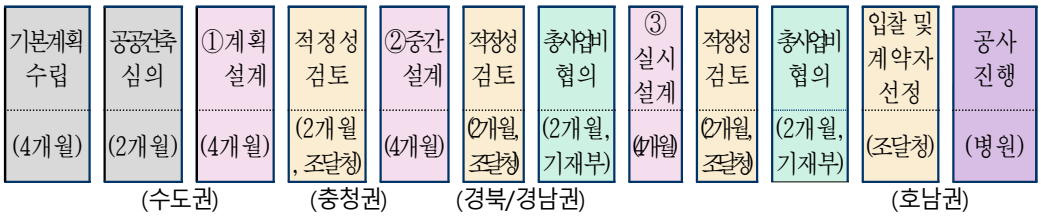
[2023년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8,697	18,697	-	△5,971	12,726	12,726	-	-	6,388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의 기본 업무 절차 및 진행상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건축 심의가 끝나면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등이 진행되고, 그 중간에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입찰과 계약자 선정 후 공사가 진행되는 체계로 구성됨.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총사업비) 기본 업무 절차 및 권역별 진행상황]



자료: 질병관리청

12)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6234-331)(감염병위기대응국)

나. 검토의견

첫째,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권역별 실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2023년도 예산현액 전액을 교부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원별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2017년 추진이 시작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만 총사업비 협의를 종료하고 입찰 및 계약자 선정 단계를 지나 공사를 준비중에 있는 상황일 뿐, 타 권역의 경우 설계조차도 전혀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현재까지 총사업비 협의와 설계, 적정성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호남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의 경우 적지 않은 규모의 이월을 실시해 왔는데, 집행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교부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경남권의 사업 추진 단계를 감안하지 않고 교부된 예산 대부분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예산 이월되는 것은 집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D)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12,726	12,726	12,726	13,466	26,192	44	12,726	38	17,718	8,428	0.3
충청남도 (순천향대 천안병원)	2,218	-	-	23,370	23,370	1	-	-	5,790	17,579	-
경상남도 (양산부산대병원)	2,218	-	-	23,316	23,316	1	-	-	5,790	17,525	-
대구광역시 (칠곡경북대병원)	1,502	-	-	9,918	9,918	2,074	-	-	7,720	124	-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	33	-	-	2,268	2,268	-	-	-	2,268	-	-

자료: 질병관리청

둘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없이 100% 국고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 보조 사업이고, 결국 지자체에 복지를 가져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자체와의 자부담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자부담분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지자체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국비 100%의 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없고 병원의 자부담만 일부(서비스부 공사비- 약제부, 급식부 등)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동 사업과 같이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의 경우 신속한 반납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3. 4월 말 현재 지원된 교부액의 국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권역별 전문병원이 완공되는 경우 장비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당국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추후 추가 권역별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액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가 전체의 감염병 대응이라는 목적 외에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권역별 대응을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주민의 건강 복지를 가져오는 정책이므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기 보다는 지자체 또한 사업의 추진에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현재 국비 100%로 추진되는 병원의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병원 시설에 필요한 장비비와 운영비 등 병원 운영비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동 협상에서 지자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종료): 사업 집행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용 과다 등

가. 개 요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자 격리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소요된 격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23억 8,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40억 2,600만원과 이·전용액 331억 7,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795억 8,400만원 중 511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4.3%)되고 284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만원이 불용됨.[13)]

[2023년도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감염병예방관리	26,240	26,240	34,327	33,033	93,600	64,997 (62,037)	28,508	95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2,385	12,385	34,026	33,173	79,584	51,155 (48,510)	28,428	2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이하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지자체로 신청하면,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치료비를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에서 치료비 심사 후 지급(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치료비 심사 후 지급(국비 100%)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기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검사 및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13)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관리(6131-303)(감염병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예산의 전액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전용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하였는데, 적정 수요를 예측하여 이·전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795억 8,400만원 중 511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284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당초 예산현액의 집행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10월 30일 자체이용(증) 72억 7,600만원 및 자체전용(증) 1억 900만원, 2023년 12월 27일 자체이용(증) 257억원 등 총 330억 8,500만원의 이·전용(증)을 실시하였음.

[2023년도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한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날짜	구분	금액
2023.10.30.	자체 이용	7,276
2023.10.30.	자체 전용	109
2023.12.27.	자체 이용	25,700
합 계		33,085

자료: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업 집행 저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전용 증액한 것은 2024년도 본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조사(2023. 10월)를 통해 확인된 치료비 부족분(308억원)과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 연장(25억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의 추가 지원을 위하여 총 33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재정소요 추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미지급액 (10월말 기준 조사) (a)	의료기관 미청구액 (b)	중증환자 추가소요액 (c)	실부족액 합계 (a+b+c)
예상 소요액	215	93	25	333

주 1) 215억원 = 330억원(지자체 미지급액, 10월말 기준 조사) - 115억원(지자체 간 조정을 통한 추가 집행)
2) 93억원: 의료기관 미청구액(치료비 발생은 했으나 지자체에 청구하지 않은 건) 조사 결과
3) 25억원 = 22,700명(1日 확진환자) x 0.1%(중증입원율) x 1,874천원(단가) x 120일(4개월) x 50%(국비보조율)
- 단가 1,874천원 = 2,840천원(중증 환자 평균 치료비 본인부담금) x 66%(평균 지원율)

자료: 질병관리청

그러나 2023년도 집행에서 발생한 102억 800만원의 불용액을 감안하면, 2024년도 집행 가능금액에 대한 추계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A)	실집행액(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10,320	33,300	43,620	16,308	27,313	-	16,308	63,372	79,679	43,107	26,364	10,208	54.1%

자료: 질병관리청

결국 2024. 4월 말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이·전용으로 확보된 이월예산의 집행이 모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2024.4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a)				실집행(b)				잔액(c=a-b)			
	22년 교부액	23년 교부액	24년 교부액		22년 교부액	23년 교부액	24년 교부액		22년 교부액	23년 교부액	24년 교부액
44,975	24,536	1,831	18,608	20,955	6,784	482	13,689	24,020	17,752	1,349	4,919

자료: 질병관리청

이용과 전용은 국가 예산의 집행에 있어 특수한 경우로서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시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면밀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예산의 이월 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월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로 보이므로,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임.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되지 않으면 불용되는 것이 적절한데도,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로 교부하지 않은 예산 273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2023년도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격리치료비 지원	10,320	33,300	43,620	16,308	27,313	-

자료: 질병관리청

그러나 동 예산의 이월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국가재정법」제48조에 규정된 이월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의 이월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14)]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이월에 대하여「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먼저「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대상이 어떠한 사업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 집행의 예외적 조치인 예산의 이월 대상 경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의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나 건설·건축에 관한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15)]

---

14)「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 ⑦(생 략)

1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궤도(軌道)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

그 외의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이라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다음으로 세입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 예산의 미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상 지자체와 지자체별 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을 교부없이 이월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의 활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세출예산의 이월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 집행의 대상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미교부 예산을 이월한 것은 적정한 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砂防) · 방풍(防風) · 방화(防火) · 방조(防潮) · 방수(防水) · 저수지 · 용수로 · 배수로 · 석유비축 ·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시설 ·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6.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사업단 운영비와의 중복 지원 부적정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은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출연사업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억 3,2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16)]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의 2023년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932	932	-	-	932	932	-	-	671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및 선정평가, 최종평가, 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2023년도 예산 편성 근거]

사업명	편성 근거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ㅇ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932백만원 ① (기획비) 400백만원 - 감염병 대응 R&D 신규사업 및 과제 상세기획 350백만원 - 감염병R&D 동향 조사·분석 등 50백만원 ② (평가비) 50백만원 - 사업별 신규과제 선정평가,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 등 수행 ③ (관리비) 318백만원 - 질병청R&D 성과조사분석·관리, 진도관리, 자문 수행 등 ④ (인건비) 134백만원 - 질병청R&D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인건비 ⑤ (간접비) 30백만원 - 질병청R&D 관리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복리후생 경비

자료: 질병관리청

16) 일반회계 - 질병관리청 출연연국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6631-303)(국립보건연구원)

나. 검토의견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로 관리하는 3개의 출연사업 중 2개 사업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 내 하위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평가관리비가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중복 지원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사업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사업단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을 실시하고, 관련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

그런데 세 사업 중 신변종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사업과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 사업은 신변종 mRNA 백신 사업단과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재단의 별도 사업단이 사업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으로 관리하는 연구개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도 집행액	진흥원 기평비	별도 사업단 운영비 집행액
주요 R&D 합계		14,558	932	
출연사업	신변종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사업 (신변종 mRNA 백신 사업단)	6,000		300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사업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재단	1,300		181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7,258		-

자료: 질병관리청

신변종 mRNA 백신 사업단은 2022년 출범한 후 과제를 심의하고, 과제를 지원하고 추진하였으며, 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을 관리하였음.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단은 2023년 출범한 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감시, 예측·차단, 진단, 방역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워크숍, 성과교류회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사업단 구성이 완료되었고, 사업단에서 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할 때, 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질병관리청은 별도의 사업단과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에 차이가 있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단 구성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단의 구성 이후에도 보건산업진흥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획평가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최초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단장 선출 등에 한정되어 있고, 보건산업진흥원의 두 사업과 관련한 2023년도 예산의 실제 집행내역에서도 사업단의 구성 이후에는 동 연구개발과 관련한 집행 실적을 찾기 어려움.[17]

사업단이 구성된 사업의 관리는 현재 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고, 사업단 자체가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 역할을 위하여 구성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단 구성이 적절한지, 별도의 출연연구개발사업에서 집행된 사업단 운영비와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간의 예산이 중복집행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17)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하여 보건산업진흥원은 최초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단장 선출 등의 역할을 하며 사업단 구성 이후 사업단 연차실적 점검 등 진도관리,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 사업단 최종평가 예정(2024.9.)이며,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사업단 컨설팅 등 연차실적·계획을 점검할 예정(2024.12)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7.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가. 개 요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을 조사하여 방역 및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하고, 백신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첨단백신 공정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86억 7,200만원 중 2억원이 전용 감액된 예산현액 84억 7,200만원 중 65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6%)되고 14억 5,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3년도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8,672	8,672	-	△200	8,472	6,572	1,454	447	2,200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7,672	7,672	-	△200	7,472	5,572	1,454	447	-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2,200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은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면역수준을 조사하고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4억 7,200만원 중 55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6%)되고 14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4,700만원이 불용됨.

또 다른 내역사업인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은 정부주도의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등을 위해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18) 일반회계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4-343)(국립보건연구원)

나. 검토의견

첫째,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 기반조성 사업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시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되어 질병관리청이 직접 센터를 설립하는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동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질병관리청의 3자 협의 끝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건축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2023년 9월 질병관리청은 질병청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인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신설하였으며, 2023년 12월 말 현재 연세대학교의 백신기술실용화사업단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안동대학교 교수 1인을 센터장으로 하여 이사회 9인, 직원 5인(2024.7.19.기준)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임.

동 사업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당초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되었던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건물의 건축이 아닌 재단의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과는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음.

[2023년도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 기반조성 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신기술 백신 공정 기술 기반조성	1,000	1,000	-	-	1,000	1,000 [0]	-	-	2,200
- 민간경상보조 (320-01)			-	530	530	530 [0]	-	-	400
- 민간자본보조 (320-07)			-	470	470	470 [0]	-	-	1,80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000	1,000	-	△1,000	-	-	-	-	-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기획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협의하였고, 건물 건립 이후 재단의 운영비는 2027년 건물의 완공 이후에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를 통해 별도의 국유재산을 형성하는 비용이 아니라 민간 재단에 운영비와 자산취득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유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건물의 완공 이후 재원부담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재단의 예산 편성 추이와 집행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둘째, 신규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센터가 질병관리청 소관의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동 보조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동 센터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1항[19]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또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경우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별도의 전문기관의 지정이 필요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 재단은 아직 연구개발을 위한 직원 채용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되었고, 재단 자체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민법상 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임.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봄.

---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 · 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 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 사용 ·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 · 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 · 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 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 ·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셋째,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계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예산의 집행도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의 202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항체양성률 조사 36억원, 감염병 면역도 조사 등 20억원, 면역학적 감시 20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2023년도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항체양성률 조사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3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고, 감염병 면역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17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면역학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5억원이 집행되었음.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의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발주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당초계획된 용역	2023년 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3,600	3,245	2,596	649	2023.8.~2024.8.
	감염병 면역도 조사기획 연구	200	198	180	-	2023.5.~2024.1
	2023년 필수예방접종 백신 면역도 조사	1,300	1,270	889	381	2023.7.~2024.7.
	감염병면역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개발 및 관리체계 연구	200	200	191	-	2023.5.~2023.12.
미계획된 용역	팬데믹 대응 면역학적 감시체계 구축	1,500	1,425	1,140	285	2023.9.~2024.9.
	백신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연구	100	100	80	20	2023.9.~2024.5.
	코로나19 XBB.1.5. 백신 접종 관련 검체 수집	60	58	46	12	2023.12.~2024.7.
	국내HPV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를 위한 면역원성 시험법 및 표준항체개발체계구축	400	400	320	80	2023.9.~2024.9.
	백신후보주분석을 위한 병원체 전장유전체 확보	100	88	88	-	2023.9.~2023.12.
	합 계	7,460	6,984	5,572	1,454	

자료: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액 74억 6,000만원 중 71.0%인 53억원은 당초 계획된 용역에 집행되었으나, 29.0%인 21억 6,000만원은 예산 편성당시 계획되지 않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용되었음.

이 과정에서 2023년도 예산현액 74억 7,200만원 중 74.6%인 55억 7,200만원의 계약만이 집행되고, 19.5%인 14억 5,400만원의 많은 이월이 발생하였음.

예산의 이월이 발생한 것은 2023년 상반기 일상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향후 유행 가능성이 높은 질환 및 신종 감염병 출현 대비를 위한 면역도 조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임

이에 과제를 재기획하여 발주 및 계약이 일부 지연되었고, 면역도 조사 과제의 특성상 임상검체 수집 및 분석에 장기간 소요되어 일부 과제의 계약기간이 이월되어 집행되었는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

8.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계획성 있는 전용 및 세목조정 필요

가. 개 요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사업은 감염병원인병원체의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국가 항균제 내성 진단 분석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표준화된 실험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18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8,700만원과 이전용 감액 2,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25억 600만원 중 223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3년도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21,840	21,840	687	△21	22,506	22,371	4	131	24,591

나. 검토의견

첫째,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사업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하나의 비목이 전용 감액되었다가 다시 조정 증액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의 집행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간의 집행 가능성만을 보고 전용 및 세목조정을 실시하였는데, 철저한 계획 마련과 다각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 예산이 계획성있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내역사업 대부분이 시험연구비와 일반연구비가 혼재되어 있어 연도 중 비목 간의 전용 및 세목조정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

비목간의 이전용 내역을 보면, 시험연구비에서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용역을 위해 전용·조정 감액하였다가 연말에는 다시 일반용역비에서 시험연구비로 조정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집행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0) 일반회계-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6331-301)(감염병진단분석국)

[동 사업의 2023년도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23.1.16.)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6331-301)	210-13	2,000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6331-301)	210-14	코로나19 변이 조기탐지를 위한 분석비 필요
세목조정('23.2.22.)		210-13	60		210-14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관리 지속
세목조정('23.3.7.)		210-13	1,500		210-14	코로나19 변이 조기탐지를 위한 분석비 필요
세목조정('23.3.10.)		210-13	30		210-14	교육용영상자료 제작
세목조정('23.4.14.)		210-13	10		210-14	홍보 등 재배정
자제전용('23.4.12.)		210-13	145		260-01 210-07	학술·평가 등 연구용역 집행
자제전용('23.5.3.)		210-13	140		260-01	CRE감염증 환자 진단검사비 확보
세목조정('23.6.20.)		210-13	5		210-09	방재실 냉난방기 설치 및 유지보수
세목조정('23.6.23.)		210-13	20		210-14	엠폭스 바이러스 완전장염기서열 해독
세목조정('23.7.20.)		210-13	9		210-14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수행
세목조정('23.8.9.)		210-13	13		210-14	해외 병원체자원 확보를 위한 수송비
세목조정('23.8.24.)		210-13	20		210-14	기 운영 중인 '2023년 코로나19 검사 관리' 용역을 연장
세목조정('23.9.13.)		210-13	16		210-09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관련 시설공사 및 장비 검교정
세목조정('23.9.21.)		210-13	5		210-09	감염병진단분석국 파이펫 교정 및 수리
세목조정('23.9.26.)		210-13	2		210-09	조달수수료 지급
세목조정('23.10.19.)		210-14	3.2		210-13	운영비 추가
전용('23.10.30.)		320-01	18	감염병예방관리 (6131-303)	330-0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20-03	3			
세목조정('23.11.7.)		210-14	20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6331-301)	210-13	코로나19 변이분석 수요 증가에 따른 재료비 추가 구매
자제전용('23.11.20.)		210-09	7		260-01	카바페넴내성 장내균속종(CRE) 유전자 분석
		210-13	34			
세목조정('23.12.13.)		210-14	1		210-13	엠폭스 바이러스 완전장염기서열 해독
세목조정('23.12.18.)		210-01	1		210-13	세균분석과 감염병 진단검사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자료: 질병관리청

또한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분석비 집행을 위해 예산을 증액 하였다가 연말에는 집행잔액을 재료비의 추가 구매 및 엠폭스 바이러스 해독 등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고, 다시 세균분석과 감염병 진단검사를 위한 분석업무를 위하여 예산을 조정증액하였는데,[21] 감액과 증액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집행에 계획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됨.

21) 질병관리청은 신규 변이 출현의 조기탐지를 위한 변이분석 확대에 따른 분석비 집행으로 예산을 증액 하였다가 연말에는 집행잔액을 변이분석에 필요한 재료비 추가 구매 및 엠폭스 바이러스 해독 등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고, CRE 감염병 진단검사 분석업무를 위하여 예산을 조정증액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사업의 내용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의 변경 증액과 감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계획성이 있는 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과도한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을 통해 집행한 자산취득비 및 시험연구비 집행 현황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집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을 통해 집행한 자산취득비와 시험연구비의 집행 내역을 보면, 남녀 휴게공간 구성을 위하여 매트리스 및 침대를 구입하거나 간행물 비치를 위한 잡지꽂이를 구입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데, 휴게공간의 구성은 표준실험실 운영 사업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고, 필요한 경우 기본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됨.

또한,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병원체자원은행의 홍보와 홍보부스 운영, 홍보용 물품 구매, 홍보용 달력 구매, 청장상 포상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매 등을 집행하였는데, 시험연구비의 경우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시험연구비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집행 사례]

(단위: 원)

건명	집행액
인쇄비 지급/5.4./2022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 발간 및 홍보	3,190,000
운송 및 설치비 지급/5.2./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홍보부스 물품 운송, 설치 및 철거	1,485,000
임차비 지급/4.27~28./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홍보부스 운영	3,300,000
소모성물품비 지급/4.6./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홍보용 우산 구매	4,200,000
소모성물품비 지급/6.22./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홍보용 필기도구 구매	4,042,000
운송 및 설치비 지급/7.12./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홍보부스 물품 운송, 설치 및 철거	1,265,000
운송 및 설치비 지급/10.19., 10.30./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홍보부스 물품 운송, 설치 및 철거	1,485,000
운송 및 설치비 지급/10.19., 10.30./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홍보부스 물품 운송, 설치 및 철거	2,240,000
임차비 지급/10.25.~27./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홍보부스 운영	2,500,000
소액(인쇄) 지급/고병/12.7/2024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홍보 달력 인쇄	4,180,000
[신종/소액] 청장상 포상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매	380,000

자료: 질병관리청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향후 동 사업의 집행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봄.

9.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시험연구비 비목의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전환 필요 등

가. 개 요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운영관리, 질병연구사업의 연구관리체계 개선, 질병연구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실시하는 연구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억 2,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300만원과 이·전용 등 감액 1억 2,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억 1,700만원 중 8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9%)되고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3년도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2,083	2,083	114	△129	2,068	1,896	38	133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1,023	1,023	23	△129	917	824	-	93

나. 검토의견

첫째,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내역사업의 R&D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 업무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사업과 유사한 집행이 확인되고 있고,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사업과도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사업은 출연금으로 집행되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개발(R&D)을 제외한, 연구원의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제안부터 평가, 관리,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인데, 국립 감염병 연구소 지원 사업 및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과 유사한 집행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간 중복이 우려됨.

22) 일반회계 -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6631-301)(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원’ 사업은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수행중인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관리 평가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10억 1,300만원 중 9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음.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R&D)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개발활동지원사업’은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2,100만원 중 9억 9,200만원이 집행되고 8,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5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세 사업의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2,083	2,083	114	△129	2,068	1,896	38	133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	300	300	713	-	1,013	913	-	100
국가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연구개발활동지원)	1,264	1,264	61	△103	1,221	992	83	145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 사업의 사업 과제 대상을 보면,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은 국립보건연구원 소관 R&D 사업 중 비감염병 R&D 사업 중심,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 사업은 감염병 R&D 사업 중심으로 하는데, 감염병 연구소 설립 이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에서 일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중복 집행이 있었음

또한,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사업에서도 연구활동지원을 위하여 R&D 발전계획 기획, 미래의료연구 기획자문위원회(연구과제 제안, 기획 평가),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과제 심의, 감염병연구센터 기획자문위원회 활동 등 여러 연구과제 운영주체의 인력지원 및 과제기획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질병관리청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 간 일부 예산 혼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업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사업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세부 내역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R&D)사업 (연구개발활동지원)	- 기관 R&D 사업의 기획,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연구실 안전관리 경비 지원 - 예산액 12억 6,400만원 중 992백만원 집행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R&D)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	-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사업 R&D 과제 기획·수행 및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공무직, 기간제,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원 - 예산액 3,132백만원 중 2,388백만원 집행

자료: 질병관리청

둘째, 시험연구비는 여러 비목이 합쳐져 있어 시험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사업의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은 평가수당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일반수용비로 비목을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의 여러 비목을 하나의 비목(210-13)으로 합친 비목임.

시험연구비의 경우 여러 비목이 합쳐져 있어 실제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비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의 비목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로 편성하기 보다는 해당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 집행 점검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사업의 시험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1,023	1,023	23	△129	-	917	824	894	803	-	93
- 시험연구비 (210-13)	233	233	-	-	-	233	218	233	218	-	15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사업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용역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되었는데, 시험연구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모두 평가수당으로 지출되었음.

평가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계상·집행하는 것이 예산 집행 점검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평가 수당의 경우에는 시험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목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시험연구비의 경우에는 이를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사업의 시험연구비 지출 내역 예]

(단위: 원)

건 명	집행액
질병관리연구평가수당	193,540,400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	5,350,000

자료: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총 괄>

10.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요

‘일반회계전입금’ 은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의 집행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비목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 1,800만원이 예산액으로 계상되어 전액 수납되었음.[23)]

[202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목명	2023								2024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전입금	3,818	3,818	-	3,818	3,818	3,818	-	-	8,347

동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는 병원의 영업수입인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의 세외수입·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병원의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 등에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2023년도 국립마산병원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특별회계-손익계정>	14,268	16,976	16,478	-	498	2.9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600	3,733	3,235	-	498	13.3
- 토지대여료	55	75	75	-	-	-
- 건물대여료	15	9	9	-	-	-
- 기타재산수입	1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542	1,542	-	-	-
- 면허료 및 수수료	-	-	-	-	-	-
- 기타잡수입	11	8	8	-	-	-

23)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일반회계전입금(91-911)(국립마산병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 잡수입(수입대체경비)	568	719	719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5,200	7,072	7,072	-	-	-
- 일반회계전입금	3,818	3,818	3,818	-	-	-

자료: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상 연례적으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을 적게 계상하고 지출을 크게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 행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수입의 과소계상과 집행의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봄.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최근 4년간 결산 실적을 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수납액이 많다는 의미는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고, 세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잔액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액 대비 과다하게 발생하는 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면, 일반회계 전입금 또한 계획보다 줄어들게 될 것임.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최근 4년간 결산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649	1,649	-	1,649	3,815	3,815	231.4	100.0	-	-
2021	2,466	2,466	-	2,466	5,830	5,830	236.4	100.0	-	-
2022	2,277	2,277	-	2,277	5,956	5,956	261.6	100.0	-	-
2023	5,200	5,200	-	5,200	7,072	7,072	136.0	100.0	-	-
2024	1,250	1,250	-	-	-	-	-	-	-	-

자료: 질병관리청

먼저 세입측면을 보면, 토지대여료의 경우 연례적인 과소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 5,500만원 대비 7,500만원이 수납되었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예산 계상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대응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손실보상 개산급이 지급되어 15억 4,200만원이 수납되었음.

특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4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예산액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으나, 매년 12억원에서 37억원까지의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의 적정한 계상이 필요할 것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4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	-	-	-	1,577	1,577	-	100.0	-	-
2021	-	-	-	-	3,716	3,716	-	100.0	-	-
2022	-	-	-	-	1,225	1,225	-	100.0	-	-
2023	-	-	-	-	1,542	1,542	-	100.0	-	-
2024	-	-	-	-	-	-	-	-	-	-

자료: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의 경우에도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으로 인한 초과지출승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입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초과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세출 측면을 보면, 인건비나 기본경비에서 예산액 대비 약 9%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마산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 사업에서도 예산액 대비 13.8%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의 2023년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조정 등	초과지출 승인					
합 계	14,268	-	107 △107	126 △126	612	14,880	13,438	-	1,442	15,131
인건비	7,063	-	△107	-	-	6,956	6,327	-	629	7,259
기본경비	1,222	-	-	33 △33	-	1,222	1,060	-	162	1,164
임상연구비 (R&D)사업비	93	-	-	-	-	93	90	-	3	92
건강보험부담금	263	-	-	-	-	263	238	-	25	272
병원관리 및 운영	4,311	-	-	93 △93	-	4,311	3,718	-	593	4,037
국립마산병원수입 대체경비	103	-	-	-	612	715	706	-	9	760

사업명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24 예산
		전년도이월액	이용이체	조정등	초과지출승인					
정보화시스템구축	184	-	-	-	-	184	163	-	21	189
공무원연금부담금	1,027	-	107	-	-	1,134	1,134	-	-	1,356
감가상각비	1	-	-	-	-	1	1	-	-	1
당기순이익	1	-	-	-	-	1	1	-	-	1

자료: 질병관리청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 사유는 예산편성 시의 입원환자 추계에 비해 실제 입원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조제투약 및 구호교정 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이 주요 요인인데, 임원환자의 감소는 결국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세입의 부족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진료수입 증가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1-2023년 국립마산병원의 환자 현황]

구 분	외래(명, 연인원)	입원(명, 연인원)
2021년	3,836	23,026
2022년	2,423	15,811
2023년	1,896	16,990

자료: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의 2023년도 말 기준 정원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정원 116명 대비 13명의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 부족은 결국 병원의 질적 저하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국립마산병원의 정원대비 현원 현황]

(2023. 12월기준, 단위: 명)

직렬 / 구분	계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일반직													
			의사	약사	의료기술	보건	전산	간호		행정	사회	공업	시설	연구	간호조무	운전
								전일	시간선택							
정원	116	1	7	2	8	6	2	59	1	8	2	1	1	2	14	2
현원	103	1	2	2	6	12	2	53	0	4	1	0	1	2	15	2
과부족	△13	0	△5	0	△2	6	0	△6	△1	△4	△1	△1	0	0	1	0

자료: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너무 커지면,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적 자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존립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본계정)】

<세 출>

11.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은 위험률이 높고 전염력이 강한 내성결핵환자의 집중 치료와 의료진·환자 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내성결핵균에 노출된 의료진과 일반결핵환자들의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는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143억 2,2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5억 5,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48억 7,500만원 중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0.0004%)되고 148억 6,900만원이 불용됨.[24)]

[2023년도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	15,183	15,183	1,410	-	16,593	1,554	-	15,039	14,248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14,322	14,322	553	-	14,875	6	-	14,869	14,119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1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6월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 결과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늘어났고, 총 사업비는 388억 8,100만원으로 증가되었음.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2019~2025년 (총 7년)	38,881	○ 건축연면적 7,076㎡(지상 3층, 지하 1층) ○ 1인실 음압 40병상, 외래부, 영상의학과, 임상검사실, 기계전기실 등

자료: 질병관리청

2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목포병원 - 자본)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4761-300)(국립목포병원)

나. 검토의견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 집행이 저조하여 계획달성이 부진하므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절차 및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는 최초 2019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1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증축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고, 2021년 6월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적정성 검토 진행,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이후 2023년 6월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2024. 6월 현재 다시 실시설계 후 공사비와 감리비 등의 사업비 증가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연례적인 예산액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의 사업 추진 이력]

연도	사업추진 이력
2019년	○ 사업금액 : 1,613백만원 ○ 증축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사업 미착수 ○ 설계비 등 사업비 1,613백만원 전액 불용(2021년, 2022년 예산으로 재편성)
2021년	○ 사업금액 : 1,098백만원(2021년) - 집행 33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 476백만원, 감리비 불용 189백만원, 집행잔액 94백만원 불용 ○ 추진경과 - 2021. 6. 설계업체 선정 - 2021. 11. 계획설계 완료 및 적정성 검토 요청(조달청) ○ 지연사유 : 계획설계 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예산 초과로 설계 일정 지연 * 계획설계 공사비 392억원(사업예산 267억원 대비 125억원 증)
2022년	○ 사업금액 : 639백만원 - (본예산) 집행 1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 553백만원, 집행잔액 71백만원 불용 - (전년도 이월예산) 476백만원 ○ 추진경과 - 2022. 2.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2022. 10. 중간설계 완료 및 적정성 검토 요청 *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예산 변경 협의에 따른 용역 중지 - 2022. 12.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조달청)
2023년	○ 사업금액 : 14,322백만원 - (본예산) 집행 6백만원, 집행잔액 14,869백만원 불용 - (전년도 이월예산) 553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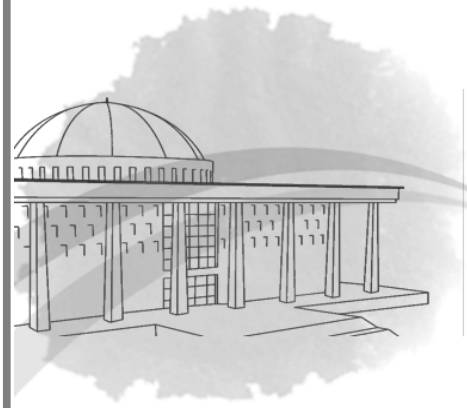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연도	사업추진 이력
	○ 추진경과 - 2023. 3. 총사업비 자율조정(낙찰차액 감액) 완료 - 2023. 6.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기획재정부) - 2023. 12. 실시설계 완료 및 적정성 검토 요청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예산 변경 협의에 따른 용역 중지 ○ 지연사유 : 중간설계 완료 후 공사비 예산 초과분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 일정 지연 * 중간설계 공사비 355억원(사업예산 267억원 대비 88억원 증)
2024년	○ 사업금액 : 14,119백만원 - (본예산) 공사비 13,343백만원, 감리비 757백만원, 시설부대비 19백만원 ○ 추진경과 - 2024. 2.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2024.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 중(기획재정부) *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예산 조정 협의 진행 중 ○ 추진계획 - 2024. 11. 공사입찰 및 시공사 선정 완료 예정 - 2024. 12. 공사착공 예정

자료: 질병관리청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차년도 수입으로 수납되게 되고 계속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에는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세계잉여금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이 결핵의 전파 방지와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에 대한 총사업비 예산 조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찰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223억 8,300만원(9.4%)이 많은 2조 5,894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5억 1,600만원(3.5%)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168,696	1,168,696	1,519,348	350,652	1,336,733	1,336,733	1,590,300	253,567	70,952
기 금	1,024,868	1,024,868	982,610	△42,258	1,030,358	1,030,358	999,174	△31,184	16,564
총수입	2,193,564	2,193,564	2,501,958	308,394	2,367,091	2,367,091	2,589,474	222,383	87,516

문의 :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852억 9,300만원(△6.2%)이 적은 11조 8,782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5억 5,900만원(△1.5%)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838,864	10,427,452	11,054,426	626,974	11,591,795	11,591,795	10,811,152	△780,643	△243,274
기 금	1,014,051	1,024,996	1,009,426	△15,570	1,056,516	1,071,791	1,067,141	△4,650	57,715
총지출	11,852,915	11,452,448	12,063,852	611,404	12,648,311	12,663,586	11,878,293	△785,293	△185,559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조 8,161억 8,100만원으로, 7조 7,151억 9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6조 9,690억 3,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0.3%)되었으며, 142억 1,3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고 7,318억 5,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278	5,278	-	5,278	68,917	57,849	-	11,06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75	575	-	575	2,542	2,448	-	94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575	575	-	575	2,542	2,448	-	9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4,348	74,348	-	74,348	125,740	110,320	-	15,420
- 투자계정	74,348	74,348	-	74,348	125,740	110,320	-	15,420
환경개선특별회계	6,734,231	6,734,231	-	6,734,231	7,493,078	6,778,694	14,213	700,17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49	1,749	-	1,749	24,832	19,728	-	5,104
- 지역자율계정	1,500	1,500	-	1,500	24,041	18,951	-	5,090
- 지역지원계정	249	249	-	249	263	257	-	6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6	6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522	514	-	8
합 계	6,816,181	6,816,181	-	6,816,181	7,715,109	6,969,039	14,213	731,85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8조 6,185억 500만원으로, 이 중 17조 2,386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6%)되고 1,846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1,952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7,037,787	7,037,787	76,786	-	-	7,114,573	6,614,961	53,981	445,6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119	40,119	1,186	-	-	41,305	41,305	-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40,119	40,119	1,186	-	-	41,305	41,305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105,833	3,105,833	271	-	-	3,106,104	2,424,463	336	681,305
- 투자계정	3,105,833	3,105,833	271	-	-	3,106,104	2,424,463	336	681,305
환경개선특별회계	6,734,231	6,734,231	89,358	58	-	6,823,647	6,630,475	130,365	62,8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32,876	1,532,876	-	-	-	1,532,876	1,527,403	-	5,473
- 지역자율계정	136,236	136,236	-	-	-	136,236	133,906	-	2,330
- 지역지원계정	1,352,544	1,352,544	-	-	-	1,352,544	1,349,551	-	2,993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9,739	39,739	-	-	-	39,739	39,589	-	150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357	4,357	-	-	-	4,357	4,357	-	-
합 계	18,450,846	18,450,846	167,601	58	-	18,618,505	17,238,607	184,682	1,195,21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3,072억 6,300만원으로, 1조 6,994억 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2,502억 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5.6%)되었으며, 6억 2,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고 896억 9,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석면피해구제기금	43,894	43,894	43,469	41,259	73	2,137
한강수계관리기금	682,477	682,477	745,360	620,357	393	46,01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8,206	248,206	496,790	243,380	59	21,265
금강수계관리기금	181,648	181,648	240,321	185,162	73	11,74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51,038	151,038	173,463	160,046	30	8,537
합 계	1,307,263	1,307,263	1,699,403	1,250,204	628	89,69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3,175억 3,900만원으로, 이 중 1조 2,502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6%)되었고 74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4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석면피해구제기금	43,894	43,894	63	43,957	41,259	104	78
한강수계관리기금	682,477	682,477	5,713	688,190	620,357	4,528	4,758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48,206	248,206	2,743	250,949	243,380	1,514	666
금강수계관리기금	181,648	181,648	1,451	183,099	185,162	1,024	1,57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51,038	151,038	306	151,344	160,046	316	359
합 계	1,307,263	1,307,263	10,276	1,317,539	1,250,204	7,486	7,44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환경부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2,578억 6,600만원이 감소한 133조 5,035억 2,800만원으로, 이는 사회기반시설이 73조 9,447억 9,8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05억 2,000만원 증가한 964억 1,900만원으로 유동부채 88억 5,3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2,578억 6,600만원이 감소한 133조 5,035억 2,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환경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0조 9,201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671억 2,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0조 6,070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40억 3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환경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33,503,528	134,761,394	△1,257,866	△0.9
		유동자산	1,203,254	1,194,810	8,444	0.7
		투자자산	1,197,973	1,307,402	△109,429	△8.4
		일반유형자산	57,013,998	57,506,320	△492,322	△0.9
		사회기반시설	73,944,798	74,610,355	△665,557	△0.9
		무형자산	130,505	129,514	992	0.8
		기타비유동자산	13,000	12,993	6	0
	부 채		96,419	85,899	10,520	12.2
		유동부채	90,419	81,566	8,853	10.9
		장기차입부채	737	1,088	△351	△32.2
		장기충당부채	4,845	420	4,425	1054.5
		기타비유동부채	146	2,826	△2,679	△94.8
	순자산		133,503,528	134,761,394	△1,257,866	△0.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0,920,117	12,687,241	△1,767,124	△13.9
	재정운영순원가		11,568,071	13,332,054	△1,763,983	△13.2
	재정운영결과		10,607,067	12,391,070	△1,784,003	△14.4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환경부 일반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관리기금·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5조 385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3,64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3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12억원 전출되었음.

[2023회계연도 환경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 환경부는 ‘더 나은 환경, 향상된 삶의 질과 성장동력 확산’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탄소중립·순환경제 및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홍수·가뭄으로부터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을 중점투자 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3년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말 기준 누적 미집행 금액이 9,680억 2,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부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의 수탁사업자의 공정률을 고려하지 않는 보조금 재교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함.

둘째, 환경부는 2022년 하천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이로 인한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하고, 예산현액 대비 735.0% 증가한 금액이 징수결정되었으므로, 향후 환경부는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하천업무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을 추가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셋째, 환경개선특별회계 2023년 법정부담금 수납액은 환특회계 자체세입(2023년 결산액 1조 7,402억원)의 40.5%인 7,050억 6,3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회 결산심의의 연례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2.9%로 저조하므로,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미집행 금액 과다 및 준공사업 정산 필요 등

가. 개 요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시설·폐기물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수생태시설 등의 설치·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본보조예산을 교부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고보조금(환경부)과 매칭 지방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

환경부의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폐기물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수생태시설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과 정산은 환경부(국고보조금) → 지자체(국고보조금+지방비 매칭) → 한국환경공단(집행 및 정산) → 지자체(국고보조금+지방비 정산) → 환경부(국고보조금 정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동 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은 1조 608억 9,300만원으로, 이 중 8,723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2%)되고, 1,094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91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내역 조정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계	**876,700**	**204,486**	**△20,293**	**1,060,893**	**872,310**	**82.2**	**109,423**	**79,160**
수생태시설 설치지원	191,661	44,572	△30,662	205,571	171,241	83.3	22,335	11,995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448,968	121,384	35,812	606,164	486,601	80.3	68,720	50,843
환경시설 민자사업 지원	883	15	-	899	813	90.4	-	86
폐기물시설 설치지원	233,768	38,415	△25,443	246,740	212,327	86.1	18,368	16,045

2)「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내역 조정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설계VE사업	1,420	-	-	1,420	1,280	90.1	-	140
시설설치지원 건설안전사업	-	99	-	99	48	48.5	-	51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누적 미집행 금액이 9,680억 2,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부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의 수탁사업자의 공정률을 고려하지 않는 보조금 재교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매칭)를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하고, 실제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공정률과 무관하게 지자체 차원의 실집행률은 100.0%로 보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수행자인 한국환경공단의 결산자료를 기초로 상세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국환경공단 2023년 수탁사업자금 명세서에 따르면, 동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에 수령한 예산은 7,980억 7,300만원임. 한국환경공단은 전년도 이월액(연초자금) 1조 1,169억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9,150억 2,600만원 중 9,025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2023년 말 누적 수탁사업자금은 9,680억 2,300만원임.

[2019~2023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자금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초 자금 (A)	수령(B)	집행(C)	반환(D)	기타(E)	연말 자금 (A+B-C-D+E)
2019	1,565,621	665,809	715,483	90,666	35,747	1,461,028
2020	1,461,028	673,195	687,956	139,562	15,330	1,322,035
2021	1,322,035	797,422	743,602	78,547	16,764	1,314,072
2022	1,314,072	693,341	859,041	54,487	23,068	1,116,953
2023	1,116,953	798,073	902,518	96,309	51,824	968,023

주 1) 기타 = 예금이자 등
2)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액에는 동 사업 예산 집행액 외에 공단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출결산 내역과 차이가 있음
자료: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이와 같은 공단의 과다한 자금 유보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공단의 보유자금 규모는 2019년 1조 4,610억 2,8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9,680억 2,3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동 사업의 1년 예산(2023년 기준 8,767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임.

이러한 공단의 연말 과다 자금 유보의 주요 사유는 지자체가 조기집행실적 달성 등을 위해, 공단의 연차별 집행 소요 이상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교부하고 있기 때문임. 2023년 이월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이 기말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299개(9,680억원) 중 사업추진현황과 무관하게 지자체가 사업비를 추가 교부한 사업이 135개(5,385억원)임. 이는 전체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기말 보유 자금의 55.6%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 기말 보유자금 사유별 구분]

보유 사유	사업수(건)	금액(억원)
지자체의 사업비 추가 교부	135	5,385
계약기간 미도래	19	1,111
인허가 및 민원 등 사업 지연	20	1,100
사업계획 변경	19	701
사업중지(민원, 소송 등)	4	118
준공(미정산 포함)	102	1,265
합계	**299**	**9,680**

자료: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실제로, 2023년 한국환경공단의 수탁사업자금 명세서에 따르면, 15개 사업의 경우 2023년 집행액이 0원임에도 지자체로부터 누적된 교부액 및 당기 교부액이 과다한 상황이었음.

일례로,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00억원인데, 이미 전기 이월액 101억 6,600만원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5,000만원을 추가교부하였으나 2023년에 집행액은 0원이었음.

[2023년 전기이월액 및 당기 증가액(지자체 교부액)이 존재하나 집행액이 0원인 사업목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당기 감소	2023년 집행액	이자 등 기타증감	기말 잔액
진안군폐자원에너지화시설민간투자	1,250	10,166	-	-	334	11,750
김해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730	-	-	-	-	730
군산2 국가산단 폐수시설(2단계)	600	-	-	-	-	600
울진군망양봉산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	66	1,571	-	-	-	1,637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신설	6,401	1,552	-	-	216	8,169
하포,용동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	562	1,865	-	-	-	2,427
옥천 군북 항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100	746	-	-	1	848
진천 광혜원 하수관로	373	1,920	-	-	35	2,329
문산,파주,법원 하수관로정비	67	2,128	-	-	65	2,260
진천군백곡2 배수분구 도시침수대응	423	43	-	-	-	466
청주시 노후관 개량사업(2023)	10,567	-	-	-	185	10,752
보은군 도시침수 예방사업(삼산)	255	-	-	-	-	255
부산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1,800	3,637	-	-	148	5,585
김천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6,562	1,368	-	-	34	7,963
하동군 친환경에너지타운	700	2,037	-	-	57	2,794

자료: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또한 2022년 말 잔액인 전기이월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과다한 사업 중 당기 집행액이 과소하거나, 당기 집행이 되었어도 지자체의 2023년 수탁금액 교부로 2022년 말 잔액보다 큰 금액이 이월된 사례가 14개 있음.

[전기이월액(2022년말 잔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기말잔액이 전기이월액보다 큰 목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당기 감소	2023년 집행액	이자 등 기타증감	기말 잔액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	20,500	27,975	-	11,987	858	37,346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17,326	22,370	-	17,824	704	22,576
왕숙천생태하천복원	0	19,594	-	-	634	20,228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5,525	18,463	-	6,064	576	18,500
파주시운정영장두포하수도정비사업	11,490	18,102	-	7,259	331	22,664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당기 감소	2023년 집행액	이자 등 기타증감	기말 잔액
이천시부발읍면설성 공공하수	9,846	17,336	-	9,757	554	17,979
홍천군 서면 농어촌용수개발(2단계)	6,000	15,898	-	4,614	521	17,804
포항시하수슬러지 에너지화	0	15,846	-	-	465	16,311
파주시금촌(조리,월롱) 하수관로 파주문산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2차) 파주공공하수설치(용미공공하수)	6,898	15,432	-	4,516	256	18,070
정선용탄천생태하천복원	177	14,842	-	120	428	15,328
제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29,983	14,762	-	24,643	359	20,462
안성 금석천 통합오염지류 개선사업	10,130	12,525	-	1,289	545	21,911
옥천 노후차집 관로정비(1단계)	14,810	10,335	783	5,900	195	18,657
진안군폐자원에너지화시설민간투자	1,250	10,166	-	-	334	11,750

자료: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국고보조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금이 교부 이후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전문기관에 유보되어 있을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공단의 과다한 보유 자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실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상황,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적정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준공 이후에도 집행잔액이 장기 미반납되어 한국환경공단의 현금자산으로 보유된 경우가 다수 있는데, 조속한 정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국고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5월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이전 준공이 완료된 16개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221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음.

[2020년 이전 준공완료 되었으나 집행잔액 미반납된 사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시행주체	준공연도	미반납액
수생태	평택현곡산단폐수	경기 평택	2012	26
수생태	강화가축분뇨처리시설	인천 강화	2015	642
상하수도	이천장호원 하수고도 사업비	경기 이천	2013	△29주
상하수도	김해시(도시침수)	경남 김해	2017	2,189
상하수도	의령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경남 의령	2018	661
상하수도	거제 장승포처리구역 하구관로정비	경남 거제	2019	4,999
상하수도	부안군(줄포 도시침수)	전북 부안	2019	1,325
상하수도	세종시 조치원 공공하수 증설	세종	2020	2,046
상하수도	세종시 부강면 공공하수 및 하수관로	세종	2020	5,920
상하수도	세종시 농어촌마을하수도(3개소)	세종	2020	1,678
폐기물	김해시 음식물	경남 김해	2014	0.7
폐기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전북 전주	2016	1,632
폐기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경북 포항	2019	△66주
폐기물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경상북도	2019	67
폐기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경북 포항	2019	659
폐기물	음성 하수찌꺼기 총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충북 음성	2020	445

주) 미반납액은 통장 잔액이 아닌 수탁예금(회계계정) 기준, 일부 사업은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자금을 대체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반납액이 음수로 표기됨

자료: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시설물의 인계인수 후 2개월 이내 정산서를 지자체에 송부하고 정산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잦은 담당자 변경・반납계좌 미회신 등 행정절차를 사유로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의 반납기한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3)4)]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럼에도 사업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도 집행잔액이 미반납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보조사업자 정산관리에 대한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집행잔액 반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12. 자치단체보조사업

(9)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늦어도 사업집행 완료 다음해 중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세 입>

2. 기타경상이전수입: 물관리 일원화 이후 하천사업 보조금 정산액 등 세입 계상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397억 3,700만원 중 309억 700만원이 수납(수납률 77.8%)되고 88억 3,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5][6]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4,759	4,759	39,737	30,907	-	8,830	77.8	13,333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2022년 하천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현액 대비 735.0% 증가한 금액을 징수결정하였으므로, 향후 환경부는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하천업무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을 정밀하게 계상할 필요가 있음.

---

5)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후 보조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0년 12월 31일「정부조직법(법률 제17814호)」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기능 및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음.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하천계획과,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국 등 인력 141명, 2021년 하천관리 예산 8,126억 원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하천정비 등 하천 사업 관련 보조금의 정산·반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2022년 이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급증하였음. 2023년의 경우도 예산현액 47억 5,900만원 대비 735.0% 증가한 397억 3,7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음.

[2019~2023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9	350	350	-	350	2,053	2,053	585.6	100.0	-	-
2020	350	350	-	350	5,979	5,979	1,708.3	100.0	-	-
2021	350	350	-	350	6,617	6,245	1,784.3	94.4	372	-
2022	2,685	2,685	12,028	14,713	61,201	52,362	1,950.2	85.6	8,839	-
2023	4,759	4,759	-	4,759	39,737	30,907	649.4	77.8	8,830	--
2024	13,333	13,333	-	-	-	-	-	-	-	-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2년 하천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이관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을 예측할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증가분을 예측하기 힘들었고, 수납액의 평균으로 산출하면 수년 안에 적정 세입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함. 환경부는 2023년 예산의 경우 과거 3개년 수납액 평균에 준하여 산출하였으며, 2024년에는 과거 5개년 수납액 평균으로 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 편성된 예산보다 큰 금액이 수납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하천 관련 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매년 지자체보조금이 90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보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사전에 고려했다면 최근의 수납액에 가중평균을 두는 등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7]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하천 관련 보조사업의 정산액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세입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7) 2022년 보조금 936억원, 2023년 보조금 1,053억원, 2024년 보조금 1,200억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증가하는 추세임.

<세 출>

3.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신규): 연내 착공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은 서울시 도림천 일대 하천 하류부 침수피해 반복 발생에 따라 지하 하수저류시설인 대심도 방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억 3,1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8)]

[2023년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3,031	3,031	-	-	3,031	3,031	-	-	12,500

동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 하류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9)] 도림천 일대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히 빗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5,005억원을 투입하여 한강과 연결되는 도림천 방수로와 대방천 방수로를 설치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로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에 보조율 25%로 교부됨. 2023년도 기본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비가 30억 3,100만원 편성되었고, 환경부는 이를 보조사업자인 서울특별시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8) 일반회계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509)(수자원정책관)

9) 도림천 유역은 도림천과 그 지류하천인 대방천, 봉천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천 상류부(관악산)의 급경사로 인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 2001년, 2010년, 2011년 집중호우 기간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2년 8월 집중호우 기간에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음.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주요 내용]

○ 사업기간: 2023~2027년→2023~2028년 ○ 총사업비: 3,000억원→5,005억원 ○ 사업시행주체/지원형태: 서울특별시/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율 25%) ○ 사업내용: 도림천 일대 대심도 지하방수로 공사를 통하여 강우로인한 도림천 하천수를 한강으로 배출하는 사업 - 지하방수로(빗물배수터널) : 도림천 방수로 D=9.8m, 신대방 보라매공원(유입부)~노량진 수도자제신터(유출부) L=10.0km (저류용량 38.0만㎥) - 유수지 : 7,000㎥ - 펌프장 : 1,800㎥/min ※ 빗물 흐름: 도림천·대방천 → 유입부 → 방수로 → 유수지(유출부) → 펌프장 → 한강

주) 서울특별시는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과 함께 강남역 일대(5,386억원), 광화문 일대(3,298억원) 빗물터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세부사업-내역사업: 하수관로정비(1132-312) - 대심도하수저류시설)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결과 총사업비가 5,005억원(당초 3,000억원)으로 증액되어 사업계획이 순연된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당초 동 사업은 총사업비 3,000억원(국비 750억원, 시비 2,250억원)으로 예상되었음.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7호[10]에 근거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

이후 사업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는 2022년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11]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3년 5월 기본계획 수립 결과 총사업비가 3,000억원에서 5,01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이에 따라 2023년 7월 20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었음.

---

10)「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11) 용역비 19억 7,900만원은 서울특별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음. 2022년 9월 입찰공고, 10월 제안서 접수 및 평가, 11월 용역 계약을 하였음. 당초 계획은 2023년 5월까지 용역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용역계약기간을 연장한 상황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계획 변경]

구분	당초	변경
규모	연장 5.2km, 직경3.2~8.5m, 저류량 18.7만m^3	연장 4.5km, 직경 9.8m, 저류량 38만m^3
총사업비	3,000억원	약 5,005억원(2,005억원 증액)
사업기간	2023~2027년	2023~2028년

자료: 환경부

이후 2023년 10월 말 KDI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었고, 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인 서울특별시가 2023년 말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조금 전액을 11월에 교부하였음.

그러나 조달청 공고 이후 사업이 2차례 무응찰 유찰됨에 따라 환경부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재협의를 통해 2024년 2월 5,005억원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였고, 이후 사업 공고에서 1개 건설사 단독입찰로 서울시는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실집행액은 없고, 2024년 5월말 현재 환경부는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을 위한 절차 진행 중임. 이는 환경부의 2023년 계획보다 10개월 지연된 것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계획 추진 계획]

구분		당초	2023.11월 기준	2024.5월 기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	2022.9.28.	2022.9.28.	2022.9.28.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2022.11.15.~2023.5.15.	2022.11.15.~2023.5.15.	2022.11 ~2023.1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23.3.	2023.3.	2023.3.
	공기 적정성 심의	2023.4.	2023.4.	2023.4.
건설공사	발주방침	2023.5.	2023.5.	2023.11.
	설계・시공 입찰공고(조달청)	2023.6.	2023.11.	2023.12.~2024.4.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2023.7.~ 10.	2023.12.~2024.4.	2024.5.~2024.9.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023.11.	2024.5.	2024.11.
	우선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	2023.11.~2024.5.	2024.5.~2024.11.	2024.12.~
	본공사 시행	2024.6.~27.12.	2024.12.~2028.5.	2025.10.~2028.12.

자료: 환경부

그런데 이러한 환경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된다고 하여도 ① 현재 환경부는 기본설계 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37조 제2항제6호는 “발주청은 차명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설계기간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② 현재 사업지 일대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적 지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2024년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순연될 것으로 보이고, 연쇄적인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환경부는 2024년도 내에 우선시공분 착공이 진행되어 연쇄적인 사업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 댐 시설안전시스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쇄적 용역 준공 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은 국가댐(37개소)에 대하여 GPS・실시간 계측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이용한 댐 안전 진단체계 및 댐 시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9억 1,400만원이 전액 민간대행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교부되었음.[12)]

[2023년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댐 운영관리	85,418	85,418	-	-	85,418	85,418	-	-	118,900
스마트댐 안전관리	16,914	16,914	-	-	16,914	16,914	-	-	51,732

동 사업은 2020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국가 댐 안전관리를 위해 ① 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② 드론기반 안전점검, ③ 댐 시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댐에 대한 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계 및 계측데이터 보정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항공・수중 드론을 활용하여 댐 시설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13)] 기반의 시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12) 일반회계 - 댐 운영관리(5231-301)(수자원정책관)

13) 디지털 3차원 정보모델을 컴퓨터 가상공간에 구축하여 시설 및 안전관리, 위기대응, 안전성 분석 등에 활용하고 시설물 생애주기(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2025년(6년)
- 총사업비: 1,061억원(국고 100%)
- 사업수행주체: 한국수자원공사(법정민간대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06,056	1,312	15,000	18,000	16,914	51,732	3,098
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39,100	-	11,911	12,991	463	11,875	1,860
드론 기반 안전점검	7,712	1,312	-	1,400	2,000	2,400	600
댐 시설 안전시스템	59,244	-	3,089	3,609	14,451	37,457	638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 중 댐 시설 안전시스템의 '운영시스템' 관련, 2022년의 1차년도 용역계약 지연으로 인해 2023년 2차년도 용역계약이 연내에 체결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사업수행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모니터링, 드론기반 안전점검, BIM 기반 댐 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현액 169억 1,400만원 중 45억 3,9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26.8%)하고 121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16,914	16,914	16,914	16,914	-	16,914	4,539	16,914	4,539	12,143	232	26.8

자료: 환경부

2023년 121억 4,300만원의 이월액은 댐 시설안전시스템 등 관련 일부 용역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른 것임. 이는 환경부가 2022년 ISP 수립 없이 신규 플랫폼 구축(댐 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시스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1차연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연쇄적 결과임.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함에도,[14] 환경부는 2022년 예산에 이를 사전 반영한 후 2022년 5월에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음.[15] 그 결과,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1차년도 사업은 2022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선금지급 이후 2023년 12월에 1차년도 용역 준공이 완료되었음.

이에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도 2차년도 계약을 2023년 12월 착수 후, 계약기간을 2024년까지로 하여 사업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였으며, 2024년 12월에야 운영시스템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임.

결국 동 사업은 사전 ISP 수립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2022년도 1차년도 사업은 2022년 11월에야 시작되었고, 이후 사업이 연쇄적으로 순연되고 있는 것이므로, 환경부는 향후 명확한 정보화 전략 수립 없이 추진된 사업의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추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동 사업의 지연은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사업'[16]의 지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의 도입 당시(2022년),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에서 댐 시설물 안전관리 목적으로 댐 3D 공간정보와 댐 관리정보(시설물정보, 보수이력, 안전점검 결과 등)를 결합하여 디지털트윈을 제작하여 그 성과를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사업의 '댐 Safety Package'[17]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환경부는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18] 완성도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의 결과물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동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4) 원칙적으로 2021년 9월,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이전 ISP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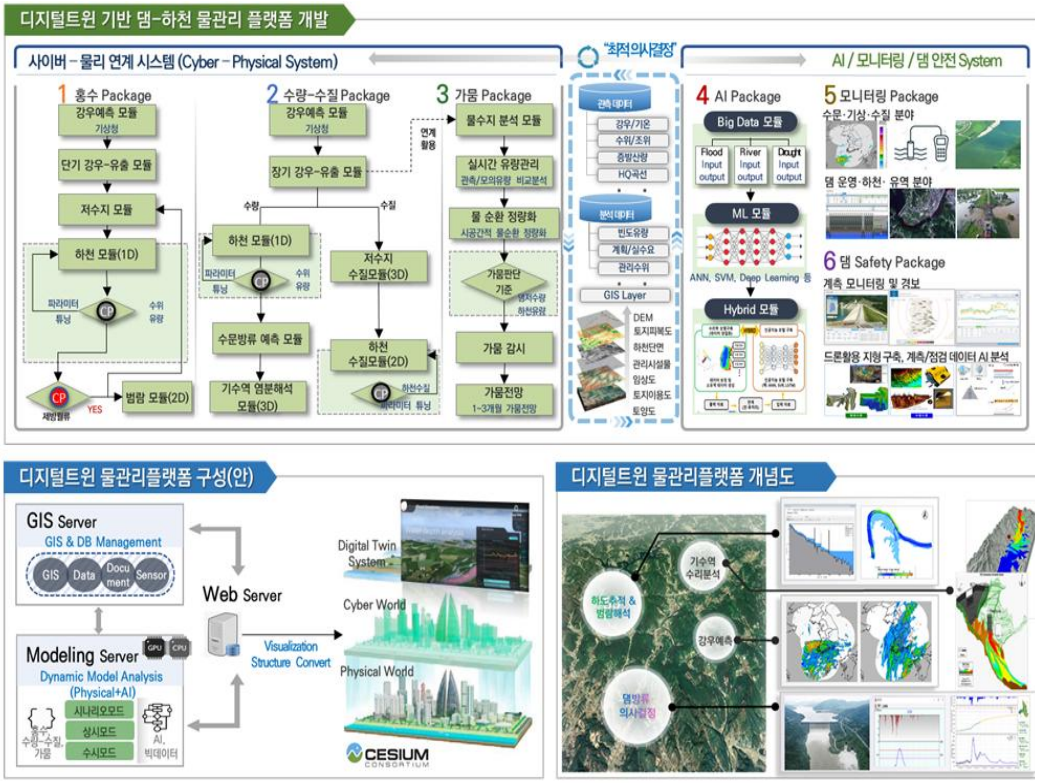
15) 환경부는 댐 시설안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ISP 수립용역을 2021년 11월에 착수하여, 2022년 5월 ISP를 수립하였음.

16) 일반회계-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정보화)(5134-307)

17) 아래 그림에서 6번에 해당

18) 당초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는 수해 피해에 대한 대응 및 선제적 예측을 위해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추진 중임. 당초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에는 2024년까지 사업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정 이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자료: 환경부

5.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지자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한 환경부 차원의 적극적 조정 노력 필요

가. 개 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낙동강 유역의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2021.6.24.)에 의거하여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광영상수원 개발 및 공급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9억 700만원 중 19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5%)되고 19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3년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1,920	1,920	1,987	-	3,907	1,973	-	1,934	2,020

낙동강 유역은 본류 전체를 상수원으로 이용 중으로,[20)] 수질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이 크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 및 하류 권역별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낙동강 취수원 상류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미량오염물질 처리를 고도화하여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동 사업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낙동강 상류(대구경북권) 및 하류(부산경남권)에 대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질·수자원시설·용수공급 현황 및 취수원 지점 선정 등을 실시하는 것임.

19) 일반회계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5033-356)(물이용정책관)

20)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본류 의존율(%)은 부산 88%, 경남 51%, 대구 66%, 경북 24%, 울산 8%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내용]

구분	사업 주요내용
대구-경북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일) → 대구(28.2만톤/일)·경북(고령·성주 등 1.8만톤/일) 공급
대구-울산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대구(운문댐) → 울산 공급 ※ 공급 물량은 운문댐 여유용량 등을 고려 추후 확정
부산-경남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일),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일) 개발 → 경남(창원, 김해, 양산 등 48만톤/일), 부산(42만톤/일) 공급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관련 지자체간 갈등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 예산도 불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갈등 조정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대구경북권) 및 하류(부산경남권)에 대해서 수질·수자원 시설·용수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취수원 지점 선정을 위한 분석·조사를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 상·하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22년 8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간 이견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관계기관에 협정 해지를 통보하였고, 낙동강 상류지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중단되었음.

[대구-구미 간 협정체결과정 및 지자체 간 이견 내용]

○ ('21.6.24.)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낙동강유역물리관위원회 의결
○ ('22.4.04.) '대구-구미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 체결
○ ('22.6.30.)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0.78, AHP 0.555)
○ ('22.8.17.) 대구시에서 구미시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상생협정 파기 통보
○ ('22.8.24.) 대구시의 협정 파기 통보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 (구미시) 해평취수장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 검토 요청(해평취수장은 물 공급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구미시의 판단)
- (대구시) 취수원 이전은 협정을 해지하자는 것과 동일, 대구시 결정은 불가역적이며, 구미시장이 추후 입장을 바꾸더라도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음
- (경북도) 어렵게 체결된 협정인 만큼 가급적 유지 희망
○ ('22.11.02.) 대구-안동, '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체결
○ ('22.12.15.)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착수

자료: 환경부

이에 2022년 낙동강 상류 지역사업이 보류되어 30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에는 낙동강 하류 지역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예산현액 39억 7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낙동강 하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19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당해연도 예산(낙동강 하류 기본 및 실시설계)인 19억 2,0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2~2023년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9,822	9,822	-	-	9,822	4,766	1,987	3,069
2023	1,920	1,920	1,987	-	3,907	1,973	-	1,934
낙동강 하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	1,979	-	1,979	1,965	-	14
낙동강 하류 전략환경 영향평가	-	-	8	-	8	8	-	-
낙동강 하류 기본 및 실시설계	1,920	1,920	-	-	1,920	-	-	1,92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예비타당성조사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공사 착수 전까지 영향지역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취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농업 피해를 우려하여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이어서 설계비 예산 19억 2,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낙동강 상·하류 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 낙동강 수질 안정화 및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지자체 간 갈등이 조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21)]

21) 환경부는 2024년 6월 10일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용역 준공 결과(안동댐 물을 상수원으로 함)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계획안의 기술검토 연구 용역이 종료된 이후 합리적인 정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낙동강 하류 지역의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취수지점 분산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입>

6.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대기배출부과금 및 수질배출부과금 등 총 10개 부과금(부담금)이 수납되는 항목으로, 2023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은 징수결정액 1조 3,322억 8,200만원 중 7,050억 6,300만원이 수납(수납률 52.9%)되고 132억 9,4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6,132억 9,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22)]

[2023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법정부담금	686,442	686,442	1,332,282	705,063	13,294	613,296	52.9	648,364

환경개선특별회계 10개 법정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임.[23)]

---

22)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정부담금(59-593)(기획조정실)

2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수질배출부과금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임.[24)]

나. 검토의견

2023년 법정부담금 수납액은 환특회계 자체세입(2023년 결산액 1조 7,402억원)의 40.5%인 7,050억 6,3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회 결산심의의 연례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2.9%로 저조하므로, 실효성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연도별 수납률은 최근 10년간 50% 수준에 불과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저해하고 있음.

[연도별 법정부담금 수납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부과액(A)	18,449	18,867	17,179	16,229	15,258	16,994	16,136	15,009	13,911	13,323
수납액(B)	9,197	9,424	8,095	7,737	7,248	9,017	8,415	8,004	7,249	7,051
불납결손액	328	396	546	429	475	198	600	297	221	139

2. ~ 7. <삭 제>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24) 「물환경보전법」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 ·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단위: 억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미수납액	8,923	9,047	8,537	8,063	7,535	7,779	7,122	6,708	6,441	6,133
수납률(B/A)	**49.9**	**49.9**	**47.1**	**47.7**	**47.5**	**53.1**	**52.1**	**53.3**	**52.1**	**52.9**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의 수납 실적 저조는 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실적 저조에 기인함. 2023년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 현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률은 26.9%, 수질배출부과금은 11.7%로 전체 미수납액의 89.0%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법정부담금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합계	**686,442**	**686,442**	**686,442**	**1,332,282**	**705,063**	**13,924**	**613,296**	**52.9**
환경개선부담금	**191,362**	**191,362**	**191,362**	**699,729**	**188,334**	**13,209**	**498,186**	**26.9**
수질배출부과금	**11,132**	**11,132**	**11,132**	**54,612**	**6,382**	**682**	**47,548**	**11.7**
폐기물처분부담금	157,099	157,099	157,099	170,824	167,104	0	3,720	97.8
대기배출부과금	22,865	22,865	22,865	36,148	33,640	1	2,507	93.1
폐기물부담금	200,518	200,518	200,518	232,427	227,295	0	5,132	97.8
수질개선부담금	15,382	15,382	15,382	19,848	15,351	0	4,497	77.3
재활용부과금	23,912	23,912	23,912	35,223	25,380	0	9,844	72.1
생태계보전부담금	60,173	60,173	60,173	64,355	39,939	0	24,416	62.1
기타 부담금 (8개 부담금 합계)	3,999	3,999	3,999	19,115	1,638	32	17,446	8.6

자료: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수납 실적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연례적으로 반영되어 왔으나, 법정부담금 수납률이 소폭(0.8%p) 상승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국회는 2017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음.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수질배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음.[25)]

25)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이후에도 지속되는 연례적인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저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음.

[2022회계연도 결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55)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세원 발굴 및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ㅇ 환경부는 법정부담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 ㅇ 환경부는 징수권자인 지자체가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의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ㅇ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징수활동 실적 관리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①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을 통해 결손·체납 처분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하고, 2023년 9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② 또한,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최대 체납업체의 기업회생 인가 결정 후 분할납부 독려 및 채권 주식 매각 추진을 통해 수납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배출부과금 모두 과년도 부과액 중 누적된 장기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

○ 환경부는 수질배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환경부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강구하는 등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2021~2023년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배출부과금의 과거체납분]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율
환경개선부담금	2021	당해연도	260,565	211,439	47,498	1,629	81.1
		과거체납분	580,411	59,872	492,848	27,691	10.3
		총계	840,976	271,311	540,345	29,320	32.3
	2022	당해연도	215,431	172,059	43,335	37	79.9
		과거체납분	534,883	44,313	468,486	22,084	8.3
		총계	750,314	216,371	511,821	22,122	28.8
	2023	당해연도	194,008	153,983	39,854	171	79.4
		과거체납분	**505,721**	**34,351**	**458,332**	**13,038**	6.8
		총계	699,729	188,334	498,186	13,209	26.9
수질배출부과금	2021	당해연도	6,845	5,219	1,627	-	76.2
		과거체납분	57,432	8,869	48,549	13	15.4
		총계	64,277	14,088	50,176	13	21.9
	2022	당해연도	5,290	4,185	1,106	-	79.1
		과거체납분	50,129	2,180	47,927	23	4.3
		총계	55,419	6,364	49,032	23	11.5
	2023	당해연도	5,713	4,338	1,374	-	75.9
		과거체납분	**48,899**	**2,044**	**46,173**	**682**	4.2
		총계	54,612	6,382	47,548	682	11.7

자료: 환경부

①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12년 4월 이후 신규 부과대상 자동차가 없어 징수결정액 중 과년도 체납액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26] ②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에도 2023년 징수결정액 중 과년도 체납액 비중이 89.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은 고액장기체납자 3인의 미납금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7.3%인 415억 6,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27]

결국, 장기체납자의 부담금 징수가 완료되어야 환경부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환경부는 미납액이 큰 지자체 및 고액 장기체

26) '19년 62.4% → '20년 65.7% → '21년 69.0% → '22년 71.3% → '23년 72.3%

27) ㈜남0 369억 7,300만원, ㈜영000 23억, 부000 22억 9,400만원

납자를 특별관리하는 등 장기미수납액 징수제고 노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28)]

[환경개선부담금·수질배출부과금 미납금액 상위 10위 체납자명 및 금액]

(단위: 백만원)

순위	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지자체명	금액	체납자명	금액
1	서울특별시 중구	869	㈜ 남0	36,973
2	서울특별시 서초구	552	㈜영000	2,300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73	부0000	2,294
4	서울특별시 서초구	369	00금속	940
5	서울특별시 서초구	215	00금속	901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8	000	778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95	㈜수000	664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74	㈜인0	408
9	광주광역시 광산구	171	㈜동0000	400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137	㈜축0	296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부는 최근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장기미수납액 869억 4,500만원, 수질배출부과금 383억 8,3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는데, 불납결손 처리를 최소화하고 장기미수납액의 징수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8)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을 개인별로 하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아 일괄 처리함에 따라 장기미납 지자체로 표현하였음.

<세 출>

7.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먹는 물 불안 해소 위한 환경부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은 낙동강 취수원 상류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미량오염물질 처리 기능을 고도화하여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3억 2,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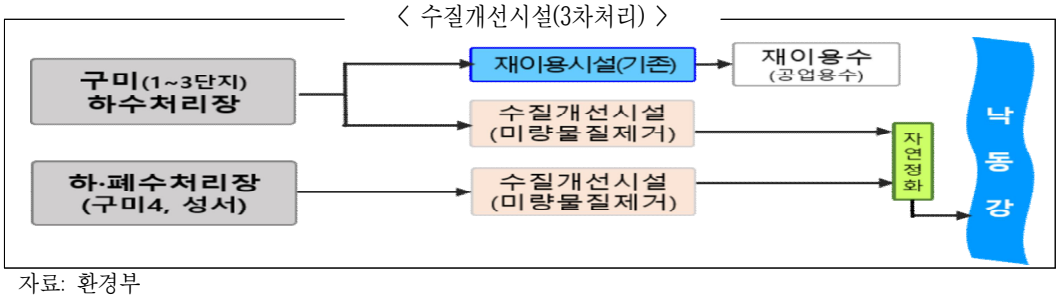
[2023년도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1,325	1,325	-	-	1,325	-	-	1,325	-

동 사업은 구미(1~3단지) 하수처리장, 구미4단지 및 대구 성서산단 등 3개 하·폐수처리시설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시설(오존+활성탄)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3년도 예산은 전액 대구광역시에 지자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되었음.

〈 수질개선시설(3차처리) 〉



자료: 환경부

29) 환경개선특별회계 -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1131-310)(물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은 관련 지자체의 매칭 재원 미확보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2022년 예산현액 12억 8,1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에 이어 2023년에도 전액 불용이 재발되고 있는데,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 물 불안의 해소라는 당초 환경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은 오염물질 5개 저감 대책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나,[30] 관련 지자체의 매칭 재원 미확보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임.

동 사업은 구미·대구성서산단 폐수배출량(21.4만m^3/일)이 낙동강수계 전체 폐수배출량(50.3만m^3)의 4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수 미량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것임. 2020년 환경부가 실시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현장 적용 가능한 수질개선시설 설치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 지적되었고, 이후 2021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상정·심의를 거쳐 2022년 사업이 추진되었음.

그런데 2022년 보조사업자인 구미시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설계비 12억 8,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에 이어 2023년에도 보조사업자(대구광역시)에게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고 환경부 차원에서 예산현액 13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2~2023년도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1,281	1,281	-	-	1,281	-	-	1,281
2023	1,325	1,325	-	-	1,325	-	-	1,325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3년 대구광역시가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시까지 국고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불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30) ① 영주댐 상류, 창녕함안보 등 지류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② 강우시 미처리 하수 관리 강화, ③ 석포제련소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④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확대, ⑤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동 사업은 근본적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한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2년 연속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것은 환경부의 낙동강 수질 안정화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낙동강 본류 인근의 먹는 물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필요

가. 개 요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은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 발행한 녹색채권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기술로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4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31)]

[2023년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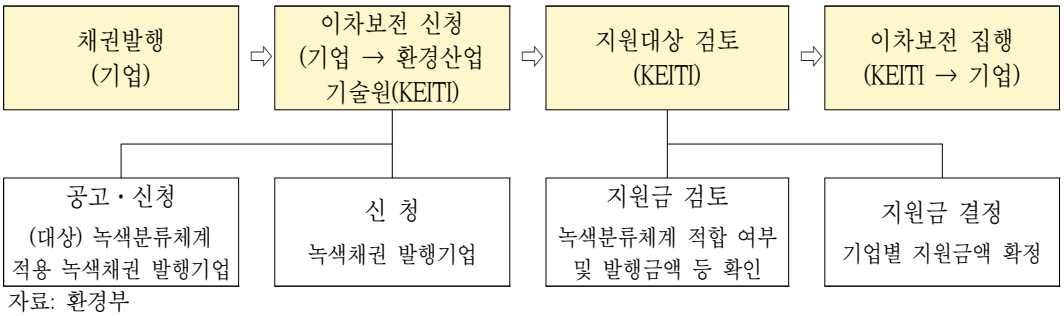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환경책임투자활성화	16,345	16,345	-	-	16,345	16,321	19	5	24,025
녹색투자비용 지원체계 구축	14,410	14,410	-	-	14,410	14,386	19	5	22,090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7,680	7,680	-	△1,280 (내역변경)	6,400	6,400	-	-	7,680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금리(대기업·공공기관 0.2%, 중소·중견기업 0.4%)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만 1년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급함.

31) 환경개선특별회계 - 환경책임투자활성화(1531-317)(녹색전환정책관)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절차]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사업 수혜 기업 중 92%가 대기업·공공기관이라는 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구매 비용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후 전기차 보조금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시범사업 이후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먼저 국내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보면, 2023년까지의 누적 발행액 28조 7,552억원 중 대기업·공공기관의 녹색채권 발행액이 28조 1,462억원으로 97.9%를 차지함. 한국형 녹색채권의 누적 발행액에서도 대기업·공공기관의 발행액 비중은 98.2%로 국내 녹색채권 발행의 대부분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국내 녹색채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발행액		6,000	14,700	9,600	124,590	58,610 (6,400)	74,052 (47,852)	287,552 (54,252)
종목수		3	18	10	119	76 (7)	89 (64)	315 (71)
발행기관		3	5	4	59	31 (6)	39 (26)	105(중복 제외) (28)
대기업 공공기관	발행기관	3	5	4	53	30 (6)	37 (24)	98(중복 제외) (26)
	금액	6,000	14,700	9,600	119,800	58,310 (6,400)	73,052 (46,852)	281,462 (53,252)
중견기업	발행기관			-	6	1 (0)	2 (2)	7(중복 제외) (2)
	금액			-	4,790	300 (0)	1,000 (1,000)	6,090 (1,000)

주) 괄호 안은 한국형 녹색채권 현황임
자료: 환경부

2023년 동 사업 기업별 금리지원 현황을 보면, 중견기업 2개, 대기업 13개, 공공기관 10개가 지원을 받았음. 2023년 동 사업 예산안 심의 시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예산의 92.7%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으로 집행된 것임.

[2023년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시범 사업]

(단위: 억원)

구분	순번	기업명	발행 일자	발행 금액	지원액 (1년)	대상 프로젝트
중견 기업	1	동원시스템즈㈜	4.27.	400	1.6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설비 구축
	2	㈜한양	6.15.	600	2.4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구축
대기업	1	현대캐피탈㈜	3.28.	6,000	3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2	㈜한화	4.13. 9.19.	1,900 2,400	3	태양광 부품 생산설비 구축
	3	비엔케이캐피탈㈜	4.18.	300	0.6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4	㈜포스코퓨처엠	4.27. 9.26.	3,000 2,500	3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설비 구축
	5	GS에너지㈜	6.8.	1,500	3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설비 구축 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6	현대카드㈜	6.9.	2,500	3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7	롯데카드㈜	7.24.	400	0.8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단위: 억원)

구분	순번	기업명	발행 일자	발행 금액	지원액 (1년)	대상 프로젝트
			8.14.	100	0.2	전기차·전기자전거 도입
	8	우리금융캐피탈㈜	7.31.	800	1.6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9	㈜부산은행	9.19.	600	1.2	폐배터리 재활용 설비 금융 지원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설비 금융 지원
	10	㈜신한은행	8.23.	1,000	2	바이오매스,태양광 이용 발전설비 구축
			12.22.	500	1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11	GS파워㈜	10.19.	1,200	2.4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건설(전환)
	12	삼성카드㈜	10.13.	100	0.2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10.18.	400	0.8	
			10.26.	400	0.8	
			10.27.	100	0.2	
			10.30	500	1	
	13	농협은행㈜	12.7.	1,500	3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설비 구축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설비 구축
공공기관	1	부산교통공사	4.25.	700	1.4	친환경 설계 전동차 도입
			8.30.	339	0.68	
	2	한국토지주택공사	5.19.	5,300	3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
	3	한국수력원자력㈜	5.22.	2,700	3	양수발전을 위한 제반설비 구축
	4	한국산업은행	6.15.	3,000	3	탄소포집 및 액화·저장설비 설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설비 증설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5	한국전력공사	6.23.	2,800	3	스마트 전기 관리 시스템 구축
	6	국가철도공단	6.23.	300	0.6	전기철도시설 인프라 구축
	7	한국중부발전㈜	7.6.	300	0.6	태양광, 풍력 이용 발전설비 구축 바이오중유 이용 발전설비 구축
			10.24.	200	0.4	
	8	서울교통공사	9.15.	1,500	3	친환경 설계 전동차 도입
	9	인천교통공사	11.15.	200	0.4	전기철도 운송 인프라 구축
	10	충청남도개발공사	11.22.	300	0.6	무공해 운송(자전거) 인프라 구축 하·폐수 시설 설치,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합 계				**46,339**	**54.48**	

자료: 환경부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세부 대상 프로젝트 내역을 보면,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구매 비용'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전기차 리스·렌트 사업을 실시하는 대기업에게 이중 수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2023년 동 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총 5개사에 대하여 11.6억원의 지원액이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을 위해 지원되었음.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을 목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기업]

(단위: 억원)

기업명	발행 일자	발행 금액	지원액 (1년)	대상 프로젝트
현대카드㈜	6.9.	2,500	3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롯데카드㈜	7.24.	320	1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8.14.	180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자전거 도입
우리금융캐피탈㈜	7.31.	800	1.6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삼성카드㈜	10.13.	100	0.2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10.18.	400	0.8	
	10.26.	400	0.8	
	10.27.	100	0.2	
	10.30	500	1	
한국산업은행	6.15.	140	3	탄소포집 및 액화·저장설비 설치
		2,160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설비 증설
		700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자료: 환경부

이 중 2개사는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녹색채권 발행 기업 중 전기차 보조금 수혜 내역]

(단위: 억원)

기업명	발행금액	이차보전액	대상 프로젝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리금융 캐피탈(주)	800	1.6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190대
삼성카드(주)	1,500	3.0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	118대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채권 발행기업이 전기차 보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동일 프로젝트로 받은 경우인지 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고려하여 리스·렌탈 비용을 책정하여 사업을 운영하므로, 기업의 중복수혜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보조금 혜택이 공유되는 형태라는 입장임.

그러나 이미 동 사업의 경우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편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보조금 수령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효율적 예산 배분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시범사업 이후 녹색채권 발행기업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며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녹색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당초 예산 편성과 다른 외부검토비용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녹색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은 신용도가 낮고 녹색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경제활동 관련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발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72억 8,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32)]

[2023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환경책임투자활성화	16,345	16,345	-	-	16,345	16,321	19	5	24,025
녹색투자비용 지원체계 구축	14,410	14,410	-	-	14,410	14,386	19	5	22,090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 기업 지원 시범사업	6,000	6,000	-	1,280 (내역변경)	7,280	7,280	-	-	13,680

당초 환경부는 이차보전 금리지원 45억원(1,500억원 발행규모×평균 3% 금리지원) 및 외부검토비용 지원 15억원, 총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역변경을 통해 이차보전 57억 8,000만원, 외부검토비용 15억원 총 7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32) 환경개선특별회계 - 환경책임투자활성화(1531-317)(녹색전환정책관)

[2023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2023 편성내역	2023 집행내역
가. 이차보전 : 4,500백만원 - (산출) '23년 지원규모 1천 5백억원 × 금리지원 3.0%*× = 4,500백만원 * 회사채 3년물 신용등급별[AAA vs. BBB-] 금리 차이(5.951%≈6%) x 지원율 50% 나. 외부검토비용 : 1,500백만원 - (산출) 75개사* × 녹색사모채 외부검토비용 지원(건당 20백만원) × 지원율 100% = 1,500백만원 * 1천억원 규모의 GABS 발행시 약 50개 기업(기업당 10~30억원 정도의 회사채 발행)의 기초자산 편입	가. 이차보전 : 5,780백만원 - '23년 발행 74개 사 1,555억원 X 금리지원 2%~4% X 기업당 지원 한도 3억원 = 5,780백만원 나. 외부검토비용 : 1,500백만원 - 외부검토비용 660백만원(3개사 × 220백만원), 기술원 운영비 840백만원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사업자로 사업을 시행하여, ① 기술원이 신청기업 대상사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② 환경성 검토가 통과된 기업에 대해 신보에서 기초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를 실시함. ③ 보증심사 승인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 기술원이 외부검토기관을 통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진행하여 편입기업을 선정하고, ④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유동화 목적으로 설립한 SPC에서 해당 편입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기업은 회사채 금리의 일부(중소 4%p, 중견 2%p)를 지원받는 구조임.

나. 검토의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5개사의 외부검토비용으로 편성된 외부검토비용 15억원 중 6억 6,000만원만 당초 예정된 목적인 외부검토비용으로 집행하고, 잔액인 8억 4,000만원은 수지차출연기관인 기술원 직원 인건비·녹색자산유동화증권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행사개최 등을 위해 집행하여 관련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외부검토비용 15억원의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외부검토비용으로 편성된 15억원이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GABS 외 녹색채권 관련 전반적 업무)을 위한 기술원의 대행 계약금으로 집행되었고, 실집행 금액 중 6억 6,000만원만 환경부가 예산 편성내역에 기술하고 있는 외부검토비용 지원으로 집행되어, 당초 예

산 편성 내역과 다른 집행이 다수 발생하였음.

[2023년도 외부검토비용 15억원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A)	집행액(B)	집행잔액 (A-B)	비고
외부검토비용	**660**	**660**	**-**	**외부검토기관 3개사*220 (각 20건*1,000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인건비	246	24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력 보수 및 전문위원 상용임금 (컨설팅, 사전검토 등 업무 수행, 6인)
운영비	543	543	-	EU Taxonomy 비교·분석 연구, 녹색분류체계 국외적용 방안 마련 및 전과정평가 도입 연구, 전문가 자문 및 협의체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협약식 및 시상식 개최 등
여비	13	13	-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4	14	-	사업추진비
경상비	24	24	-	일반관리비
총 계	1,500	1,500	-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외부검토 절차와 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부검토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입장임. 또한 인건비 지출 사유와 관련하여, 2023년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수의 73.8%, 상용임금의 75.2%만 출연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어 출연사업 외 나머지 인건비를 위탁·대행사업에서 반영 및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3년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수		상용임금	
	예산	비율	예산	비율
합계	33,880	100.0	12,581	1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25,006	73.8	9,463	75.2
위탁대행(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등)	8,874	26.2	3,118	24.8

자료: 환경부

그러나 15억원 중 44%에 불과한 6억 6,000만원이 외부검토비용이고 나머지 8억 4,000만원이 기술원 운영비로 지출되었다면 이는 외부검토비용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검토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인건비의 경우, 기술원이 수지차 출연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의 정확한 인건비 지출 규모 파악을 위해 출연금 내 인건비로 계상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8억 4,000만원의 기술원 운영비 집행 내역 중 GABS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아보이는 행사개최 비용이 다수 있음.

[외부검토비용으로 집행된 신규 행사 관련 비용]

구분	금액	비고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관련	1억 2,600만원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지원(위탁대행)에서도 집행
ESG ON 세미나 (제1회, 제4회, 제7회 총 3회 개최)	1,000만원	환경성적표지 인증 활성화(기관고유사업), ESG 인프라지원단 기본경비, ESG 전문인력 양성사업(위탁대행)에서도 집행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식 관련	5,200만원	
계	**1억 8,800만원**	

주) 이외에도 GABS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연구용역, 전문가 수당 등이 다수 있으나 행사개최에 한해서만 명시함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사업은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금융 지원사업 홍보 등 제반 운영비 집행이라고 설명하나, 동 사업 외부검토비용의 목적이 녹색분류체계·녹색금융에 대한 홍보 등 운영비가 아니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검토비용 지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당초 예산 편성내역과 다른 집행으로 보임.

녹색자산 유동화증권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술원 운영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예산 편성과 다른 집행은 적정한 외부검토비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어렵게 하고, 일부 집행내역이 당초 사업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만을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

10.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융자 사업: 이차보전 실적 저조·사업 목적 달성 미흡 및 관리기관비용 간접 충당 부적정

가. 개 요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 은 최신 방지시설 설치 촉진 및 효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를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시멘트 제조업, 석유정제업)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이차보전)하는 것으로, 2023년도 결산 24억원 중 5억원이 집행(집행률 20.8%)되고 19억원이 불용되었음.[33)]

[2023회계연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융자)	2,400	2,400	-	-	2,400	500	-	1,900	2,400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2020년 9월 감사원의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에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관리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동 사업은 2021~2022년까지는 융자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 이차보전사업(금리차 2%p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33) 환경개선특별회계 -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융자)(1633-314)(대기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국회 예산심의에서 실집행 부진을 이유로 연례적으로 감액되고 있음에도 실집행률이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편성 이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수요 부족을 이유로 2022년 200억원 감액, 2023년 12억원 감액되었음에도 2023년 연말 기준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동 사업은 연내 1,200억원의 융자(4개사×300억원)를 기준으로 하여 2%p의 이차보전을 시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융자 대상기업의 수요 부족으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5억원이 교부되고, 19억원은 불용되었음.

기술원 차원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① 이월예산인 기타민간융자금의 경우 7개 설비 464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실집행률이 99.6%임. ② 이차보전금의 경우 6개 설비에 691억 8,500만원의 융자승인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차보전금 집행은 2억 4,000만원에 그쳤음.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안	국회 감액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300,000	-	300,000	200,000	200,000	-	200,000	85,658	28,388	85,954	42.8
2022	210,000	△20,000	190,000	110,000	110,000	28,388	138,388	54,875	46,618	36,895	39.7
2023	3,600	△1,200	2,400	500	500	46,618	47,118	46,676	-	442	99.1
(기타 민간융자금)	-	-	-	-	-	46,618	46,618	46,436	-	182	99.6
(이차보전금)	3,600	△1,200	2,400	500	500	-	500	240	-	260	48.0

자료: 환경부

이러한 집행부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주체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융자 대상기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 1,200억원 수요를 희망하였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시설 설치 보류·축소 등으로 실제 수요는 414억원(융자 승인 기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3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기술원이 2023년 2월 융자사업 공고를 한 이후 기존 사업 수혜자인 ‘한00’가 4월 융자를 신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6건의 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신청 수요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승인일자	업체	업체 유형	시설전환 관련 사업내역	융자승인 금액	23년말까지 이차보전액
1	2023-05-02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개조)	36,965	133
2	2023-07-04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재활용 원료투입 설비 설치)	5,600	47
3	2023-07-11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후처리 설비 구매)	4,974	50
4	2023-07-11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예열탑 내화물, 덕트 등 설치)	10,256	10
5	2023-12-01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B/H, R/M BY-PASS DUCT 등 설치)	6,416	-
6	2023-12-01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후처리 설비 설치)	4,974	-
계					69,185	240

자료: 환경부

둘째, 당초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된 사유는 감사원 감사 이후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관리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SCR 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것인데, 해당 설비 외 기타 미세먼지 설비 설치 지원으로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단순히 융자가 집행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동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질소산화물 관리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원 시설은 ① 연소방식을 개선한 고효율 저녹스(NOx) 버너, ② 연소가스의 환원 반응 시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을 촉진하는 SCR 설비,[34] ③ 환원제

34)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선택적촉매환원법): 요소수라고 부르는 암모니아(NH3) 수용액 또는 우레아(NH2(2CO)) 수용액을 배출가스에 분사시켜 촉매 반응을 통해 물(H2O)과 질소(N2)로 변환시키는 장치임. 이는 질소산화물(NOx)은 물론 엔진에서 다량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수치로 약 65~85%의 저감효

를 고온부에 직접 주입하여 환원시키는 SNCR 설비 등임.[35)]

그런데 사업 추진 이후 SCR 설비는 0건이고, 2021년 SCNR 설치 2건, 2022년 저녹스 버너 설치 1건 지원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동 사업은 모두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정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집행되었음. 2023년의 6개 설비도 모두 기타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정 효율 개선 사업 지원임.

따라서 환경부는 청정대기 전환 시설설치 사업의 수요가 저조하고, 집행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당초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환경부는 이차보전 사업의 관리기관 비용을 이차보전 사업구조를 이용하여 간접 충당하고 있는데, 이차보전금을 사업운영비로 지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 통상의 보조금이나 용역비와 달리 건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통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차보전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운영비로 이차보전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무한 상황임.

그런데 환경부는 청정대기전환 시설전환(융자) 사업을 추진하며 이차보전 지원이 이루어진 융자잔액의 0.1%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관리기관의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6)]

[2023년 이차보전금으로 사업관리비용을 충당한 사례]

(단위: 백만원)

위탁기관 지급 비용			
지급 비용 구분	산정 방식	실제 지원액 (2023년 기준)	관련 비용을 조달하는 재정사업
융자취급 수수료	Σ (일단위 융자잔액 × 0.1%)	9	정부 이차보전금에서 간접 차감

자료: 환경부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5) SNCR(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무촉매환원법): 촉매없는 환원반응으로 고온 배출가스에 암모니아(NH3) 수용액 또는 우레아(NH2(2CO)) 수용액을 분사하여 물(H2O)과 질소(N2)로 변환시키는 장치임.

36) 환경부는 이차보전 지원이 이루어진 융자잔액의 0.1%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직접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차보전지원 효과를 0.1%p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차보전금에서 간접 차감하는 효과를 낳게 됨.

이차보전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로서 사업구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자수익의 일부를 사업운영비로 지출하기에 적절치 않고, 통상의 보조금이나 용역비와 달리 건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통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차보전 사업구조 상 사업관리비용을 간접 충당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별도 사업 편성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11. 조기폐차 사업: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국고보조율 60%, 단 2023년부터 50%)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718억 8,700만원 중 2,710억 3,4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집행률 99.7%) 8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37]

[2023년 조기폐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380,794	380,794	11,610	△6,800	385,605	370,008	6,548	9,049	346,427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6,655	346,655	-	△4,646	342,009	339,069	-	2,940	320,650
조기폐차	274,825	274,825	-	△2,938	271,887	271,034	-	853	259,575

주) ASF 현안 대응 및 호우·태풍 카눈 재해복구비를 위해 일부 예산 이용되었고, 내내역사업간 조정이 일부 있음

37)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대기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당초 조기폐차 사업의 목표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5등급 경유차량의 폐차 실적이 목표 대비 부진하여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실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조기폐차 사업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3,081억 9,400만원 중 2,446억 3,2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79.4%)되고, 180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55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는 2022년 실집행률 53.1%에서 상당부분 집행이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최근 5개년 조기폐차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환경부		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9	336,924	323,624	323,624	1	323,626	226,820	34,914	61,892	70.1
2020	244,036	244,036	244,036	31,345	275,381	213,443	16,559	45,379	77.5
2021	333,067	327,335	327,335	19,240	346,575	245,952	39,481	61,142	71.0
2022	264,014	264,014	264,014	40,658	304,672	161,731	37,240	105,701	53.1
2023	273,188	271,034	271,033	37,161	308,194	244,632	18,019	45,543	79.4

자료: 환경부

그러나 이러한 집행실적의 개선은 조기폐차 차종의 확대에 기인함. 환경부는 2022년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만을 지원하였으나, 4등급 경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등급 차량과 유사하다는 사유로 4등급 경유차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음. 또한 노후 건설기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필요성에 따라 건설기계 조기폐차도 신규로 실시하였음.

2023년 차종별 조기폐차 실적을 보면, 4등급차량은 당초 목표인 7만대를 상회한 8.2만대가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17.1%로 나타났으나, 5등급 차량은 17만대 목표에 비해 8.3만대가 폐차되어 실집행률이 48.8%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2023년 조기폐차 차종별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대, %)

구분	목표(A)	수요조사 결과	교부	실집행(B)	실집행률(B/A)
합 계	**24.5만**	**22.6만**	**22.0만**	**16.6만**	**67.7**
5등급	17.0만	15.8만	13.0만	8.3만	48.8
4등급	7.0만	6.4만	8.5만	8.2만	117.1
건설기계	0.5만	0.4만	0.5만	0.1만	20.0

자료: 환경부

이는 2021년까지 연 20만대 내외의 5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된 이후, 2022년 5등급 조기폐차 실집행 물량 12.3만대로 감소하고, 2023년에는 8.3만대로 전년 대비 4만대의 물량이 감소한 것임.

[2019~2023년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실적 현황]

(단위: 대, %)

사업연도	목표(A)	교부	실집행(B)	실집행률(B/A)
2019	40만	40.3만	26.8만	59.6
2020	30만	25.3만	24.9만	83.0
2021	34만	34.1만	23.6만	69.4
2022	35만	27.5만	12.3만	35.1
2023	17만	13.0만	8.3만	48.8

자료: 환경부

이러한 실집행 물량 감소에는 조기폐차 사업 이후 5등급 노후 경유차 잔여물량(5등급 경유차 저공해 미조치・보험가입 잔여 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실집행 물량이 감소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임.[38)]

그러나 환경부가 2026년까지 잔여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획물량 대비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잔여 5등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8) 2021년 말 기준 잔여물량 61만 3,760대, 2022년말 기준 잔여물량 40만 9,217대, 2023년말 기준 잔여물량 28만 1,363대임.

12.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부적정

가. 개 요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은 도심 건설현장 내 경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전기굴착기를 보급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억 9,300만원 중 14억 5,000만원이 지자체에 교부(집행률 85.6%)되었고, 2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39)]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380,794	380,794	11,610	△6,800	385,605	370,008	6,548	9,049	346,427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6,655	346,655	-	△4,646	342,009	339,069	-	2,940	320,650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2,000	2,000	-	△307	1,693	1,450	-	243	2,000

주) ASF 현안 대응 및 호우·태풍 카눈 재해복구비를 위해 일부 예산 이용되었고, 내내역사업간 조정이 일부 있음

동 사업은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사업으로, 2023년 사업은 11개 시·도[40)]에서 추진되었음.

39) 환경개선특별회계-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대기환경정책관)

40) (2023년 참여) 서울·대구·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23년 미참여) 인천·부산·세종·광주·대전·충북
※ 대구는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음.

나. 검토의견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 이후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2023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10.6%에 불과하므로, 환경부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음.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100대의 전기굴착기 보급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보급 물량을 400대로 확대하여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대응비로 18억원을 이용(감)하여 예산현액 22억원으로 조정되었음.

이후 환경부는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수요 부족으로 지자체 실집행률이 저조함을 감안하여 2022년 계획물량을 예산 편성 시 200대로 조정하였으나, 2022년도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를 위해 6억 5,000만원을 이용(감)한 후 13억 5,0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는데도 실집행액이 3억 7,900만원(22.1%)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이어 2023년에도 ASF 및 재해복구비로 3억 700만원을 이용(감)한 예산현액 16억 9,300만원 중 지자체 실집행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0.6%에 불과함.

[2020~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지자체						
	본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	600	300	10.0
2021	4,000	2,200	2,200	100.0	2,200	600	2,800	298	368	2,134	10.6
2022	2,000	1,350	1,350	100.0	1,350	368	1,718	379	10	1,329	22.1
2023	2,000	1,693	1,450	85.6	1,450	10	1,460	155	10	1,295	10.6

자료: 환경부

이는 경유 굴착기 대비 전기굴착기의 가격이 높고, 현재 전기굴착기는 소형굴착기(6톤 이하)만 출시되어 있어 구매자의 선택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구매수요가 저조하기 때문임.[41]

이러한 연례적 실집행부진 및 수요 저조로 인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41) <경유 대비 전기굴착기 가격 비교>

제조사	HR E&I(호룡)	HD현대인프라코어	볼보
규모(총중량)	3.9톤급	2톤급	2.5톤급
판매가(만원)	6,300	4,800	7,800
동급 경유굴착기 가격(만원)	3,000 ~ 4,500		

자료: 환경부

전기굴착기 구매의 실수요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급 목표를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해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집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2022회계연도 결산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59)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급 목표 물량 조정 필요 등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ㅇ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구매의 실수요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급 목표를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시정) ㅇ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보금 사업 추진 시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수요, 지자체 실집행 금액, 전기굴착기 신규 출시일정 등 사업 추진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주의)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2024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사 판매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 (제조사 판매계획) 2024년 237대(2023.4, 현대·볼보·HR) - 아울러, 이동형 충전시설 보급지원, 무공해건설현장 시범사업 등 전기굴착기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배터리식 굴착기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식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ㅇ 아울러 보조금 교부시 실집행실적에 따라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토록 세부교부 담당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으며(2023.8.3), - 2024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전 안내 및 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 ㅇ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의 보급 목표를 실수요를 고려하여 계획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13.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신규): 법 개정을 전제로 시범사업 예산 편성 이후 사업내용 변경 부적정

가. 개 요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 사업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 0.1톤이상)을 EU 수준(연 1톤이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신고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 기업 자율・책임형 유해성정보 신고제도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42)]

[2023년도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56,739	56,739	732	-	57,471	56,161	544	766	61,770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이행 지원	44,991	44,991	48	-	45,039	44,815	24	200	43,998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6,000	6,000	-	-	6,000	6,000	-	-	5,000

동 사업은 유해성정보 작성, 유해성정보 DB 구축, 교육・홍보로 구분되는데, 유해성정보작성 및 유해성정보 DB 구축(49억 8,000만원)은 한국환경공단이, 교육・홍보(10억 2,000만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민간대행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3년에 신규편성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의 EU수준 완화논의(연 0.1톤이상 → 1톤이상)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업 자율・책임형 유해성정보 신고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기 위한 사업임.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간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42) 환경개선특별회계-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2310-301)(환경보건국)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연간 0.1톤 미만은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3)]

나. 검토의견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편성내역과 상이한 집행내역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신규 시범사업 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연 0.1톤이상 → 1톤이상)과 관련된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상반기 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되어 상반기 내에 법 개정이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여, 선제적인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음.[44)]

---

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44) 동 사업의 컨설팅과 유사하게, EU에서는 연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은 등록하도록 하면서, 연 1톤 미만의 경우에는 소량이라도 그 양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를 기업이 신고하도록 하는 '유해성정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U는 2008년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법규를 도입하여 EU 내 유통되는 모든 유해성을 갖는 화학물질과 제품내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 소량이라도 그 양에 관계없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유해성에 대한 분류・표시 신고 및 전달의 의무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

※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주요 내용

C&L(Classification & Labelling Notification) 신고	양과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 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정보를 신고
C&L 인벤토리	기업이 신고한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정보 DB를 운영하고 그 내용을 대국민 공개
CLH(Harmonized Classification & Labeling) 운영	CMR* 물질 등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은 유해성 정보 일원화(정부가 정한 분류・표시 사용 권고) * CMR: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Carcinogens, Mutagens, Reproductive toxins)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평균 연간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 건수(3,000여 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42%)을 적용하여 컨설팅 지원 물량을 1,230건으로 추정하여, 유해성정보 작성 지원 사업 17억 2,000만원, 유해성정보 DB구축 32억 6,000만원, 교육·홍보 10억 2,000만원 총 60억원의 사업 예산을 요구하였음.[45]

[2023년도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구분	세부 내용
유해성정보 작성 (1,720백만원)	기업이 유해성 분류정보를 작성·신고, 컨설팅 서비스 지원(1,230건 × 1.4백만원)
유해성정보 DB 구축 (3,260백만원)	기업이 신고한 유해성정보를 DB화하고 대국민 공개(500백만원)
	자료 접수, 민원 응대, 유해성정보 DB 관리 등 지원(250백만원)
	유해성정보 신고내역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시험 등을 거쳐 검증하고, 유독물질 지정, 정보 표준화 등에 활용 (250건 × 1.4백만원 + 27건 × 80백만원 = 2,510백만원)
교육·홍보 (1,020백만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300백만원, 권역별 설명회 120백만원, 가이드북 발간 100백만원, 홍보 400백만원 등(1,020백만원)
계	60억원

자료: 환경부

그러나 환경부의 예측과 달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연 0.1톤이상 → 1톤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하반기에 발의되고, 2024년 1월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46]

이에 민간대행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법개정 이전에는 유해성정보 신고를 위한 작성지원(컨설팅)에 대한 기업 참여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해성정보 작성 지원 사업 예산 17억 2,000만원 중 15억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한 후, 해당 금액을 유해성정보 DB 구축 사업 용역사업으로 조정하여 유해성정보 검증 등 유해성정보 DB 구축을 확대 실시하였음.

45) 이에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고, 제도도입 논의에 맞추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2호, 2024.2.6., 일부개정, 2025.8.7.시행)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기업 참여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컨설팅 물량을 조절한 것이고, 이러한 예산 조정을 통해 컨설팅 물량은 10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기업이 신고한 신규화학물질 DB는 당초 목표였던 277건보다 증가한 4,400건에 대하여 유해성정보 DB화를 실시하였다는 입장임.

[2023년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	조정	집행액		
				계약액	실집행액	잔액
유해성정보 작성 지원		**1,722**	**160**	160	160	-
유해성정보 DB 구축		3,264	4,820	4,820	3,325	1,495
	시스템 구축	500	310	310	298	12
	유해성정보 검증	**2,510**	**4,006**	4,006	2,690	1,316
	헬프데스크	254	-	-	-	-
	기타	-	504	504	337	167
교육·홍보		1,020	1,020	1,020	1,020	-
	대국민 홍보	500	515	515	515	-
	기업 홍보(설명회, 교육 등)	520	505	505	505	-
계		6,000	6,000	6,000	4,050	1,495

자료: 환경부

그러나 이는 당초 유해성정보 작성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유해성정보 DB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예산 편성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환경부는 법개정을 전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예산 편성내역과 상이한 집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법개정을 전제로 한 신규 시범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근거법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1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 및 정산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차량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조 9,180억원 중 1조 5,729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0%)되고 3,450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47)]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공해차 보급사업	2,565,224	2,565,224	30	±10	2,565,254	1,908,899	61	656,294	2,319,254
전기자동차 보급	1,918,000	1,918,000	-	-	1,918,000	1,572,969	-	345,031	1,734,000

환경부는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소형)·전기승합차·전기이륜차 4개 차종에 대하여 총 30만 9,1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하였는데, 2023년 결산 결과 총 21만 1,188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이 이루어졌음.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2023 예산 편성내역	2023 집행내역
- 전기승용차 21만 6,100대 × 500만원 - 전기화물차(소형) 5만대 × 1,200만원 - 전기승합차 3,000대 × 7,000만원 - 전기이륜차 4만대 × 80만원	- 전기승용차 134,298대 × 500만원 - 전기화물차(소형) 56,820대 × 1,200만원 - 전기승합차 2,942대 × 7,000만원 - 전기이륜차 17,128대 × 80만원
1조 9,180억원	**1조 5,729억 6,900만원**

주) 집행내역의 대수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집행(교부) 기준임
자료: 환경부

4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대기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차종별 집행내역을 보면, 화물을 제외한 전 차종에서 집행률이 부진하게 나타났고, 특히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집행률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당초 전기 승용차 보급 지원을 위해 1조 76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전기 승용차와 이륜차의 수요가 부진하고 화물차와 승합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승용차 예산을 9,556억 8,500만원, 이륜차 예산을 229억 3,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화물차와 승합차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음.

그러나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승용차는 5,689억 400만원, 승합차는 1,620억 7,600만원 집행되고 이륜차는 74억 8,500만원이 집행되어, 당초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화물차를 제외하면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음.

[2023년 전기차 차종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액(A)	조정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대비 집행률(b/A)
승용	1,076,000	955,685	671,491	671,491	21,829	693,320	568,904	20,982	103,435	82.1	52.9
승합	210,000	215,880	205,939	205,939	66,115	272,054	162,076	85,712	24,267	59.6	77.2
화물	600,000	723,505	681,836	681,836	7,574	689,410	601,226	5,862	82,322	87.2	100.2
이륜	32,000	22,930	13,703	13,703	1,078	14,781	7,485	57	7,241	50.6	23.4
계	1,918,000	1,918,000	1,572,969	1,572,969	96,596	1,669,565	1,339,691	112,613	217,265	80.2	69.8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승용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신규 구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정체로 인해 집행이 저조하였고,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7~80km)와 긴 충전시간(2~3시간)이 보급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엔데믹 이후 배달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이륜차 주요 소비층의 구매 유인책 부족하여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 3년간 차종별 계획대비 보급실적을 보면 전기승용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한 집행실적 저조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전기이륜차의 경우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2022년에도 계획대비 저조하게 보급된 점을 고려하면, 엔데믹 이후 배달 수요 감소라는 환경부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전기차 차종별 계획대비 보급실적]

(단위: 대)

구분	2021년		2021년까지 보급실적(A)	2022년		2022년까지 보급실적(C=A+B)	2023년		2024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B)		계획	실적	
전기승용	**75,000**	**63,140**	191,755	**164,500**	**123,920**	315,675	**215,200**	**115,817**	233,000
전기승합	1,000	1,011	3,146	2,000	2,074	5,220	3,000	2,820	2,000
전기화물	25,000	26,349	43,036	41,000	38,471	81,507	50,000	43,940	57,272
전기이륜	**20,000**	**16,858**	48,089	**20,000**	**14,892**	62,981	**40,000**	**8,183**	40,000
계	121,000	107,358	286,026	227,500	179,357	465,383	308,200	170,760	332,272

주) 보급실적 기준은 차량 실제 신규등록 실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차종별 집행실적 제고 및 수요 견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지자체 교부예산의 불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누적된 불용액 및 이자액의 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지자체로 교부된 보조금 중 2,172억 6,500만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불용되었음. 동 사업의 최근 5개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누적된 지자체 보조금의 불용액이 5,574억 300만원에 달함.

[최근 5개년 전기차 보급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9	457,720	457,720	-	457,720	30,669	488,389	353,525	72,556	62,308
2020	817,008	817,008	-	817,008	72,556	889,564	568,833	194,133	126,598
2021	1,027,463	1,027,463	-	1,027,463	194,133	1,221,596	1,030,585	111,001	80,009
2022	1,719,000	1,446,291	272,709	1,446,291	111,001	1,557,292	1,388,714	97,351	71,227
2023	1,918,000	1,572,969	345,031	1,572,969	96,596	1,669,565	1,339,691	112,613	217,261

자료: 환경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48][49]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5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의 정산 현황을 보면, 누적 1,066억 8,200만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국고 수납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18년 종료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집행잔액은 4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반납되지 않고 있음.[50]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정산 현황]

(누적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지자체 불용액	2024년 5월말 기준 반납대상액	반납액	미반납액
2018	7,693	3,072	1,993	1,079
2019	62,315	4,083	3,375	708
2020	79,035	5,328	3,150	2,178
2021	80,009	35,166	1,842	33,324
2022	71,227	79,098	9,704	69,393
합계	**557,403**	**126,747**	**20,065**	**106,682**

주) 반납대상액은 정산완료 금액에서 기반납된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실집행내역에서 확인되는 불용액보다 작음
자료: 환경부

지자체의 불용액이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미반납되는 금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정산 후 반납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발생액 규모를 면밀히 정산하여 보조금 정산액과 이자액 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 자치단체보조사업
(9)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늦어도 사업집행 완료 다음해 중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0) 강원 300만원, 경기 2억 7,600만원, 전남 3억 2,100만원, 전북 2억 1,200만원, 충북 2억 6,800만원

15. 수소차 보급사업: 연례적 과다불용 부적정 및 예산편성시 적정물량 반영 필요

가. 개 요

‘수소차 보급사업’ 은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차량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334억원 중 3,223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9%)되고 3,110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51)]

[2023년도 수소차 보급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공해차 보급사업	2,565,224	2,565,224	30	±10	2,565,254	1,908,899	61	656,294	2,319,254
수소차 보급사업	633,400	633,400	-	-	633,400	322,320	-	311,080	571,350

수소차 보급사업은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음. 2023년 환경부는 수소승용・수소버스・수소화물・수소폐기물청소차 총 16,92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결산 결과 총 7,499대의 보급이 이루어졌음.[52)]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2023 예산 편성내역	2023 집행내역
- 수소 승용 16,000대×22.5백만원 - 수소버스(저상) 400대×2억 1,000만원 - 수소버스(고상) 300대×2억 6,000만원 - 수소화물 100대×2억 5,000만원 - 수소폐기물청소차 120대×7억 2,000만원	- 수소 승용 6,792대×22.5백만원 - 수소버스(저상) 340대×2억 1,000만원 - 수소버스(고상) 353대×2억 6,000만원 - 수소화물 8대×2억 5,000만원 - 수소폐기물청소차 6대×7억 2,000만원
6,334억원	**3,223억 2,000만원**

주) 집행내역의 대수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집행(교부) 기준임
자료: 환경부

5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대기환경정책관)

52) 2023년도 말 기준 실제 보급물량 4,669대, 지자체 이월액(보급예정) 물량 2,830대임.

나. 검토의견

2023년 수소차 보급사업은 본예산 대비 49.1%의 금액이 환경부 차원에서 불용되었고 전 차종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집행물량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 집행가능한 물량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수소차 보급 사업의 2021~2023년 실집행현황을 보면, 자치단체에 교부되지 않고 환경부 차원에서 불용·이용되는 금액이 매년 본예산 대비 36%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환경부 차원에서 3,110억 8,0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49.1%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2021년 54.6%, 2022년 35.9%, 2023년 29.3%로 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1~2023년 수소차 보급 사업 실집행현황(금액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 (A)	추경	자치단체 교부액(B)	불용+ 이용	전년도 이월액(C)	예산현액 (B+C)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A)
2021년	365,500	365,500	229,010	136,490	45,660	274,670	199,608	15,698	59,364	54.6
2022년	679,505	454,505	288,813	165,693	15,698	304,510	243,748	23,698	37,064	35.9
2023년	633,400	633,400	322,320	311,080	23,585	345,905	185,574	90,688	69,643	29.3

자료: 환경부

이러한 저조한 집행실적은 물량기준으로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남. 2023년 말 기준 실제 보급대수를 보면, 수소승용차는 4,294대(계획대비 26.8%), 저상 수소버스는 265대(66.3%), 고상 수소버스는 102대(34.0%), 수소화물 5대(5.0%), 수소청소차 3대(2.5%)만 보급되었음.

[수소차 차종별 실집행현황(물량기준)]

(단위: 대)

구분	2021년 까지 보급실적	2022년		2022년까지 보급실적	2023년		2024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승용차	19,341	17,650	10,104	29,445	16,000	4,294	6,800
수소버스(저상)	131	300	152	283	400	265	910
수소버스(고상)	-	40	-	-	300	102	810
수소화물	5	6	-	5	100	5	15
수소청소차	-	4	-	-	120	3	15
계	19,477	18,000	10,256	29,733	16,920	4,669	8,550

주) 보급실적 기준은 차량 실제 신규등록 실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러한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하여, 승용·승합·화물 등 각 차종별 단일차종으로 인해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차량 출시 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보급 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수소차 출시 현황]

구 분	승용	승합		화물	청소차
	넥쏘	일렉시티 FCEV(저상)	유니버스 FCEV(고상)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	에이엠수소암롤트럭, 에이엠수소압축진개형 차량
차량 사진					
국고보조금	2,250만원	2.1억원	2.6억원	2.5억원	7.2억원
편성물량	16,000대	400대	300대	100대	120대
출시일	2018.3월	2020년	2023.4월	2022.11월	2023.10월 (당초 2022년 말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연)

자료: 환경부

그러나 연도별·차종별 수소차 수요조사결과와 생산물량을 볼 때, 수요조사 결과 및 생산물량에 비해 집행물량을 과다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먼저, 수요조사 측면에서 2020년 수소승용차와 2023년 고상버스를 제외하고 수요조사결과를 상회하는 보급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또한 생산물량 측면에서도 2020~2023년 보급계획과 생산물량의 차이를 보면, 저상버스 출시 첫 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실제 제작사 생산물량을 상회하는 보급계획이 편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0~2023년 수소차 차종별 수요조사결과, 생산물량과 보급실적의 차이]

(단위: 대)

차종	회계연도	수요조사 결과 (A)	생산물량 (B)	보급계획 (C)	실제 보급실적 (D)	보급실적과 수요조사 차이 (D-A)	보급계획과 생산물량 차이 (C-B)
승용차	2020	3,774[1)]	5,522	10,100	5,783	2,009	4,578
	2021	12,218	8,303	15,000	8,473	△3,745	6,697
	2022	15,408	10,260	17,650	10,104	△5,304	7,390
	2023	16,089	4,439	16,000	4,294	△11,795	11,561
저상 버스	2020	90[1)]	82	80	60	△30	△2
	2021	185	64	180	54	△131	116
	2022	369	145	300	152	△217	155
	2023	492	253	400	265	△227	147
고상 버스	2020	-	-	-	-		
	2021	-	-	-	-		
	2022	-[2)]	-	40	-		
	2023	80	73	300	102	22	227
화물차	2021	시범사업	5	5	5		0
	2022	-	2[3)]	6	-		
	2023	21	6	100	5	△16	94
청소차	2022	-	-	4	-		
	2023	17	-	120	3	△14	

주 1) 환경부는 2020년 수소승용차·저상버스 수요조사는 일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이고, 전체 수요조사 결과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2) 2022년 고상버스 수요조사는 저상버스와 통합하여 이루어졌음
3) 2022년 수소화물차 2대 생산물량은 군수용 차량 등으로 사용된 생산물량임
4) 2023년 실제 보급실적은 2023년도 말 기준임

자료: 환경부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연례적인 불용액 과다와 집행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안 편성 시 집행가능한 물량만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16.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신규): 연내 착공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은 강남역·광화문(대심도하수저류시설 사업) 일대에 침수 방지를 위해 대심도 방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4억 3,500만원 중 45억원이 교부(집행률 82.8%)되고 9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53]

[2023년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하수관로 정비	953,051	953,051	-	-	953,051	952,116	-	935	1,281,593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5,435	5,435	-	-	5,435	4,500	-	935	13,731

2023년 편성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예산은 설계비 총 54억 3,500만원(강남역 31억 7,100만원, 광화문 22억 6,400만원)임. 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인 서울특별시에 45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하수관로정비(1132-312)(물환경정책관)

[대심도하수저류시설 사업 주요 내용]

구분	강남역 일대	광화문 일대
총사업비	3,500억원→5,386억원	2,500억원→3,298억원
사업규모	강남역~한강, L=3.1km, D=8.3m →L=4.5km, D=5~11m	효자동~청계천, L=3.2km, D=5.5m →L=3.4km, D=6.0m
사업기간	2023~2027년→2023~2028년(1년 연장)	
2023 예산	설계비 31억 7,100만원 (12,793백만원*25%)	설계비 22억 6,400만원 (8,945백만원*25%)

주) 서울특별시는 대심도하수저류시설 사업과 함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3,000억원→5,00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세부사업: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309))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대심도하수저류시설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결과 총사업비가 강남역 5,640억원(2,140억원 증액), 광화문 3,504억원(1,004억원 증액)으로 증액되어 사업계획이 순연된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연쇄적인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당초 사업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는 총사업비가 강남역 3,500억원, 광화문 2,5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강남역 5,640억원(61.1% 증액), 광화문 3,504억원(40.2% 증액)으로 변경되어[54] 2023년 7월 20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었음. 2023년 10월 말 도출된 적정성 검토 결과, 3,144억원의 총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음.[55]

54)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용역비 13억 400만원, 용역기간 2022.11.21.~2023.11.30.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용역비 7억 200만원, 용역기간 2022.11.21.~2023.11.30.

55) 강남역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상 유출부였던 한강 한남IC 유역이 지형적으로 공사가 곤란함을 고려하여, 반포빗물펌프장을 유출부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노선 및 시설에 따라 사업규모의 증가가 발생하였음.
광화문의 경우, 당초 유입구인 옥류동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고, GTX-A공사 구간과의 중복을 방지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중학천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노선을 일부 변경하며 수직구 위치가 변경되어 길이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계획 변경 내역]

구분	강남역		광화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규모	연장 3.1km, 직경 8.3m, 저류량 17만m^3	연장 4.5km, 직경 5.0~11.0m, 저류량 46.2만m^3	연장 3.2km, 직경 5.5m, 저류량 8만m^3	연장 3.4km, 직경 6.0m, 저류량 12만m^3
총사업비	3,500억원	약 5,640억원	2,500억원	약 3,504억원
사업기간	2023~2027년	2023~2028년	2023~2027년	2023~2028년

자료: 환경부

2023년 11월 타당성 검토 이후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인 서울특별시가 2023년 말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조금 전액을 11월에 교부하였음.

그러나 조달청 공고 이후 사업이 2차례 무응찰 유찰됨에 따라 환경부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재협의를 통해 2024년 2월 8,684억원(강남역 5,386억원, 광화문 3,298억원)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였고, 이후 사업 공고에서 1개 건설사 단독입찰로 서울시는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실집행액은 없고, 2024년 5월 말 현재 환경부는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을 위한 절차 진행 중임. 이는 당초 환경부의 계획보다 10개월 지연된 것임.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3년 기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후 우선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에서 2024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추진 계획]

구분		당초	2023.11월 기준	2024.5월 기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입찰공고	2022.9.28.	2022.9.28.	2022.9.28.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2022.11.15.~2023.5.15.	2022.11.15.~2023.5.15.	2022.11 ~2023.1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23.3.	2023.3.	2023.3.
	공기 적정성 심의	2023.4.	2023.4.	2023.4.
건설 공사	발주방침	2023.5.	2023.5.	2023.11.
	설계・시공 입찰공고(조달청)	2023.6.	2023.11.	2023.12.~2024.4.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2023.7.~ 10.	2023.12.~2024.4.	2024.5.~2024.9.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023.11.	2024.5.	2024.11.
	우선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	2023.11.~2024.5.	2024.5.~2024.11.	2024.12.~
	본공사 시행	2024.6.~27.12.	2024.12.~2028.5.	2025.10.~2028.12.

자료: 환경부

그러나 현재 환경부는 기본설계 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37조제2항제6호는 “발주청은 차명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설계기간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업지 일대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적 지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2024년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순연될 것으로 예측됨.

환경부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내에 우선시공분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3억 4,800만원(△16.6%)이 적은 67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200만원(19.2%)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산	21,419	21,419	5,693	△15,726	8,133	8,133	6,785	△1,348	1,092
총수입	21,419	21,419	5,693	△15,726	8,133	8,133	6,785	△1,348	1,092

문의 :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05억 4,600만원(△2.2%)이 적은 4,591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5,500만원(4.0%)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53,682	452,087	441,571	△10,516	469,672	469,672	459,126	△10,546	17,555
총지출	453,682	452,087	441,571	△10,516	469,672	469,672	459,126	△10,546	17,555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1억 3,300만원으로 68억 3,0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67억 8,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3%)되었으며, 1,4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고, 3,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133	8,133	-	8,133	6,830	6,785	14	32
합 계	8,133	8,133	-	8,133	6,830	6,785	14	3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851억 1,900만원으로, 이 중 4,591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6%)되고 122억 3,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7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66,628	466,628	15,447	-	-	482,075	459,126	12,051	10,89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044	3,044	-	-	-	3,044	-	181	2,863
합 계	469,672	469,672	15,447	-	-	485,119	459,126	12,232	13,76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기상청 자산은 전년 대비 250억 4,100만원이 증가한 1조 127억 7,6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84억 3,400만원, 무형자산이 82억 3,5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67억 2,800만원 감소한 280억 8,8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159억 3,9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17억 6,900만원이 증가한 9,846억 8,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기상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966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288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6,6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상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012,776	987,735	25,041	2.5
		유동자산	8,326	10,220	△1,894	△18.5
		투자자산	1,175	614	561	91.4
		일반유형자산	941,767	923,333	18,434	2.0
		무형자산	57,104	48,869	8,235	16.9
		기타비유동자산	4,403	4,700	△297	△6.3
	부 채		28,088	44,816	△16,728	△37.3
		유동부채	18,330	19,119	△789	△4.1
		장기차입부채	9,758	25,697	△15,939	△62.0
	순자산		984,688	942,919	41,769	4.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96,606	272,997	23,609	8.6
	재정운영순원가		428,869	405,203	23,666	5.8
	재정운영결과		428,869	405,203	23,666	5.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기상청은 「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총 110개 사업에서 위험기상, 지진, 기후위기 등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 대응역량 확보와 미래기술 기반의 기상서비스 및 기상기술 연구개발 확대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시험연구비 예산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시험연구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보고서 번역 부족분, 기관의 일반업무에 대한 용역 수행 등의 목적으로 세목조정 및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으므로, 기상청은 향후 시험연구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용도로만 시험연구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상청은 2023년 10월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사업을 계약해제한 이후 사업자 재선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2024년 7월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계약근거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 재선정 및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상청은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감리 용역을 연말(2023년 12월 12일) 세목조정을 통해 추진하였고, 2024년 감리 용역도 세목조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감리 용역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의 연례적 조정 부적절

가. 개 요

‘시험연구비(210-13목)’ 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만 집행할 수 있음.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10개 세목은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임.

이는 비목 간의 전용 절차를 생략하여 시험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험연구의 특성상 비목별 지출소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집행가능비목을 한정하여 편성하는 비목임.

2023년도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비는 8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예산현액 95억 5,100만원 중 93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3%)되고 1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기상청 시험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도 시험연구비								2024년도 예산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태풍센터 운영	44	44	-	-	44	41	-	3	44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정보화)	21	21	-	-	21	4	-	17	21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1,699	1,699	-	△200	1,499	1,445	-	54	1,627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R&D)	512	512	-	-	512	471	-	41	474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605	605	-	△46	559	559	-	-	197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도 시험연구비								2024년도 예산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	218	218	-	△5	213	209	-	4	226
기상위성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479	479	-	△74	405	403	-	2	340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6,023	6,023	112	162	6,298	6,259	-	39	4,789
계	9,602	9,602	112	△325	9,551	9,391	-	160	7,718

나. 검토의견

첫째, 기상청은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시험연구비 예산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연구비가 시험연구의 특성상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부 집행내역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집행가능비목을 한정하여 총액으로 편성하는 비목임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먼저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최근 5개년 결산 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2억원 상당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2019~2023년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시험연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개발 (R&D)	2019년	1,525	1,525	-	△213	1,312	1,254	-	58
	2020년	1,269	1,269	-	△40	1,229	1,061	-	168
	2021년	1,586	1,586	-	△250	1,336	1,072	-	264
	2022년	1,402	1,372	-	△50	1,322	856	-	466
	2023년	1,699	1,699	-	△200	1,499	1,445	-	54
	5개년 평균 불용액								202

자료: 기상청

2023년의 경우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슈퍼컴퓨터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2억원을 동 사업에서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사업으로 이용(감)하였음.

[2019~2023년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시험연구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이·전용 등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R&D)	2019년	△213	- 2019년 기후서비스포럼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분(세목조정, 1억 6,800만원) - 국제지진조기경보컨퍼런스 진행에 따른 시험연구비 부족분 재배정(수치내역사업→지진내역사업 증감재배정, 4,500만원)
	2020년	△40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1140-501)의 문자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예산 충당(이용, 4,000만원)
	2021년	△250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1140-501)의 취약계층 문자서비스 제공 및 기상정보 통보 회선료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예산 충당(이용, 1억원) - 수치예보기술 R&D사업 중기 성과관리방안 연구(전용, 1억원) - 미래 기상기후재해 대응 융합형 예보기술개발 추진방안 연구 등 기획연구 추진(전용, 5,000만원)
	2022년	△50	-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성 저조 등 현행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전용, 5,000만원)
	2023년	△200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슈퍼컴퓨터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이용, 2억원)

자료: 기상청

이는 기상청이 예상 불용재원 2억원을 슈퍼컴퓨터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으로 활용한 것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슈퍼컴퓨터 전기요금 충당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본적으로 기상청 동 사업에서 2억원 상당의 불용재원이 있었다는 것은 연례적으로 시험연구비가 과다 편성되었음을 의미함.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의 특성상 비목별 지출소요를 시험연구비가 시험연구의 특성상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부 집행내역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집행가능비목을 한정하여 총액으로 편성하는 비목임을 고려하면, 시험연구비를 과다편성한 후 이를 이·전용하는 집행관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둘째, 일부 사업의 경우 시험연구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보고서 번역 부족분, 기관의 일반업무에 대한 용역 수행 등의 목적으로 세목조정 및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으므로, 기상청은 향후 시험연구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용도로만 시험연구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등 4개 사업에서 세목조정·내역변경을 통해 시험연구비 예산을 타 비목으로 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 시험연구비가 편성된 세부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연구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이 있었음.

[2023년 기상청 시험연구비 세목조정·내역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명	코드		세부사업명	코드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3133-316)	210-13	46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3133-316)	210-14	**화산활동 감시·예측 및 한반도 지각활동 진단기술 개발을 위해 ‘청양 지구자기 관측자료 생산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매뉴얼’과 ‘GNSS 관측자료 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전세계 화산 및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영향’ 보고서 번역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자체 세목조정**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3137-307)	210-13	30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3137-301)	210-02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천리안위성 지상국 기반시설 전기요금 부족
	210-13	44		210-02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천리안위성 지상국 기반시설 전기요금 부족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3137-301)	210-13	5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3137-301)	210-08	-천리안위성 지상국 기반시설 유류비 예산 부족
기상업무 지원기술 개발연구 (R&D) (4133-301)	**210-13**	15	기상업무 지원기술 개발연구 (R&D) (4133-301)	210-14	**예산확보 등을 위해 선진국 조직·예산 현황 분석을 전문기관 통해 수행하고자 시험연구비(210-13)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여 충당**
	210-13	9		210-14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회, 관련부처, 민간기업이 참여한 행사(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포럼)를 전문기관 통해 수행하고자 시험연구비(210-13)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여 충당**
	210-15	186		210-13	해양기상부이 관련 전손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자부담 발생·갱신 보험료 증가, 환율 인상으로 인해 기상조절 실험을 위해 필수인 연소탄 구매비용 등 예산 부족분에 대해 관리용역비(210-15) 집행잔액에서 시험연구비(210-13)로 세목조정하여 충당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용역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연구비 2,4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세목조정하였음. 이후 국립기상과학원은 2023년 11월 8일 연소탄 구매비용 등 시험연구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관리용역비에서 시험연구비로 1억 8,600만원 세목조정을 하여 재료비를 충당하였음.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사업 시험연구비 세목조정으로 신규 용역 추진 사례]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관측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도로위험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포럼	9	9	현대기획사	23.1.~23.2.	수의
응용기상 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기상선진국(미 기상청 중심) 예산 구조분석	15	15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3.1.~23.3.	수의

자료: 기상청

기상청이 시험연구비 세목조정(감)을 통해 추진한 신규 용역은 당초 동 세부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이러한 시험연구비 감액 조정으로 동 세부사업 시험연구비가 부족하여 연소탄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시험연구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기상청은 시험연구비를 과다편성한 후 이를 이·전용하는 집행관행을 개선하고, 시험연구와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시험연구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사업: 사업자 재선정으로 인한 집행부진

가. 개 요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사업은 위험기상 선행관측·환경기상 감시 및 기상조절 실험 등에 활용하고 있는 기상항공기에서 관측자료를 지상으로 신속하게 전달·제공하기 위한 위성통신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억 2,800만원 중 3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0%)되고, 8,600만원이 이월되었음.[2)]

[2023년도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2,604	2,604	-	-	2,604	2,511	86	8	2,604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428	428	-	-	428	342	86	-	-

동 사업은 기상항공기에 신규 위성통신안테나를 기존 위성통신안테나가 설치된 위치에 기체 타공이나 절단을 가하지 않고 설치하여, 신규 위성통신안테나가 제공하는 고속의 전화·인터넷 회선 서비스를 통해 운항 중인 기상항공기와 지상 간 문자·음성통화·데이터전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일반회계-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1231-303)(국립기상과학원)

나. 검토의견

기상청은 2023년 10월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사업을 계약해제한 이후 사업자 재선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2024년 7월 기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이러한 지연사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2023년 3월 동 사업 용역을 공고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인해 유찰되었고, 이후 2023년 4월 18일 ㈜아리온통신과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 사업 위성통신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운행 중인 기상항공기 기종에 위성통신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기상청은 계약상대방인 ㈜아리온통신이 제시한 설치대상물품(위성통신안테나)이 기상항공기 기종(King Air 350)에 적합하다는 기술근거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기술근거자료 재제출을 요구하였음.

기상청은 총 4회에 걸쳐 기술근거자료 재제출을 요구하였고,[3] 설치대상물품에 대한 기술근거자료 준비·제출을 위해 당초 7월 종료 예정이던 계약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음에도 ㈜아리온통신은 기술근거자료의 마련·추진을 위한 자료를 미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기상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2023년 10월 ㈜아리온통신과의 계약을 해제하였음.[4][5]

---

3) 1차 요청(이메일): 2023.6.5., 2차 요청(공문): 2023.6.22., 3차 요청(공문): 2023.9.5., 4차 요청(공문): 2023.9.13.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 · 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8. 12. 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5) 이후 기상청은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21,554,500원을 2024년 1월 5일 위약금 세입으로 수납 완료하였고, 2024년 1월 8일 계약해제 후속처분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 청취 및 처분 심의를 판단하여, 2024년 1월 29일 계약상대자 ㈜아리온통신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실시하였음.

이후 기상청은 2023년 11월 사업자 신규 선정을 위해 동 사업을 재공고하였고, 단일응찰로 인한 유찰 이후 2023년 12월 27일 ㈜써니항공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라 기상청은 2024년 7월 현재까지 기상항공기 위성통신체계 개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2024년 9월 이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

이러한 사업 지연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있으나, 당초 기상청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방에 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여 계약상대방의 기술근거자료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기상청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사업자 재선정 및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본예산 미편성 이후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 부적절

가. 개 요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상레이더 및 관측장비 총 46개소의 송·수신기, 제어부, 안테나부와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실시간 운영상태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억 2,200만원 중 3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0.5%)되고 9,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도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레이더 운영	8,065	8,065	529	150	8,744	8,327	96	320	9,011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및 성능시험	1,727	1,727	-	△36	1,690	1,535	96	59	1,433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500	500	-	22	522	368	96	57	900

동 사업은 기상레이더 12소, 연직바람관측장비 13소, 낙뢰관측장비 21소 총 46개소의 원격탐사관측장비에 대하여 장비의 상태정보 관리 DB 구축 및 실시간 운영상태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됨. 기상청은 총 20억 5,000만원의 총사업비(시스템 구축 등 16.5억원, 시스템 고도화 4억원)를 계획하였음.

6) 일반회계-기상레이더 운영(1233-302)(기상레이더센터)

나. 검토의견

기상청은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감리 용역을 연말(2023년 12월 12일) 세목조정을 통해 추진하였고, 2024년 감리 용역도 세목조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절한 집행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기상청은 2023년 설계용역과 구축용역을 추진하였음. 기상청은 당초 연내에 설계와 구축 용역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설계용역이 3회 무응찰 됨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어, 구축용역 계약 체결이 2023년 12월 27일에 이루어졌음.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내역]

○ 설계용역 추진내역 - 사업공고(1차1.16.~1.27./2차 1.30.~2.7./3차 2.8.~2.14./3회 무응찰) - 계약체결(3.16.) - 과업수행(3.16.~7.14.) ○ 구축용역 추진내역 - 계획수립(7.27) - 조달청 협의(7.27.~9.25.) - 사전규격공개(9.27.~10.2.) - 사업공고(1차 10.26.~11.15./2차 11.16.~11.29.) - 제안서 평가(11.30.~12.4.) 및 계약체결(12.27.)

자료: 기상청

동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5,000만원으로,「전자정부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가 필수적인 사업임. 그런데 기상청은 본예산에 동 사업 감리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세목조정을 통해 동 사업 감리용역 예산을 조달하였음.[7)]

---

7)「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기상청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명	코드		세부사업명	코드	
기상레이더 운영	210-15	22	기상레이더 운영	210-14	지상 기반 원격탐사관측장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1차연도 감리용역 추진을 위한 부족분 충당을 위해 동 사업 내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자료: 기상청

감리용역이「전자정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감리용역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세목조정을 통해 해당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이전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기상청은 2024년도 예산에도 감리를 위한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동 사업 2차년도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계약금액 4,790만원), 이러한 예산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기상청은「전자정부법」에 따라 감리 용역이 필수적인 정보화 사업 예산을 수행함에 있어 감리 용역을 본예산부터 편성하고,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용역을 추진하는 부적정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사업: 전용 등을 통한 공사비 조달 부적정

가. 개 요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은 항공사고를 경감하고 항공기상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위험기상탐지장비가 부족한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공항기상레이더(TDWR; Terminal Doppler Weather Radar)[8]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7억 8,900만원 중 7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6%)되고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9][10]

[2023년도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레이더 운영	8,065	8,065	529	150	8,744	8,327	96	320	9,011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1,868	1,868	529	480	2,877	2,811	-	66	2,049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	-	-	490	299	789	723	-	66	-

나. 검토의견

기상청은 2억 9,900만원의 전용 등을 통해 제주공항 레이더 설치 공사 사업 공사비 부족액을 충당하였는데, 이는 2020년부터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2022년 예산 3억 700만원을 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8) 공항기상레이더(TDWR; Terminal Doppler Weather Radar)는 공항 주변의 구름의 분포와 강수강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난류를 감지하는 기상레이더 시스템으로, 공항기상레이더를 통해 관측된 정보는 처리되어 관제탑, 접근관제소, 항공교통관제소 등에 제공됨. 특히, 난류지역에 접근하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경보를 알림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이 · 착륙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됨.

9) 일반회계-기상레이더 운영(1233-302)(기상레이더센터)

10) 「기상법」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상청은 당초 제주공항 타워공사를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3년부터 완료된 타워에 설치할 기상레이더 구매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주민반대・전자파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세 차례에 걸쳐 부지가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음.

기상청은 2022년말까지 1차년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2022년 3억 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이후 기상청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2022년 불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2억 9,9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해 조달하였음.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공사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년	1,500	-	23	1,523	73	1,362	88
2022년	545	1,362	△13	1,894	1,098	490	307
2023년	-	490	299	789	723	-	66

주) 2020년에는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았음
자료: 기상청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공사비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명	코드		세부사업명	코드	
내역변경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420-03	163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420-03	내역사업 기상레이더센터 및 관측소 운영(기상레이더관측소 및 레이더 테스트베드 진입로 및 시설물 보수) → 공항기상레이더 구축(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
전용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430-01	108	기상레이더 운영 (1233-302)	420-03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타워설치 공사로 인한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의 공사비로 전용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231-304)		28			
계			299			

자료: 기상청

이는 집행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결과,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타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기상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운영 사업: 대국민 기상만족도 향상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운영’ 사업은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일반 국민 및 유관기관 대상 다채널 기상정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날씨누리, 날씨알리미 등)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5억원 중 72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2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3년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정보화)	15,722	15,722	284	△476	15,530	15,099	-	431	16,233
종합기상정보 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서비스 개선 운영	7,192	7,192	284	24	7,500	7,261	-	239	8,140

기상청은 동 사업을 통해 날씨누리,[12)] 날씨알리미[13)] 등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기상청은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기상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해 2억 1,500만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음.

11) 일반회계-기상정보통신시스템운영(정보화)(1239-500)(관측기반국)

12) 기상청이 운영하는 날씨, 지진 정보 등 제공 홈페이지임.

13) 기상청이 운영하는 날씨, 지진 정보 등 제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임.

나. 검토의견

기상청은 대국민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날씨누리, 날씨알리미 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2023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기상서비스 요소별 국민만족도 및 기상서비스 활용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상청은 일반 국민의 기상서비스 만족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등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20년 기상청은 날씨누리 개선을 위해 8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2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2억 1,500만원의 예산 집행을 통해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였음.

[2020~2023년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사업내용
2020년	900	873	2020년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날씨누리) 개선
	200	190	2020년 기상청 홈페이지 통합정비 사업
	230	230	날씨알리미 개선 *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3차년도 구축사업에 포함
2021년	200	196	2021년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날씨누리) 개선
	85	85	날씨알리미 개선 *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사업에 포함
2022년	200	196	2022년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날씨누리) 개선
	100	94	모바일 서비스 날씨알리미 앱 개선
2023년	220	215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날씨누리) 개선

자료: 기상청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및 실질적인 국민의 기상정보서비스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보임. 날씨알리미 앱·인터넷 기상방송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3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서비스 요소별 국민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반국민 중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상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도 감소하였음.

먼저 기상서비스 요소별 국민만족도를 보면, 단기예보·중기예보·기상특보 만족도

및 기상특보 시의성 모두에서 2021년 대비 2023년 만족도가 감소하였음.

[2021~2023년 일반국민의 기상서비스 요소별 국민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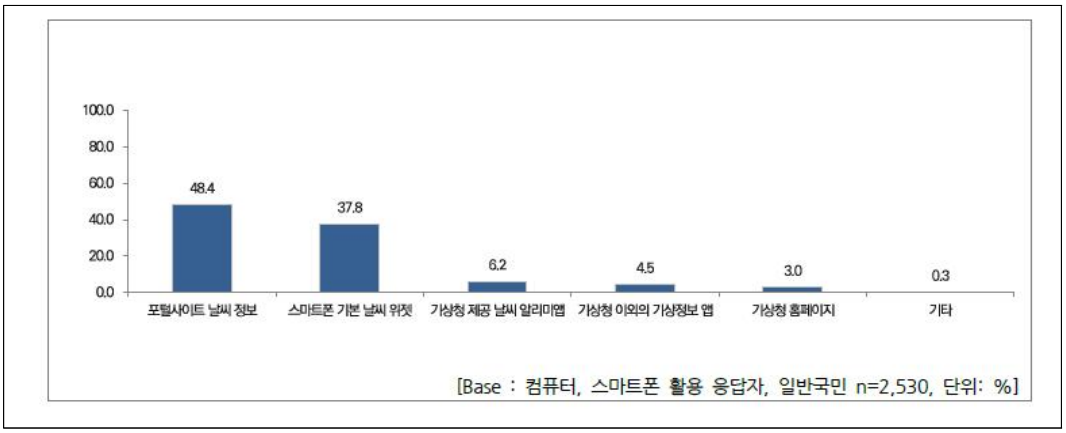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증감
단기예보 만족도	70.4	67.1	67.8	△2.6
중기예보 만족도	62.1	61.1	60.9	△1.2
기상특보 만족도	69.8	70.5	69.6	△0.2
기상특보 시의성	75.5	75.5	72.1	△3.4

자료: 기상청

또한, 활용도 측면에서도 일반국민 중 인터넷 기상정보서비스를 통해 기상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이 9.2%로 낮고, 전년 대비 감소(△1.4%p)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해당 응답자 중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기상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이 84.4%인데, 그 중 기상청 날씨알리미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은 6.2%, 기상청 홈페이지를 주로 활용하는 국민은 3.0%에 불과하였음.[14)]

[일반국민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기상서비스 이용매체]



자료: 기상청

이처럼 기상청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만족도 및 활용도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일반 국민의 기상서비스 만족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을 받는 국민 중 48.4%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터 날씨 정보를 활용한다고 응답하고, 스마트폰 기본탑재 날씨 위젯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연례적 인건비 미집행 잔액 이월 부적정

가. 개 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사업은「기상법」등에 따라 기상·지진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담하고,「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상기업 육성 및 기상산업 지원업무도 담당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5억 6,100만원 전액이 출연되었음.[15)]

[2023회계연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산업 활성화	15,350	15,350	-	-	15,350	15,349	-	1	15,32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10,561	10,561	-	-	10,561	10,561	-	-	9,130

나. 검토의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연례적으로 인건비 미집행 잔액을 이월하고 있는데, 기관 인건비 운용에 관한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미집행 잔액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7개년 동안 평균 4억 9,8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인건비 미집행잔액 5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음.

15) 일반회계 - 기상산업활성화(1431-301)(기상서비스진흥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운영 출연금 (인건비)	수입	4,661	4,782	4,887	5,092	5,667	6,346	6,637
	지출	4,185	3,877	4,390	4,587	5,343	6,074	6,129
	잔액 (=차년도 이월액)	476	905	497	505	324	272	508

자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퇴직자 및 휴직자 등 결원 발생으로 인해 인건비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이를 차년도 기관세입에 계상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음.[16)]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약 3억원~9억원에 이르는 인건비 미집행잔액을 반복하여 차년도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기관 인건비를 운용하는 것은 정·현원 차이, 충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국회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연례적 인건비 미집행잔액 이월 관행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을 의결하고, 기상청은 이에 대해 2021년 12월 28일 조치완료로 국회에 보고하였음에도 이러한 집행 관행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17)]

1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06)」
- 일반출연금(350목) 세부지침: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17) 이에 대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의결 이후 2020~2022년 동안 인건비 미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 노력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동 기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대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2021.10.)된 이후 1차 지방이전(2023.12.)이 있어 이로 인한 결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잔액 발생분을 차년도로 이월하였다고 설명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연례적 인건비 미집행잔액 이월 관련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7) 기상청의 출연예산을 활용한 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사례 개선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건비 이월 등 시정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이월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예결위 내 인건비 이월 관련 지적사항 개선 계획 수립('21.12.)하여 시행중임 - '22~'26년 중기사업계획서(출연금)에 정원 대비 인건비 부족분 요구 및 '23년부터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음 ※ 정원 대비 인건비 확보 시, 향후 인건비 잔액은 반납조치 - 대행역무사업 및 기획평가관리비(R&D사업) 내 인건비 자연 증감분 반영을 위해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따라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향후 철저한 인력운영 계획의 수립을 통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연례적 인건비 미집행액 관리 필요

가. 개 요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수치예측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41억 3,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8)]

[2023년도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 기술 개발	14,135	14,135	-	-	14,135	14,135	-	-	10,125

동 사업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 출연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3개 과제 수행을 위해 2023년 연구개발인건비 65억 600만원, 연구개발경상경비 15억 7,700만원, 연구개발활동비 60억 5,200만원을 교부받았고, 예산현액 167억 7,700만원 중 131억 3,8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78.3%)하고 36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음.

18) 일반회계-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3133-312)(수치모델링센터)

[2023년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4차원 고품질 기상분석을 위한 최신 자료동화기술 개발	3,910	3,910	3,910	3,910	648	4,558	3,819	739	-	83.8
가변격자차계 기반 통합형수치예보모델개발	6,473	6,473	6,473	6,473	1,055	7,528	6,413	1,115	-	85.2
거대 수치예측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수요맞춤 활용기술 개발	3,752	3,752	3,752	3,752	932	4,684	2,906	1,778	-	62.0
계	14,135	14,135	14,135	14,135	2,635	16,770	13,138	3,632	-	78.3

자료: 기상청

나. 검토의견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인력채용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인건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차년도 인건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단의 최근 3개년 인건비 집행실적을 보면, 2021년의 경우 인력채용 지연 등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잔액이 18억 7,400만원이 발생하여 2022년으로 이월되었음. 2022년에도 정원 104명 대비 현원 83명 운영으로 기상청에서 9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도 예산현액 70억 5,900만원 중 63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3년의 경우에도 인건비 집행 잔액 5억 7,6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최근 3개년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이월사유 및 비고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21	5,672	5,672	5,672	717	6,389	4,516	70.7	1,874	-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 잔액 이월
2022	6,100	5,185	5,185	1,874	7,059	6,350	90.0	709	-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915백만원 미교부(불용)
2023	6,506	6,506	6,506	709	7,215	6,639	92.0	576	-	인건비 집행 잔액 이월
2024	6,806	4,084	4,084	576	4,660	2,031	43.6	-	-	

주) 2024년 집행액은 5월 말 기준임
자료: 기상청

이처럼 동 사업단이 인건비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연례적으로 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2021년은 정원 104명 대비 현원이 31명 부족하였고, 2022년의 경우에도 정원 104명 대비 현원 21명이 부족하였음. 2023년은 정원 99명·현원 84명으로 15명의 인원이 채용되지 못하였음.

[최근 연도별 인건비 정원, 예산반영 인원, 현원]

연도	구분	정원	예산반영 인원[1]	인건비 단가[2]	현원[3]	현원-정원
2021	단장	1	-	-	1	-
	책임	17	17	1억 710만원	18	1
	선임	47	40	6,620만원	27	△20
	원급	34	28	4,290만원	20	△14
	연구근접인력	5	-	-	7	2
2022	단장	1	-	-	1	-
	책임	23	21	1억 480만원	19	△4
	선임	42	43	6,310만원	30	△12
	원급	31	34	3,720만원	26	△5
	연구근접인력	7	-	-	7	-
2023	단장	1	1	1억 4,000만원	1	-
	책임	23	21	1억 630만원	20	△3
	선임	40	44	6,400만원	31	△9
	원급	28	29	3,770만원	25	△3
	연구근접인력	7	7	5,180만원	7	-

연도	구분	정원	예산반영 인원[1]	인건비 단가[2]	현원[3]	현원-정원
2024	단장	1	1	1억 4,200만원	0	△1
	책임	23	22	1억 780만원	20	△3
	선임	40	31	6,490만원	32	△8
	원급	28	26	3,820만원	22	△6
	연구근접인력	7	7	5,250만원	7	-

주 1) 해당연도 확정예산 기준
2) 2021년은 선행사업단 평균연봉에 인건비 상승률 1.4% 적용, 2022년은 예산 산출 시(2021.5월) 평균연봉, 2023~2024년은 직전연도 단가에 인건비 상승률 1.4% 각각 적용
3) 현원은 각 연도별 12.31. 기준, 2024년의 경우 5월 말 기준 현원임
※ 예산반영인원은 채용예정인원 포함
자료: 기상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 2023년 이월된 5억 7,600만원의 인건비는 실인건비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예산반영인원이 모두 채용되지 않는 이상 동 인건비는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19]

특히 신규 채용에 비해 퇴사 인력이 더 많아짐에 따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2024년 5월 말 기준 정원 99명 대비 현원은 다시 81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처럼 인력 채용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2024년에도 이러한 인건비 미집행액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기상청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차년도 인건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20]

1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일반출연금(350목) 세부지침: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20) 참고로,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의 인건비는 동일한 사유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2023년 7억 8,000만원, 2022년 4억원 감액된 바 있음.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8.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연례적인 예산 미집행 부적절

가. 개 요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종합상황실인 국가기상센터를 대전시에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억 4,400만원 중 1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고 28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3년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3,044	3,044	-	-	3,044	-	181	2,863	1,943

당초 기상청은 5년(2022년~2027년) 내에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청사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추진과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2027년 → 2022~2028년(1년 연장)
○ 총사업비: 675억 1,500만원(기상청) → 454억 3,600만원(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확정값)
○ 사업 추진 경과
- 2021.6: 국가기상센터(대전) 청사수급관리계획 확정(8,127㎡)
- 2021.7: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비 반영(혁신회계 67,515백만원)
- 2021.8: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면제(기재부)
- 2021.11~2023.5.: KDI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 2023.8.~2023.9.: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총사업비 확정(454억 3,600만원) 및 조정(총사업비 변경 없이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증액)
- 2023.10.: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계약
- 2024.1.: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국제지명설계공모
- 2024.5.: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기본설계 계약 체결

자료: 기상청

2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7141-301)(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탄소중립청사로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및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 역시 집행실적이 전무하므로, 이와 같은 예산불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3년 5월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기상청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2022년 5월까지 KDI 적정성 검토 완료 후 동 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KDI와의 이견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에 기간이 소요되었고, 2023년 8월에야 총사업비가 454억 3,600만원으로 확정되어 이후 사업을 추진 중임.[22)]

총사업비 확정 이후 기상청은 국가기상센터를 탄소중립센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국제설계공모로 센터 신축 설계공모를 시행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9월 27일 조달청에 국제설계공모 관리를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시행함.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당초 기상청은 2023년 12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12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8개월의 기본설계 후 2024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23년 10월 12일 동 사업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유찰(단일응찰)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후 2023년 10월 말에서야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월 이후 국제지명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4년 5월 설계용역을 계약하였음.

22)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시 기상청과 KDI의 주요 이견사항>

주요 이견사항	기상청 의견	KDI 의견
건축 특수시설 기본단가	- 3개 사례 단가: 4,628천원/㎡ * 탄소중립건물과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설비 구축 필요 * KDI 선정 사례는 주요기반설비(공조설비, 전력이중화 등) 부족하거나 추후 공사 진행된 사례임	- 타 3개 사례 단가: 2,671천원/㎡ - 추후 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필요
면적	탄소중립 청사 개발을 위한 기계실 등 적정면적 확보 필요	일반청사 기준의 기설기준에 의한 기계실 면적 축소 필요
총사업비	675억 1,500만원	413억원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국제설계공모 일정]

내 용	일 정	장소
공고	2024. 1. 15.(월)	홈페이지 (kma-eco-nmc.kr)
현장설명	2024. 1. 22.(월) 14:00~15:00	대전정부청사
응모작 접수	2024. 4. 15.(월) 13:00~17:00	서울청사 2층 대강당
기술검토	2024. 4. 19.(금)	서울청사 2층 대강당
작품심사	2024. 4. 26.(금)	서울청사 2층 대강당 (유튜브 실시간 공개)
결과발표	2024. 4. 27.(토)	홈페이지 (kma-eco-nmc.kr)

자료: 기상청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은 2022년 전액 불용된 이후 2023년에도 집행액이 전혀 없이 1억 8,100만원 이월되고 28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2~2023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945	945	-	-	945	-	-	-	-	945
2023	3,044	3,044	-	-	3,044	-	-	-	181	2,863
2024	1,943	-	-	-	-	-	-	-	-	-

자료: 기상청

이러한 예산의 불용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이미 1년의 사업기간을 연장한 국가기상센터 신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기상청은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예산안이 추가적인 지연 없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조 2,321억 5,800만원(4.2%)이 많은 30조 4,363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976억 3,700만원(11.7%)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41,061	141,061	538,360	397,299	250,447	250,447	344,649	94,202	△193,711
기 금	26,634,857	26,634,857	26,700,349	65,492	28,953,741	28,953,741	30,091,697	1,137,956	3,391,348
총수입	26,775,918	26,775,918	27,238,709	462,791	29,204,188	29,204,188	30,436,346	1,232,158	3,197,637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조 1,091억 4,300만원(△5.9%)이 적은 33조 6,595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545억원(△4.7%)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099,325	9,236,348	7,669,940	△1,566,408	6,674,114	6,674,114	5,787,760	△886,354	△1,882,180
기 금	29,472,696	29,687,640	27,644,073	△2,043,567	28,276,425	29,094,542	27,871,753	△1,222,789	227,680
총지출	36,572,021	38,923,988	35,314,013	△3,609,975	34,950,539	35,768,656	33,659,513	△2,109,143	△1,654,500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504억 4,700만원으로 5,149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446억 4,900만원이 수납(수납률 66.9%)되고 24억 9,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677억 8,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33,946	233,946	-	233,946	469,927	315,754	2,491	151,68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580	40	-	540
- 투자계정	-	-	-	-	580	40	-	54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501	16,501		16,501	44,413	28,854		15,559
- 지역지원계정	15,939	15,939	-	15,939	38,920	23,362	-	15,559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62	562	-	562	5,493	5,493	-	-
합 계	250,447	250,447	-	250,447	514,920	344,649	2,491	167,78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9,967억 9,800만원으로, 이 중 6조 1,078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3%)되고 170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718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239,387	6,239,387	2,602	±12,234	-	6,241,989	5,358,711	17,099	866,17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9,132	89,132	-	-	-	89,132	89,127	-	5
- 투자계정	89,132	89,132	-	-	-	89,132	89,127	-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0,248	300,248	-	-	-	300,248	298,511	-	1,737
- 지역지원계정	276,577	276,577	-	-	-	276,577	274,840	-	1,737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3,671	23,671	-	-	-	23,671	23,671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65,429	365,429	-	±1,552	-	365,429	361,492	-	3,937
합 계	6,994,196	6,994,196	2,602	±13,786	-	6,996,798	6,107,842	17,099	871,857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43조 9,656억 7,400만원으로 46조 8,884억 5,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9조 3,780억 5,100만원이 수납(수납률 84.0%)되고 3,843억 7,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7조 1,260억 3,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1,679,991	21,679,991	23,021,402	20,913,318	72,500	2,035,58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9,056,193	19,056,193	16,582,597	14,967,779	106,555	1,508,263
임금채권보장기금	916,927	916,927	4,612,138	975,222	195,224	3,441,69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900,474	1,900,474	2,127,938	2,095,985	3,008	28,944
근로복지진흥기금	412,089	412,089	544,377	425,747	7,083	111,547
합 계	43,965,674	43,965,674	46,888,451	39,378,051	384,370	7,126,03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43조 9,682억 800만원으로, 이 중 39조 3,780억 5,100만원이 지출(집행률 89.6%)되고 1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2,368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고용보험기금	21,679,991	21,679,991	214	21,680,205	20,913,318	87	630,81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9,056,193	19,056,193	16	19,056,209	14,967,779	102	565,926
임금채권보장기금	916,927	916,927	8	916,935	975,222	0	10,2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900,474	1,900,474	-	1,900,474	2,095,985	0	8,839
근로복지진흥기금	412,089	412,089	2,296	414,385	425,747	0	20,982
합 계	43,965,674	43,965,674	2,534	43,968,208	39,378,051	189	1,236,843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고용노동부 자산은 전년 대비 5조 3,419억 1,600만원이 증가한 46조 5,870억 6,2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98억 4,7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5조 3,180억 6,8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379억 6,3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959억 7,800만원 감소한 41조 6,168억 500만원으로 기타비유동부채 846억 6,7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조 4,378억 9,400만원이 증가한 4조 9,702억 5,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1조 72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725억 8,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8,031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066억 9,8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6,587,062	41,245,146	5,341,916	13.0
		유동자산	8,860,257	8,890,104	△29,847	△0.3
		투자자산	34,330,191	29,012,123	5,318,068	18.3
		일반유형자산	3,286,598	3,248,635	37,963	1.2
		무형자산	19,545	12,613	6,932	55.0
		기타비유동자산	90,472	81,672	8,800	10.8
	부 채		41,616,805	41,712,783	△95,978	△0.2
		유동부채	81,761	92,270	△10,509	△11.4
		장기차입부채	10,316,765	10,313,306	3,459	0.0
		장기충당부채	28,322	32,583	△4,261	△13.1
		기타비유동부채	31,189,957	31,274,624	△84,667	△0.3
	순자산		4,970,257	△467,637	5,437,894	1162.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1,007,252	29,734,668	1,272,584	4.3
	재정운영순원가		31,505,094	30,477,400	1,027,694	3.4
	재정운영결과		2,803,167	4,609,865	△1,806,698	△39.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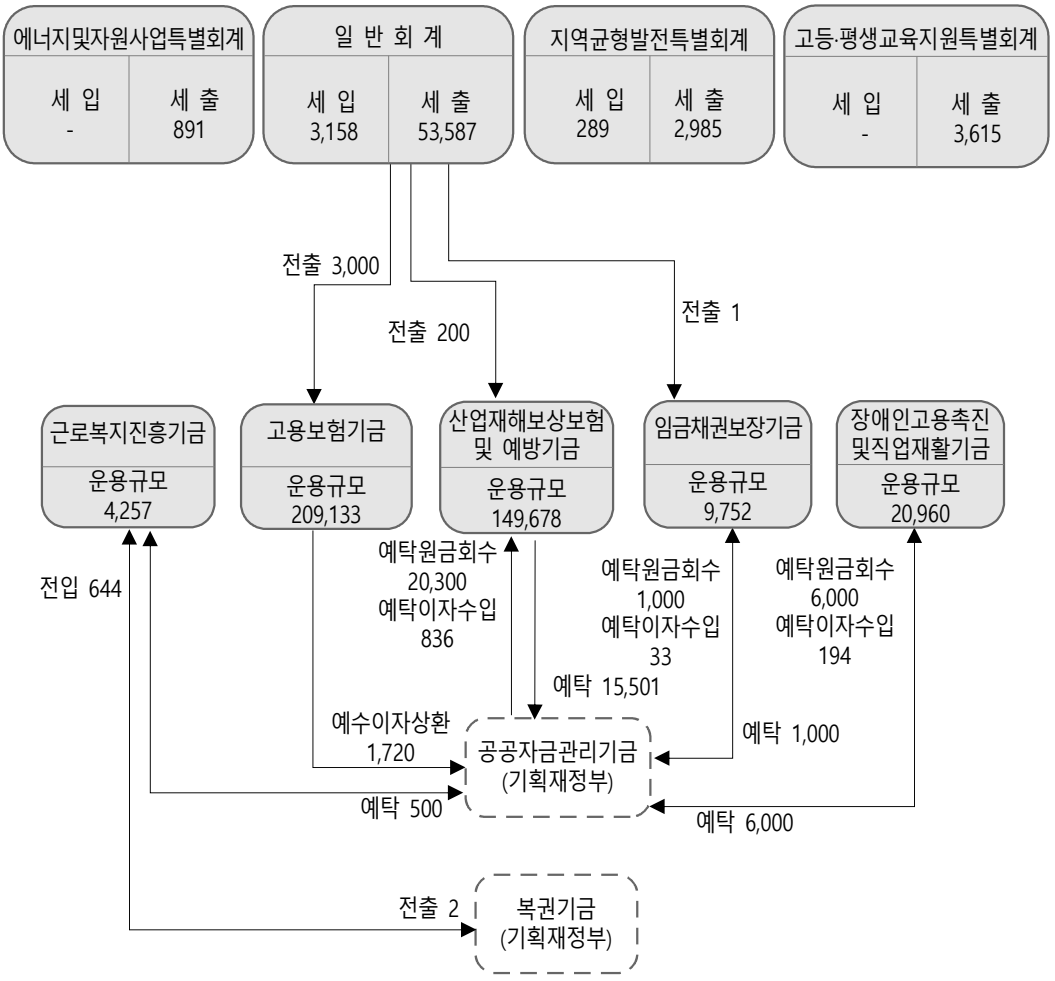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4개 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3,0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200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1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이자 1,720억원을 상환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2조 300억원, 예탁이자수입 836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 5,501억원을 예탁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1,000억원, 예탁이자수입 33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000억원을 예탁하였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6,000억원, 예탁이자수입 194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0억원을 예탁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644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2억원을 반환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고용노동부는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보호,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 지역균형발전, 고등·평생교육지원)와 5개의 기금(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근로복지진흥)에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음.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경우 1유형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참여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참여기업이나 개인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특화 유형에 대한 지원이 당초 사업의 목적인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경우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양성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산재보험급여 사업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기간이 2023년 증가하여 처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산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산재승인 처리 신속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사업성과평가 및 워크넷 모니터링 등 : 계획적인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사업성과평가 및 워크넷 모니터링 등’ 사업은 워크넷 구인·구직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위탁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억 6,800만원 중 4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4%)되고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사업성과평가 및 워크넷 모니터링 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직업안정 기관운영	71,425	71,425	-	-	71,425	60,191	8,406	2,828	53,166
고용서비스 고도화	27,274	27,274	-	-	25,956	15,666	8,372	1,918	10,547
사업성과 평가 및 워크넷 모니터링 등	568	568	-	-	568	474	49	45	-

사업성과평가 및 워크넷 모니터링 등 사업 예산 중 ‘워크넷 구인·구직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위탁사업’ 예산으로 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고용서비스정책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연도 중 데이터 표준화와 모니터링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전용(증)을 통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워크넷 구인·구직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위탁사업’을 위해 일반용역비(210-14목)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억 8,000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목)로 목간 전용(증)(’23.6.8.)하여 ‘워크넷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연구’, ‘참여기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연구용역에 집행함.

[2023년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한 연구용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워크넷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인·구직자 실태조사 및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연구	180	113	49	’23.7.28~ 24.1.31	한국노동경제학회
지자체 등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의 워크넷 이용 실태조사 및 워크넷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방안 연구	100	90	-	’23.7.28~ 23.12.15	한국직업자격학회

주) 이월액은 수행기관 단계에서 이월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연구용역의 추진으로 당초 계획된 모니터링 위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023년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직업안정 기관운영 (1032-301)	210-14목 (일반용역비)	280	직업안정 기관운영 (1032-301)	260-01목 (일반연구비)	워크넷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사업은 심층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으로 계획 변경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위탁사업 대신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해 당초 계획한 모니터링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과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정확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기관의 업무처리 현황·서비스 수요 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 전용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데이터 표준화 방법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모니터링 위탁사업 추진 이전에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항들로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 실적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조 2,256억 1,500만원 중 9,255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5%)되고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00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민취업지원제도	1,225,455	1,225,455	160	-	1,225,615	925,569	40	300,006	942,51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1유형, ②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유형, ③ 참여자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지원	
								구직 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1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	×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5억원↓	×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2년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2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	×	○
	청년		18~34세	×	×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			

자료: 고용노동부

3) 일반회계-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고용서비스정책관)

나. 검토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엄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하 '1유형' 이라 함)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및 선발형(청년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1유형은 인원 기준으로 57.2%가 참여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72.1%가 집행되어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사업 불용액 3,000억 600만원의 97%인 2,922억 5,400만원이 1유형에서 발생하였음.

[2021~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사업 목표 대비 참여인원]

(단위: 명, %)

연도	목표 인원 (A)	참여 인원 (B)	목표 대비 참여인원 비율 (B/A)
2021	450,000	340,649	75.7
2022	500,000	219,527	43.9
2023	400,000	228,929	57.2

자료: 고용노동부

[2021~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년	828,647	937,179	30	462	937,671	820,544	0	117,127	87.6
2022년	1,205,551	1,205,429	-	-	1,205,429	724,416	50	480,963	60.1
2023년	1,048,796	1,048,796	50	-	1,048,846	756,542	-	292,254	72.1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과 2022년의 집행 실적이 인원 기준으로 각각 34만명, 22만명, 금액기준으로는 8,205억원, 7,244억원임을 고려할 때, 2023년에 목표로 설정된 40만명과 1조 488억원 수준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1유형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지출의 성격이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

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4] 2024년에는 2022년과 2023년의 참여실적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내실화하였다고 설명함.[5]

그러나 2023년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추후 국민취업제도 사업 추진 시 예산과 집행실적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③ 취업지원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고용노동부는 정책서민금융이용자(금융위), 자립준비청년(복지부), 근로장려금 신청자(국세청), 복지수급자(지자체), 범죄피해가구(경찰청) 등 기관 간 연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 발굴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엄밀한 고용유지율 추계 노력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 확대 필요

가. 개 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8,890억 7,800만원 중 7,194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9%)되고 1,696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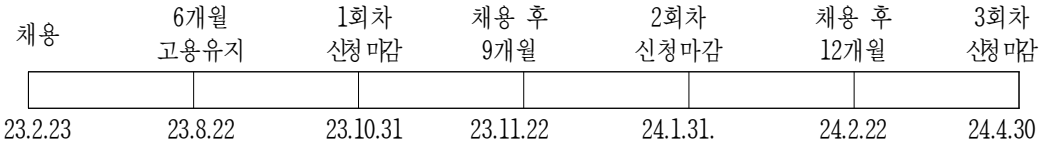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889,078	889,078	-	-	889,078	719,429	-	169,649	657,68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2021년 모두 종료되었으나,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을 감안한 장려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일반회계)사업이 추진되었음.

2023년 청년도약장려금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익월부터 2개월 내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하면 1차 지원금(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마다 지원금을 지급함.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절차 예시]



주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 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지침」

6) 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청년고용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존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달리 ‘취업애로청년’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였음에도 기존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을 적용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사업 추진 시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과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는 달리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사업수혜자가 일반 청년에서 취업애로청년으로 변경되고 지원기업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되는 등 사업 요건이 변화하였음.[7)]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비교]

구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17~2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21년 한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2~'24년 한시)
기업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예외)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예외) 지식서비스 산업 및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23년) 최소 매출액 기준 설정
청년 요건	청년이면 별도 제한 없음 (15~34세)		취업애로청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24년 4개월), 고졸 이하 학력, 자립지원 필요청년 등
지원 수준	월75만원×3년 (최대 2,700만원)	월75만원×1년 (최대 900만원)	(23년) 월60만원×1년 + 480만원 (2년차) (최대 1,200만원)
			(22년) 월 80만원×1년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 6개월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 6개월 고용유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사업대상과 요건이 달라졌음에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자의 고용유지율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당초 계획한 고용유지율인 92%보다 실제 고용유지율이 83%로 낮아 1,696억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음.

---

7) 2023년 기준 사업대상자인 ‘취업애로청년’은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임.

지원 대상 청년 및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였음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수혜자의 고용유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대상자인 취업애로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세부 산출 근거]

<table>
<tr><th></th><th>지원인원</th><th>지원금액</th><th colspan="7">고용유지율(개월)</th><th>예산</th></tr>
<tr><td>2022년 채용자 잔여지원금</td><td>12만명</td><td>월 80만원 ×12개월</td><td rowspan="2" colspan="7">6 | 7 | 8 | 9 | 10 | 11 | 12
0.92 | 0.90 | 0.87 | 0.84 | 0.82 | 0.80 | 0.78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019년 고용유지율 참고</td><td>6,974 억원</td></tr>
<tr><td>2023년 채용자 신규지원금</td><td>9만명</td><td>월 60만원 × 12개월</td><td>2,073 억원</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추계 시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이전에는 ‘취업애로청년’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하여 참고할 고용유지율 자료가 없었고, 다양한 유형의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 ‘취업애로청년’은 일반적인 청년고용통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추계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2019년 고용유지율을 적용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2년 예산 편성 시점까지 취업애로청년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2022년 1월 7일에서야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설정하여 지침을 배포한 것을 고려할 때, 2023년 예산 편성에 적용할 1년 이상 고용유지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존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용장려금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원대상자의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8)]

둘째, 고용노동부는 2024년의 경우 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4년「청년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상 동 사업의 목적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임.

동 사업의 2022~2024년 지원 대상자 변화 경과를 보면,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

8) 현재는 2022년 말에 채용된 ‘취업애로청년’의 고용유지율 확인이 가능하므로, 2025년도 이후 사업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고용유지율 적용이 필요함.

대되고 있음.

예컨대 2023년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 참여가능하였으나 2024년의 경우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청년일경험지원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음.

[2022~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대상자 변화 경과]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⑦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삭제)**~~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설명이나, 신규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 청년들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당초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청년일경험지원: 비수도권지역 청년 참여기회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청년층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553억 3,000만원 중 524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9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3년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126,293	126,293	-	-	126,293	117,280	939	8,074	244,113
청년일경험 지원	55,330	55,330	-	-	55,330	52,426	939	1,965	171,820

[2023년도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주요 내용]

유형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목적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기간	5일 이내	1개월 내외	1~3개월 내외
대상	미취업 청년 ※ 재학생 저학년, 군 장병, 구직단념·자립준비 청년 등	미취업 청년 ※ 재학생 고학년 등	
주요 내용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CEO와의 대화, 현직자(직무 및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 등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팀별 수행 ·기업·운영기관에서 수행 과정 코칭	·기업에서 과업 직접 수행 ·과업 수행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용	(기업) 시설 이용 등 운영비 (운영기관) 운영비	(기업) 코칭·심사 등 운영비 (청년) 참여 수당·활동비 (운영기관) 운영비	(기업) 멘토수당 등 운영비 (청년) 참여 수당 (운영기관) 운영비

자료: 고용노동부

9) 일반회계-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청년고용정책관)

나. 검토의견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참여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 제공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지역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15세~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행 방식・인턴・기업탐방 등의 일경험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 및 청년에게 운영비와 참여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전체 참여기업 1,857곳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1,077곳(58%)이며 전체 참여 청년 20,836명 중 수도권 지역에서 일 경험에 참여한 인원이 12,245명(58.7%)으로 비수도권지역 청년들의 일경험 참여가 다소 부족함.

[2023년 시·도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참여 현황]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참여기업(개)	640	109	328	144	154	48	27	22	5
참여청년(명)	7,546	1,393	3,306	2,065	1,064	546	389	407	101
지자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참여기업(개)	47	59	9	71	6	39	27	12	110
참여청년(명)	371	661	41	874	186	662	247	184	793

주) 기타는 비대면(온라인, 메타버스 등), 해외 일경험 등 국내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임
자료: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2023년 충남에서 41명, 전남에서 186명, 경남에서 247명이 동 사업에 참여하여, 전체 참여자수 대비 비율로는 각각 0.2%, 0.9%, 1.18%에 해당함.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수도권에 사업체와 청년이 집중되어 집행결과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2024년부터는 지역 청년의 일경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을 제공하도록 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함.[10)]

수도권에 많은 수의 기업이 위치하고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 또한 수도권 기업과 수도권 청년이 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53.3%와 49.3%의 청년고용률을 달성한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고용률이 40%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 등 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 (수도권 및 강원) 경기경총, 한국표준협회, ▲ (동남권) 창원상의, ▲ (대경권) 경북경총, ▲ (호남권) 광주상의 ▲(충청권) 청주상의

[2024년 1분기 시·도별 청년고용률 현황]

(단위: %)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년 고용률	53.3	45.2	49.3	45.2	38.2	38.1	43.0	37.1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4	45.4	46.6	45.0	37.6	39.0	39.6	36.6	4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이 일경험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유형 운영 필요

가. 개 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및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07억 8,000만원 중 348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4%)되고 59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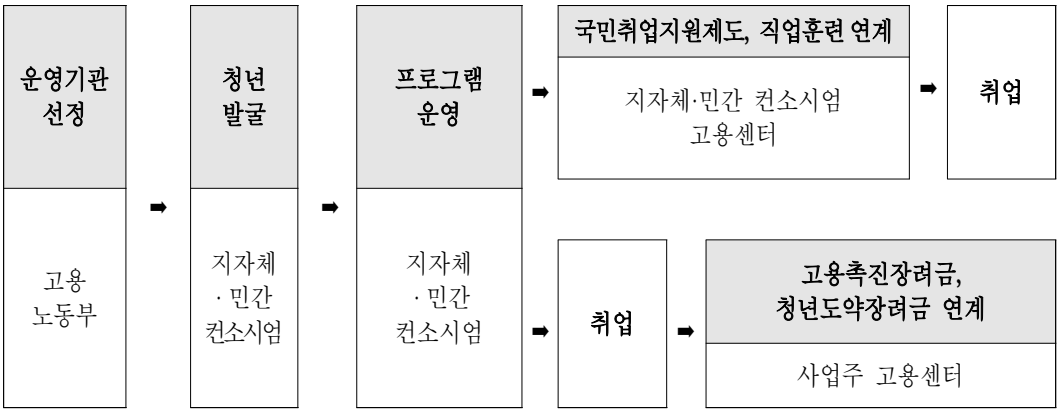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126,293	126,293	-	-	126,293	117,280	939	8,074	244,113
청년도전 지원사업	40,780	40,780	-	-	40,780	34,858	-	5,922	70,933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체계]



자료 : 고용노동부

11) 일반회계-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청년고용정책관)

나. 검토의견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중 지역특화 유형은 구직단념청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년들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의 목적인 구직단념청년 지원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 이라 함)에 따르면 참여가 가능한 '구직단념청년 등' 은 ①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18~34세 청년), ② 자립준비청년, ③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④ 북한이탈청년, ⑤ 지역특화 청년 등임.

지역특화 청년은 다른 요건의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으로, 지자체별로 도전과 도전+프로그램 각 목표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가 가능함.

2023년 지역특화유형의 경우 1,076명이 참여하여 전체 참여자의 15.0%를 차지하였으며, 2024년 5월 기준 전체 참여자의 20.2%가 지역특화유형임.

[2022~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유형별 참여자]

(단위: 명, %)

구분	전체 참여 인원 (A)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보호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 청년	지역특화 (B)	
							비율 (B/A)
2022	5,795	4,670	6	3	-	1,116	19.2
2023	7,147	6,019	40	9	3	1,076	15.0
2024.5.	4,839	3,821	29	10	2	977	20.2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3년 지자체 지역특화 유형의 경우, 구직단념 청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년을 포함하고 있음.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여성,·취업 등의 문제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장기 휴학 중인 대학생 등을 지역특화유형의 예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구직단념이나 취업의 어려움과 무관히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 청년 또는 39세 청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특화 유형 주요 지자체별 지원 대상 현황]

지자체	지역특화 기준 예시
서울 은평구	**지역 조례의 청년,** 위기 청년 관리기관(시설), **졸업예정청년(고등학교, 대학교)**, 장기 휴학생, 자립준비청년, 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청년, **기혼청년**, 북한이탈청년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적용 (만18 ~ 39세)**,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 2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지역특화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 39세),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근로기간이 한달 이내(주말, 공휴일 포함)이고, 취득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자
충남 천안시	**천안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정의) 1항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역특화유형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로 지역특화 기준을 제출 받아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며, 주요 내용 변경 시 지방관서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부 지역특화유형의 경우 당초 사업의 목적과 달리 구직단념 청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성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구직단념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 촉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유형의 사업대상자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ODA):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가. 개 요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ODA)’는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직업훈련·산업안전 및 고용서비스 등) 정책발전경험 공유·전수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한국의 정책모델을 확산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6억 1,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2)]

[2023년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ODA)	9,961	9,961	-	-	9,961	9,961	-	-	10,175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7,615	7,615	-	-	7,615	7,615	-	-	5,671

2023년 동 사업에서 추진된 주요 ODA사업은 ①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SQ-Net) 구축지원사업, ② 스리랑카 노동시장 수요기반 직업훈련 역량강화 사업, ③ 스리랑카 고용서비스전산망 구축지원 사업 등임.

[2023년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주요 ODA 사업]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SQ-Net) 구축지원 사업	스리랑카 노동시장 수요기반 직업훈련 역량강화 사업	스리랑카 고용서비스전산망 구축지원 사업
사업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업기간	2021~2024년(4년)	2022~2024년(3년)	2022~2024년(3년)
사업예산	40.75억원	21.5억원	36억원
사업유형	무상원조	무상원조	무상원조
사업내용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의 지원으로 기건립한 Niyagama 국립직업훈련원 현대화 및 역량강화	스리랑카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자료: 고용노동부

12) 일반회계-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3050-302)(국제협력관)

나. 검토의견

2023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ODA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고용노동부의 베트남과 스리랑카 ODA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을 하여 추진되었음.

그러나 실제 집행단계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집행률이 부진하였음. 예컨대,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진한 스리랑카 고용서비스전산망 구축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2023년 예산 30억 7,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2023년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사업 피출연기관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한국산업인력공단	3,375	2,573	5,948	2,189	3,745	14
근로복지공단	150	-	150	150	-	-
한국산업안전공단	600	200	800	410	390	-
한국고용정보원	3,070	-	3,070	-	-	3,070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으로 진행 중인 베트남과 스리랑카 ODA 사업은 전년도의 이월예산까지 집행되지 못하여 재이월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023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 및 스리랑카 주요 ODA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베트남 국가기술 정보자격 시스템 구축 사업	1,073	1,240	2,313	125	5.4
스리랑카 직업훈련 역량강화 사업	941	1,049	1,990	433	21.8

자료: 고용노동부

실집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설명함.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SQ-Net) 구축지원’ 사업은 사업 실시 전 베트남의 내부 법령 개정으로 베트남 측의 사전조사 절차가 추가되었으나 수원기관의 ODA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용역기관까지 선정하였음에도 집행이 부진하였음.

2022년 시작된 ‘스리랑카 노동시장 수요기반 직업훈련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스리랑카의 경제위기로 인한 디폴트 선언과 반정부 시위 등 정세 불안으로 2022년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고, 2023년 IMF 구제금융 제공 결정 이후 정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였으나, 스리랑카 정부와 추가 협의 사항을 발생으로 인한 일부 과업 지연 및 훈련(시설)장비 구매 공고 무응찰로 인하여 이월액이 발생한 것임.[13)]

‘스리랑카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사업은 2023년 3월 IMF의 구제금융 이후 스리랑카 정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존 ‘스리랑카 노동시장 수요기반 직업훈련 역량 강화’ 사업에 비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재원(전산망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인건비・서버실 관련 임차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 수원국 부담사항)이 필요하고, 관련 재원 마련에 재정적 부담을 느낀 스리랑카 재무부의 반대로 스리랑카 정부의 공식사업 중단요청(2023.9.14.)에 따라 주관기관인 외교부의 사업중단 승인(2023.11.10.) 및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 중단의결에 따라 전액 불용한 것임.

위와 같이 ODA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지 정세 불안 등에 영향을 받아 사업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담당 기관의 철저한 ODA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봄.

13) 2022년 7월 10일 스리랑카 대통령 퇴진하였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이월액 15억 5,700만원 중 14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음.

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 지원금의 엄밀한 수요 추계 필요

가. 개 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조 764억 500만원 중 8,612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0%)되고 2,151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3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1,076,405	1,076,405	-	-	1,076,405	861,232	-	215,173	837,516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보수 기준과 지원수준이 변경되었으며, 2023년은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 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함.

[2018~2023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제도변화 경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 보수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지원 수준	기가입자 40% 신규 80~90%		기가입자 20% 신규 80~90%	신규 80%		

자료: 고용노동부

14) 일반회계-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고용서비스정책관)

나. 검토의견

2023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지원액이 과다 추계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수요 추계를 엄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수행됨. 사업주가 보험료지원금을 신청하면 각 공단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액을 공제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고, 이후 보험료지원금이 공단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2023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피보험자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지원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은 예산현액 1조 764억 500만원 중 8,612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2,151억 7,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 80.0%로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음. 이러한 집행부진은 2022년부터 나타나고 있음.

[2020~2023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149,011	1,208,611	-	110,000	1,318,611	1,318,536	99.9	75
2021	810,347	810,347	-	-	810,.347	773,805	95.5	36,542
2022	1,046,594	1,046,594	△26,894	-	1,019,700	688,184	67.5	331,516
2023	1,076,405	1,076,405	-	-	1,076,405	861,232	80.0	215,173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2023년의 경우 동 사업의 대상자 중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목표 대비 실제 지원금액의 비율이 각각 33.7%, 61.0%, 41.8%로 다소 부진하였음.

[2023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대상별 목표 대비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인원기준			금액기준		
	목표인원(A)	실제인원(B)	목표 대비 실제 (B/A)	목표 지원액(C)	실제 지원액(D)	목표 대비 실제 (D/C)
일반근로자	983,489	820,722	83.5	985,067	792,207	80.4
고용보험료 지원	459,796	385,739	83.9	164,147	124,794	76.0
국민연금료 지원	523,693	434,983	83.1	820,920	667,413	81.3
일용근로자	96,288	87,842	91.2	38,893	13,106	33.7
고용보험료 지원	76,913	85,179	110.7	12,109	10,297	85.0
국민연금료 지원	19,375	2,663	13.7	26,784	2,809	10.5
예술인	7,638	3,096	40.5	761	464	61.0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2,284	2754	120.6	350	427	122.0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5,354	342	6.4	411	37	9.0
노무제공자	195,132	63,301	32.4	26,193	10,945	41.8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29,401	11,738	39.9	6,862	4,275	62.3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165,731	51,563	31.1	19,331	6,670	34.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인 2021년 지원실적이 많지 않아 사업장 규모나 소득 등의 축적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지원 인원의 예측이 어려웠고,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3년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다소 과다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월평균보수액에 비례하여 보험료 지원이 되는 사업구조상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정보가 부족하여 추계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함. 특히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서 실태조사 간 연계를 강화해 예산추계를 면밀히 하도록 하는 국회의 주의 요구[15]가 있어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특별히 더 요구되는 상황임.[16]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의 수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비효율적인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5) '고용노동부는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예술인·노무제공자 실태조사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인원에 대한 예산추계를 면밀히하고, 지원요건을 개선하며, 사업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6)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2024년 6월 기준 집행률이 56.2%로 정상 집행 중이라고 설명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8.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정·현원 차이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774억 6,100만원 중 2,735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39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3년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78,661	278,661	-	△1,200	277,461	273,527	-	3,934	317,873

한국폴리텍대학은「국가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의해 설립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연을 받아 수지차를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 기관임.

[2023년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278,661	278,661	273,527	273,527	-	273,527	264,339	2,665	6,523	94.9

자료: 고용노동부

1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1135-308)(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원의 정·현원 차이로 인해 인건비가 상당 부분 불용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정·현원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인건비로 1,213억 600만원 교부를 계획하였으나 1,174억 400만원만 교부하고 39억 200만원을 불용시켰으며, 한국폴리텍 대학은 교부받은 인건비 1,174억 400만원 중 1,11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61억원을 불용한 결과, 실제 집행률은 당초 예산 1,213억 600만원의 91.8%에 지나지 않고 있음.

[2023년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예산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121,306	117,404	3,902	117,404	-	117,404	111,304	-	6,100	94.8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인건비 불용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의 정·현원 차이로 인해 발생함. 실제 2024년 4월 19일 기준 한국폴리텍대학 전체 교원 정·현원 차이는 173명으로 정원 대비 약 86%의 인력만을 확보하고 있음.

[2024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별 교원 정·현원표]

(단위: 명, %)

구분	정원(A)	현원(B)	충원율(B/A)	결원 (A-B)
Ⅰ대학	206	190	92.2	△16
Ⅱ대학	139	127	91.4	△12
Ⅲ대학	75	56	74.7	△19
Ⅳ대학	158	137	86.7	△21
Ⅴ대학	156	127	81.4	△29
Ⅵ대학	167	143	85.6	△24
Ⅶ대학	203	173	85.2	△30
특성화 대학	114	92	80.7	△22
합계	1,218	1,045	85.8	△173

자료: 고용노동부 (기준일: 2024.04.19.)

한국폴리텍 대학은 공공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일반계고 학생, 재취업 준비 여성,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바이오・항공・반도체 학과 등을 신설하였으나, 교원 부족은 양질의 직업훈련 교육을 어렵게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의 정・현원 차이는 ① 교원 충원의 어려움, ② 신규 교원의 이탈 등으로 발생하였으나, 시간강사 등 임시직을 통해 차질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전임 교원들은 강의 뿐만 아니라 교내 행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② 향후 4년간(2024~2027년) 한국폴리텍대학 전체 교원 중 238명(재직교원 대비 22.8%)이 정년퇴직 예정이므로 퇴직으로 인한 인원 공백을 임시직으로 충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임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2023년 기준 한국폴리텍대학 향후 10년간 교원 퇴직 규모]

(단위: 명)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합계	70	66	54	48	66	34	53	57	61	76	585
65세 정년 퇴직자	68	63	52	39	46	21	30	32	23	30	404
60세 정년 퇴직자	2	3	2	9	20	13	23	25	38	46	181

주) 2011년 이후 임용 교원부터 정년이 60세임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한국폴리텍 대학의 경우 교원 임용 경쟁률과 교원 수급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충원된 신규 교원의 이탈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과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충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8~2023년 한국폴리텍대학 임용경쟁률, 교원수급률, 신규임용 교원 중 이직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임용경쟁률	8.2:1	7.8:1	6.8:1	5.8:1	4.5:1	3.8:1	2.7:1
교원 수급률[18]	60.5	67.6	58.7	66.1	32.5	53	23
신규임용 교원 중 이직 인원[19]	-	-	5	2	3	5	4

자료: 고용노동부

18) 해당년도 충원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충원 인원의 비율

【고용보험기금】

<지 출>

9. 고용보험기금 총괄: 실업급여계정의 연례적인 법정 적립배율 미준수 문제 개선 필요

가. 개 요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수입은 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의 수행에 지출함.[20]

[2023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수입	20,836,178	21,679,991	21,679,991	20,913,318	96.5	23,413,642
지출	20,836,178	21,679,991	21,680,205	20,913,318	96.5	23,413,642

19) 2016년도부터 임용된 교원을 신규임용 교원으로 봄.

20)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gk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검토의견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적립배율이 연례적으로 법정 적립배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4조는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각 계정별로 연도말 적립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21)]

이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의 적립금을 연도말에 보유해야 하며, 실업급여 계정은 1.5배 이상 2배 미만의 적립금을 보유해야 함.

2023년 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경우 법정 적립금 배율을 준수하였으나,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법정 적립금 배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 배율 미준수는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고용보험기금 (근로자) 계정별 재정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배)

계정(근로자)	구분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2023결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수 입(A)	6,188,433	5,169,062	5,169,550	4,123,762
	사업비(B)	6,570,643	6,632,479	3,918,207	2,710,074
	수지차(A-B)	△382,211	△1,463,417	1,251,344	1,413,688
	연말적립금(C)	2,780,008	1,316,337	2,565,764	3,979,414
	적립금배율(C/B)	0.4	0.2	0.7	1.5
실업급여	수 입(A)	13,628,678	14,814,055	13,567,529	14,387,917
	사업비(B)	13,885,952	14,413,779	14,132,507	14,330,660
	수지차(A-B)	△257,275	400,277	△564,978	57,258
	연말적립금(C)	3,866,572	4,266,495	3,695,306	3,752,509
	적립금배율(C/B)	**0.3**	**0.3**	**0.3**	**0.3**

자료: 고용노동부

21)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증가가 맞물리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보고있음.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 발생과 고용상태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고용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적립배율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의 확보에 대해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②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22)]

22) 2018~2022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 ('18) 28.9% → ('19) 25.8%, → ('20) 26.8% → ('21) 26.9%, → ('22) 27.9%

1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가. 개 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은 금속·동력·전기 및 전자 등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4,248억 3,300만원 중 2,181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51.3%)되고 2,066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3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내일배움카드(고보)	887,312	887,312	76	887,388	655,434	32	231,922	734,204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464,833	424,833	-	424,833	218,138	-	206,695	325,960

[2023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1회에 한함)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절차**

심사평가 공고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선정	⇨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주) 심평원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23) 고용보험기금-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유사 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의 훈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훈련 수요가 감소하고 집행이 부진하므로, 차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4,248억 3,300만원 중 불용액 2,066억 9,50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음.[24][25]

고용노동부는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정보통신 직종에서는 지원 분야가 동일한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이하 'K-디지털트레이닝' 이라 함)의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설명함.

K-디지털트레이닝의 경우 훈련비 전액 지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동일하지만, 참여자 훈련수당 지원이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참여 유인이 더 큼.

[2023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내용 비교]

구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정보·통신)	K-디지털트레이닝
지원 대상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지원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동일 지원 분야	3D프린터 운용,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반도체 장비 설빌, 네트워크 운영관리, 디지털 컨버전스,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빅데이터분석 및 U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인터넷(홈·산업 IoT), 산업응용로봇제어, 스마트웹&콘텐츠 개발, 스마트팜 구축,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증강현실, 클라우드 운영관리, 핀테크, 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SW구축(에너지관리), 드론제어,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신소재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관리	
훈련 방식	- 평균 6개월, 주5일, 하루 8시간 훈련	- 평균 6개월, 주5일, 하루 8시간 훈련 - 기업 참여를 통해 전체 훈련과정의 30%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
훈련비	전액 지원	전액 지원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최대 31.6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 대상 중 일부 직종과 2023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 지원하고 있는 직종이 동일함.

25)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400억을 감액하여 일반직종 훈련 사업을 위해 사용함.

실제 두 훈련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일부 직종의 경우, K-디지털트레이닝의 훈련 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감소하고 있음.

예컨대 디지털 컨버전스 직종의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2021년 12,081명에서 2023년 4,677명으로 훈련인원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K-디지털트레이닝의 경우 훈련인원이 140명에서 6,136명으로 43배 이상 증가하였음.[26)]

[2021~2023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및 K-디지털트레이닝 주요 유사 직종 훈련인원 비교]

(단위: 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대상 직종	2021년	2022년	2023년	훈련대상 직종	2021년	2022년	2023년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593	501	212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3,953	4,446	4,838
디지털 컨버전스	12,081	7,879	4,677	디지털 컨버전스	140	2,284	6,136
빅데이터분석 및 UI 전문가	992	599	207	빅데이터분석 및 UI 전문가	1404	2,596	2,488
빅데이터 전문가	1,460	663	233	빅데이터 전문가	2,072	3,705	4,206
스마트웹&콘텐츠 개발	4,291	2,829	1,938	스마트웹&콘텐츠 개발	553	2,431	4,027
정보시스템구축 (개발, 운영)	1,514	707	404	정보시스템구축 (개발, 운영)	462	1,432	3,092
클라우드 운영 관리	593	372	200	클라우드 운영 관리	911	2,560	2,664

자료: 고용노동부

K-디지털트레이닝의 경우 2021년 11,727명, 2022년 22,394명, 2023년 31,922명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의 유사 직종 참여가 더욱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과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과의 중복・유사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6) 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기술과 제품, 서비스가 하나로 융합・통합・복합되는 것을 의미함.

1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부정수급액 징수 기준 마련 필요

가. 개 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은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2,992억 3,200만원 중 2,946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46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3년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299,232	299,232	-	299,232	294,609	-	4,623	311,632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806억 8,400만원을 출연하여 일학습병행운영을 지원하고, 포스코 등 206개 기관에 769억 5,500만원을 보조하여 추진됨.

[2023년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출연 및 보조 지원 비율]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결산)	지원 비율(%)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출연	한국산업인력 공단	80,684백만원	100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보조	포스코 등 206개 기관	76,955백만원	· 일반운영비 (100%) · 인건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80%)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사업은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 후(後)학습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대상 및 유형, 주요 내용 등을 다르게 하고 있음.

27) 고용보험기금-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1154-356)(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정수급에 대해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은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만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사업 부정수급액의 경우 2023년 82억 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024년 5월 기준 11억 3,500만원을 환수하였음.

[2021~2023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 부정수급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적발건수 (중복 포함)	부정수급액 (A)	추가징수액 (B)	환수결정액(A+B)			환수율 (24년 5월 기준)
					환수액	미환수액	
2021	3 (3)	25.5	24.5	50	11	39	22.0
2022	6 (7)	180	112	292	207	85	70.9
2023	27 (33)	4,303	3,901	8,204	1,135	7,069	13.8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를 포함하여 일학습병행 관련 기관·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면서 부정수급 지원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일학습병행의 실시, 일학습병행과정 및 교재의 개발, 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환수 및 추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위해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를 결정한 취지는 위반행위의 양태나 부정수급 액수 등의 편차가 다양함을 고려하여 부정수급 행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는 제재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법률이 부정수급에 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하위법령에서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법의 위임에 따라 추가 징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학습기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환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학습기업 또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으로 일률적인 상한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취지와 달리 행위의 제제 필요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액을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28)]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학습병행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추가 징수 규정을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8) 실제 2021~2023년 추가 징수액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실무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한 감면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 적은 액수의 추가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반 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지 출>

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목표인원의 엄밀한 추계 노력 필요

가. 개 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33억 1,200만원 중 63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47.8%)되고, 69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29)]

[2023년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퇴직연금사업운영	15,624	15,624	-	15,624	8,675	-	6,949	22,324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13,310	13,312	-	13,312	6,372	-	6,940	20,179

2023년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도입 및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였음.

29) 근로복지진흥기금-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근로기준정책관)

나. 검토의견

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은 재정지원 목표 근로자 수를 과다 추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재정지원 수요 추계를 엄밀히 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은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3년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개요]

○ **(사업개요)**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사업대상)**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 **(제도설정)**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 **(부담금 수준 및 납입)**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재정지원 및 수수료)**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도입 및 정착되도록 재정을 지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

* 월 242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장 1개소 당 최대 30명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 87,072명의 재정지원 근로자 수를 목표로 하였으나 21,844명만 가입하여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였고, 계획한 사업주 재정지원 부담금 92억 4,000만원 중 23억 300만원만 집행되고 69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2022~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지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인원		예산	
	재정지원 목표 근로자 수	실제 재정지원 근로자 수	계획	집행
2022년	54,420	1,113	3,115	38
2023년	87,072	21,844	9,240	2,303

자료: 고용노동부

3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모두 재정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 수와 재정지원 근로자 수의 차이가 남.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①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가입유인이 부족하고, ② 과거 20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의 30인 이하 사업장 당 평균가입인원 4.8명의 150%인 7.2명으로 가입자수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즉 2022년부터 시작된 신생 사업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평균가입인원의 150%를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 후 1년여의 시행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준비 미비로 집행 부진을 초래하였으므로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 엄밀한 추계와 사업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엄밀한 추계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지 출>

13.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회수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6,869억 2,800만원 중 6,869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지급금 지급	559,155	686,928	-	686,928	686,905	-	23	474,733

동 사업은 금리인상 및 건설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사정 악화로 체불신고액 및 대지급금 지급 수요가 증가하여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277억 7,300만원을 자체변경(2023.10.26.)하여 증액하였음.

[2020~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집행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2020	18,020	110,177	579,690	1,166	14,006	109,975	16,854	96,171	469,715
2021	17,227	106,926	546,571	961	10,368	79,360	16,266	96,558	467,210
2022	15,858	107,444	536,864	570	5,291	36,576	15,288	102,153	500,288
2023	18,112	131,777	686,905	720	5,798	39,635	17,392	125,379	647,271

자료: 고용노동부

31)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지급(3051-300)(근로기준정책관)

나. 검토의견

대지급금 지급 후 회수가 미흡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율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대지금금 제도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음. ①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며, ②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임.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변제하고, 국가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구상하고 있음.

그런데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이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누적대지급금 회수율이 30.9%에 불과하였으므로,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19~2023년 대지급금 지급 내역 및 사업 회수 실적]

(단위: 백만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해년도 사업주 변제금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당해연도 사업주 변제금 중 미수금	345,663	457,207	398,323	383,623	538,773
당해연도 변제금 회수율	24.8	21.1	27.1	28.5	21.6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	34.3	32.8	32.2	31.9	30.9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장 특성상 무재산·소멸 사업장의 비중이 높고,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민사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법원을 통해 변제금이 회수되는 구조로 인해 빠른 시간 내 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채권관리비용을 위해 약 2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채권관리를 위한 예산이 큰 규모로 다시 투입될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회수실적의 제고가 필요한 측면도 있음.[32)]

32) 2024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채권관리비용 21억 8,300만원 편성

특히 대지급급 지급액은 2023년말 기준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체 사업비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나, 회수율 저조 및 대지급금 지급액의 확대로 인해 기금 적립금이 2019년 대비 45%이상 감소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중·장기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2019~2023년 연말 임금채권보장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체수입	827,130	1,051,845	844,279	775,395	975,22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비 지출 (A)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대지급급 지급 지출 (B)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한국은행예치금	5,609	4,965	4,187	4,979	3,601
기금 사업비 대비 대지급금 지급 비율 (B/A)	90.8	92.4	89.1	91.9	88.9

자료: 고용노동부

더욱이 2024년은 1~4월 체불임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24.6.24. 2,216억원 증)하였음.[33)]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통해 생활안정을 돕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금의 건전성 또한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의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3) 2023년 1~4월 체불임금 5,359억 → 2024년 1~4월 체불임금 7,518억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 출>

14.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 처리 지연 개선 필요

가. 개 요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7조 7,923억 1,700만원 중 7조 2,849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5%)되고, 5,073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3년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재보험급여	7,792,317	7,792,317	-	7,792,317	7,284,941	-	507,376	7,876,091

동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제1호),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제2호),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제3호),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제4호) 등을 수행함.

또한 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으로구분됨.

2018년 이후 산재보험의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2년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

3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급여(4051-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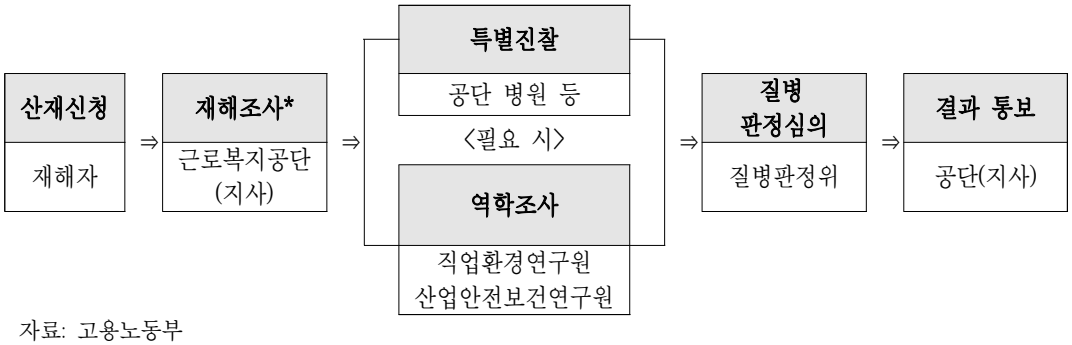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후 승인 여부 결과 통보까지의 처리기간이 2022년 182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하여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산재승인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함.

이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산재신청 이후 공단의 재해조사와 (필요 시) 공단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직업환경연구원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후, 질병 판정심의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됨.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업무 처리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평균처리일 수는 2020년 172.4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14.5일로 2022년의 182.0일 대비 17% 이상 증가하였음.

[2019~2023년간 산재 승인 평균 처리일 수]

(단위: 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처리일 수 (전체)	40.9	39.1	43.4	47.6	55.0
평균 처리일 수 (출퇴근재해를 포함한 업무상 사고)	16.1	15.5	15.3	15.9	16.5
평균 처리일 수 (업무상 질병)	186.0	172.4	175.8	182.0	214.5

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이 지연되는 원인을 ① 법원 판결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신청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사업장 퇴사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으로 변경되어 접수 건수가 폭증하였고,[35] ② 새로운 질병 및 유해인자의 증가에 따른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의뢰 건수 증가로 설명함.[36]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및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피보험자인 노동자의 의료비와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후 재활도 지연되어 사회 복귀가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전문조사, 특별진찰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순·반복업무의 전산화, 역학·전문조사와 특별진찰 위탁물량의 확대 등을 계획하였으므로, 수립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속·공정하게 업무상 질병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5) 소음성난청 접수건수: ('18) 3,294건 → ('20) 9,090건 → ('22) 12,590건 ('18년 대비 282% 증가)

36) ▲역학조사 의뢰건수(누적): ('18) 943건 → ('20) 1,135건 → ('22) 1,202건
▲특별진찰 의뢰건수(누적): ('18) 5,398건 → ('20) 9,352건 → ('22) 24,223건

15. 취약계층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취약계층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은 건설업 일용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어려움 해소와 사업주 의무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65억 3,500만원 중 64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었고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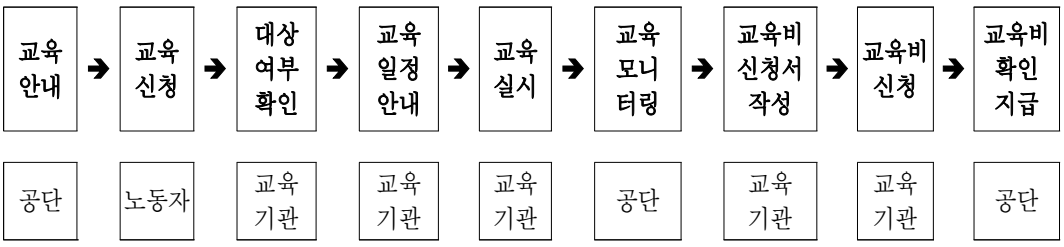
[2023년도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안전보건문화정착	32,847	32,847	-	32,847	32,357	-	490	32,925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19,457	19,457	-	19,457	19,133	-	324	20,112
취약계층 기초안전 보건교육	6,535	6,535	-	6,535	6,474	-	61	7,376

동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을 통해 추진되며, 지정·등록된 교육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공단에 교육비 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2023년도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집행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3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 추진단)

나. 검토의견

2023년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은 세종과 제주지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38] 제31조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9]

동 사업은 건설 일용근로 취업을 희망하지만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와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정부가 안전보건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임.

[2023년도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 목표 및 대상]

ㅇ **(사업목표)** 130,000명(건설업 125,000명, 배달 플랫폼 종사자 5,000명)에게 교육비 1인당 4만원 지원 ㅇ **(사업대상)** - 취약계층 일용근로자 : ①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②장애인, ③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 이상), ④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⑤만 20세 이하 노동자 ⑥ 플랫폼 종사자 등 ※ 지원제외: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3년에 세종과 제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음.

[2023년도 시·도별 취약계층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지원 인원	4,590	27,999	6,140	6,650	5,850	8,850	6,300	10,235	29,151	-	3,200	9,170	2,350	2,600	-	2,900	4,015

자료: 고용노동부

3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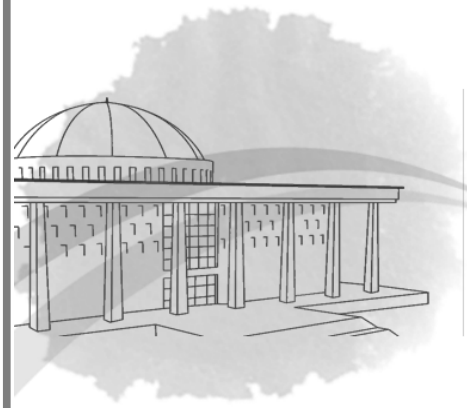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39)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종과 제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소재 교육기관(1개소)이 2021년 폐업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인근지역(대전・청주) 등 교육기관에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② 제주의 경우 제주 소재 교육기관(1개소)이 책정한 교육비(6만원)에 비해 지원금 단가(4만원)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인근 지역 교육기관을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취약계층안전교육비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조 6,492억 5,700만원(△24.5%)이 적은 17조 4,163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106억 1,800만원(8.1%)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24,500	1,010,767	1,216,832	206,065	1,065,829	1,065,829	1,307,416	241,587	90,584
기 금	20,099,816	20,099,816	14,888,882	△5,210,934	21,999,760	21,999,760	16,108,916	△5,890,844	1,220,034
총수입	21,124,316	21,110,583	16,105,714	△5,004,869	23,065,589	23,065,589	17,416,332	△5,649,257	1,310,618

문의 : 강세욱 예산결산조사관 sewook@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조 417억 800만원(△5.6%)이 적은 51조 6,198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246억 1,400만원(△6.7%)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5,097,813	24,990,468	23,473,388	△1,517,080	22,401,280	22,401,280	21,098,171	△1,303,109	△2,375,217
기 금	35,701,659	32,566,778	31,871,115	△695,663	33,350,132	32,260,316	30,521,718	△1,738,598	△1,349,397
총지출	60,799,472	57,557,246	55,344,502	△2,212,744	55,751,412	54,661,596	51,619,888	△3,041,708	△3,724,614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조 7,546억 6,500만원으로, 15조 8,525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조 2,247억 1,900만원이 수납(수납률 89.7%)되고, 83억 6,3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1조 6,194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75,100	175,100	-	175,100	262,855	232,738	-	30,117
교통시설특별회계	14,023,811	14,023,811	-	14,023,811	13,462,450	13,323,433	69	138,947
- 도로계정	7,906,130	7,906,130	-	7,906,130	7,689,356	7,571,784	69	117,503
- 철도계정	4,707,602	4,707,602	-	4,707,602	4,417,404	4,406,077	-	11,327
- 교통체계관리계정	993,989	993,989	-	993,989	910,396	910,393	-	3
- 공항계정	416,090	416,090	-	416,090	445,293	435,179	-	10,1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67	767	-	767	354	354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5,666	35,666	-	35,666	32,921	32,92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19,321	519,321	-	519,321	2,093,937	635,272	8,293	1,450,372
- 지역자율계정	238,208	238,208	-	238,208	1,536,691	296,688	8,292	1,231,711
- 지역지원계정	280,522	280,522	-	280,522	557,140	338,478	1	218,66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57	257	-	257	3	3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334	334	-	334	103	103	-	-
합 계	14,754,665	14,754,665	-	14,754,665	15,852,517	14,224,719	8,363	1,619,435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6조 5,389억 8,800만원으로, 이 중 31조 3,807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9%)되고 6,600억 4,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조 4,982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9,445,889	19,445,889	58,374	11	-	19,504,274	16,324,702	56,049	3,123,523
교통시설특별회계	14,023,811	14,023,811	543,072	-	-	14,566,883	12,726,844	551,580	1,288,459
- 도로계정	7,906,130	7,906,130	392,038	-	-	8,298,168	7,417,627	428,120	452,421
- 철도계정	4,707,602	4,707,602	82,545	-	-	4,790,147	4,180,014	43,300	566,834
- 교통체계관리계정	993,989	993,989	1,520	-	-	995,509	756,781	18,085	220,643
- 공항계정	416,090	416,090	66,969	-	-	483,059	372,422	62,075	48,56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105	17,105	-	-	-	17,105	15,677	-	1,42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2,622	32,622	394	-	-	33,016	31,194	277	1,5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24,547	2,224,547	193,163	-	-	2,417,710	2,282,311	52,142	83,257
- 지역자율계정	312,772	312,772	-	-	-	312,772	312,772	-	-
- 지역지원계정	1,815,103	1,815,103	190,913	-	-	2,006,016	1,875,029	50,078	80,909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3,606	83,606	-	-	-	83,606	82,819	-	787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13,066	13,066	2,250	-	-	15,316	11,692	2,063	1,561
합 계	35,743,974	35,743,974	795,003	11	-	36,538,988	31,380,728	660,047	4,498,21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05조 7,981억 2,500만원으로, 96조 8,653억 9,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5조 7,013억 4,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8%)되고 829억원 6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1조 811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주택도시기금	105,535,503	105,535,503	96,319,652	95,437,682	65,850	816,120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62,622	262,622	545,743	263,660	17,056	265,027
합 계	105,798,125	105,798,125	96,865,395	95,701,342	82,906	1,081,14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05조 8,012억 4,400만원으로, 이 중 95조 7,013억 4,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0.5%)되고 23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조 3,236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택도시기금	105,535,503	105,535,503	3,119	105,538,622	95,437,682	2,353	3,323,609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62,622	262,622	-	262,622	263,660	-	-
합 계	105,798,125	105,798,125	3,119	105,801,244	95,701,342	2,353	3,323,609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2,363억 9,500만원이 증가한 717조 6,588억 6,5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7조 722억 7,500만원 감소하였음에도 투자자산이 7조 6,682억 8,5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1조 4,120억 3,9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2,630억 5,300만원 증가한 193조 7,490억 4,400만원으로 유동부채 2조 4,590억 7,300만원의 증가와 기타비유동부채 9,526억 6,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733억 4,200만원이 증가한 523조 9,098억 2,1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1조 6,066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조 6,360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0조 7,650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조 4,053억 9,7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17,658,865	715,422,470	2,236,395	0.3
		유동자산	63,301,894	70,374,169	△7,072,275	△10.0
		투자자산	211,274,342	203,606,057	7,668,285	3.8
		일반유형자산	122,843,322	121,431,283	1,412,039	1.2
		사회기반시설	318,752,341	319,060,396	△308,055	△0.1
		무형자산	231,720	261,258	△29,538	△11.3
		기타비유동자산	1,255,247	689,307	565,940	82.1
	부 채		193,749,044	192,485,991	1,263,053	0.7
		유동부채	123,281,676	120,822,603	2,459,073	2.0
		장기차입부채	65,793,915	67,948,720	△2,154,805	△3.2
		장기충당부채	63,363	57,240	6,123	10.7
		기타비유동부채	4,610,089	3,657,428	952,661	26.0
	순자산		523,909,821	522,936,479	973,342	0.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1,606,651	15,970,591	5,636,060	35.3
	재정운영순원가		21,247,159	△5,056,476	26,303,635	520.2
	재정운영결과		20,765,044	△5,640,353	26,405,397	4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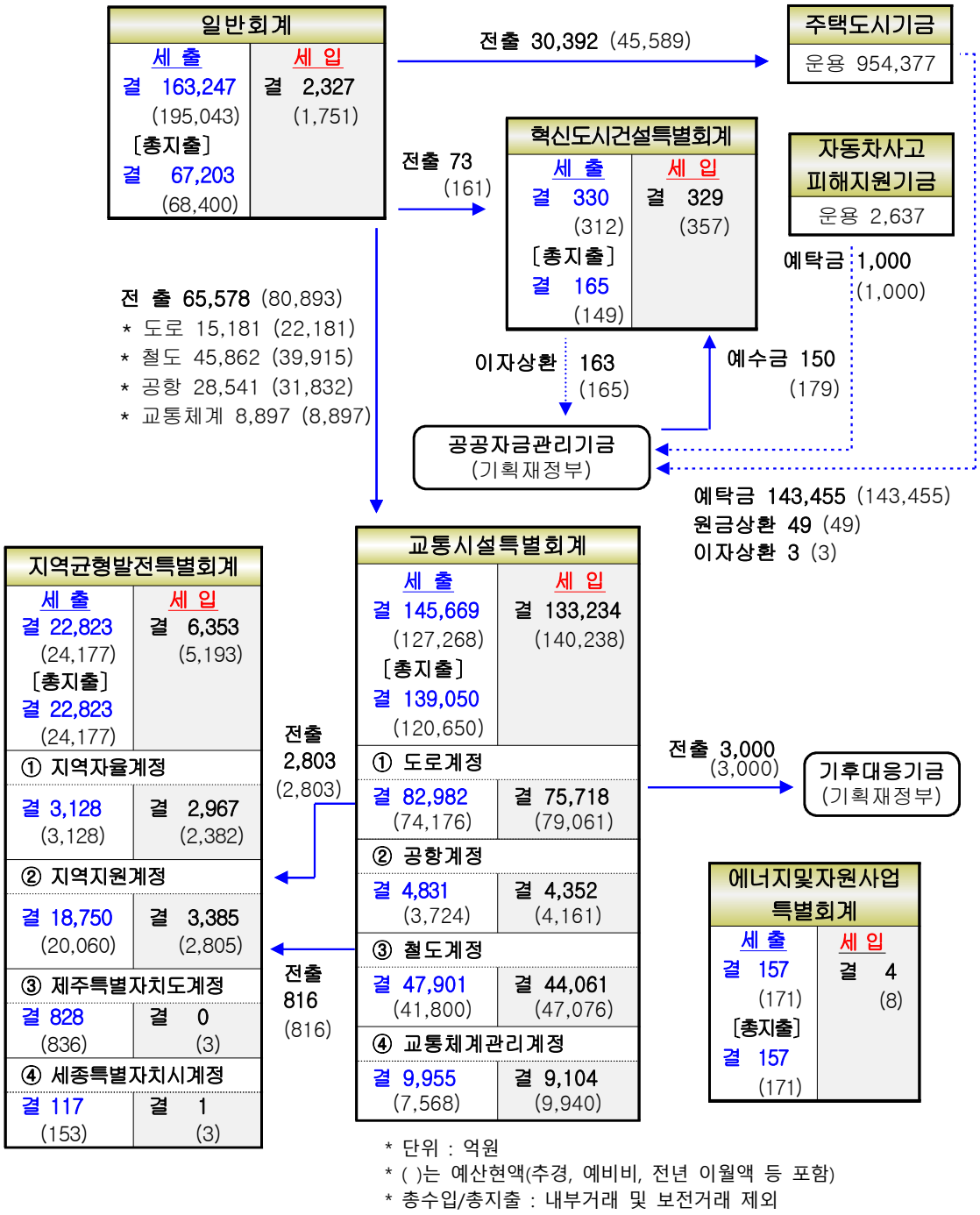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6조 5,578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73억원, 주택도시기금으로 3조 392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619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3,00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이자 163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150억원을 예수받았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0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4조 3,455억원이 예탁되었으며, 예수금 원금 49억원과 예수금 이자 3억원이 상환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재정흐름도]



* 단위 : 억원
* ( )는 예산현액(추경, 예비비, 전년 이월액 등 포함)
* 총수입/총지출 :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기반 마련, 주거안전망 강화, 교통서비스 혁신, 미래 신산업 육성, 국민안전 강화 등을 2023년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3년 국토교통부 소관 미수납액이 1조 6,194억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89.6%인 1조 4,504억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법정부담금 등의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노력을 독려하는 등 장기 미수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둘째, 2023년 세수부족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3조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SOC사업 지연이 우려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설공사비가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고금리·분양가 상승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약저축과 채권 등의 조성액이 감소하고, 청약저축 해지 증가로 기금재원의 순조성이 급감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넷째, 주택도시기금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로 보기 어렵고, 회계연도 종료 3일 전 3조 7,448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변경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SOC 신규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기본적으로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사업착수를 위한 설계비 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최근 5년간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4,622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국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시설물의 하자를 줄이는 등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외국인 이용객 비율은 76.9%에 이르고, 직통열차 요금은 해외 공항철도 대비(일본 2분의 1, 영국 4분의 1 수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쟁 교통수단인 공항리무진·택시 등의 운임비용보다 크게 저렴하므로, 직통열차 운임을 현실화하여 정부 지원금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그간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회수되지 않는 사업방식임에도 최근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차보전 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직접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세입: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수납실적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조 7,546억 6,500만원으로, 15조 8,525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조 2,247억 1,900만원이 수납(수납률 89.7%)되고, 83억 6,3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1조 6,194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75,100	175,100	-	175,100	262,855	232,738	-	30,117
교통시설특별회계	14,023,811	14,023,811	-	14,023,811	13,462,450	13,323,433	69	138,947
- 도로계정	7,906,130	7,906,130	-	7,906,130	7,689,356	7,571,784	69	117,503
- 철도계정	4,707,602	4,707,602	-	4,707,602	4,417,404	4,406,077	-	11,327
- 교통체계관리계정	993,989	993,989	-	993,989	910,396	910,393	-	3
- 공항계정	416,090	416,090	-	416,090	445,293	435,179	-	10,1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67	767	-	767	354	354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5,666	35,666	-	35,666	32,921	32,92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19,321	519,321	-	519,321	2,093,937	635,272	8,293	1,450,372
- 지역자율계정	238,208	238,208	-	238,208	1,536,691	296,688	8,292	1,231,711
- 지역지원계정	280,522	280,522	-	280,522	557,140	338,478	1	218,66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57	257	-	257	3	3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334	334	-	334	103	103	-	-
합 계	14,754,665	14,754,665	-	14,754,665	15,852,517	14,224,719	8,363	1,619,435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전체 미수납액 중 89.6%인 1조 4,504억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법정부담금 등의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노력을 독려하고, 징수실적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미수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연도별 미수납액은 2019년 9,750억원 수준이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조 6,194억원으로 2019년 대비 66.1%가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1년 94.4%에서 2023년에는 89.7%까지 감소하였음.

[2019~2023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19	15,465,891	15,389,358	16,189,436	15,205,304	93.9	9,124	975,008
2020	15,276,258	15,411,135	16,608,479	15,500,048	93.3	4,108	1,104,323
2021	20,722,276	20,494,875	21,633,321	20,416,197	94.4	7,645	1,209,480
2022	16,412,982	15,951,474	17,731,875	16,255,959	91.7	8,024	1,467,892
2023	14,754,665	14,754,665	15,852,517	14,224,719	89.7	8,363	1,619,435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건수	5년 경과한 채권의 미수납액
합계	**1,619,435**	**2,401,986**	**444,575**
일반회계	30,117	70,536	22,317
교통시설특별회계	138,947	2,255,673	79,673
도로계정	117,503	2,254,647	73,853
철도계정	11,327	561	5,179
공항계정	10,114	458	641
교통체계관리계정	3	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50,372	75,777	342,585
지역자율계정	1,231,711	70,324	226,740
지역지원계정	218,661	5,453	115,845
제주계정	-	-	-
세종계정	-	-	-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국토교통부의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체 미수납액 1조 6,194억원 중 89.6%인 1조 4,504억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1조 2,317억원(전체 미수납액 대비 76.1%)은 지역자율 계정에서, 나머지 2,187억원은 지역지원 계정에서 발생하였음.

100억원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미수납액이 발생한 항목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계정의 법정부담금으로 1조 1,719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 계정의 법정부담금이 2,138억 1,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2023년 미수납액 100억원 이상 세입과목]

(단위: 백만원)

회계	계정	세입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법정부담금	222,505	1,460,087	282,923	5,169	1,171,99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	법정부담금	250,189	519,742	305,925	1	213,817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과태료	27,599	82,446	20,698	-	61,7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가산금	4,099	62,228	3,173	3,115	55,939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가산금	593	31,935	887	2	31,046
일반회계	-	위약금	516	15,606	182	-	15,424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토지대여료	19,494	30,779	15,659	68	15,053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자율 계정의 법정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입과목이며, 지역지원 계정의 법정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위한 세입과목임.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과밀부담금의 경우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에 50:50으로 귀속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2]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국토부장관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수행함.

[지역발전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세입 관련 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부담금의 부과 · 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 · 도에 귀속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한다.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부담금의 부과 · 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외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 후 국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일정 비율을 귀속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토교통부가 해당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의 유인과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법정부담금 등의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노력을 독려하고, 징수실적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미수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0% 미만인 세입과목은 주로 민간으로부터 수납하는 세입과목으로 징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2023년 미수납액이 1조 6,194억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2023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0% 미만 세입과목]

(단위: 백만원)

회계	계정	세입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일반회계	-	기타관유물대여료	15	2	-	-	2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3	-	-	3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	변상금	457	5,847	-	-	5,847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벌금및과료	6	27	-	-	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22	32	-	-	32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	변상금	251	2,418	-	-	2,4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과태료	8	394	-	-	39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기타잡수입	1	2	-	-	2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	벌금및과료	177	19	-	-	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벌금및과료	1	331	-	-	327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	토지대여료	130	2,611	5	0.2	2,6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	가산금	241	3,731	36	1.0	3,694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기타관유물대여료	50	1,657	18	1.1	1,639
일반회계	-	위약금	516	15,606	182	1.2	15,424
일반회계	-	가산금	18	614	12	2.0	602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가산금	593	31,935	887	2.8	31,046
일반회계	-	벌금및과료	590	1,295	49	3.8	1,24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가산금	4,099	62,228	3,173	5.1	55,939
일반회계	-	변상금	310	745	53	7.1	691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변상금	384	3,929	527	13.4	3,402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법정부담금	5,065	306	46	15.0	2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법정부담금	222,505	1,460,087	282,923	19.4	1,171,994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	기타잡수입	207	100	20	20.0	80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	기타경상이전수입	5,292	3,928	935	23.8	2,993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과태료	27,599	82,446	20,698	25.1	61,748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	가산금	983	10	4	40.0	6
일반회계	-	과태료	303	3,031	1,230	40.6	1,801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	위약금	338	489	212	43.4	277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	가산금	143	223	97	43.5	125
일반회계	-	징계부과금	21	36	18	50.0	18

주) 징수결정액이 없는 항목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0% 미만인 세입과목을 보면, 주로 변상금·벌금 및 과료, 법정부담금, 과태료, 가산금, 위약금, 변상금 등 민간으로부터 수납하는 세입과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변상금, 벌금 및 과료 등의 세입과목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납부 의무이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위 세입과목을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 또는 법령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체납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5년이 경과한 채권의 미수납액만 2023년 4,446억원 수준임.

[2023년 국토교통부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건수	5년 경과한 채권의 미수납액
합계	**1,619,435**	**2,401,986**	**444,575**
일반회계	30,117	70,536	22,317
교통시설특별회계	138,947	2,255,673	79,67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50,372	75,777	342,585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가산금, 위약금 등 민간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입과목은 징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 미수납액이 1조 6,194억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2.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 과다: 건설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2023년도 국토교통부의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6조 5,389억 8,800만원 중 31조 3,807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9%)되고, 6,600억 4,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조 4,982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회계	계정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	-	19,445,889	19,445,889	58,374	11	19,504,274	16,324,702	56,049	3,123,523
교특	도로	7,906,130	7,906,130	392,038	-	8,298,168	7,417,627	428,120	452,421
	철도	4,707,602	4,707,602	82,545	-	4,790,147	4,180,014	43,300	566,834
	교통	993,989	993,989	1,520	-	995,509	756,781	18,085	220,643
	공항	416,090	416,090	66,969	-	483,059	372,422	62,075	48,562
지특	지역자율	312,772	312,772	-	-	312,772	312,772	-	-
	지역자원	1,815,103	1,815,103	190,913	-	2,006,016	1,875,029	50,078	80,909
	제주	83,606	83,606	-	-	83,606	82,819	-	787
	세종	13,066	13,066	2,250	-	15,316	11,692	2,063	1,561
에특	투자	17,105	17,105	-	-	17,105	15,677	-	1,428
혁특	-	32,622	32,622	394	-	33,016	31,194	277	1,545
합계		**35,743,974**	**35,743,974**	**795,003**	**11**	**36,538,988**	**31,380,729**	**660,047**	**4,498,213**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세수부족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3조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SOC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설공사비가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을 보면, 2020년 1,852억원이 불용된 이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3)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철도・교통체계관리・공항계정(교통물류실)

2023년에는 4조 4,982억원이 불용되어 전년대비 3조 9,696억원(750.1%)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예산현액은 2023년이 가장 적음에도 2023년에 4.5조원 수준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도 12.3%로 크게 증가한 상황임.[4)]

[2019~2023년도 국토교통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9	36,086,368	36,324,578	595,394	△131,881	36,858,476	35,919,894	286,916	651,665
2020	37,808,744	38,748,142	286,916	△85,978	39,086,873	38,531,968	369,679	185,228
2021	45,468,688	45,344,247	369,679	△13,952	45,845,529	44,969,980	417,007	458,541
2022	40,898,900	40,343,780	417,007	△16,408	40,862,300	39,538,702	795,003	528,598
2023	35,743,974	35,743,974	795,003	11	36,538,988	31,380,729	660,047	4,498,213

주) 2022년 수자원 부문 환경부 이관에 따라 연도별로 수자원 부문 사업을 제외한 세출결산 현황 작성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2023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불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불용규모가 1조 2,885억원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불용액 약 1.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집행자금 부족으로 예산규모가 크고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SOC분야의 집행을 다음연도로 늦춘 것으로 보임.

2023년 정부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를 보면,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이며,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 수준임.[5)]

2023년 기금을 제외한 예산의 전체 규모는 총지출 기준 441조 676억원이며, 이 중 국토교통부 예산은 22조 4,013억원으로 5.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불용규모를 보면, 전체 사업비 불용액 7.5조원 중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불용액은 약 1.4조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어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이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4)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19) 1.8%, (2020) 0.5%, (2021) 1.0%, (2022) 1.3%, (2023) 12.3%

5)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결과」, 2023.2.

[2023회계연도 불용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년			2023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 불용액		12.9	10.1	2.8	45.7	41.2	4.5
	세입여건변화	2.1	2.1	-	18.6	18.6	-
	내부거래	3.4	2.1	1.3	16.4	14.8	1.5
	사실상 불용	7.4	5.9	1.6	10.8	7.8	3.0

주 1) (세입여건변화:18.6) 국세수입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 규모
2) (내부거래:16.4) 회계간, 회계-기금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
3) (사실상 불용:10.8) 예비비 미집행, 지출소요 조정 및 기타 집행계획변경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2023.2.

[2019~2024.3월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기준)]

(단위: 2015=10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9.12	'20.12	'21.12	'22.12	'23.12	'24.03 p)
건설	소계	소계	117.33	121.80	138.89	148.56	153.22	154.85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소계	소계	116.94	121.33	138.32	147.39	151.95	153.55
	주거용건물	소계	117.24	121.62	138.02	147.56	152.43	154.09
		주거용건물	117.24	121.62	138.02	147.56	152.43	154.09
	비주거용건물	소계	116.70	121.09	138.56	147.29	151.67	153.21
		비주거용건물	116.70	121.09	138.56	147.29	151.67	153.21
	건축보수	소계	116.79	121.16	138.42	147.08	151.06	152.62
		건축보수	116.79	121.16	138.42	147.08	151.06	152.62
토목건설	소계	소계	118.11	122.75	139.99	150.83	155.69	157.39
	교통시설건설	소계	116.88	120.67	138.21	150.57	155.02	156.51
		도로시설	116.48	119.84	137.62	151.44	156.03	157.42
		철도시설	117.64	122.13	139.84	148.95	153.03	154.76
		항만시설	117.49	122.37	136.84	148.90	153.60	154.96
	일반토목시설건설	소계	117.92	121.34	137.86	149.76	154.09	155.26
		하천사방	117.48	122.12	134.77	145.75	150.23	151.75
		상하수도시설	117.91	122.25	140.98	150.59	153.49	153.72
		농림수산토목	118.92	124.08	143.01	153.73	159.02	160.69
		도시토목	117.84	120.27	136.24	149.55	154.32	155.74
	산업시설건설	소계	118.99	124.98	142.19	151.40	156.92	159.13
		환경정화시설	118.96	124.13	144.17	152.23	156.94	158.35
		통신시설	118.65	125.29	142.76	150.54	156.70	160.35
		전력시설	119.05	125.60	141.74	151.90	158.12	161.10
		산업플랜트	118.97	124.33	142.09	150.82	155.55	156.71
	기타건설	소계	120.31	125.34	144.54	153.21	157.78	159.14
		기타건설	120.31	125.34	144.54	153.21	157.78	159.1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SOC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세수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6]를 보면, 2019.12월 117.33이었으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12월에는 153.22(2019년 대비 30.6% 증가)까지 증가하였고, 2024.3월 기준 154.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토교통부 SOC사업의 주요 부분인 건물건설(주거용・비주거용) 및 건축보수 분야는 2019년 116.94에서 2024.3월 153.55로 건설공사비지수가 증가하였고, 교통시설건설 분야는 116.88에서 156.51로 공사비가 최근 5년동안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세수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3년 국토교통부 세출 결산에서 발생하는 불용규모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전입금 결손으로 인한 것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과목이나 교통・에너지・환경세 수납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전입금은「교통시설특별회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수입을 말하며, 8조 1,054억원의 예산현액 중 6조 5,651억 4,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조 5,403억원(△19.0%)이 적게 수납되었음.

2023년 일반회계전입금 결손현황을 회계별로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계정에서 7,000억원, 철도계정에서 5,947억원, 공항계정에서 329억원,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2,039억원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88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2019~2023년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예산 대비 수납 (B-A)
2019	12,714,625	12,641,025	12,672,896	12,672,896	31,871
2020	12,315,583	12,358,904	12,378,824	12,378,824	19,920
2021	11,870,046	11,870,046	11,870,046	11,870,046	-
2022	10,663,749	10,215,974	10,215,941	10,215,941	△33
2023	8,105,400	8,105,400	6,565,146	6,565,146	△1,540,254

자료: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생산자 물가지수 2015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는 지수

[2019~2023년 회계별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계정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예산 대비 수납 (B-A)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2019	8,815,919	8,733,171	8,765,042	8,765,042	31,871
		2020	7,430,829	8,236,874	8,256,794	8,256,794	19,920
		2021	5,949,521	5,949,521	5,949,521	5,949,521	-
		2022	3,885,118	3,683,575	3,683,575	3,683,575	-
		2023	2,218,130	2,218,130	1,518,130	1,518,130	**△700,000**
	철도	2019	3,719,607	3,719,607	3,719,607	3,719,607	-
		2020	4,422,429	3,676,002	3,676,002	3,676,002	-
		2021	5,205,961	5,205,961	5,205,961	5,205,961	-
		2022	5,517,708	5,271,488	5,271,488	5,271,488	-
		2023	4,586,205	4,586,205	3,991,523	3,991,523	**△594,682**
	공항	2019	-	-	-	-	-
		2020	-	-	-	-	-
		2021	-	-	-	-	-
		2022	337,208	337,183	337,183	337,183	-
		2023	318,323	318,323	285,413	285,413	**△32,910**
	교통체계 관리	2019	142,123	151,271	151,271	151,271	-
		2020	443,596	427,299	427,299	427,299	-
		2021	634,094	634,094	634,094	634,094	-
		2022	899,680	899,713	899,680	899,680	△33
		2023	966,652	966,652	762,780	762,780	**△203,872**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	2019	36,976	36,976	36,976	36,976	-
		2020	18,729	18,729	18,729	18,729	-
		2021	80,470	80,470	80,470	80,470	-
		2022	24,035	24,015	24,015	24,015	-
		2023	16,090	16,090	7,300	7,300	**△8,790**

자료: 국토교통부

일반회계전입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산 기준으로 전체 세입의 2019년 88.1%였으나 2023년 세수부족으로 49.2%까지 감소하였고, 2024년 예산에는 11조 4,728억원이 편성되어 77.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2019~2023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예산
세입(A)	143,450	144,022	192,793	154,610	133,234	148,134
일반회계전입금(B)	126,359	123,601	117,896	101,919	65,578	114,728
비중(B/A)	88.1	85.8	61.2	65.9	49.2	77.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68%에 해당하는 금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중이 가장 큼.

[일반회계전입금 관련 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③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최근 5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납액을 보면, 2019년 14조 5,627억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수납액은 2019년 대비 3조 6,627억원(△25.2%) 감소한 10조 9,000억원(잠정치)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대상[7]으로 하는데, 최근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해 수납실적이 감소하였고, 향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인해 수납실적이 더욱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2019~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19년	147,766	147,766	147,766	146,081	145,627	98.6
2020년	157,273	154,636	154,636	139,738	139,379	90.1
2021년	156,903	156,903	156,903	166,312	165,984	105.8
2022년	153,805	109,022	109,022	111,417	111,164	102
2023년	111,471	111,471	111,471	108,683	109,000	97.8

주) 2023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납액 및 수납률은 잠정치

자료: 국토교통부

3. 주택도시기금 재무건전성: 여유자금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05조 5,355억 300만원으로, 96조 3,196억 5,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5조 4,376억 8,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1%)되고 658억원 5,0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8,161억 2,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8)]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105,535,503	105,535,503	96,319,652	95,437,682	65,850	816,12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05조 5,386억 2,200만원으로, 이 중 95조 4,376억 8,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0.4%)되고 23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조 3,236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105,535,503	105,535,503	3,119	105,538,622	95,437,682	2,353	3,323,609

주) 총계 기준

8)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고금리·분양가 상승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약저축과 채권 등의 조성액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은 ①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②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③「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④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①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③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됨.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주택법」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 ~ 14. (생 략)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 10. (생 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9]·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며,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보면, 2019년 58.7조원에서 2021년 76.1조원까지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62.6조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63.5조원으로 2021년 대비 12.6조원(△16.6%)이 감소하였음.

9)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됨.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58.7**	**69.7**	**76.1**	**62.6**	**63.5**
○ 차입금	**31.6**	**39.9**	**41.9**	**32.8**	**28.3**
청약	16.2	21.2	23.1	18.3	15.0
채권	15.4	18.7	18.8	14.4	13.4
○ 정부내부수입	**12.7**	**12.0**	**16.6**	**15.1**	**19.1**
일반회계전입금	1.7	2.4	3.6	4.3	3.0
복권기금전입금	0.6	0.6	0.6	0.6	0.5
기금예탁원리금회수	9.8	8.6	11.6	9.6	15.1
계정간전입금(도시)	0.6	0.5	0.9	0.6	0.5
○ 자체수입	**14.4**	**17.9**	**17.5**	**14.8**	**16.0**
융자원리금회수	14.0	17.5	17.1	14.1	15.0
정부출자수입 등	0.4	0.4	0.5	0.7	1.1

주) 여유자금회수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약은 2021년까지 적립에서 해지를 차감한 연간 순조성액이 2021년에는 12.9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고금리·분양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2021년 대비 13.6조원이 감소하여 0.7조원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0.2조원 적자인 상황임.[10)]

[최근 5년간 청약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적립(A)	16.2	21.2	23.1	18.3	15.0
해지(B)	12.2	10.1	10.3	19.0	15.2
순조성(A-B)	**4.0**	**11.1**	**12.9**	**△0.7**	**△0.2**

자료: 국토교통부

10)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변경 현황(청약저축 동일)]

가입기간	1개월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2016.8.12. ~ 2022.11.22	1.0%	1.5%	1.8%
2022.11.23. ~2023.8.29	1.3%	1.8%	2.1%
2023.8.30. ~	2.0%	2.5%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드림통장) 금리 변경 현황]

가입기간	1개월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2018.7.31. ~ 2022.11.22	1.0%	1.5%	3.3%
2022.11.23. ~ 2023.8.29	1.3%	1.8%	3.6%
2023.8.30. ~ 2024.2.20	2.0%	2.5%	4.3%
2024.2.21.~	2.0%	2.5%	4.5%

2021~2023년 청약통장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체 2,837만 좌에서 2023년에는 2,704만 좌로 133만 좌가 감소하였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21~2023년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 현황]

(단위: 좌)

연도	합계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2021(A)	28,371,484	26,772,491	406,850	166,757	1,025,386
2022	27,894,013	26,381,077	381,102	158,222	973,612
2023(B)	27,038,534	25,613,059	356,580	149,442	919,453
감소분(B-A)	**△1,332,950**	**△1,159,432**	**△50,270**	**△17,315**	**△105,933**

자료: 한국부동산원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11]의 경우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연간 순조성액이 2021년 3.3조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2021년 대비 3.8조원 감소한 0.5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음.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상환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행(A)	15.4	18.7	18.8	14.4	13.4
상환(B)	12.3	16.2	15.5	14.4	13.9
순조성(A-B)	**3.2**	**2.5**	**3.3**	**△0.0**	**△0.5**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기금예탁원리금 회수, 계정간 전입금(도시)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전입금은 2023년 3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3조원이 감소하였고, 복권기금전입금은 연간 0.5조원 수준임.

---

11)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일반 국민이 각종 등기 또는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첨가소화채권에 해당함.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최근 5년간 정부내부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회계전입금	1.7	2.4	3.6	4.3	3.0
복권기금전입금	0.6	0.6	0.6	0.6	0.5
기금예탁원리금회수	9.8	8.6	11.6	9.6	15.1
계정간전입금(도시)	0.6	0.5	0.9	0.6	0.5
소계	**12.7**	**12.1**	**16.7**	**15.1**	**19.1**

자료: 국토교통부

일반회계전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출 사업 중 출자, 구입·전세자금 대출 이차보전 사업 등과 같이 기금으로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수입이나, 2023년에는 세수부족으로 1조 5,196억원의 일반회계전입금 불납결손까지 발생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일반회계전입금을 매년 예산대비 12개월로 균등 배분하여 집행하고, 매월 기획재정부(국고과)의 자금신청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나, 2023.9월부터 국가 여유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아 총 4개월분의 전입금 1.5조원에 대해 미수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20~2023년 주택도시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0	2,424,024	2,424,024	2,424,024	2,424,024	2,424,024	100.0	100.0	-	-
2021	3,593,621	3,593,621	3,593,621	3,593,621	3,593,621	100.0	100.0	-	-
2022	4,278,137	4,278,137	4,278,137	4,278,137	4,278,137	100.0	100.0	-	-
2023	4,558,870	4,558,870	4,558,870	3,039,248	3,039,248	66.7	100.0	-	**1,519,622**

자료: 국토교통부

기금예탁원리금 회수는 차입금(청약, 채권) 기반으로 타 기금 예탁 등으로 운용한 자금이 만기도래 등에 따라 회수된 수입이며, 계정간 전입금은 도시계정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기금의 근본적인 조성재원은 아님.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을 통한 자체수입 현황을 보면, 2020년 17.9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융자원리금 회수가 정체되면서 감소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자체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융자원리금회수	14.0	17.5	17.1	14.1	15.0
정부출자수입 등	0.4	0.4	0.5	0.7	1.1
소계	14.4	17.9	17.6	14.8	16.1

자료: 국토교통부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고금리, 분양가 상승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약과 채권 등의 조성액이 감소하고, 청약통장 해지 증가로 기금재원의 순조성이 급감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함.

둘째, 저출생·주거복지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기금의 지출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1년 49조원이었던 여유자금이 2023년 19.2조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와 함께 기금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지출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62.3**	**67.1**	**69.5**	**81.1**	**74.6**
○사업비	**26.7**	**26.7**	**31.7**	**29.3**	**28.1**
구입·전세융자	9.4	9.9	10.3	8.5	11.3
이차보전	0.2	0.3	0.4	0.5	0.9
사업자융자(임대)	11.7	10.6	13.7	14.1	9.5
사업자융자(분양등)	0.5	0.2	0.6	0.2	0.6
임대주택출자	3.9	4.4	5.1	5.0	4.2
도시재생	0.6	0.9	0.8	0.6	0.9
기타사업[1)]	0.4	0.3	0.7	0.3	0.7
○차입금이자	**2.1**	**2.2**	**1.7**	**2.5**	**2.4**
청약	0.7	0.6	0.6	1.2	1.1
채권	1.3	1.5	1.2	1.3	1.3
○차입금원금	**24.4**	**26.3**	**25.8**	**33.5**	**29.1**
청약	12.2	10.1	10.3	19.0	15.2
채권	12.3	16.2	15.5	14.4	13.9
○정부내부지출	**9.1**	**12.0**	**10.3**	**15.8**	**15.0**
공자기금예탁	8.4	11.5	9.4	15.1	14.3
도시계정전출등	0.7	0.5	1.0	0.7	0.6

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위탁수수료 등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지출 현황을 보면, 2019년 총 62.3조원 규모에서 2022년 81.1조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이후 2023년 74.6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 최근 2년간 청약·채권의 순조성액이 2021년 대비 약 13조원 이상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9조원 수준의 사업비 지출규모를 유지하고 있음.[12)]

기금재원을 통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2023년 11.3조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32.9%)이 증가하였고, 은행 재원을 포함한 전체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청약저축의 해지가 증가함에 따라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도 2021년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금재원	9.4	9.9	10.3	8.5	11.3
이차보전	0.2	0.3	0.4	0.5	0.9
(은행재원)	(13.7)	(9.0)	(8.6)	(12.5)	(35.7)
소계	9.6	10.2	10.7	9.0	12.2
(대출규모)	(23.1)	(18.9)	(18.9)	(21.0)	(47.0)

주)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MBS) 재원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각 연도말 기준 여유자금 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A)	**58.7**	**69.7**	**76.1**	**62.6**	**63.5**
ㅇ 차입금	31.6	39.9	41.9	32.8	28.3
ㅇ 정부내부수입	12.7	12.0	16.6	15.1	19.1
ㅇ 자체수입	14.4	17.9	17.5	14.8	16.0
지출(B)	**62.3**	**67.1**	**69.5**	**81.1**	**74.6**
ㅇ 사업비	26.7	26.7	31.7	29.3	28.1
ㅇ 차입금이자	2.1	2.2	1.7	2.5	2.4
ㅇ 차입금원금	24.4	26.3	25.8	33.5	29.1
ㅇ 정부내부지출	9.1	12.0	10.3	15.8	15.0
수지차(A-B)	**△3.6**	**2.6**	**6.6**	**△18.4**	**△11.1**
운용손익	2.6	1.8	1.1	△1.9	1.6
여유자금	**36.8**	**41.3**	**49.0**	**28.7**	**19.2**

주) 2023년 연말(비영업일)에서 연초로 이월된 채권상환분(1.2조원) 반영 시 실여유자금 18조원 수준
자료: 국토교통부

12) 2019~2021년 연간 28조원 → 2022~2023년 연간 29조원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주거복지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기금의 지출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효과분석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기금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1년 49조원까지 증가했던 기금 여유자금 잔액이 2022년 28.7조원, 2023년에는 19.2조원, 2024.3월에는 13.9조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금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대규모 변경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출계획현액 105조 5,386억 2,200만원 중 95조 4,376억 8,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0.4%)되고 23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조 3,236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105,535,503	105,535,503	3,119	105,538,622	95,437,682	2,353	3,323,609

주) 총계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 사유는 융자조건 변경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국회에서 확정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성 기금은 지출금액의 30%,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는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한하여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 6.(생 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4]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긴급한 소요인지 여부,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⑤ 사업의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⑥ 기타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여러 제한사항을 두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3년 총 11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변경 사유는 대부분 다가구매입임대 융자금 지역별 대출 한도 조정,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등 융자조건의 변경임.

14)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1., pp.314~339 참조

그러나 대출한도, 금리 등 융자조건은 사업수요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절성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므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이를 변경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상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차수	구분	변경 사유
1차 (2월)	융자조건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2차 (3월)	융자조건 변경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한도 변경 -다가구매입임대 융자금 지역별 대출 한도 조정
3차 (3월)	사업비 변경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144억원을 일반출자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 목간 전용
4차 (7월)	융자조건 변경 사업비 변경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경락·구입자금 지원대출 신설 및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융자조건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3,839억원 증액 등
5차 (7월)	사업비 변경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출자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국민임대출자 575억원, 행복주택출자 474억원을 사업 내 목간 전용 -분양자금대출, 디딤돌대출 등 기금 대출규모 확대 등에 따른 대출 부대비용(공공요금 및 제세) 목간 전용
6차 (7월)	사업비 변경	-청약 해지가 증가하여 과소 편성된 이자상환액 3,071억원 증액
7차 (7월)	융자조건 변경 사업비 변경	-대출수요 증가, 신혼희망타운 입주(6,217세대)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소요액 9,364억원 증액 -전세임대 수요 증가에 따라 5,580억원을 통합공공임대(융자) 등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으로부터 전세임대(융자)로 전용
8차 (2월)	융자조건 변경	-구입자금, 전세자금 금리 인상 -청약통장 우대금리 확대
9차 (2월)	융자조건 변경 사업비 변경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버팀목 대출요건 완화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 소득요건 완화
10차 (12월)	융자조건 변경 사업비 변경	-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변경 -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출한도 상향
11차 (12월)	융자조건 변경 사업비 변경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세부사업 간 변경(총지출 △30,683억원)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세부사업 내 목간 변경 -융자조건 변경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긴급한 소요,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회계연도 종료 3일 전 12.28일 3조 7,448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변경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중 사업비 변경은 총 8차례였으며, 변경 규모는 증액, 감액 각각 6조 5,067억원이며, 가장 큰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023.12.28. 실시한 건으로 3조 7,448억원을 변경하여 연간 총 변경규모의 57.6%를 회계연도 말에 변경하였음.

[2023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사업비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2023.3.7	자체변경	14,354	14,354
2023.7.7	기재부협의	783,400	783,400
2023.7.7	자체변경	108,001	108,001
2023.7.12.	기재부협의	307,144	307,144
2023.7.28.	기재부협의	1,509,350	1,509,350
2023.9.26	기재부협의	300	300
2023.10.17.	기재부협의	39,279	39,279
2023.12.28.	기재부협의	3,744,828	3,744,828
합계		**6,506,656**	**6,506,656**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연말 집행수요를 반영하여 집행률 제고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용예상 금액을 감액[15]하는 등 사업 간 변경을 실시하였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 조건 변경,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등 융자조건 변경으로 회계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16]에서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긴급한 소요,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회계연도 종료 3일 전 12.28일 3조 7,448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변경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2023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6조 5,067억원으로 2023년 총지출 기준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333억원보다 큰 규모이며, 이보다 예산 규모가 큰 부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16개 부처밖에 없음.

---

15) 총지출 3조 683억원 감액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나머지 43개 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보다 부처 전체 예산이 작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17)]

참고로,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의 12월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보면, 10년간 12월 중 변경이 없었던 해는 없었으며, 변경 규모 측면에서 보면 2022년에 6조 8,635억원을 변경하여 가장 크며, 최근 2년간 변경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10년간 12월 중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2014	2014-12-01	자체변경	28,000	28,000
	2014-12-18	기재부협의	593,202	593,202
	2014-12-30	자체변경	78,100	78,100
	2014-12-31	기재부협의	73,500	73,500
	소계		**772,802**	**772,802**
2015	2015-12-31	기재부협의	768,971	768,971
	2015-12-31	자체변경	240,112	240,112
	소계		**1,009,083**	**1,009,083**
2016	2016-12-22	기재부협의	801,702	801,702
	2016-12-23	자체변경	35,500	35,500
	소계		**837,202**	**837,202**
2017	2017-12-19	자체변경	70,000	70,000
	2017-12-27	기재부협의	611,131	611,131
	2017-12-28	자체변경	1,983	1,983
	소계		**683,114**	**683,114**
2018	2018-12-19	자체변경	35,000	35,000
	2018-12-20	자체변경	1,093,001	1,093,001
	2018-12-21	자체변경	3,200	3,200
	2018-12-31	기재부협의	63,616	63,616
	소계		**1,194,817**	**1,194,817**
2019	2019-12-26	기재부협의	507,903	507,903
	소계		**507,903**	**507,903**

17)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2023.3., pp.376~377.

(단위: 백만원)

연도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2020	2020-12-17	자체변경	94,350	94,350
	2020-12-23	기재부협의	671,561	671,561
	2020-12-29	자체변경	18,892	18,892
	소계		**784,803**	**784,803**
2021	2021-12-24	기재부협의	795,349	795,349
	2021-12-29	자체변경	430	430
	소계		**795,779**	**795,779**
2022	2022-12-08	자체변경	18,754	18,754
	2022-12-15	기재부협의	286,150	286,150
	2022-12-26	기재부협의	6,549,096	6,549,096
	2022-12-27	자체변경	9,485	9,485
	소계		**6,863,485**	**6,863,485**
2023	2023-12-28	기재부협의	3,744,828	3,744,828
	소계		**3,744,828**	**3,744,82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12.28.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변경 증액			변경 감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17,585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17,585
위탁수수료	일반수용비	4,150	위탁수수료	민간위탁사업비	9,969
	공공요금 및 제세	5,819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타민간융자금	3,6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차보전금	3,600
노후산단 재생지원(융자)	기타민간융자금	2,405	도시재생씨앗융자	기타민간융자금	2,405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금융성기금출연금	6,000	분양주택(융자)	기타민간융자금	279,108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민간예수금이자	157,780	국민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103,169
국공채이자상환	차입금이자	3,512	행복주택(융자)	기타민간융자금	234,000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기타민간융자금	44,100	다가구매입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1,703,880
공공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63,569	통합공공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229,134

(단위 : 백만원)

변경 증액			변경 감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전세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354,78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자치단체자본보조	140,516
공자기금(융자계정)예수원금상환	예수금원금상환	1	국민임대출자	자치단체자본보조	40,500
공자기금(융자계정)예수이자상환	예수금이자	87	국민임대출자	일반출자금	95,500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반환금및손실금	13,26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3,268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민간예수금원금상환	2,971,381	영구임대출자	자치단체자본보조	5,800
국공채원금상환	국내차입금상환	96,791	영구임대출자	일반출자금	40,200
-	-	-	행복주택출자	자치단체자본보조	14,200
-	-	-	행복주택출자	일반출자금	208,800
-	-	-	임대주택리츠출자	일반출자금	100,000
-	-	-	통합공공임대출자	자치단체자본보조	85,000
-	-	-	통합공공임대출자	일반출자금	415,000
-	-	-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민간경상보조	1,437
-	-	-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자치단체경상보조	1,75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배상금(310-02목): 관련법령 준수 및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한 소송발생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배상금(310-02목)’ 은 국가의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57억 5,900만원 중 555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3,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배상금(310-02목) 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500	20,500	1	35,258	55,759	55,563	32	163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4,622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국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시설물의 하자를 줄이는 등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배상금(310-02목)은 국가 또는 공무원이 사업 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의미함.[18)]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배상금(310-02목) 결산 내역을 보면, 2020년 이후 예산액은 205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2019년 785억원, 2020년 877억원, 2021년에는 1,85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에는 556억원 수준의 배상금을 집행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예산액 대비 350억원(171.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18)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1.

국토교통부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차이만큼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증)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집행액의 평균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19~2023년 배상금(310-02목)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9	758	758	-	77,848	78,513	78,468	9	37
2020	20,418	20,418	9	67,258	87,685	87,666	-	19
2021	20,418	20,418	-	164,737	185,155	184,817	32	305
2022	20,469	20,469	32	35,380	55,881	55,668	1	212
2023	20,500	20,500	1	35,258	55,759	55,563	32	163
합계	**82,563**	**82,563**	**42**	**380,481**	**462,993**	**462,182**	**74**	**736**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국토교통부의 배상금(310-02목)은 주로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이나 「국가배상법」[19]에 따른 도로·하천 등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최근 5년간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소송비용 집행액은 4,622억 원에 달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공항 등 SOC건설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국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시설물의 하자를 줄이는 등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19)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19~2023년 세부사업별 배상금(310-02목)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	-	45	45	45	-	-
	부산지방항공청기본경비(비총액)	-	-	4	4	4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비총액)	-	-	5	5	5	-	-
	일반국도건설지원	458	-	68,121	68,579	68,545	7	27
	국도유지운영	300	-	393	693	683	-	10
	민자철도운영지원	-	-	8,617	8,617	8,617	-	-
	공항소음대책	-	-	436	436	435	-	1
	사천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	-	-	134	134	133	1	-
20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	-	10	10	10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	-	1,311	1,311	1,311	-	-
	일반국도건설지원	20,000	7	26,246	46,253	46,245	-	7
	국도유지운영	418	1	121	540	530	-	10
	민자철도운영지원	-	-	36,639	36,639	36,639	-	-
	일반공항시설관리	-	-	2,927	2,927	2,926	-	1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	-	5	5	5	-	-
	사천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	-	0.8	-	0.8	0.4	-	0.4
2021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	-	-	13	13	13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	-	10	10	10	-	-
	국유재산실태조사	-	-	66	66	66	-	-
	일반국도건설지원	20,000	-	114,816	134,816	134,770	32	14
	국도유지운영	418	-	454	872	843	1	28
	민자철도운영지원	-	-	49,337	49,337	49,076	-	262
	일반공항시설관리	-	-	16	16	15	-	1
	공항소음대책	-	-	25	25	25	-	-
2022	본부 기본경비(비총액)	-	-	49	49	49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	-	31	31	26	-	5
	부산지방항공청기본경비(비총액)	-	-	24	24	24	-	-
	제주지방항공청기본경비(비총액)	-	-	21	21	21	-	-
	고속도로조사	-	-	15,700	15,700	15,700	-	-
	일반국도건설지원	20,000	32	18,955	38,987	38,900	1	86
	국도유지운영	469	1	527	997	876	-	121
	공항소음대책	-	-	14	14	14	-	-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	-	58	58	58	-	-
2023	건설및지하안전관리	-	-	9	9	9	-	-
	본부 기본경비(비총액)	-	-	34	34	34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	-	12	12	12	-	-
	제주지방항공청기본경비(비총액)	-	-	8	8	8	-	-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	-	-	23	23	23	-	-
	국유재산실태조사	-	-	48	48	-	-	48
	일반국도건설지원	20,000	1	15,207	35,208	35,194	1	13
	국도유지운영	500	-	491	991	858	31	102
	민자철도운영지원	-	-	19,115	19,115	19,115	-	-
	공항소음대책	-	-	297	297	297	-	-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	-	14	14	14	-	-

자료: 국토교통부

6. 신규 SOC(철도, 도로) 건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2023년 신규 철도건설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8억 4,400만원 중 174억원이 집행(집행률 76.2%)되고 54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3년도 신규 철도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	8,700	8,700	-	-	8,700	8,700	-	-	5,000
문경~김천 철도건설	5,000	5,000	-	-	5,000	5,000	-	-	3,000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3,700	3,700	-	-	3,700	3,700	-	-	-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1,200	1,200	-	-	1,200	-	-	1,200	13,80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2,500	2,500	-	-	2,500	-	-	2,500	12,983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1,744	1,744	-	-	1,744	-	-	1,744	3,000
합계	**22,844**	**22,844**			**22,844**	**17,400**	**-**	**5,444**	**37,783**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하는 신규 도로건설 사업은 총 7건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388억 7,700만원 중 28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1.2%)되고 2,360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

20) 철도건설 사업은 고속철도건설(2500), 일반철도건설(2600), 광역철도건설(2800, 2900), 도시철도건설(3000)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21) 도로건설 사업은 고속도로건설(1500), 국도건설(1600), 민자도로건설및관리(1800), 지자체도로건설지원(1900)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2023년 국토교통부 직접수행 신규 도로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동광주-광산고속도로건설	1,000	1,000	-	△136	864	864	-	-	86.4
대산-당진고속도로	8,000	8,000	-	△6,018	1,982	1,982	-	-	24.8
안산-인천고속도로	3,000	3,000	-	△3,000	-	-	-	-	-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78,381	78,381	-	-	78,381	-	-	78,381	-
세종-청주고속도로	100,269	100,269	-	-	100,269	-	-	100,269	-
울산외곽고속도로	57,256	57,256	-	-	57,256	-	-	57,256	-
부안-홍덕국도건설	200	200	-	△75	125	10	-	115	5.0
합계	**248,106**	**248,106**	**-**	**△9,229**	**238,877**	**2,856**	**-**	**236,021**	**1.2**

자료: 국토교통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 도로건설 사업은 총 9건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5억 2,1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20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 방식의 신규 도로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 년 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검단-대곡광역도로	200	200	-	-	200	200	-	-	3,000
금곡-대곡혼잡도로	5,921	5,921	-	-	5,921	5,921	-	-	-
각화동-제2순환로 혼잡도로	500	500	-	-	500	500	-	-	400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혼잡도로	1,000	1,000	-	-	1,000	1,000	-	-	400
연천군남옥계-연천상리 국지도건설	200	200	-	-	200	200	-	-	200
밀양무안-동산국지도건설	200	200	-	-	200	200	-	-	200
사천곤양-곤명국지도건설	200	200	-	-	200	200	-	-	200
충북도계-천안탑원 국지도건설	200	200		△100	100	100	-	-	200
함안-의령국지도건설	200	200	-	-	200	200	-	-	200
합계	**8,621**	**8,621**	**-**	**△100**	**8,521**	**8,521**	**-**	**-**	**4,800**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SOC 신규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을 시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기본적으로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사업착수를 위한 설계비 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철도건설 사업은 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2개, 도시철도 3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중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건설 사업은 사업비 174억원을 모두 공단으로 교부하였으나 공단은 전액 이월하였으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54억 4,400만원의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지 않고 모두 불용하여 신규 철도건설 사업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2023년 신규 철도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	8,700	8,700	8,700	8,700	-	-	8,700	-	8,700	-
문경~김천 철도건설	5,000	5,000	5,000	5,000	-	-	5,000	-	5,000	-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3,700	3,700	3,700	3,700	-	-	3,700	-	3,700	-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1,200	1,200	-	-	-	-	-	-	-	-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2,500	2,500	-	-	-	-	-	-	-	-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1,744	1,744	-	-	-	-	-	-	-	-
합계	**22,844**	**22,844**	**17,400**	**17,400**	**-**	**-**	**17,400**	**-**	**17,400**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신규로 추진된 철도건설 사업들의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문경~김천 철도건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모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비 등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전액 이월되었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사업은 타당성재조

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이 추진되면서 국비 전액이 불용되었음.

[2023년 신규 철도건설 사업 집행부진 사유]

사업명	집행부진 사유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	- 기본계획 중('23.2~)으로 설계비 등 집행 불가하여 부진
문경~김천 철도건설	- 기본계획 중('23.3~)으로 설계비 등 집행 불가하여 부진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 기본계획 중('22.5~)으로 설계비 등 집행 불가하여 부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 기본계획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 (설계적정성 검토, 2023.11~2024.1)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국비 불용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 기본계획 수립 중 국회증액된 예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국비 불용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2023.12.~2024.7., 기재부)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 타당성재조사 추진중(2023.1~) 국회증액된 예산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되어 국비 불용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수행하는 신규 도로건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2,481억 600만원 중 집행액은 28억 5,600만원(1.2%)에 불과하고, 2,360억 2,100만원을 불용하여 당초 예산의 95.1%가 불용되었음.

[2023년 국토교통부 직접수행 신규 도로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동광주-광산고속도로건설	1,000	1,000	-	△136	864	864	-	-	86.4
대산-당진고속도로	8,000	8,000	-	△6,018	1,982	1,982	-	-	24.8
안산-인천고속도로	3,000	3,000	-	△3,000	-	-	-	-	-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78,381	78,381	-	-	78,381	-	-	78,381	-
세종-청주고속도로	100,269	100,269	-	-	100,269	-	-	100,269	-
울산외곽고속도로	57,256	57,256	-	-	57,256	-	-	57,256	-
부안-홍덕국도건설	200	200	-	△75	125	10	-	115	5.0
합계	**248,106**	**248,106**	**-**	**△9,229**	**238,877**	**2,856**	**-**	**236,021**	**1.2**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 사업들의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총사업비 협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업착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신규 도로건설 사업(국토부 직접수행) 집행부진 사유]

사업명	집행부진 사유
대산-당진고속도로	- 총사업비 협의('23.6)로 인한 발주시기 지연
안산-인천고속도로	- 1구간 설계지연 및 2구간 전략환경평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23.5~'24.5) 후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중('24.5~)
세종-청주고속도로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23.5~'24.5) 후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중('24.5~)
울산외곽고속도로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23.5~'24.2) 후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중('24.2~)
부안-흥덕국도건설	-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연내 총사업비 협의 미완료로 발주지연

자료: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2023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건설 신규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85억 2,100원의 예산현액 중 9억원이 집행(집행률 10.4%)되고, 76억 2,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9개 사업 중 충북도계-천안탑원국지도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예산액 전액을 지자체로 교부하였고, 검단~대곡 광역도로, 금곡~대곡 혼잡도로 등 4개 사업의 지자체는 교부받은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23년 지자체 보조사업 방식의 신규 도로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이전용 등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검단-대곡 광역도로	200	200	200	200	-	200	-	200	-	-
금곡-대곡 혼잡도로	5,921	5,921	5,921	5,921	-	5,921	-	5,921	-	-
각화동-제2순환로혼잡도로	500	500	500	500	-	500	-	500	-	-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혼잡도로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연천군남옥계-연천상리국지도건설	200	200	200	200	-	200	200	-	-	100
밀양무안-동산국지도건설	200	200	200	200	-	200	200	-	-	100
사천곤양-곤명국지도건설	200	200	200	200	-	200	200	-	-	100
충북도계-천안탑원국지도	200	200	100	100	-	100	100	-	-	50
함안-의령국지도건설	200	200	200	200	-	200	200	-	-	100
합계	**8,621**	**8,621**	**8,521**	**8,521**	**-**	**8,521**	**900**	**7,621**	-	**10.4**

자료: 국토교통부

집행실적이 부진한 4개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검단-대곡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금곡-대곡 혼잡도로는 총사업비 협의, 각화동-제2순환로 혼잡도로 건설 사업은 민원발생 및 설계기간 소요,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혼잡도로 건설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2023년 신규 도로건설 사업(지자체 보조) 집행부진 사유]

사업명	집행부진 사유
검단-대곡 광역도로	-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9월)후 10월 설계 발주 예정
금곡-대곡 혼잡도로	- 총사업비 협의 기간 소요
각화동-제2순환로 혼잡도로	- 민원발생(노선 변경) 및 설계기간 소요('22.12~'23.12)로 집행 부진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혼잡도로	- 고속도로IC 추가설치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조사중으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 SOC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을 시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기본적으로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사업착수를 위한 설계비 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7.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운영 사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재 신청요건 명확화 및 홍보강화 필요

가. 개 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운영’ 사업은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가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를 통해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억 3,4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2)]

[2023년도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동차안전도 강화	15,868	15,868	-	-	15,868	15,868	-	-	16,446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운영	934	934	-	-	934	934	-	-	900

나. 검토의견

첫째, 하자차량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제출서류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하자차량 소유자가 교환·환불 중재신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일반회계-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23]로 2회, 일반하자[24]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2019~2024.4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년도	사건 접수	진행중	사건 종료	중재사건 종료 유형							
				교환		환불		보상·수리	요건미충족 등 각하	기각	취하
				판정	합의 취하	판정	합의 취하				
2019	79	-	26	-	3	-	2	3	8	-	10
2020	668		424	1	14	-	17	48	245	27	72
2021	707		828	-	44	4	67	186	295	78	154
2022	444		550	5	49	1	37	120	169	57	112
2023	533		466	7	53	3	83	61	146	35	78
2024.4.	289		224	-	30	3	42	30	69	19	31
계	2,720	202	2,518	13	193	11	248	448	932	216	457
				206		259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2024년 4월말까지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접수 2,720건 중 2,518건이 종료되었으며, 사건종료 건수 중 932건(37.0%)이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되어 중재사건 종료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재 신청인이 교환·환불 중재신청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중재제도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의 대부분은 중재제도를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25] 본인 차량의 중재요건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신청하거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요건에 부합되는지 또는 서류상의 흠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하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음.[26]

23)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24) 중대한 하자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25) 소비자 설문조사(2021.12.) 결과: 중재제도에 대해 정부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분쟁해결(49.9%) 또는 정부가 당사자 합의(34.3%)를 알선하는 것으로 인식

26) 2024.4월말 기준 각하 932건 중 보완요청 미이행 496건(53.2%), 차량소유자와 신청인 상이 282건(30.2%), 기

그러나 2019.1.1.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2024년 전체 289건의 사건 중 요건미충족으로 인한 각하사건이 69건(2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 하고, ②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여야 하며, ③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여야 하고, ④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또는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여야 하며, 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중재신청 요건 중에는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의 현저한 훼손, 사용 곤란 등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명확하지 않은 요건이 존재하며, 구조나 장치의 중대

타 신청 기간 도과, 중재미수락 등

한 하자 및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일반 하자의 범위도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하자차량의 소유자가 해당 요건들을 이해하고 중재신청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임.[27]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중재신청 요건은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과 비교하여 절대 강화된 요건이 아니며, 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한 차량의 하자추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고, 하자차량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신청할 때에는 중재 신청서·차량 등록증 사본 및 정비명세서 등만 제출하면 중재부가 직접 증거·사실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소유자의 하자입증책임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28]

---

2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28)「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③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

그러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가 교환·환불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목적이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자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제출서류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환·환불 중재신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동차 교환·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동 제도와 함께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수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에 관하여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있으므로 소비자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요건미충족 등 각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교환환불 중재 신청서, 차량 등록증 사본, 정비명세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흠보정을 요구해도 보정을 하지 않으며, 중재진행을 위해 연락하더라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각하된 건이 932건 중 851건(91.3%)으로, 대부분 신청자의 해태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보완요청 미이행 등 소비자의 탓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며,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에 관하여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또한 2019년부터 2024년 4월말까지 사건종료 유형 중 37%가 요건미충족 등 각하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신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내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업: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요건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6억 3,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9)]

[2023년도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통안전공단 출연	80,269	80,269	-	-	80,269	80,269	-	-	88,113
운전적성 정밀검사	1,633	1,633	-	-	1,633	1,633	-	-	1,209

나. 검토의견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의 의료적성검사 대체제도는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평균 0.2%에 불과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적성검사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0)]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1)]에 따라 운

29) 일반회계-교통안전공단출연(4638-301)(교통물류실)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

전업무 종사자격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32]되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로서 만 65~70세 미만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중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혈압·신체기능 적합도 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3]

[운전적성정밀검사 유형별 대상자]

구분	대상자
신규검사	-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특별검사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 대상: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시행일: 버스(2016.1.1), 택시(2019.2.13), 화물(2020.1.1) - 만 65세~만 70세 미만인 사람: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후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후 1년마다 수검 *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https://lic.kotsa.or.kr/) 누리집, 2024.6.13.

준에 맞을 것

3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자격유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비교]

구 분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
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의료법에 따른 병·의원
시행주기	• 만 65세-69세(매 3년), 만 70세 이상(매 1년)	
검사장소	• 전국 검사장(17개) 및 이동검사장(2대)	• 전국 37개 병·의원 등
검사항목	• 시야각검사 등 총 7가지 항목	• 혈압 등 총 8가지 항목
판정기준	• 5등급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	• 적합 기준 미달 시 부적합(1개 이상)
소요시간	• 2시간(120분)	• 병원마다 상이
시행절차	• 예약 → 공단 방문 및 수검 → 판정	• 예약 → 병·의원 방문 및 검사 수검 → 결과 제출(공단) → 판정
시행연도	• 버스('16년), 택시('19년), 화물('20년)	• 택시('19년), 화물('20년)
검사인원	• 버스(19,762명, 택시(51,752명), 화물(26,996명)	• 택시(16,394명), 화물(2,167명)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러나 의료적성검사 대체제도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도입 당시 택시 및 화물차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의 부실검사, 낮은 검사기준, 반복 재검사 등으로 인해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4년간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검사현황을 보면, 자격유지검사는 부적합률이 2020~2023년 평균 2.5% 수준이나 의료적성검사는 0.2%에 불과하여 고령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2020~2023년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검사현황]

(단위: 명, %)

구 분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		
	수검 인원	부적합인원	부적합률	수검 인원	부적합인원	부적합률
2020년	97,328	3,826	3.9	21,599	89	0.4
2021년	67,014	1,834	2.7	15,231	48	0.3
2022년	81,467	1,561	1.9	16,298	21	0.1
2023년	102,128	1,562	1.5	18,561	19	0.1
평균	**86,984**	**2,196**	**2.5**	**17,922**	**44**	**0.2**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한, 2020~2023년 연령대별 의료적성검사 수검 비중을 보면, 65~69세는 12.7%, 70~74세는 18.2%, 75~79세는 27.8%, 80세 이상에서는 36.0%가 의료적성검사를 받고 있어 연령대가 높은 운수종사자일수록 적합판정이 용이한 의료적성검사를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등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2020~2023년 연령대별 의료적성검사 수검 비중]

(단위: 명, %)

구 분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	의료적성검사 비중
65-69세	182,705	26,681	**12.7**
70-74세	138,204	30,664	**18.2**
75~79세	31,719	12,219	**27.8**
80세 이상	4,092	2,302	**36.0**
합 계	356,720	71,866	**16.8**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9.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당초예산 대비 전용 과다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은 용산기지 반환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부지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29억 2,400만원 중 424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6,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3년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30,378	30,378	391	12,155	42,924	42,458	60	406	43,542

나. 검토의견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은 공원계획 수립 내역사업 등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하여 추가과업에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03년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35)] 평택이전 합의를 계기로 2005년 용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조성절차는 기본계획, 조성계획, 실시계획 수립 후 완전반환 및 오염정화 및 조성공사 순으로 진행되며, 2024.5월 현재 기본계획이 수

34) 일반회계-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5635-301)(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35) 면적: 약 243만㎡(메인포스트 75만㎡ + 사우스포트스 168만㎡)*
* (메인포스트) 한미연합사 등 군사시설, (사우스포스트) 숙소, 편의시설 등 입지

립・고시(2022.8, 3차 변경)되었고, 정식조성 전까지 반환부지 내 장교숙소 5단지(5만㎡)와 용산어린이정원[36](30만㎡)을 임시개방 중임.

[용산공원 기본계획('22.8) 상 용산공원 정식 개방계획]

반환 이전 (~N년)	⇨	조성 준비 (N~N+3년)	⇨	조성 (N+3~N+7년)	⇨	개원 (N+7년)
・기본/조성/실시계획 수립 등		・ 각종 계획 보완 ・ 오염 정화		・ 조성공사 ・ 관리센터설립		・ 공원-주변지역 연계성 보완

주) N년은 용산기지의 완전반환이 이루어지는 연도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의 2023년 비목별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303억 7,800만원의 40.0% 수준인 121억 5,500만원을 전용(증)하여 집행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공원계획수립 내역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예산 8억 6,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내역사업의 정책연구비도 8,9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추진단 운영사업의 무형자산도 8,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음.

[2023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 공원계획수립	860	34	△840	54	52	20	18	-	2
- 정책연구비	-	34	20	54	52	20	18	-	2
- 기본조사설계비	860		△860	-	-	-	-	-	-
・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27,744	358	13,175	41,277	41,203	40,919	40,919	-	74
- 정책연구비	89	-	△89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27,655	-	13,264	40,919	40,919	40,919	40,919	-	-
- 공사비	-	285	-	285	251	-	-	-	34
- 관리용역비	-	73	-	73	33	-	-	-	40
・ 추진단 운영	660	-	△80	580	516	580	516	-	63
(일부 생략)									
- 무형자산	80	-	△80	-	-	-	-	-	-
합 계	**30,378**	**391**	**12,155**	**42,924**	**42,458**	**42,533**	**42,140**	**60**	**406**

자료: 국토교통부

36)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후 방문실적>

연월	'23.5	6	7	8	9	10	11	12	'24.1	2	3
방문객수(명)	20,337	26,345	21,353	14,491	29,241	28,089	18,518	11,476	12,408	11,144	17,744

감액된 예산은 전용(증)을 통해 민간위탁사업비로 증액되었는데, 민간위탁사업비의 예산은 276억 5,500만원이었으나 당초 예산의 48% 수준인 132억 6,400만원이 증액된 것임.

[2023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8.11)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5637-308)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2,155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5635-30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전용 ('23.8.11)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5635-30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860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5635-30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정책연구비 (260-02)	69		
		일반연구비 (260-01)	100		
		무형자산 (440)	80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3차 변경계획(2022.8)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기본조사설계비 예산(8억 6,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와 연계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23.1)」 변경 등 여건변화로 추후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동 예산을 임시개방을 위한 부지정비 및 관리운영 등 추가과업 소요예산으로 전용(증)한 것이라고 설명함.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내역사업의 정책연구비 8,900만원은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가과업(2,000만원)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정책연구 수요가 없어 불용예상액 6,900만원을 전용(감)하였다고 설명함.

추진단 운영 내역사업의 무형자산 8,000만원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사무실 임차기간 종료 시점(2023년 2월)에 맞춰 용산기지(현재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으로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범위내 임차료, 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매물이 없어 기존 사무실에 잔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동 예산을 전용(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LH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증)한 예산은 ① 어린이정원 추가과업(45억원, 관람형 연못 → 분수정원), ② 위해성 저감조치 보강(45억원), ③ 관리운영 인력 증원(42억원)으로 집행하였음.

[2023년 민간위탁사업비 전용액 집행내역]

당초		변경		
예산액 (A)	사업내용	예산액 (B)	전용액 (B-A)	추가과업 등 변경내역
85억원	용산어린이정원내 수공간(관람형 연못) 조성	130억원	45억원	어린이가족을 위한 분수정원으로 조성계획 변경
-	-	45억원	45억원	위해성 저감사업 보강시행
55억원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개방부지 관리 운영비	95억원	42억원	분수정원 등 추가개방에 따른 시설안내, 안전관리요원 증원 등 관리운영 인력 증원

자료: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당시 추진하려던 공원계획수립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와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의 정책연구비 등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하여 새로운 추가과업에 집행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으며, 2022년에도 122억원의 예비비 집행과 예산 대비 73.8%의 예산을 전용(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0~2023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431	1,431	425	△23	-	1,833	1,519	106.2	82.9	282	32
2021	9,078	9,078	282	7	2,000	11,367	7,354	81.01	64.7	3,289	724
2022	8,942	8,942	3,289	6,600	12,200	31,031	28,939	323.6	93.3	391	1,700
2023	30,378	30,378	391	12,155	-	42,924	42,458	139.8	98.9	60	406

자료: 국토교통부

10.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 적정 인건비 반영을 통한 인건비 부족 문제의 재발방지 필요

가. 개 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일반철도시설의 점검·보수·교체 등을 통해 시설의 기능과 성능 유지로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286억 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7]

[2023년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428,608	428,608	-	-	428,608	428,608	-	-	510,991

나. 검토의견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38]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그간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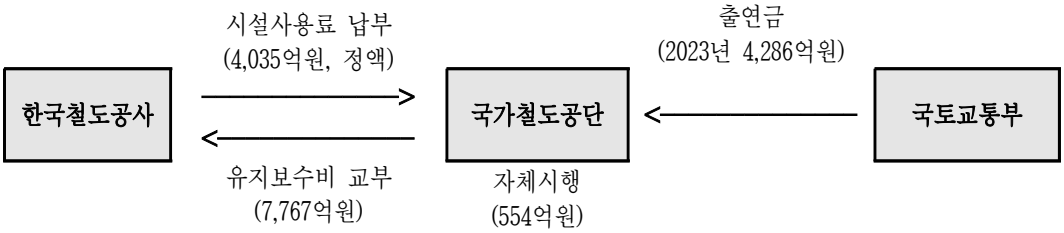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를 출연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운용됨.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는 선로사용료(4,035억원, 정액)와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출연금은 유지보수비 전체 소요액 중 선로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음.

---

37) 일반회계-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2731-301)(철도국)

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국가철도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 운용구조]



자료: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는 세부적으로 인건비, 경비, 보수비로 구분되며, 2021~2023년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수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 등의 부족액은 2021년 400억원에서 2022년 672억원, 2023년에는 7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21년 집행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2024.7월 현재 정산이 진행 중에 있고, 2022년도 미정산액에 대해서는 2025년 정부예산에 요구 및 협의 중에 있음.[39]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A)	공사 집행액(B)	과부족 (A-B)	정산금액 (C)	정산잔액 (A-C)	비 고
2021	**소계**	**7,078**	**7,473**	**△395**	**7,073**	**5**	보수비 잔액(5억원) 제외 시 △400억원
	인건비	4,398	4,458	△60	4,398	-	
	경비	1,107	1,310	△203	1,107	-	
	보수비	1,133	1,128	5	1,128	5	
	부가세	440	577	△137	440	-	
2022	**소계**	**7,435**	**8,016**	**△581**	**7,344**	**91**	보수비 잔액(91억원) 제외 시 △672억원
	인건비	4,640	4,943	△303	4,640	-	
	경비	1,177	1,546	△369	1,177	-	
	보수비	1,618	1,527	91	1,527	91	
2023	**소계**	**7,767**	**8,286**	**△519**	-	-	보수비 잔액(233억원) 제외 시 △752억원 ※ 정산 중 (2024.12 완료예정)
	인건비	4,719	5,105	△386	-	-	
	경비	1,177	1,543	△366	-	-	
	보수비	1,871	1,638	233	-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9) 2023년 미정산액에 대해서는 2024.7월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예산 요구를 하지 못한 상황임.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강화 정책으로 2017~2022년 동안 1,258명의 증원이 있었고, 정부지원 인건비는 실제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인건비 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2023년까지 2,579억원, 2024년까지 3,419억원[40]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41]

[한국철도공사 인력운용 현황]

2016년	⇨	2017년~2022년	⇨	현 재
6,088명		총 1,258명 증원 (정규직전환 608, 신규개통 517, 안전강화 533, 효율화 △400)		7,346명

자료: 한국철도공사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정부 위탁사업임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관련 비용 및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논의하여 2025년 예산 협의 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42]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그간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40) 2021년 400억원, 2022년 672억원, 2023년 752억원, 2024년(예상) 840억원, 통상임금 소송금 755억원

41) (정부 인건비 심의결과) 2021년 6,200만원 → 2024년 6,585만원(평균 6,382만원)
(공사 평균임금) 2021년 6,911만원 → 2024년 7,170만원(평균 7,010만원)

4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 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 국가철도공단 · 철도공사 ·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11. 주택공급 통계 오류: 재발방지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필요

가. 개 요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주택 공급동향을 진단하고, 기존 통계에 대한 품질개선 및 신규통계 발굴을 위한 시스템(HIS)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6억 4,000만원 중 54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고 1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43)]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3억 4,200만원 중 100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고 2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3년도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510	5,510	130	-	5,640	5,493	-	147	5,559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0,342	10,342	-	-	10,342	10,071	-	271	8,131

나. 검토의견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통계 오류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공급통계는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정책 결정의 주요근거로 활용되므로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국토교통부는 2024.4.30.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되어 2023년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발표하였음.

---

43) 일반회계-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4263-502)(주택토지실)

44) 일반회계-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4244-516)(건축정책관)

국토교통부는 2023.1월(2023.2월말 공표) 데이터부터 2023.12월(2024.1월말 공표)까지 1년간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과소집계되었으며, 2023년 주택 인허가 38.9 → 42.9만호, 착공 20.9 → 24.2만호, 준공 31.6 → 43.6만호로 정정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 주택공급실적 정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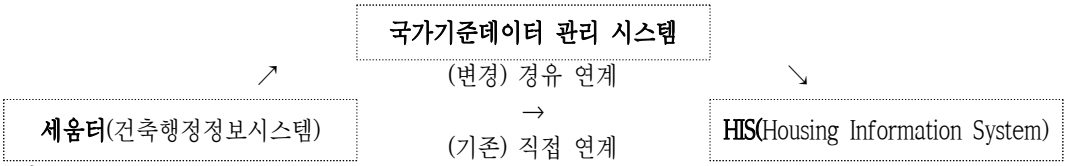
(단위: 호)

인허가		착공		준공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388,891	428,744	209,351	242,188	316,415	436,055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실적 통계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전자정부법」 개정에[45]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었고,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주택공급 DB 연계방식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오류가 발생한 2023년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이 발표되었음.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목표는 착공 대기물량 해소 및 신규 인허가 촉진 등을 통해 장래 주택공급 위축 우려 해소 및 국민 주거안정 강화에 있고, 주택공급실적 정정 후에도 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통계오류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45) 「전자정부법」 제44조의3 제3항 -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2021.6월 개정, 2021.12월 시행)

[주택공급통계 오류를 바탕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

구분	주요내용	통계정정으로 인한 영향
2023.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ㅇ 주택 인허가·착공 위축 등을 감안하여 장래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추진 -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 제고 - 민간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PF 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 정비사업 분쟁완화	ㅇ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목표는 착공 대기물량 해소 및 신규 인허가 촉진 등을 통해 장래 주택공급 위축 우려 해소 및 국민 주거안정 강화 ㅇ 2023년 주택공급실적(정정 이후)은 10년 평균(2013~2022년) 대비 인허가 △24%, 착공은 △54%, 준공은 △10% 부족 * 공급실적(2023년/10년평균, 만호): (인허가) 42.9/56.7, (착공) 24.2/53.0, (준공) 43.6/48.3 ㅇ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필요
2024.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ㅇ 주택공급 규제 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 기반 조성,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 정상화 추진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등) 및 사업추진 요건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등 세제지원 및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공공주택 공급 확대, 준공후 미분양 세 부담 경감	

자료: 국토교통부

현재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통계 오류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공급통계는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정책 결정의 주요근거로 활용되므로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1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인력운용 구조 개선 필요

가. 개 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6억 6,900만원 중 26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46)]

[2023년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2,669	2,669	-	-	2,669	2,612	-	57	2,729

나. 검토의견

인력운용 및 예산부족의 문제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법정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필요인력 점검을 통해 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47)]에 따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46) 일반회계-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1034-307)(주택토지실)

47)「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관련한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임.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경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분쟁재정의 경우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면서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차례 연장을 허용하고 있음.[48)]

[2010~2023년 하자분쟁 사건 법정 처리기간 준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
		계	기간초과	기간내처리	
2010	69	39	-	39	100.0
2011	327	231	30	201	87.0
2012	836	761	38	723	95.0
2013	1,954	1,103	298	805	73.0
2014	1,676	1,997	363	1,634	81.8
2015	4,246	3,986	1,468	2,518	63.2
2016	3,880	4,073	2,149	1,924	47.2
2017	4,089	3,358	1,046	2,312	68.9
2018	3,818	4,663	2,793	1,870	40.1
2019	4,290	3,954	3,011	943	23.8
2020	4,245	4,173	2,741	1,432	34.3
2021	7,686	4,717	2,776	1,941	41.1
2022	3,027	4,370	3,738	632	14.5
2023	3,313	4,559	3,837	722	15.8

주) 법정처리기간 준수율 : 기간내 처리건수 / 전체 처리건수
자료: 국토교통부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48)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2010년 이후 법정 처리기간 준수 현황을 보면, 2019년 100% 준수율을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4,559건의 처리건수 중 법정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722건에 불과해 15.8% 준수율을 보이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신청연도에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사건 수가 2021년 1,982건에서 2022년 4,95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3,615건이 발생하고 있는상황임.

이렇게 법정 처리건수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매년 해당연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접수건수에 비해 이를 처리할 인력의 운용이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음.

[2010~2023년 연도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현황]

(단위: 건)

구분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재심의		각하	취하	
년도	신청 건수	전년 이월	판정서 교부	조정 회부	조정 성립	조정 결렬	조정 불응	재정서 교부	조정 회부	이의 기각	이의 인용			
2010	69	-	-	-	13	0	18	-	-	-	-	-	8	30
2011	327	30	46	-	80	25	48	-	-	-	-	17	15	126
2012	836	126	686	-	34	19	16	-	-	-	-	1	5	201
2013	1,954	201	640	-	58	280	1	-	-	-	-	8	116	1,052
2014	1,676	1,052	1,056	-	72	676	8	-	-	-	-	21	164	733
2015	4,246	733	2,628	-	538	408	24	-	-	-	-	33	355	993
2016	3,880	993	1,928	-	533	33	1	-	-	1	-	148	1,429	802
2017	4,089	802	1,511	82	179	59	-	-	-	80	7	43	1,397	1,667
2018	3,818	1,667	1,777	733	831	10	-	-	-	16	2	126	1,168	1,566
2019	4,290	1,566	2,217	6	106	30	-	-	-	10	8	137	1,440	1,908
2020	4,245	1,908	2,627	2	93	31	-	-	-	6	7	215	1,192	1,982
2021	7,686	1,982	2,784	6	148	50	-	-	-	32	3	81	1,613	4,957
2022	3,027	4,957	1,591	1	76	34	-	3	-	26	11	1,197	1,431	3,615
2023	**3,313**	**3,615**	**2,084**	**10**	**42**	**50**	**-**	**15**	**1**	**24**	**2**	**836**	**1,495**	**2,381**
누계	**43,456**	**-**	**21,575**	**840**	**2,803**	**1,705**	**116**	**18**	**1**	**195**	**40**	**2,863**	**11,828**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민간위탁[49]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력운용 현황을 보면, 2023년 정규직 정원은 20명, 현원은 22명 운용 중에 있고, 정규직 인건비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출연금[50]으로 운용되고 있음.

[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규직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정 규 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0	1	-	3	4	5	7
현원	22	-	1	2	6	5	8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2023년 계약직 운용 현황을 보면 정원은 20명이나 현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상근직은 8급 4명은 모두 결원, 9급은 7명 중 6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위촉직은 1급 8명으로 정원 대비 5명이 초과되었고, 3급 5명은 모두 결원인 상황임.

[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계약직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상근직			위 촉 직				
		7급	8급	9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인턴포함)
정원	20	1	4	7	3	-	5	-	-
현원	12	1	-	1	8	-	-	-	2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 사건의 조사 업무와 법률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51]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2]에 따라 전문자격을 소지한 변호사, 엔지니어(기술사, 건축사) 등 위촉직 1급만 사용이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자격을 소지한 계약직(위촉 1급)의 보수는 1인 평균 연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함.

또한, 상근직(무기계약직, 7~9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사관의 업

49)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일반회계-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 기관운영출연금 171억 3,900만원, 사업출연금 439억 3,600만원

51)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계약직 사용 제한).

5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무를 수행할 수 없고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접수 등의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인력 사용에 제한을 받으며, 계약직 인건비 예산의 한도와 직급별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약직 인원이 한정되어 8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운용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이 2018년 이후 50%를 계속 하회하고, 2023년에는 15.8%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법정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필요인력 점검을 통해 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3.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조성 사업: 투자실적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조성’ 사업은 정부와 민관자금을 매칭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이하 ‘PIS’라 함)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3]

[2023년도 PIS 펀드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29,852	29,852	4,130	42	34,024	29,575	2,734	1,715	47,643
PIS 펀드조성	5,000	5,000	-	-	5,000	5,000	-	-	20,000

나. 검토의견

PIS 펀드의 투자실적이 2024.7월 기준으로 1조 857억원으로 당초 PIS 펀드 투자목표 1.5조원에 비해 투자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며,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하위펀드의 경우 매입약정 기한이 2024.9월까지이므로 1단계 PIS 펀드 조성자금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해외건설 수주부진 및 단순도급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수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관자금을 매칭한 PIS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 및 수주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은 5년차 출자금 50억원임.

정부는 PIS 펀드 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54] 라 함)에 2019년 250억원, 2020년 500억원 등 2023년까지 총 1,500억원을 출자하였으

53) 일반회계-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건설정책국)

54) 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며, 정부 출자금과 공공기관 투자로 총 6,000억원, 민간자금으로 9,000억원, 총 1조 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2024년 7월 현재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6,000억원을 조성하였고, 블라인드펀드[55] 1.1조원, 프로젝트펀드[56] 0.3조원, 총 1.4조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한 상태임.[57]

[PIS 펀드 개요]



자료: KIND

[PIS 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분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P	I	S	제안형	신한 PIS	EIP PIS	신한 PIS 2
모태펀드(A)		900	2,226	1,198	600	228	327	194
민간(B)		1,200	2,274	1,202	1,400	531	739	776
투자약정(A+B)		2,100	4,500	2,400	2,000	759	1,066	970
투자승인 금액	9,974 ('23.12.31.)	1,688	3,009	589	1,893	759	1,066	970
	10,857 ('24.7.31.)	1,688	3,559	894	1,893	761	1,061	1,001

자료: KIND

55) 투자대상을 정해 놓고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기존 펀드 방식과 달리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우량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

56)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확정된 후 펀드를 조성

57) PIS 1단계 펀드 1.5조원 중 블라인드펀드로 1.1조원 조성을 '20.9월 완료하였고, 4천억원은 프로젝트펀드로 조성 추진

PIS 펀드의 투자실적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9,974억원이 투자승인되었고, 2024.6.월 기준으로도 1조 857억원으로 투자약정액 1.4조원 규모에 비해 투자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며,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하위펀드의 경우 매입약정 기한이 2024.9월까지이므로 펀드 조성자금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 당초계획에서는 1단계 1.5조원, 2단계 1.5조원 규모로 총 3조원의 PIS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및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투자 저조를 고려하여 2단계 펀드 규모를 1.1조원으로 조정하였음.

[PIS 1단계 펀드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펀드명	사업명	펀드 투자
블라인드 펀드	플랜트	미국 텍사스 Frio태양광발전사업	451
		사우디가스파이프라인운송사업	606
		말레이시아 에너지산업단지	400
		미국조지아 LNG 액화 플랜트 사업	231
		소계	**1,688**
	인프라	스웨덴 육상풍력 발전사업	352
		멕시코 해저 파이프라인 사업	377
		호주항암치료센터	580
		말레이시아 에너지 산업단지	900
		프랑스 광통신 인프라 구축	800
		프랑스 에너지 전환 인프라	550
		소계	**3,559**
	스마트시티	미국아마존 물류센터 포트폴리오	204
		말레이시아 에너지산업단지	300
		베트남 하이퐁 물류센터 개발사업	90
		베트남 하이퐁 물류센터 개발사업(PF투자)	300
		소계	**894**
	제안형	핀란드 배전망 지분인수	540
		미국 버지니아 유료도로 지분인수	441
		사우디원유 파이프라인 지분인수	571
		호주 송배전 포트폴리오	341
		소계	**1,893**
프로젝트 펀드	신한PIS	영국 Botley ESS 투자	761
	EIPPIS	미국 Concho 태양광 발전	1,061
	신한PIS2	영국 Widow Hill BESS 투자	1,001
소계		**21건**	**10,857**

자료: KIND

14.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등

가. 개 요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42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8]

[2023년도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월세 한시 지원	44,200	44,200	-	-	44,200	44,200	-	-	79,351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2023년도 예산 442억원 전액을 교부하였으므로,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2022.8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024.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59]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58) 일반회계-청년월세 한시 지원(1034-311)(주택토지실)

59)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하며,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서울 30%, 그 외 50%)으로 추진됨.

국토교통부는 2023년 예산 442억원을 지자체에 모두 교부하였는데, 지자체에서는 예산현액 1,103억 8,600만원 중 728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63억 5,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2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지자체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지자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잔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서울	4,120	4,120	4,120	4,120	9,977	14,097	8,310	4,120	518	3,000	2,787	12.6
부산	7,688	7,688	7,688	7,688	4,133	11,821	10,114	7,688	6,575	1,113	594	85.5
대구	3,560	3,560	3,560	3,560	2,974	6,534	6,219	3,560	3,263	295	21	91.7
인천	1,720	1,720	1,720	1,720	4,766	6,486	3,035	1,720	264	1,450	2,001	15.3
광주	3,350	3,350	3,350	3,350	1,880	5,230	4,199	3,350	2,322	1,028	3	69.3
대전	3,665	3,665	3,665	3,665	1,846	5,511	4,657	3,665	2,813	852	2	76.8
울산	530	530	530	530	1,572	2,102	1,477	530	443	86	539	83.6
세종	110	110	110	110	506	616	257	110	-	110	250	-
경기	5,964	5,964	5,964	5,964	20,701	26,665	10,307	5,964	669	5,290	11,068	11.2
강원	1,520	1,520	1,520	1,520	1,842	3,362	2,688	1,520	1,364	149	525	89.7
충북	1,526	1,526	1,526	1,526	1,386	2,912	2,566	1,526	1,525	-	345	99.9
충남	2,219	2,219	2,219	2,219	2,839	5,058	3,312	2,219	1,059	1,151	594	47.7
전북	1,530	1,530	1,530	1,530	2,178	3,708	3,279	1,530	1,426	99	330	93.2
전남	1,327	1,327	1,327	1,327	1,694	3,021	1,824	1,327	727	597	600	54.8
경북	3,390	3,390	3,390	3,390	2,868	6,258	5,399	3,390	3,047	342	517	89.9
경남	1,620	1,620	1,620	1,620	4,178	5,798	4,157	1,620	869	750	891	53.6
제주	361	361	361	361	846	1,207	1,023	361	313	42	141	86.7
합계	**44,200**	**44,200**	**44,200**	**44,200**	**66,186**	**110,386**	**72,823**	**44,200**	**27,197**	**16,354**	**21,208**	**61.5**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60]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며, 지자체의 전년도 이월금 662억원이 남아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2023년도 예산 442억원 전액을 교부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 출>

15. 도로 건설 사업: 사업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도로 건설 사업은 크게 고속도로 건설(1532), 일반국도 건설(1632),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1636),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1831)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고속도로 건설 단위사업은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현액 1조 6,388억 4,600만원 중 1조 4,029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6%)되고 2,359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61)]

일반국도 건설 단위사업은 10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현액 1조 5,909억 3,000만원 중 1조 3,230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2%)되고, 1,354억 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24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62)]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단위사업은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현액 4,139억 6,700만원 중 3,500억원이 집행(집행률 84.5%)되고, 365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3억 9,500원이 불용되었음.[63)]

[2023년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속도로건설	1,638,846	1,638,846	-	-	1,638,846	1,402,940	-	235,906
일반국도건설	1,478,673	1,478,673	193,085	△80,828	1,590,930	1,323,097	135,402	132,431
대체우회도로건설	335,339	335,339	43,069	35,559	413,967	350,000	36,573	27,395

자료: 국토교통부

61)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고속도로건설(1532-)(도로국)

62)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일반국도건설(1632-)(도로국)

63)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1636-)(도로국)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일반회계전입금의 7,000억원 결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고속도로 건설·일반국도 건설 및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202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불용규모가 2,359억원(예산현액 대비 14.4%)이 발생되었고, 일반국도 건설 사업은 1,324억원(8.3%),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274억원(6.6%)이 발생하여 3개 단위사업에서 발생한 전체 불용 규모는 총 3,957억원 수준임.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속도로	2019	1,407,514	1,407,514	-	-	1,432,514	1,432,514	-	-
	2020	1,828,891	1,635,891	-	-	1,635,891	1,635,891	-	-
	2021	2,016,083	2,016,083	-	-	2,016,083	2,016,083	-	-
	2022	2,369,484	2,307,804	-	△12,619	2,295,185	2,295,185	-	-
	2023	**1,638,846**	**1,638,846**	**-**	-	**1,638,846**	**1,402,940**	**-**	**235,906**
일반국도	2019	1,289,978	1,396,978	53,423	△63,756	1,393,516	1,375,105	17,599	812
	2020	1,360,003	1,233,503	17,599	△7,163	1,243,939	1,221,042	21,142	1,755
	2021	1,424,102	1,424,102	21,142	△83,528	1,361,716	1,298,605	54,256	8,854
	2022	1,489,171	1,376,571	54,259	△39,109	1,391,721	1,194,040	193,091	4,590
	2023	**1,478,673**	**1,478,673**	**193,085**	**△80,828**	**1,590,930**	**1,323,097**	**135,402**	**132,431**
대체우회도로	2019	311,699	341,699	9,643	△19,457	331,885	328,697	3,182	6
	2020	356,328	348,828	3,182	△9,029	342,981	342,785	190	7
	2021	374,214	374,214	190	△25,625	348,779	340,492	8,284	4
	2022	375,093	364,293	8,284	22,865	392,442	349,371	43,070	1
	2023	**335,339**	**335,339**	**43,069**	35,559	**413,967**	**350,000**	**36,573**	**27,395**
2023년 합계		**3,452,858**	**3,452,858**	**236,154**	**△45,269**	**3,643,743**	**3,076,037**	**171,975**	**395,73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단위사업별로 최근 5년간의 결산 내역을 보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최근 5년 중 불용액이 처음 발생하였고, 일반국도 건설 사업은 전년 대비 29배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역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및 민원발생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불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의 불용액 추이를 볼 때 예년에 비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2023년 세수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 규모 감소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9~2023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계정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예산 대비 수납(B-A)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2019	8,815,919	8,733,171	8,765,042	8,765,042	31,871
		2020	7,430,829	8,236,874	8,256,794	8,256,794	19,920
		2021	5,949,521	5,949,521	5,949,521	5,949,521	-
		2022	3,885,118	3,683,575	3,683,575	3,683,575	-
		2023	**2,218,130**	**2,218,130**	**1,518,130**	**1,518,130**	**△700,000**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7,000억원이 적게 수납되어 고속도로, 일반도로 건설 사업 등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불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전용을 통한 집행이 관행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이·전용의 횟수 및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이·전용 규모를 살펴보면, 이·전용 증액과 감액 규모를 합한 변경 규모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1조 850억원, 일반국도 건설 사업이 6,071억원,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811억원 수준이며, 국회 확정예산 대비 변경 비율은 각각 66.2, 41.1%, 24.2%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19~2023년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이·전용 증액(B)	이·전용 감액(C)	변경규모 (B+C)	변경비율 (B+C/A)
		본예산	추경(A)				
고속도로	2019	1,407,514	1,407,514	165,556	△165,556	331,112	23.5
	2020	1,828,891	1,635,891	238,000	△238,000	476,000	29.1
	2021	2,016,083	2,016,083	178,893	△178,893	357,786	17.7
	2022	2,369,484	2,307,804	85,044	△97,663	182,707	7.9
	2023	**1,638,846**	**1,638,846**	**542,515**	**△542,515**	**1,085,030**	**66.2**
일반국도	2019	1,289,978	1,396,978	75,036	△138,792	213,828	15.3
	2020	1,360,003	1,233,503	84,325	△91,488	175,813	14.3
	2021	1,424,102	1,424,102	109,599	△193,127	302,726	21.3
	2022	1,489,171	1,376,571	165,896	△205,005	370,901	26.9
	2023	**1,478,673**	**1,478,673**	**263,148**	**△343,976**	**607,124**	**41.1**
국도대체	2019	311,699	341,699	20,577	△40,034	60,611	17.7
	2020	356,328	348,828	13,959	△22,988	36,947	10.6
	2021	374,214	374,214	10,781	△36,406	47,187	12.6
	2022	375,093	364,293	45,053	△22,188	67,241	18.5
	2023	**335,339**	**335,339**	**58,309**	**△22,750**	**81,059**	**24.2**

주) 변경규모는 이·전용 증액과 감액을 상계하지 않고 합한 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0개 이상의 도로건설 세부사업을 관리하여야 하고, 각 사업별로 사업추진 여건이 달라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 간 이·전용, 세목조정, 내역변경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국회 확정예산 대비 변경 규모 및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전용을 통한 집행이 관행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이·전용의 횟수 및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세 출>

16. 철도 건설 사업: 세수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철도 건설 사업은 크게 고속철도 건설(2531), 일반철도 건설(2631), 광역철도 건설(2833, 2933), 도시철도 건설(3031, 3032)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일반철도 건설 사업은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현액 2조 2,229억 2,100만원의 중 1조 7,009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76.5%)되고, 5,220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64]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현액 6,435억 8,300만원의 중 4,103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63.8%)되고, 140억 5,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91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65]

[2023년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철도 건설	2,222,921	2,222,921	-	-	2,222,921	1,700,904	-	522,017
도시철도 건설	643,583	643,583	-	-	643,583	410,371	14,054	219,158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첫째,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결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인건비, 자재비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64)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일반철도건설(2631-)(철도국)

65)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도시철도건설(3031-, 3032-)(도로국)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일반철도 건설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규모가 2019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22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규모도 2023년 23.5%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불용규모가 2023년 2,192억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0배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일반철도, 도시철도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철도	2019	2,621,200	2,621,200	-	△1,000	2,620,200	2,620,200	-	-
	2020	3,007,358	2,348,258	-	-	2,348,258	2,347,258	-	1,000
	2021	3,269,581	3,269,581	-	△49,337	3,220,244	3,180,640	-	39,604
	2022	3,000,940	2,802,320	-	-	2,802,320	2,726,009	-	76,311
	2023	**2,222,921**	**2,222,921**	-	-	**2,222,921**	**1,700,904**	-	**522,017**
도시철도	2019	191,900	191,900	-	-	191,900	161,100	30,800	-
	2020	344,810	328,513	30,800	-	359,313	334,183	21,130	4,000
	2021	523,999	523,999	21,130	-	545,129	526,288	-	18,841
	2022	723,243	723,243	-	-	723,243	703,123	-	20,120
	2023	**643,583**	**643,583**	**-**	**-**	**643,583**	**410,371**	**14,054**	**219,15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재조사,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불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 세수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감소한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9~2023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 교통체계관리계정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계정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예산 대비 수납 (B-A)
철도	4,586,205	4,586,205	3,991,523	3,991,523	△594,682
교통체계관리	966,652	966,652	762,780	762,780	△203,87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 수납액 감소 규모는 5,947억원 수준이며, 교통체계관리계정은 2,039억원 규모의 전입금이 결손된 상황임.

세수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인건비, 자재비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반철도 건설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으로 출연금의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철도 건설 사업의 2023년도 실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26개 세부사업 중 실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이 14개, 30% 미만인 사업은 21개에 달하고 있고, 2023년 출연금을 모두 교부한 사업 중에서도 실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이 7개로 나타나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교부한 출연금 1조 7,009억원 중 공단 집행액은 4,213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연금은 모두 공단에 유보된 상태임.

국가철도공단은 일반철도건설 사업 이월액 중 상당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본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민원발생, 설계 지연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집행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일반철도건설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구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집행액 (C)		
포항~동해 전철화	2021	112,400	112,400	112,400	63	112,463	71,229	112,400	71,166	41,234	63.3
	2022	292,400	292,400	292,400	41,234	333,634	92,795	292,400	51,561	240,839	17.6
	2023	15,456	15,456	15,456	240,839	256,295	126,265	15,456	-	130,030	-
강릉~제진 철도건설	2021	60,000	60,000	60,000	-	60,000	21,921	60,000	21,921	38,079	36.5
	2022	115,800	115,800	115,800	38,079	153,879	21,408	115,800	-	132,471	-
	2023	282,822	209,288	209,288	132,471	341,759	136,744	209,288	4,273	205,015	1.5
대구 산업선	2021	16,400	16,400	16,400	1,000	17,400	-	16,400	-	17,400	-
	2022	43,800	43,800	43,800	17,400	61,200	2,542	43,800	-	58,658	-
	2023	157,600	116,624	116,624	58,658	175,282	4,582	116,624	-	170,700	-
석문산단 인입철도	2021	7,800	7,800	7,800	3,000	10,800	-	7,800	-	10,800	-
	2022	17,800	17,800	17,800	10,800	28,600	6,472	17,800	-	22,128	-
	2023	21,000	21,000	21,000	22,128	43,128	2,301	21,000	-	40,827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구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집행액 (C)		
남부내륙 철도	2021	40,600	40,600	40,600	1,000	41,600	-	40,600	-	41,600	-
	2022	54,100	54,100	54,100	41,600	95,700	59,028	54,100	17,428	36,672	32.2
	2023	178,600	132,164	132,164	36,672	168,836	38,975	132,164	2,303	129,861	1.3
충북선 고속화	2021	15,400	15,400	15,400	1,000	16,400	-	15,400	-	16,400	-
	2022	28,000	28,000	28,000	16,400	44,400	-	28,000	-	44,400	-
	2023	18,677	-	-	44,400	44,400	-	-	-	44,400	-

자료: 국가철도공단

국가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임에도 대구 산업선, 석문산단 인입철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최근 3년간 당해연도 교부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철도 건설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으로 출연금의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일반철도 건설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35,400	35,400	35,400	35,400	73,995	109,395	95,927	35,400	21,932	13,468	-	62.0
포항~삼척 철도건설	23,156	23,156	23,156	23,156	163,430	186,586	77,797	23,156	-	108,789	-	-
원주~제천 복선전철	12,411	12,411	1,458	1,458	15,363	16,821	15,975	1,458	612	846	-	4.9
포승~평택 철도건설	25,000	25,000	25,000	25,000	19,123	44,123	26,182	25,000	7,059	17,941	-	28.2
서해선 복선전철	120,275	120,275	120,275	120,275	12,808	133,083	133,059	120,275	120,251	24	-	100.0
이천~문경 철도건설	148,707	148,707	110,043	110,043	200,516	310,559	174,703	110,043	-	135,856	-	-
장항선개량 2단계	112,061	112,061	82,925	82,925	65,676	148,601	86,391	82,925	20,716	62,210	-	18.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동두천~연천 전철화	52,753	52,753	52,753	52,753	83	52,836	47,351	52,753	47,268	5,485	-	89.6
도담~영천 복선전철	257,216	257,216	190,340	190,340	126,607	316,947	275,136	190,340	148,529	41,811	-	57.7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108,264	108,264	80,115	80,115	83,557	163,672	68,459	80,115	-	95,213	-	-
진주~광양 전철화	5,798	5,798	-	-	11,886	11,886	6,480	-	-	-	5,406	-
포항~동해 전철화	15,456	15,456	15,456	15,456	240,839	256,295	126,265	15,456	-	130,030	-	-
강릉~제진 철도건설	282,822	282,822	209,288	209,288	132,471	341,759	136,744	209,288	4,273	205,015	-	1.5
춘천~속초 철도건설	227,489	227,489	168,342	168,342	98,288	266,630	44,268	168,342	-	222,362	-	-
월곶~판교 복선전철	92,000	92,000	68,080	68,080	236,426	304,506	242,947	68,080	6,521	61,559	-	7.1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4,400	4,400	4,400	4,400	29,380	33,780	2,860	4,400	-	30,920	-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18,821	118,821	87,928	87,928	158,458	246,386	197,529	87,928	39,071	48,857	-	32.9
여주~원주 복선전철	79,515	79,515	58,841	58,841	35,759	94,600	38,533	58,841	2,774	56,067	-	3.5
수서~광주 복선전철	8,400	8,400	8,400	8,400	32,000	40,400	5,322	8,400	-	35,078	-	-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157,600	157,600	116,624	116,624	58,658	175,282	4,582	116,624	-	170,700	-	-
석문산단 인입철도	21,000	21,000	21,000	21,000	22,128	43,128	2,301	21,000	-	40,827	-	-
남부내륙철도	178,600	178,600	132,164	132,164	36,672	168,836	38,975	132,164	2,303	129,861	-	1.3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08,400	108,400	80,216	80,216	85,380	165,596	10,433	80,216	-	155,163	-	-
문경~김천 철도건설	5,000	5,000	5,000	5,000	-	5,000	-	5,000	-	5,000	-	-
충북선 고속화	18,677	18,677	-	-	44,400	44,400	-	-	-	44,400	-	-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3,700	3,700	3,700	3,700	-	3,700	-	3,700	-	3,700	-	-

자료: 국가철도공단

17.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직통열차 등 요금 현실화를 통한 국비 보조예산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637억 9,800만원 중 3,632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66]

[2023년도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민자철도운영지원	744,316	744,316	27	-	744,343	741,284	1,028	2,031	872,355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363,798	363,798	-	-	363,798	363,298	500	-	411,664

나. 검토의견

첫째, 2015년 MRG 방식에서 SCS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정부보조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2040년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정부보조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지급되는 정부보조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천국제공항철도는 1994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재정부담 경감 및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996년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자 유치사업으로 결정된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의 제1호 민자사업임.

인천국제공항철도는 2001.3월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체결(MRG[67] 90%)하였고, 2007.3월 1단계 개통 후 2009년 최대주주가 변경(한국철도공사, MRG 58%)되었고, 2010년 12월 2단계 개통, 2015년 최대주주가 KB공항철도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

66)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철도국)

67)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로 변경(SCS[68] 방식)되었음.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MRG, SCS 비교]

구분	MRG	SCS
보장방식	최소운임수입 보장 2009~2020 : 65% 2021~2030 : 58% 2031~2040 : 46%	사업운영비용 보전 (투자비+운영비)
보조금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 지원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 지원
수익보장	사업수익률 14.07%(세후경상)	사업수익률 3.19(경상) [고정 : 변동 = 50 : 50]
재정소요	15조원	8조원
운임조정	사업시행자 신고	주무관청 승인
출자자구성	한국철도공사 88.8% 8,267억 국토해양부 9.9% 922억 현대해상화재보험 1.3% 121억	KB사모투자신탁 66% 1,778억원 국토교통부 34% 922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총 건설비용은 총 4조 310억원이 투입되었고, 정부가 8,296억원, 민간자본이 3조 2,014억원 투입되었음.

최초 MRG 방식의 실시협약 체결 후 MRG 방식이 유지된 2015.6월까지 정부보조액은 총 1조 4,565억원이며, SCS 방식으로 변경된 후 정부보조액은 2023년까지 2조 7,349억원으로 총 4조 1,914억원이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지급되었고, 이는 철도 건설 시 투입된 민간투자자본 3조 2,014억원을 이미 2021년부터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15년 MRG 방식에서 SCS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정부보조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2040년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정부보조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지급되는 정부보조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실시협약에 따라 2024~2040년까지 정부가 공항철도(주)에 지급해야 하는 민간투자자금 원리금 상환액만 2조 9,704억원이며, 지급비용의 총 금액은 2040년까지의 인천공항 이용객 등 탑승객 수, 운임변동 및 이에 따른 수요변화, 혼잡도 증가에 따른 차량증차, 표준운영비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약에서 정해진 비용 외에 추가로 지급될 비용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68) 표준비용보전(SCS. Standard Cost Support) 방식은 투자 원금과 이자 상환액, 운영비 등 표준운영비를 정해 놓고 실제 운임수입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인천국제공항철도 MRG, SCS 방식의 연도별 정부 지원 현황]

(단위: 억원)

총 투자비		합계 (A+B)	MRG								
정부	민간		소계 (A)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8,296	32,014	40,310	14,565	1,040	1,645	1,188	1,322	2,750	2,959	2,872	789
			SCS								
			소계 (B)	2015.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7,349	1,509	2,771	3,000	3,035	2,995	3,412	3,260	3,869	3,49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SCS 방식에서의 정부보조액은 사업수입에서 표준운영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사업수입을 구성하는 운임수입, 부속사업수입 등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정부보조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인천국제공항철도 연도별 SCS 수령액 세부산출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 사업수입(A)	407	869	917	1,114	1,141	608	692	780	1,406	7,934
- 운임수입	351	734	766	965	981	485	573	628	1,265	6,748
- 부속사업수입	52	113	120	130	142	111	104	128	129	1,029
- 이자수입	1	4	6	3	3	1	1	2	1	22
- 기타수입	3	18	25	16	15	11	14	22	11	135
2. 표준운영비(B)	1,916	3,640	3,917	4,149	4,136	4,020	3,952	4,649	4,904	35,283
- 운영비	542	1,084	1,425	1,641	1,697	1,721	1,703	2,260	2,455	14,528
-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758	1,460	1,460	1460	1,458	1,459	1,459	1,459	1,459	12,432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수익금	616	1,096	1,032	1,048	981	840	790	930	990	8,323
수령액 (C=B-A)	**1,509**	**2,771**	**3,000**	**3,035**	**2,995**	**3,412**	**3,260**	**3,869**	**3,498**	**27,349**

자료: 공항철도(주)

둘째,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외국인 이용객 비율은 76.9%에 이르고 있고, 직통열차 요금은 해외 공항철도 대비(일본 2분의 1, 영국 4분의 1 수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쟁 교통수단인 공항리무진, 택시 등의 운임비용보다 저렴하므로, 직통열차 운임을 현실화하여 정부 지원금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일반열차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수도권통합환승구간 운임은 2016년 1,250원으로 인상 후 2023년 수도권 정책기관(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의 운임조정(+150원) 합의 결과를 준수하여 150원 인상하여 현재 1,400원이며, 독립구간

기본운임은 2011년 900원에서 2023년에 150원 인상하여 현재 1,050원임.

국토교통부는 독립구간 운임인상 수준에 대하여 수도권통합환승 참여(2010.12.) 후 소비자물가상승률(25.2%) 적용 시 220원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수도권통합환승 운임인상 수준(+150원)과 동일한 인상금액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함.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 현황]

(단위: 원)

운임체계		수도권통합환승구간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독립운임구간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T2역)
	기본운임	1,400원 (10km)	1,050원 (10km)
	추가운임	100원 / 5km	130원 / 1km (T1~T2역 : 600원)
구간운임		2,000원	3,050원
전체운임		5,050원	

주) 2024.5월 기준
자료: 공항철도(주)

다음으로 직통열차의 경우 서울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까지 요금이 11,000원인데, 공항이용 경쟁 교통수단의 운임 수준[69] 및 소비자 의향조사를 통한 시장점유율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실시협약상 운임은 17,800원이나 최대 매출이 산출된 운임(11,000원)으로 할인율(47%→38%)을 조정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운임 현황]

구분	어른(특별할인)	교통약자 등[1)]	제휴할인[2)]
서울 ~ 인천공항2터미널	11,000원	8,000원	최대 6,500원

주 1) 어린이,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2) B2B(여행사 및 항공사 할인 등), B2C 할인
자료: 공항철도(주)

그러나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2024년 4월까지 외국인 이용객 비율은 76.9%에 이르고 있으며, 직통열차 요금은 해외 공항철도 대비(일본 2분의 1, 영국 4분의 1 정도) 매우 낮은 운임이며, 경쟁 교통수단인 공항리

69)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쟁 교통수단 운임 비교(2023.1.기준)]

구 분	직통열차	공항리무진	택시	자가용
소요시간	56.0분	73.0분	57.0분	57.0분
운 임	9,500원	17,000원	64,280원	39,797원
직통열차 대비	-	+7,500원	+54,780원	+30.297원

무진, 택시 등의 운임비용보다 크게 저렴한 운임 수준으로 판단됨.

[해외 공항철도 운임수준 비교]

(단위: km, $, 원)

구분		한국	일본	홍콩	영국	캐나다
		직통열차	SKYLINER	MTR	히드로	UP Express
운행거리(km)		63.0	64.1	35.2	57.0	23.0
달러	운임($)	8.11	16.76	14.07	31.39	9.04
	동일거리(63km) 환산($)	8.11	16.47	25.18	34.69	24.76
	(거리단가, $/km)	(0.13)	(0.26)	(0.40)	(0.55)	(0.39)
원화	운임(원)	11,000	22,700	19,000	42,600	12,500
	동일거리(63km) 환산(원)	11,000	22,300	34,000	47,000	34,000
	(거리단가, 원/km)	(175)	(354)	(539)	(747)	(543)

자료: 공항철도(주)

즉, 협약상 요금인 17,800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설정하고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임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통열차 운임을 현실화하여 정부 지원금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공항철도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요금인상은 공항철도 운영상황, 수요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임.

[공항철도 직통열차 외국인 이용객 현황]

(단위: 명/일)

구분	2022(코로나19)		2023		2024 (1~4월)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수송수요	1,446	1,237	1,751	4,882	1,670	5,560
수송비율	53.9%	46.1%	26.4%	73.6%	23.1%	76.9%

자료: 공항철도(주)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 출>

18. 신공항 건설 사업: 추가적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신공항 건설 프로그램은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 항공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흑산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71억원 중 7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10.7%)되고, 3억 4,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9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70]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174억 8,000만원 중 2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1.5%)되고 172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71]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 139억 2,000만원 중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0.1%)되고 57억 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1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72]

[2023년도 신공항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흑산도 소형공항	7,100	7,100	-	-	7,100	758	344	5,998	6,590
제주 제2공항	17,286	17,286	194	-	17,480	258	-	17,222	17,286
새만금 신공항	13,500	13,500	420	-	13,920	19	5,708	8,193	32,651

70)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항공정책실)

71)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제주 제2공항 건설(3538-304)(항공정책실)

72)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새만금 신공항 건설(3538-305)(항공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2023.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서 후속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에 재착수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그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준공일정도 당초 2023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신공항 건설 사업은 「공항시설법」[73]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74]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업규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이후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한 후 「공항시설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고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체를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계약한 후 착공 및 준공됨.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흑산도 지역의 접근성 향상,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총사업비 1,833억원 수준의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2023.1)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으로 예산의 84.8%가 불용되었음.

[2023년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흑산도 소형공항	7,100	7,100	-	-	7,100	758	344	5,998	6,590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2024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73)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과]

연월	주요내용	비고
2015.12	기본계획 고시	
2016.10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 및 유찰	
2016.11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보류” 결정	2017.7, 2018.2 보완서 제출
2017.4	턴키 수의계약 방식 추진	
2017.8	기본설계 완료	
2018.10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	
2020.10	신안군 대체부지 대안 제시	
2023.1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2023.2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착수	
2024.1	실시설계 재착수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2015년 12월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이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가 지연·중단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고, 2023.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서 후속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에 재착수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그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준공일정도 당초 2023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민간 의견대립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24.6월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후속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2023년도 예산 174억 8,000만원 중 2억 5,800만원 집행(1.5%)에 그치고 예산의 대부분인 172억 2,200만원이 불용된 상황임.

[2023년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제주 제2공항	17,286	17,286	194	-	17,480	258	-	17,222	17,286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기본설계 착수가 지연되면서 기본조사설계비 등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

명하고 있음. 2024.6월 현재 기본계획 고시 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과]

연월	주요내용	비고
2015.11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성산읍 일원 입지 발표	
2016.12.	예비타당성 조사	
2018.6.~2019.6.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19.6.~2023.3.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2023.3.~7.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주도 의견수렴	
2024.6. 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중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민간 의견대립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이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2021.7.) 후 2023.3까지 보완하여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었음.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4.6월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후속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입찰 절차가 중단되었다가 2024.4월 재개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황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이 2024~2025년까지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139억 2,000만원의 예산 중 집행액이 1,900만원에 불과하고, 57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81억 9,3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2023년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새만금 신공항	13,500	13,500	420	-	13,920	19	5,708	8,193	32,651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시행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절차가 연기(2023.8)되면서 후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며,「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결과 사업추진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을 재개(2024.4)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과]

연월	주요내용	비고
2022.06.30.	기본계획 고시	
2023.03.09.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 입찰 공고	
2023.08.17.	기본설계 도서 등 입찰서 제출	
2023.08.21.	입찰절차 연기 조치	
2024.04.08.	설계·시공 일괄입찰 절차 재개	

자료: 국토교통부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 입찰 공고는 2023.3월 시행되었으나「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입찰 절차가 중단되었다가 2024.4월 재개되어 그만큼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황이며「새만금 기본계획(MP)」변경이 2024~2025년까지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에서「새만금 기본계획」변경(2021.2) 이후「공항시설법」에 따라 진행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내용을「새만금 기본계획」재수립 시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함.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세 출>

1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246억 6,200만원 중 2,238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75)]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24,560	224,560	102	-	224,662	223,874	76	712	232,427
저상버스 도입보조	189,519	189,519	-	-	189,519	189,514	-	5	167,495
BF인증사업	450	450	29	-	479	248	29	202	445
교통약자장거리 이동지원	500	500	-	-	500	-	-	500	350

내역사업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여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895억 1,900만원 중 1,895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BF인증’** 사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76)]을 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억 7,900만원

75)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교통물류실)

중 2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51.8%)되고, 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광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고정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고속·시외버스 운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2022년 대비 92.3%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지자체 실집행률은 58.5%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실집행률이 2020년 88.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버스 제작사 공급망을 확대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저상버스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77]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에 따라 2022년 대비 92.3%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지자체 실집행 내역을 보면, 실집행률은 58.5%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의 실집행률이 2020년 88.3%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2019~2023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6,698	57,701	66,030	98,565	189,519

자료: 국토교통부

7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77)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출고지연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 것을 감안하여 버스 제작사 공급망을 확대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19~2023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37,550	46,698	46,688	46,688	3,994	50,682	41,182	5,049	457	88.2
2020	57,701	57,701	55,440	55,440	5,049	60,489	50,949	4,382	109	88.3
2021	66,030	66,030	66,027	66,027	4,382	70,409	53,139	12,448	440	80.5
2022	98,565	98,565	98,539	98,539	12,448	111,394	78,380	18,874	1,285	79.5
2023	189,519	189,519	189,514	189,514	18,874	208,388	110,821	75,301	5,579	58.5

자료: 국토교통부

[2019~2023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서울	26,054	26,054	26,054	26,054	3,506	29,560	12,546	13,201	307	48.2
부산	11,529	11,529	11,529	11,529	2,845	14,374	5,651	5,878	-	49.0
대구	5,704	5,704	5,704	5,704	-	5,704	3,542	1,978	-	62.1
인천	8,129	8,129	8,129	8,129	964	9,093	4,370	782	3,435	53.8
광주	3,910	3,910	3,910	3,910	230	4,140	3,648	262	-	93.3
대전	2,573	2,573	2,573	2,573	1,242	3,815	1,380	1,193	31	53.6
울산	1,104	1,104	1,104	1,104	1,012	2,116	46	1,058	-	4.2
세종	3,128	3,128	3,128	3,128	322	3,450	966	2,162	-	30.9
경기	98,880	98,880	98,880	98,880	6,184	105,064	58,732	40,284	1,609	59.4
강원	2,283	2,283	2,283	2,283	230	2,513	1,590	641	52	69.6
충북	3,634	3,634	3,634	3,634	92	3,726	3,174	460	-	87.3
충남	4,278	4,278	4,278	4,278	368	4,646	3,404	874	-	79.6
전북	3,542	3,542	3,542	3,542	867	4,409	3,312	230	138	93.5
전남	2,852	2,852	2,852	2,852	276	3,128	1,196	1,653	4	41.9
경북	1,794	1,794	1,794	1,794	-	1,794	1,518	276	-	84.6
경남	8,234	8,234	8,234	8,234	-	8,234	5,333	2,898	4	64.8
제주	1,886	1,886	1,886	1,886	736	2,622	414	1,472	-	22.0

자료: 국토교통부

둘째, BF인증 공모에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BF인증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BF인증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추진됨.[78]

2023년도 예산은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시설개선 보조비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시설개선 보조비는 1억원만 집행되고 2억원은 불용되었으며, 집행된 1억원도 지자체에서 전액 이월하였음.

[2023년 BF인증 사업 예산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편성 근거
BF인증 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및 BF 인증 지원 ■ 150×시범사업 연구용역비 1식 ■ 300(시설개선 보조)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4차례에 걸쳐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1개 지자체만 공모하여 나머지 사업비는 불용되었고, 공모에 선정된 충북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터미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계획 수립 등 단계적으로 절차가 수행됨에 따라 2024년에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023년 BF인증 사업 공모내역]

구분	공모기간	공모결과	주요 공모 내용
1차	3.29.~4.28.	1개 지자체 공모	BF 인증등급 취득을 위한 여객터미널 시설개선(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 등을 위한 설계·시공·사업관리 지원
2차	6.14.~7.14.	공모자 없음	
3차	8.28.~9.29.	공모자 없음	
4차	10.25.~11.24.	공모자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BF인증 공모에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BF인증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셋째, 2024.2월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시행[79]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광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나 고정장치 등을 고속·시외버스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하려는 것이나 2023년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고, 최근 3년간 10차례의 공모에도 운송사업자의 공모 참여가 전무한 상황임.

[2021~2023년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공모내역]

연도	공모기간	공모결과	공모 내용
2021	7.12.~8.6.	공모자 없음	시외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가능 차량 도입 지원(개조비) (해당 시외버스가 승하차하는 터미널 및 정류장, 휴게소 시설개선 포함)
	8.9~8.23.	공모자 없음	
	10.5~10.19.	공모자 없음	
2022	3.31.~4.22.	공모자 없음	
	6.17.~7.8.	공모자 없음	
	9.30.~10.21.	공모자 없음	
2023	3.29.~4.28.	공모자 없음	
	6.12.~7.7.	공모자 없음	
	8.28.~9.29.	공모자 없음	
	10.25.~11.24.	공모자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2023.8월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2024.2월 시행)되었으므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전세버스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20.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부담금의 법정 활용비율 폐지 또는 개정 필요

가. 개 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매수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99억 6,900만원 중 1,597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억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80]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발제한구역 관리	159,912	159,912	57	-	159,969	159,762	176	30	163,381

나. 검토의견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만을 규정할 뿐 부담금의 배분비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통령령에서 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정함으로써 법률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하며, 주민지원사업, 토지등의 매수 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부담

8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개발제한구역관리(5551-301)(국토도시실)

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음.

부담금의 용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는 주민지원, 토지등의 매수, 조사연구 등에 각각 45:45:10 비율로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법률에서는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만을 규정할 뿐 부담금의 배분비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대통령령에서 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정함으로써 법률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둘째, 시행령의 사용용도별 배분비율은 2009.8월 조문 신설 당시부터 주민지원 45%, 토지등 매수 45%, 조사연구 등 10%로 규정하여 2024.6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후 실제 집행비율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가 법률의 효과를 제한하는 하위법령으로 무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의 예산액 및 집행액의 활용비율을 보면, 2019년에는 주민지원 58.2%, 토지등 매수 37.3%, 조사연구 등 4.5%의 비율로 편성 및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55.0% : 46.0% : 4.3%의 비율로 편성 및 집행되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임.

[2019~202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활용비율		
	주민지원	토지등 매수	조사연구 등	합계	주민지원	토지등 매수	조사연구 등
2019	85,926	55,000	6,715	147,641	58.2	37.3	4.5
2020	88,141	55,000	7,590	150,731	58.5	36.5	5.0
2021	95,067	59,400	6,890	161,357	58.9	36.8	4.3
2022	92,251	62,200	6,890	161,341	57.2	38.6	4.3
2023	88,022	65,000	6,890	159,912	55.0	40.6	4.3
연도	집행액				활용비율		
	주민지원	토지등 매수	조사연구 등	합계	주민지원	토지등 매수	조사연구 등
2019	85,926	55,000	6,675	147,601	58.2	37.3	4.5
2020	87,591	55,000	6,283	148,874	58.8	36.9	4.2
2021	95,067	59,400	6,654	161,121	59.0	36.9	4.1
2022	92,251	62,200	6,635	161,086	57.3	38.6	4.1
2023	88,022	65,000	6,683	159,705	55.1	40.7	4.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 단서[81]에 따라 예산편성금액, 예산집행실적, 자금배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 가능하며, 향후에도 주민지원사업 예산규모는 계속사업의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토지매수사업 예산규모는 확대하는 등 배분비율 격차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배분비율대로 사용하고, 예산편성금액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10%p 이상의 차이를 일부라고 보기에도 어려움.

또한, 배분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사용하기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나 조정에 관한 내부지침, 고시 등의 행정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배분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행령의 배분비율은 2009.8월 조문 신설 당시부터 45:45:10으로 2024.6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후 실제 집행비율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지 출>

21.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 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조성 및 공사의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3,839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2)]

[2023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383,900	-	383,900	383,900	-	-	700,000

나. 검토의견

첫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7월말 기준으로도 3조 7,804억원 발생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당기순손실 1,126억원 발생으로 적자 전환되었고,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3조 8,598억원이 발생하였음. 2023년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16.9%로 전년대비 81.5%p 증가하는 등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

82)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301)(주택토지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체 보증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실적	644,334	2,361,129	658,911	2,346,981	789,292	2,550,479	460,348	1,710,884
보증잔액	1,282,294	5,366,164	1,409,461	5,962,429	1,520,771	6,183,161	1,552,162	6,294,698
보증사고	4,720	8,171	8,354	15,693	28,642	76,542	23,046	54,964
대위변제	3,480	6,036	5,642	10,581	21,044	49,229	16,380	37,804
채권회수실적	1,838	4,171	1,877	2,804	3,308	6,286	3,470	5,765

주) 회수 건수: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 회수 건이라도 1건으로 집계. 단, 해당년도에 1개 구상채권에 회수 이력이 여러 차례 있더라도 1건으로 집계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현황을 보면 2021년 8,171억원이었던 보증사고 금액이 202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7조 6,54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7월 현재 5조 4,964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도 2021년 6,036억원에서 2023년 4조 9,229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의 상당부분은 전세사기 증가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실적	232,150	515,508	237,797	554,510	314,456	712,676	176,002	410,018
보증잔액	393,162	850,481	456,999	1,047,641	537,775	1,237,635	558,835	1,279,505
보증사고	2,799	5,790	5,443	11,726	19,350	43,347	14,250	30,818
대위변제	2,476	5,041	4,296	9,241	16,040	35,544	11,124	24,177
채권회수실적	1,284	2,114	1,459	2,179	2,799	5,088	2,777	4,406

주) 회수 건수: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 회수 건이라도 1건으로 집계. 단, 해당년도에 1개 구상채권에 회수 이력이 여러 차례 있더라도 1건으로 집계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보증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1.)으로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보증배수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2023.6. 개정), 70배에서 90배로(2024.1. 개정) 상향조정하였음.[83]

83) 2024.5.현재 자본금: 8조 4,151억원 - 자본금에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납입자본은 8조 7,759억원

공사의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금 3,839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출자하였고, 2024년 2월 7,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였으며, 3월에는 4조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84]하였음.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현황을 보면, 1999년 이후 현금출자 3조 3,230억원, 현물출자 4조원으로 총 7조 3,230억원이 출자되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현금 출자액	현물 출자	
		유형	수량
1999	5,000	-	-
2001	9,470	-	-
2003	3,321	-	-
2018	700	-	-
2021	3,900	-	-
2023	3,839	-	-
2024.2	7,000	-	-
2024.3	-	한국도로공사 주식	40,000주)(359,647,546주)
합계	**33,230**	**-**	**40,000**

주)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 금액 시가(11,122원) 기준 4조원 / 액면가(10,000원) 기준 3조 5,965억원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잔액 급증에도 2024.7월 현재 보증배수는 53.1배로 법정 보증배수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보증배수가 유지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보증잔액(A)	2,506,168	2,715,070	3,108,522	3,593,971	3,700,240	3,607,713
자기자본(B)	55,003	57,281	63,243	66,114	68,201	67,996
보증배수(B/A)	45.6	47.4	49.2	54.4	54.3	53.1
법정 보증배수	50	50	60	60	70	90

자료: 국토교통부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되고 있고, 현물출자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2년 1조 581억원이었던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7월말 기준으로도 3조 7,804억원 발생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4)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 금액 시가(11,122원) 기준 4조원 / 액면가(10,000원) 기준 3조 5,965억원

둘째,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결산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적받았음에도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2023년 당초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3,839억원을 집행하였음.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급감이 발생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실시하였고, 이는 2023년 예산안 확정시점(2022.12월)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로 「국가재정법」상 자체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85)]

대위변제 급증으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출자금 집행은 공사의 보증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나, 2022년 대위변제 금액은 1조 581억원으로 2021년 대비 75.3% 증가하고 있었으며, 2021년도 결산 심사에서 동일한 사유로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2023년 공사의 보증여력 악화로 인한 출자소요는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체 보증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실적	644,334	2,361,129	658,911	2,346,981	789,292	2,550,479	264,930	967,582
보증잔액	1,282,294	5,366,164	1,409,461	5,962,429	1,520,771	6,183,161	1,554,993	6,311,933
보증사고	4,720	8,171	8,354	15,693	28,642	76,542	14,088	35,096
대위변제	3,480	6,036	5,642	10,581	21,044	49,229	25,735	19,967
채권회수실적	1,838	4,171	1,877	2,804	3,308	6,286	1,875	2,747

주) 회수 건수: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 회수 건이라도 1건으로 집계. 단, 해당년도에 1개 구상채권에 회수 이력이 여러 차례 있더라도 1건으로 집계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8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동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3년에 동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 이차보전 지원 사업: 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방식으로 적정규모 검토 필요

가. 개 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민간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1조 94억 7,800만원 중 9,297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1%)되고, 797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86)]

[2023년도 이차보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이차보전 지원	765,578	1,009,478	-	1,009,478	929,745	-	79,733	1,395,141

나. 검토의견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회수되지 않는 사업방식임에도 최근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차보전 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직접 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토교통부는 민간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①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직접 융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과 ② 민간이 정부 대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직접 융자방식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의 2023년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계획액은 10조 3,800억 2,700만원이었으나 대출수요 증가로 11조 3,605억 2,7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이 중 11조 3,123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음.

86)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이차보전 지원(1042-401)(주택토지실)

[2023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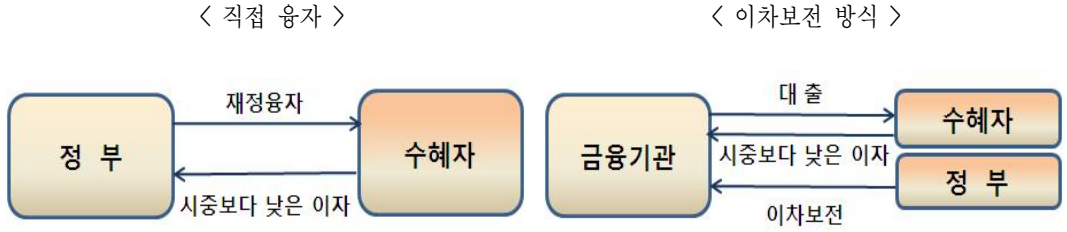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10,380,027	11,360,527	-	11,360,527	11,312,360	-	48,167	12,364,500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재정건전성 도모와 재정지출 확대의 두 가지 효과를 위해 2013년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을 도입하였고,[87] 이차보전 방식은 이차보전 지출만 총지출에 포함되어 외형상 지출 규모는 축소되지만 민간자금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융자 규모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음.

[2023년도 직접 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이차보전 방식은 원금은 은행재원을 활용하고, 이차만 보전해주기 때문에 기금재원을 통한 직접 융자방식에 비해 융자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며, 민간자금 활용을 통한 기금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차보전료는 집행하고 나면 회수가 불가능한 일회성 지출이며, 대출기간이 긴 상품의 대출잔액이 누적될 경우 장기간 이차보전료가 누적되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시중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이차보전 금리차 확대로 기금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존재함.

87)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LH 등 공공분양주택자금에 대해 직접융자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

[이차보전 방식의 장·단점 비교]

구분	주요 내용
장점	- **(융자 확대)** 기금 직접지원 대비 융자 규모 확대 가능 * 이차보전 요율이 1%인 경우, 이차보전 집행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융자지원 가능 - **(기금재정 효율화)** 민간금융 활용을 통한 기금지출 절감*에 따라, 타 주거복지 사업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집행 가능 * 이차보전 상한선 적용 → 실제 금리차보다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보전액이 축소되는 구조
단점	- **(장기재정 악화)** 이차보전료는 회수가 불가한 일회성 지출이며, 대출 기간이 긴 디딤돌대출*이 누적될 경우 집행액 누증 예상 * 만기 30년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만기가 짧은 전세자금과는 달리 회수에 긴 시간이 소요 - **(금리변동 영향)** 정책금리는 시중금리 인상기에도 제한적으로 변동 →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차보전 금리차 확대 시 재정지출 급증 가능성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이차보전 사업의 예산을 살펴 보면, 당초 계획액 기준 2019년 1,903억원에서 2023년 7,656억원으로 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대출수요 증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시켜 왔으며, 변경된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178억원에서 2023년 1조 95억원 수준으로 5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19~2023년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및 대출실적 추이]

구분		최근 5년					예상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e)	2025(e)
예산 (억원)	당초	1,903	2,505	3,388	3,850	7,656	13,951	19,510
	수정	2,178	2,630	3,688	5,013	10,095		
대출 실적	건수(만건)	14.8	9.6	8.5	12.0	26.6	28.7	38.1
	금액(조원)	13.7	9.0	8.6	12.5	35.7	42.4	59.9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같이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의 경우 세수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 결손 규모가 1조 5,19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2023년 주택도시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0	2,424,024	2,424,024	2,424,024	2,424,024	2,424,024	100.0	100.0	-	-
2021	3,593,621	3,593,621	3,593,621	3,593,621	3,593,621	100.0	100.0	-	-
2022	4,278,137	4,278,137	4,278,137	4,278,137	4,278,137	100.0	100.0	-	-
2023	4,558,870	4,558,870	4,558,870	3,039,248	3,039,248	66.7	100.0	-	1,519,622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2022~2023년 주요 대출조건 변경 내역을 보면, 대부분 대출한도 상향, LTV완화, 소득요건 완화 등 차주의 대출조건을 완화해오고 있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4년부터는 저출생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어 대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2~2023년 주요 대출 조건 변경 내역]

연도	구분	변경 내역
2022	디딤돌대출 호당 대출한도 상향	· (일반) 2억원→2.5억원, (신혼가구) 2.2억원→2.7억원, (2자녀이상) 2.6억원→3.1억원
2022	버팀목대출 호당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상향	· (임차보증금 한도) 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 수도권외 2억원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외 3억원, 청년전용 1억원 → 3억원 · (대출한도) 신혼가구 수도권 2억원 / 수도권외 1.6억원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외 2억원, 청년전용 0.7억원 → 2억원
2023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LTV, 대출한도 상향	· (대상주택) 신혼가구, 2자녀 이상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LTV)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최대 70% → 80% · (대출한도) 생애최초 2.5억원 → 3억원, 신혼가구 2.7억원 → 4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 4억원
2023	버팀목대출 2자녀 이상 가구 대출한도 상향	· 수도권 2.2억원 / 수도권외 1.8억원 이하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외 2억원
2023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 8.5천만원 이하 · (버팀목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 7.5천만원 이하

자료: 국토교통부

아울러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 금리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이차보전율 확대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1~2023년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전금리 변동 내역을 보면, 2021년 상반기 이차보전 금리는 1.01% 수준이었으나 시중금리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상반기 2.21%까지 증가하였음.

[2021~2023년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전금리 변동 내역]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상반기[1)]	하반기[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애최초	0.78	0.98	1.57	1.99	2.17	1.79
디딤돌은행재원	0.43	0.82	0.99	1.35	1.69	1.58
버팀목(일반)	0.63	1.04	1.06	1.35	1.81	1.74
버팀목(중기취업)	1.35	1.67	2.09	2.18	2.63	2.52
합계	**1.01**	**1.34**	**1.68**	**1.86**	**2.21**	**1.96**

주 1) 상반기 보전금리 = 이차보전규모(실지급 이차보전료) / 지원규모(반기 대출평잔) * 365 / 181
2) 하반기 보전금리 = 이차보전규모(실지급 이차보전료) / 지원규모(반기 대출평잔) * 365 / 184
3)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버팀목대출에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회수되지 않는 사업방식임에도 최근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세수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 결손,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차보전 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직접 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3.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과도한 수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감) 부적정

가. 개 요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조 5,331억 2,000만원 중 1조 4,617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3%)되고 714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88]

[2023년도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37,000	1,533,120	-	1,533,120	1,461,701	-	71,419	3,612,000

나. 검토의견

첫째, 국회 확정 예산의 50%가 넘는 1조 7,038억원의 대규모의 예산을 변경(감)하고 있어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3조 2,370억원이었으나 2023.12.28. 회계연도 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 7,038억 8,000만원(52.6%)을 감액하여 1조 5,331억 2,0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연말 집행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간 변경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88)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주택토지실)

그러나 국회 확정 예산의 50% 이상을 변경하고, 그 규모도 1조 7,038억원으로 매우 큰 규모의 예산을 변경하고 있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89]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인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4월 기준 매입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대비 4.4% 매입에 불과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매입실적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2023년 달성률은 30.4%, 2024.4월까지는 4.4%에 불과함.

[2023~2024년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매입 현황]

연도	구분(호)	목표	실적	달성률
2023	**합 계**	**35,000**	**10,673**	**30.4%**
	기존매입(준공형)	-	2,340	-
	매입약정(약정형)	-	8,333	-
2024.4	**합 계**	**35,000**	**1,546**	**4.4%**
	기존매입(준공형)	-	504	-
	매입약정(약정형)	-	1,042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매입임대는 건설 경기의 영향을 받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토지와 원자재가 및 금리 인상 등 건설비용 상승[90]으로 민간건설사의 사업참여 감소 및 매입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매입제도 개선(2023.4월)으로 사업자 모집공고 등 사업착수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8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90) 주거지역 지가상승률(’21.1월～’23.7월) : 전국 +6.9%, 수도권 +7.5%, 지방 +5.3%, 서울 +7.9%
원자재가 변동률(’21.1월～’23.7월) : 철근 +54.8%, 형강 +33.1%, 동판 +20.4%, 레미콘 +38.7%

그러나 2024.4월 기준 매입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대비 4.4% 매입에 불과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주거 지원을 위하여 매입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해 보임.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제도 개선 사항]

구분	'22년	'23년 개선사항	'24년 개선사항
매입가격 산정	■ 감정평가 활용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 (약정형) 감정평가 활용 (원가법 검토 병행) ■ (준공형) 원가기반 활용	■ (약정형) 감정평가 활용, 수도권 100호 이상 직접원가법 (원가법 검토 병행) ■ (준공형) 원가기반 활용(재조달원가)
평가업체 선정	■ (약정형) LH 1, 매도자 1 ■ (준공형) LH 2	■ (공통) LH 1, 평가사협회 1	■ (공통) LH 1, 평가사협회 1
매입가격 상한	-	■ 사업방식별 · 지역별 · 유형별 주택매입 상한가격 적용	■ 상한제도 폐지
업체편중 방지	-	■ 업체별 연간 계약건수 제한 (年 계약 최대 2건)	■ 업체별 연간 계약건수 제한 (年 계약 최대 4건)

자료: 국토교통부

24. 공공임대(융자) 사업: 당초 계획에 없던 공공리츠 사업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공공임대(융자)’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2,515억 2,700만원 중 2,465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49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91]

[2023년도 공공임대(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공임대(융자)	117,958	251,527	-	251,527	246,578	-	4,949	818,896

나. 검토의견

공공임대(융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92] 사업을 추진하고, 국회 확정예산에 비해 1,335억 6,900만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로 집행하였으며, 당초 계획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5년・10년・분납임대[93] 및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액은 1,179억 5,8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보다 더 큰 1,335억 6,900만원을 증액한 2,515억 2,7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91)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공공임대(융자)(1333-401)(주택토지실)

92) 공공리츠: 주택도시기금, LH가 공동출자(8%)하여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및 청산

93) 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10년간 분납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사업집행 과정에서 취소·지연 등을 고려하여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수요가 증가하는 동 사업으로 전용(증)하였고, 다양한 주거수요 및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불가피하였으며,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 편성 대비 실적을 보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공공리츠 사업에 1,689억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공공임대(융자) 사업 예산 편성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호)

구분	계획액		집행액 (B)	예산상 목표 (호)	실적 (호)
	당초	수정(A)			
신규	57,037		17,370	2,555	14,035
2년차	30,793		21,713	1,858	965
착공	12,918	-	35,967	613	965
준공	17,210		2,648	1,043	939
공공리츠	-		168,880	-	22,574
합계	**117,958**	**251,527**	**246,578**	**6,069**	**39,478**

주 1) 신규 승인물량에는 공공임대(5/10년), 선택형, 장기전세 관련 물량 포함
2) 동 사업의 비목은 '기타민간융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현액 수정시 공정별 내역(신규, 착·준공 등)이 아닌 총 금액으로 수정 운영 중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23년 예산편성 시 공공리츠는 수요가 없었지만, 예산편성 이후인 2023년 당해년도에 수요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2024.6월 현재 전체 공공리츠의 조기 분양전환 여부와 일정이 확정되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국가재정법 시행령」[94]에서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 중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나, 2023년 예산편성 당시에 조기 분양전환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리츠와 임차인간 조기 분양전환을 논의중에 있었으므로, 다음해에 융자금 집행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9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따라서, 조기 분양전환 여부의 불확실성과 예산 불용의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공공리츠 사업을 2023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 사업을 당초 국회 확정예산에 비해 큰 규모(1,335억 6,900만원)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집행한 것은 국회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98억 2,100만원(1033.8%)이 많은 546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4,700만원(48.5%)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688	13,688	36,793	23,105	4,819	4,819	54,640	49,821	17,847
총수입	13,688	13,688	36,793	23,105	4,819	4,819	54,640	49,821	17,847

문의 : 강세욱 예산결산조사관 sewook@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49억 1,700만원(△20.1%)이 적은 1,785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40억 3,600만원(△52.1%)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03,805	403,597	372,553	△31,044	223,434	223,434	178,517	△44,917	△194,036
총지출	403,805	403,597	372,553	△31,044	223,434	223,434	178,517	△44,917	△194,036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250억 3,400만원으로, 2,749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748억 5,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1억 1,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5,034	225,034	-	225,034	274,972	274,855	-	117
합 계	225,034	225,034	-	225,034	274,972	274,855	-	11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921억 1,100만원으로, 이 중 4,003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4%)되고 878억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20,215	220,215	-	-	-	220,215	220,215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5,034	225,034	46,861	8,935	-	271,895	180,117	87,821	3,958
합 계	445,249	445,249	46,861	8,935	-	492,110	400,332	87,821	3,95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산은 전년 대비 3,072억 2,800만원이 감소한 2조 802억 3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2,890억 1,8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억 1,400만원 증가한 3억 4,600만원으로 유동부채 3억 1,4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075억 4,200만원이 감소한 2조 798억 5,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557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868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7억 8,0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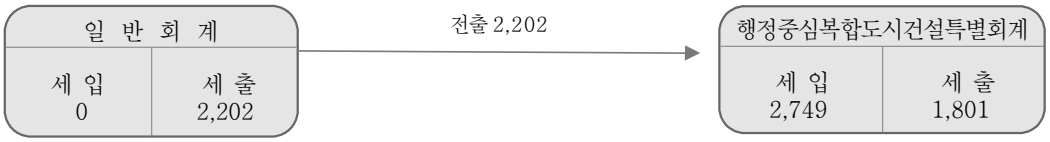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080,203	2,387,431	△307,228	△12.9
		유동자산	1,774	2,953	△1,179	△39.9
		투자자산	0	0	0	0
		일반유형자산	833,242	1,122,260	△289,018	△25.8
		사회기반시설	1,244,725	1,261,976	△17,251	△1.4
		무형자산	187	242	△55	△22.7
		기타비유동자산	275	0	275	0
	부 채		346	32	314	981.3
		유동부채	346	32	314	981.3
		장기차입부채	0	0	0	0
		장기충당부채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자산		2,079,857	2,387,399	△307,542	△12.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55,769	127,140	28,629	22.5
	재정운영순원가		186,830	150,050	36,780	24.5
	재정운영결과		186,830	150,050	36,780	24.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은 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수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모든 세출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바,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기능을 강화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기반 확충,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성장 거점 확립,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도시 구현을 2023년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광역교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국립박물관단지 등 공공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지방행정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립하여 지자체에 이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필수적인 행정 및 교육시설 등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향후 이전될 시설도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무상양여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재정법」의 경상적 경비 이월규정의 입법취지는 사고이월이 곤란한 행정경비 등의 연도말 예산낭비를 막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고이월이 가능한 일반용역비를 동 조항을 근거로 이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기본경비 이월 대상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의 경우 2024년 9월 개교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전액을 불용하고 2024년 예산도 수시배정 미해소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캠퍼스의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조속히 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넷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전 준공을 위해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예산의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추진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비 건립시설의 지자체 무상양여: 지자체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의 검토 필요

가. 개 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세종시 또는 세종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세종시·세종시교육청에 대한 매각 또는 무상양여 관련 규정]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행복도시법」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행복도시법 별표」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5.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7.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8.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9.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119특수구조단
10.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체육시설
11. ~17. (이하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검토의견

첫째, 「행복도시법」은 지자체 출범 초기단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으로 행정시설 등을 우선 건립한 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필수적인 행정 및 교육시설 등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향후 이전될 시설도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무상양여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를 통해 행복청에서 조성 · 취득한 청사 등을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로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은 은하수장례문화센터 등 총 30건으로 총 투입예산은 1조 440억원 수준이며, 세종시교육청으로 무상양여한 국유재산은 참샘유치원 등 총 23건으로 2,193억원 수준임.

[국유재산의 세종시·세종시교육청 무상양여 현황]

(단위: 건, 억원)

무상양여 기관	총 건수	총 투입예산	양여연도
세종특별자치시	30	10,440	2014~20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3	2,193	2013~2019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법 별표」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는 법률 제정 당시에는 시청사, 교육청사 등 10개 시설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 개정을 통해 총 17개 시설을 무상양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2)]

이러한 무상양여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단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으로 행정시설 등을 우선 건립하고, 해당 시설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임.[3)]

그러나 세종시의 2023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재정규모는 2조 5,033억원으로, 특별시·광역시 수준의 지자체에 비하여 규모 자체로는 가장 작은 수준이나 인구 1인당 재정규모는 652만 6,000원으로 8개의 유사단체 중 가장 높음.

또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02%인데 반해, 세종시는 57.21%로, 특별시·광역시 유사단체 8개 중에서는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4)]

---

2)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지식산업센터,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7개가 추가됨.

3) 2010.11.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07.01. 출범하였음.

4) 서울시 76.99%, 부산시 41.66%, 대구시 42.79%, 인천시 50.34%, 광주시 38.69%, 대전시 38.19, 울산시 45.15%

[세종특별자치시 및 특·광역시 유사 지자체 재정여건 비교]

(단위: 백만원, 명, 천원, 2023년 기준)

지자체명	재정규모(A)	인구(B)	1인당 재정규모(A/B)
세종특별자치시	2,503,300	383,591	6,526
서울특별시	52,387,900	9,428,372	5,556
부산광역시	16,690,900	3,317,812	5,031
대구광역시	11,649,800	2,363,691	4,929
인천광역시	15,379,100	2,967,314	5,183
광주광역시	7,468,000	1,431,050	5,219
대전광역시	7,540,200	1,446,072	5,214
울산광역시	5,194,300	1,110,663	4,677

주) 재정규모 =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 기금

자료:「지방재정 365」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https://www.lofin365.go.kr/, 2024.4.18.

이러한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행정 및 교육관련 필수 시설들은 대부분 건립이 완공되어 무상양여가 완료되었음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비 건립시설의 무상양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에 무상양여된 시설들은 주로 행정관리·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되거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로서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향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거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비용분담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자체의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증진, 산업진흥, 교육, 지역소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에 무상양여된 시설들은 주로 청사 등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되거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로서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시설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목 생략)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복지서설 등을 자체예산으로 건립·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현재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과 향후 건립계획인 시설들에 대한 비용분담 논의가 필요해 보임.

[국유재산의 세종시 무상양여 내역]

(단위: 억원)

	국유재산명	재산 종류	매각 또는 양여 기관	총 투입예산	매각/양여 /교환	금액	연도
1	은하수장례문화센터	건물	세종시	500	양여	무상	2014
2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79	양여	무상	2014
		토지	세종시	271	양여	무상	2019
3	한솔동 나성어린이집	건물	세종시	26	양여	무상	2014
4	한솔동 송원어린이집	건물	세종시	25	양여	무상	2014
5	한솔동 119안전센터	건물	세종시	20	양여	무상	2014
		토지	세종시	7	양여	무상	2019
6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270	양여	무상	2014
		토지	세종시	101	양여	무상	2019
7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260	양여	무상	2014
		토지	세종시	120	양여	무상	2019
8	아름동 119안전센터	건물	세종시	25	양여	무상	2014
		토지	세종시	16	양여	무상	2019
9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336	양여	무상	2014
		토지	세종시	141	양여	무상	2019
10	도담동 밀마루복지관	건물	세종시	117	양여	무상	2014
		토지	세종시	33	양여	무상	2019
11	행복아파트(2차)	건물	세종시	468	양여	무상	2015
		토지	세종시	83	양여	무상	2019
12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물	세종시	315	양여	무상	2015
		토지	세종시	69	양여	무상	2019
13	세종시청사 (의회동 포함)	건물	세종시	901	양여	무상	2019
		토지	세종시	250	양여	무상	2019
14	세종소방서	건물	세종시	100	양여	무상	2019
		토지	세종시	35	양여	무상	2019
15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246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55	양여	무상	2020
16	1-1(A)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248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55	양여	무상	2020
17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320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74	양여	무상	2020
18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물	세종시	331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102	양여	무상	2020
19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264	양여	무상	2020

(단위: 억원)

	국유재산명	재산 종류	매각 또는 양여 기관	총 투입예산	매각/양여 /교환	금액	연도
		토지	세종시	48	양여	무상	2020
20	1-1(B)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274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56	양여	무상	2020
21	2-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302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60	양여	무상	2020
22	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309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61	양여	무상	2020
23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316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80	양여	무상	2020
24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물	세종시	328	양여	무상	2020
		토지	세종시	100	양여	무상	2020
25	세종예술의전당(아트센터)	건물	세종시	771	양여	무상	2021
		토지	세종시	244	양여	무상	2023
26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332	양여	무상	2021
27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330	양여	무상	2021
		토지	세종시	63	양여	무상	2023
28	3-2생활권 119안전센터	건물	세종시	25	양여	무상	2021
		토지	세종시	15	양여	무상	2021
29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세종시	343	양여	무상	2023
		토지	세종시	55	양여	무상	2023
30	119특수구조단	건물	세종시	65	양여	무상	2023
합계				**10,44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유재산의 세종시교육청 무상양여 내역]

(단위: 억원)

	국유재산명	재산 종류	매각 또는 양여 기관	총 투입예산	매각/양여 /교환	금액	연도
1	참샘유치원	건물	세종시교육청	25	양여	무상	2013
		토지	세종시교육청	초등학교 토지에 포함	양여	무상	2019
2	참샘초등학교	건물	세종시교육청	138	양여	무상	2013
		토지	세종시교육청	36	양여	무상	2019
3	한솔초등학교 (유치원포함)	건물	세종시교육청	160	양여	무상	2013
		토지	세종시교육청	39	양여	무상	2019
4	한솔중학교	건물	세종시교육청	174	양여	무상	2013
		토지	세종시교육청	39	양여	무상	2019
5	한솔고등학교	건물	세종시교육청	144	양여	무상	2013
		토지	세종시교육청	60	양여	무상	2019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사	건물	세종시교육청	353	양여	무상	2015
		토지	세종시교육청	96	양여	무상	2019

(단위: 억원)

	국유재산명	재산 종류	매각 또는 양여 기관	총 투입예산	매각/양여 /교환	금액	연도
7	도담고등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74	양여	무상	2019
8	아름고등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71	양여	무상	2019
9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137	양여	무상	2019
10	세종국제고등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128	양여	무상	2019
11	어진중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53	양여	무상	2019
12	도담중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48	양여	무상	2019
13	아름중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51	양여	무상	2019
14	연양초등학교(연양유치원)	토지	세종시교육청	49	양여	무상	2019
15	연세초등학교(연세유치원)	토지	세종시교육청	60	양여	무상	2019
16	도담초등학교(도담유치원)	토지	세종시교육청	53	양여	무상	2019
17	양지초등학교(양지유치원)	토지	세종시교육청	51	양여	무상	2019
18	나래초등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47	양여	무상	2019
19	아름초등학교	토지	세종시교육청	48	양여	무상	2019
20	초롱별유치원	토지	세종시교육청	7	양여	무상	2019
21	가온유치원	토지	세종시교육청	19	양여	무상	2019
22	아름유치원	토지	세종시교육청	19	양여	무상	2019
23	나래유치원	토지	세종시교육청	14	양여	무상	2019
합계				**2,193**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2. 기본경비 사업: 경상적 경비 이월규정의 제한적 적용 필요

가. 개 요

‘기본경비’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4억 2,300만원 중 31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0%)되고, 1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3년도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경비	3,368	3,368	30	25	3,423	3,116	140	167	3,450

나. 검토의견

「국가재정법」의 경상적 경비 이월규정의 입법취지는 사고이월이 곤란한 행정경비 등의 연도말 예산낭비를 막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고이월이 가능한 일반용역비를 동 조항을 근거로 이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기본경비 이월 대상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결산 내역을 보면 1억 4,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복청은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자족기능유치지원, 홍보예산 등이 삭감되고, 기본경비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6)]에 따른 기본경비 총액의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기본경비(1011-200, 250)(운영지원과)

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15% 내에서 이월한 것이며, 연례적으로 기본경비를 이월하고 있지 않고 2023년에만 예산부족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3년 기본경비 이월조서]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이 월 액	사 업 내 역	이 월 사 유
140-142-1000-1011 -250-210-01 (764,261,000)	118,000,000	1.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일반수용비	· 기본경비 이월 -기본경비 총액의 15% 이내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소계	118,000,000		
140-142-1000-1011 -250-210-14 (92,988,000)	14,520,000	1. 기본경비(비총액)/운영비/일반용역비(**영상기록물 제작용역**) - **계약기간 : 23.4.10. ~ 24.2.3.** - 계약금액 : 48,400,000원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계 약 자 : ㈜더존크리에이티브	· 기본경비 이월 - 기본경비 총액의 15% 이내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제3항
(7,012,000)	7,000,000	2. 기본경비(비총액)/ 운영비/일반용역비(**미원인행위**)	· 기본경비 이월 - 기본경비 총액의 15% 이내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소계	21,520,000		
합계	139,520,00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본경비 이월조서를 보면, 일반용역비 이월 중 계약기간이 2023.4.10.~2024.2.3. 까지인 '영상기록물 제작용역'의 이월사유를 기본경비 이월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고이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한 일반용역비도 존재함.

「국가재정법」 제48조[7]는 세출예산의 이월 금지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월한도를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음.

유지 · 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동 조항은「국가재정법」제정 이전「예산회계법」개정(1999.2.5.) 시 신설된 조항으로, 일반 행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고이월제도의 적용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도말에 이용과 전용이 빈발할 뿐 아니라 낭비적 폐단이 있어, 이를 이월범위에 포함하여 예산낭비와 문란한 예산집행을 막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임.

따라서 기본경비의 이월은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특히 사고이월이 가능한 일반용역비 등 항목의 이월은 동 조항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음.

1999년「예산회계법」개정 시 신설된 조문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15%의 기본경비를 아무런 제한없이 이월할 수 있다고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해 이월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며,「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출예산은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경상적 경비의 이월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사업: 정부청사 체육관 운영주체의 조속한 확정 필요

가. 개 요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문화관 및 체육관 운영을 통해 세종청사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6억 1,500만원 중 15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도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615	1,615	-	-	1,615	1,552	-	63	1,643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세종시에서 시설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행복청은 공무원전용시설[9)]에 대한 사용료를 세종시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10)]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청사 체육관 민간위탁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체육관의 운영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행복청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 및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주체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1031-511)(시설사업국)

9) 공무원전용주차장(155대) 및 동호회실 일부(5,390㎡, 약 27%)를 공무원 전용으로 운영.

10) 대지면적 16,064㎡(지상 16,064㎡, 지하22,257㎡), 연면적 36,107㎡로 지하층(주차장, 수영장, 헬스장, 필라테스, GX룸, 매점 등), 지상층(풋살장, 다목적홀, 이벤트 마당 등) 운영.

민간위탁사업비(320-02)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에 적용되는 비목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청사 체육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항]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대해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11]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12]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관련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일반규정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직장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정부청사 체육관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으로 보기에는 다소 포괄적임.

또한 정부청사 체육관은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생활체육시설로 보면 「지방자치법」[13]에 따라 세종시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청사 공무원을 위한 직장체육시설 또는 청사부대시설로 보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4]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15]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복합편의시설 체육관 운영비를 2022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체육관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재검토하여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음.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와 운영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상 관리전환(인수) 받아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16]이며, 세

---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목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 재정 ·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 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15) 청사부대시설인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정부청사 체육관 이용인원의 약 67%가 공무원이 아닌 세종시 주민인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를 관리·운영 주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종시 역시 국비지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임시적으로 행복청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청사 체육관 민간위탁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체육관 운영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행복청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 및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운영주체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청사 체육관은 국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체육관 사용인원의 67.1%가 공무원이 아닌 주민이므로, 주민복지시설에 대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종시와 운영비용 분담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체육관 프로그램을 1회라도 이용한 이용자 통계를 보면, 전체 59,044명 중 공무원은 19,441명(32.9%), 공무원이 아닌 주민은 39,603명(67.1%)으로 정부청사 체육관은 직장체육시설의 성격과 함께 주민복지시설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2023년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프로그램별 사용인원 현황]

(단위: 명)

프로그램	공무원	주민	합계
수영	10,054	23,341	33,395
헬스	1,349	1,792	3,141
GX	1,906	3,315	5,221
스피닝	2,049	3,581	5,630
요가	1,886	2,165	4,051
필라테스	2,197	3,905	6,102
체대입시	-	458	458
체육관	-	595	595
풋살장	-	394	394
어린이 골프	-	57	57
합계	19,441	39,603	59,044

주) 프로그램별 연중 1회라도 이용한 이용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현재 정부청사 체육관은 행복청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주민 체육시설을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종시와 운영비용 분담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복합편의시설 체육관 운영비를 2022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16) 행정안전부 청사기획과-2291호 2023.7.27.

4. 세종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신규): 공동캠퍼스 운영방안의 조속한 확정 필요

가. 개 요

‘세종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은 2024년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공익법인의 초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억 6,400만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0%)되었음.[17)]

[2023년도 세종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세종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964	964	-	-	964	-	-	964	646

나. 검토의견

2024년 9월 개교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전액을 불용하고 2024년 예산도 수시배정 미해소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캠퍼스의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조속히 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세종 공동캠퍼스는 국내외 명문대학 유치를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에 위치한 4-2생활권 내 교육연구용지에 설립하는 공동캠퍼스로, 임대형 캠퍼스는 2024년 9월 개교하고, 분양형 캠퍼스는 2026년 개교할 예정임.

동 사업은 2023.11월 설립된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 지원을 위해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공동캠퍼스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음.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1031-515)(도시계획국)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국회는 “정부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차질없이 개교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LH가 조성한 캠퍼스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운영할 계획이었던 세종 공동캠퍼스의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지면서 수시배정이 해소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4년 예산도 2024.6월 현재 수시배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2024년 9월 개교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전액을 불용하고 2024년 예산도 수시배정 미해소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캠퍼스의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국회 부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세종 공동캠퍼스 사업 추진경과]

구분	추진일정	비고
공동캠퍼스 1차 입주대학 선정·승인	2021.2	
공동캠퍼스 2차 입주대학 선정·승인	2023.2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완료	2023.11	
임대형 캠퍼스 준공	2024.8	두 차례 공사중단으로 공정 지연 발생 *(1차) 2023.10.17.~10.26./ (2차) 2024.3.6.~3.17.
공동캠퍼스(임대형) 개교	2024.9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신규): 신속한 사업추진 및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가능성의 지속 점검 필요

가. 개 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3-1생활권(대평동)에 체육활동과 국제경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18]

[2023년도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200	200	-	-	200	-	-	200	100

나. 검토의견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2027년 충청권[19] 세계대학경기대회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건립 과정의 지속적인 점검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동 사업은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20] 개최지원을 위해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착수를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2억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한 사업임.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배정이 해소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2051-405)(시설사업국)

1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20) 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전세계 대학생들의 종합스포츠 대회이며, 2021년 대회명칭이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로 변경되었음.

이후 2024년 5월까지 시행된 타당성재조사 결과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 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이 결정되었고, 2024년 5월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2024년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임.

2027.8.1.~8.12.까지 개최되는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을 위해서는 2027년 6월 이전에 시설이 준공되어야 하므로, 입찰공고 및 평가 등 사업자 선정과정과 건축설계 및 시공 전반에 걸친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계획]

공정	일정	비고
타당성재조사 착수	2023. 2.	타당성재조사 완료(2024.5.)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2024. 5.	
입찰공고	2024. 7.	
적격자 선정	2024. 12.	
본공사 착공	2025.下	
준공	2027.6.	행정절차 단축 및 최소 공사기간 적용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양질의 시설 건립을 위한 적정공기는 부족[21]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세계대학경기 개최를 위해 입찰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최소 공사기간을 적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동 사업은 총사업비 1,676억원(국비 838억원[22])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초 예산의 편성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과정 및 이후 설계·시공 과정에서 면밀한 공정관리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1) 유사 체육시설 건립사례는 33개월 수준이며, 주52시간·5일제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 등으로 공사기간이 증가 추세

22) 국비 50%, 지방비 50%

새만금개발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900만원(0.7%)이 많은 79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300만원(△19.4%)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903	7,903	9,920	2,017	7,938	7,938	7,997	59	△1,923
총수입	7,903	7,903	9,920	2,017	7,938	7,938	7,997	59	△1,923

문의 : 강세욱 예산결산조사관 sewook@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29억 8,900만원(△8.8%)이 적은 1,353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6억 1,400만원(△44.7%)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48,543	248,321	244,994	△3,327	148,369	148,369	135,380	△12,989	△109,614
총지출	248,543	248,321	244,994	△3,327	148,369	148,369	135,380	△12,989	△109,614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9억 3,800만원으로, 116억 8,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9억 9,700만원이 수납(수납률 68.4%)되고 36억 8,6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7,869	7,869	-	7,869	11,627	7,974	-	3,6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9	69	-	69	56	23	-	32
- 지역지원계정	69	69	-	69	56	23	-	32
합 계	7,938	7,938	-	7,938	11,683	7,997	-	3,686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36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353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1%)되고 9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3억 6,3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48,369	148,369	5,276	-	-	153,645	135,380	902	17,363
합 계	148,369	148,369	5,276	-	-	153,645	135,380	902	17,363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새만금개발청 자산은 전년 대비 602억 2,600만원이 증가한 1조 6,014억 1,5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572억 4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이 2,034억 1,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9억 6,800만원 감소한 18억 800만원으로 유동부채 59억 8,2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61억 9,300만원이 증가한 1조 5,996억 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91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6억 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37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9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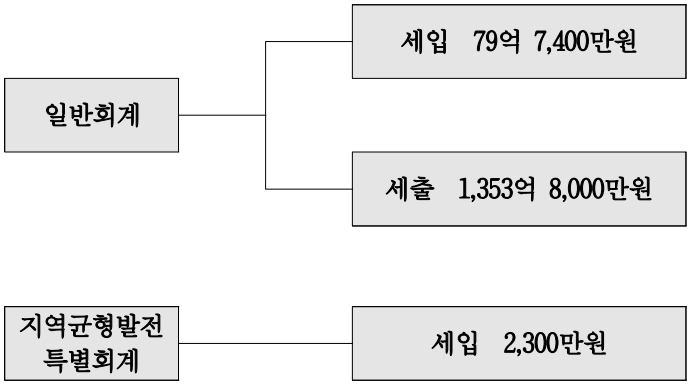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601,415	1,541,189	60,226	3.9
		유동자산	6,378	7,037	△659	△9.4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43,945	401,149	△157,204	△39.2
		사회기반시설	1,329,062	1,125,647	203,415	18.1
		무형자산	21,081	7,015	14,066	200.5
		기타비유동자산	949	341	608	178.3
	부 채		1,808	7,776	△5,968	△76.7
		유동부채	1,652	7,634	△5,982	△78.4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56	142	14	9.9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599,606	1,533,413	66,193	4.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9,102	17,489	31,613	180.8
	재정운영순원가		63,717	719	62,998	8,761.9
	재정운영결과		63,717	719	62,998	8,761.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청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은 핵심 인프라의 적기 구축, 새만금 지역 내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총 20개 세부사업에서 지역간 연결도로 및 상수도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 민간 투자유치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은 2021.12월 재정비가 완료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하위계획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변경함으로써 하위계획인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개항, 스마트 수변도시 입주에 따른 용수수요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부적절한 이월 주의 필요

가. 개 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은 2021년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4억 1,300만원 중 11억 300만원을 집행(집행률 78.1%)되고, 3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음.[2)]

[2023년도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1,034	1,034	379	-	1,413	1,103	310	-	-

나. 검토의견

첫째, 2021.12월 재정비가 완료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하위계획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변경함으로써 하위계획인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2) 일반회계-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5557-376)(개발전략국)

변경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3]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 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의미함.

[광역단위 기반시설의 종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중에서 둘 이상의 용지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용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도로·철도·운하·복합형교통수단·수상교통수단, 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共同溝),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방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遊水池)·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동 사업은 2021.1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맞춰 2015.11월 수립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1차년도 사업은 완료되었고(2022.6.~ 2023.6.), 2차년도 사업은 2023.3월 계약하여 추진 중[4]이었으나, 상위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은 2024년 15억원의 예산으로 1차년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2025년까지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2021.12월 재정비가 완료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른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변경하고 있는 것임.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용역 1차년도 계약(2022.6)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용역 1차년도 준공(2023.6)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용역 2차년도 계약(2023.3)

[새만금 기본계획(MP) 수립·변경 등 사업추진 경과]

주요내용	추진시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201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9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2014.9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2015.11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2020.5~2021.12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2024.~2025.

자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은 그간의 용역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2025년에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그간 검토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과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위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므로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재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022년부터 투입된 예산의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2~2023년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1,500	1,500	-	-	1,500	1,066	379	55
2023	1,034	1,034	379	-	1,413	1,103	310	-
2024	-	-	-	-	310	-	-	-

자료: 새만금개발청

둘째,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예산을 이월하였으나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이 2025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2024년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2025년까지 재이월할 수 없으므로, 집행이 어려운 잔여예산을 무리하게 이월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청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인데, 2023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이월하였음. 그러나 2024년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중으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2025년까지 이월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이월이 금지되므로 불용될 수밖에 없음.[5)]

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새만금청은 2024년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 용역을 일시정지(2023.9) 하였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초안이 2024년 상반기 내 도출될 경우 변경된 지표를 반영하여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4월 현재 「새만금 SOC 적정성 용역」이 진행 중이고(2024.6. 완료예정),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용역의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 수립되는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반영하여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연도 내에 완료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이월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초안이 2024년 상반기 내 도출될 경우’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예비비처럼 운용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이월 사유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신규):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및 2권역(복합개발용지), 3권역(관광레저용지)과 주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6억 4,200만원 중 10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28.3%)되고, 3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3,642	3,642	-	-	3,642	1,030	341	2,271	12,679

나. 검토의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22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면서 2024년 예산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국토교통부, 2023.11~2024.6)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당초 예산의 62.4%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세부적으로는 기본설계비 35억 4,200만원 중 3억 4,100만원을 이월하고, 21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억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함.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7)] 2023년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수립·고시(2023.6),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2023.7)까지 모두 완료한 사

6) 일반회계-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5557-387)(개발전략국)

7)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0.68, AHP 0.608

업임에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가 2024년 6월까지 시행되어 동 사업의 2024년 예산 126억 7,900만원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이므로, 총사업비가 1조 1,287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사업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은 새만금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69억 1,200만원 중 121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9%)되고, 47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도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16,912	16,912	-	-	16,912	12,156	-	4,756	2,000

나. 검토의견

첫째, 새만금 신항만 개항, 스마트 수변도시 입주에 따른 용수수요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옥구배수지(군산시)와 계화배수지(부안군) 건설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계화배수지는 2023.7월 준공되었고, 옥구배수지에서 내역사업 예산대비 39.4%인 47억 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새만금청은 토지보상 협의 결렬 및 토지수용 절차 이행에 따라 착공이 2023년 5월까지 순연되어 연중 공사가 가능한 기간이 축소되었고, 토질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공법 검토 등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예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9)]에 따라 불가피하게 미교부 및 불용하였다고 설명함.

---

8) 일반회계-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5557-323)(개발전략국)

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

[2023년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옥구배수지	12,056	12,056	-	-	12,056	7,300	-	4,756	2,000
계화배수지	4,856	4,856	-	-	4,856	4,856	-	-	-
합 계	16,912	16,912	-	-	16,912	12,156	-	4,756	2,000

자료: 새만금개발청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옥구배수지의 2024년 준공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3년도 소요사업비 12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7억원 이상을 불용하였고, 2024년 예산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소요인 20억원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지연으로 옥구배수지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2023.11.)하였고, 불용액 발생 및 보조사업자인 군산시 실집행실적 부진 등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음.

[2023년 옥구배수지(군산시)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12,056	12,056	7,300	7,300	-	7,300	4,448	7,300	4,448	2,852	-	36.9,

자료: 새만금개발청

최근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차전지 등 입주기업과 관광레저용지 등의 용수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고보조금을 구분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산시(옥구배수지)와 부안군(계화배수지)은 동 사업 외에도 다수의 국고보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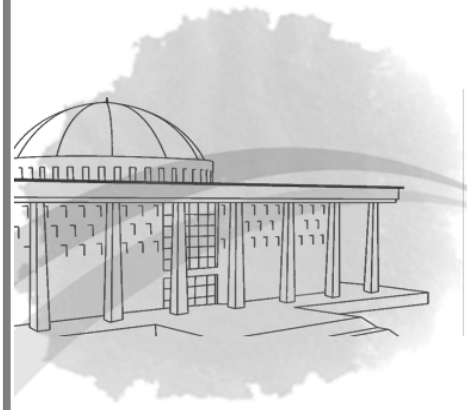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10]는 보조사업자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산시(옥구배수지)와 부안군(계화배수지)은 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한 후 정산 시 보조금 예치 금액과 예치기간, 금리를 통해 이자발생액을 산출하여 정산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11]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군산시는 0.1%(수자원공사와 위수탁계약 시 금리 결정, 국민은행 일반입출금 계좌 금리), 부안군은 0.6%(직접수행, 농협은행 금리 적용) 연이율 적용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7억 2,300만원(△5.6%)이 적은 462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8,900만원(△18.3%)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492	13,492	34,525	21,033	26,776	26,776	12,779	△13,997	△21,746
기 금	34,910	34,910	22,125	△12,785	22,158	22,208	33,482	11,274	11,357
총수입	48,402	48,402	56,650	8,248	48,934	48,984	46,261	△2,723	△10,389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97억 8,600만원(△2.6%)이 적은 1조 4,904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9억 7,600만원(5.9%)이 증가됨.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83,954	683,411	665,631	△17,780	688,886	688,886	702,271	13,385	36,640
기 금	744,918	744,918	741,840	△3,078	841,347	841,347	788,176	△53,171	46,336
총지출	1,428,872	1,428,329	1,407,471	△20,858	1,530,233	1,530,233	1,490,447	△39,786	82,976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67억 7,600만원으로 235억 7,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7억 7,900만원이 수납(수납률 54.2%)되고 107억 9,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6,776	26,776	-	26,776	21,038	11,753	-	9,2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2,538	1,026	-	1,513
- 지역지원계정	-	-	-	-	1,513	-	-	1,513
- 지역자율계정	-	-	-	-	1,026	1,026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	-	-
합 계	26,776	26,776	-	26,776	23,576	12,779	-	10,79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175억 1,500만원으로, 이 중 7,022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36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6억 1,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99,121	599,121	13,452	3,208 △3,208	15,177	627,750	612,665	3,630	11,4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9,765	89,765	-	-	-	89,765	89,606	-	159
- 지역자율계정	14,660	14,660	-	-	-	14,660	14,660	-	-
- 지역지원계정	74,355	74,355	-	-	-	74,355	74,196	-	159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50	750	-	-	-	750	750	-	-
합 계	688,886	688,886	13,452	-	15,177	717,515	702,271	3,630	11,61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9,145억 7,400만원으로 1조 4,645억 1,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4,267억 8,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4%)되고 377억 2,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양성평등기금	737,209	737,209	1,178,781	1,155,444	-	23,336
청소년육성기금	177,315	177,365	285,731	271,345	-	14,386
합 계	914,524	914,574	1,464,512	1,426,789	-	37,72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9,147억 5,300만원으로, 이 중 8,708억 2,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5.2%)되고 1억 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31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양성평등기금	737,209	737,209	179	737,388	690,221	179	52,136
청소년육성기금	177,315	177,365	-	177,365	180,602	-	1,052
합 계	914,524	914,574	179	914,753	870,823	179	53,18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여성가족부 자산은 전년 대비 4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2,904억 9,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64억 3,3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26억 9,400만원 증가 및 무형자산 17억 8,900만원 증가, 기타비유동자산이 1억 6,3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1억 1,900만원 증가한 592억 1,800만원으로 유동부채 19억 4,300만원 증가, 장기차입부채 85억원 증가 및 기타비유동부채 53억 2,300만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59억 6,000만원이 증가한 2,312억 8,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4,010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7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7억 4,4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90,499	249,419	41,080	16.5
		유동자산	113,047	76,614	36,433	47.6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165,217	162,523	2,694	1.7
		무형자산	7,440	5,651	1,789	31.7
		기타비유동자산	4,794	4,631	163	3.5
	부 채		59,218	54,099	5,119	9.5
		유동부채	5,526	3,583	1,943	54.2
		장기차입부채	17,100	8,600	8,500	98.8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36,593	41,916	△5,323	△12.7
	순자산		231,280	195,320	35,960	18.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401,097	1,326,382	74,715	5.6
	재정운영순원가		1,415,721	1,333,723	81,998	6.1
	재정운영결과		655,800	615,056	40,744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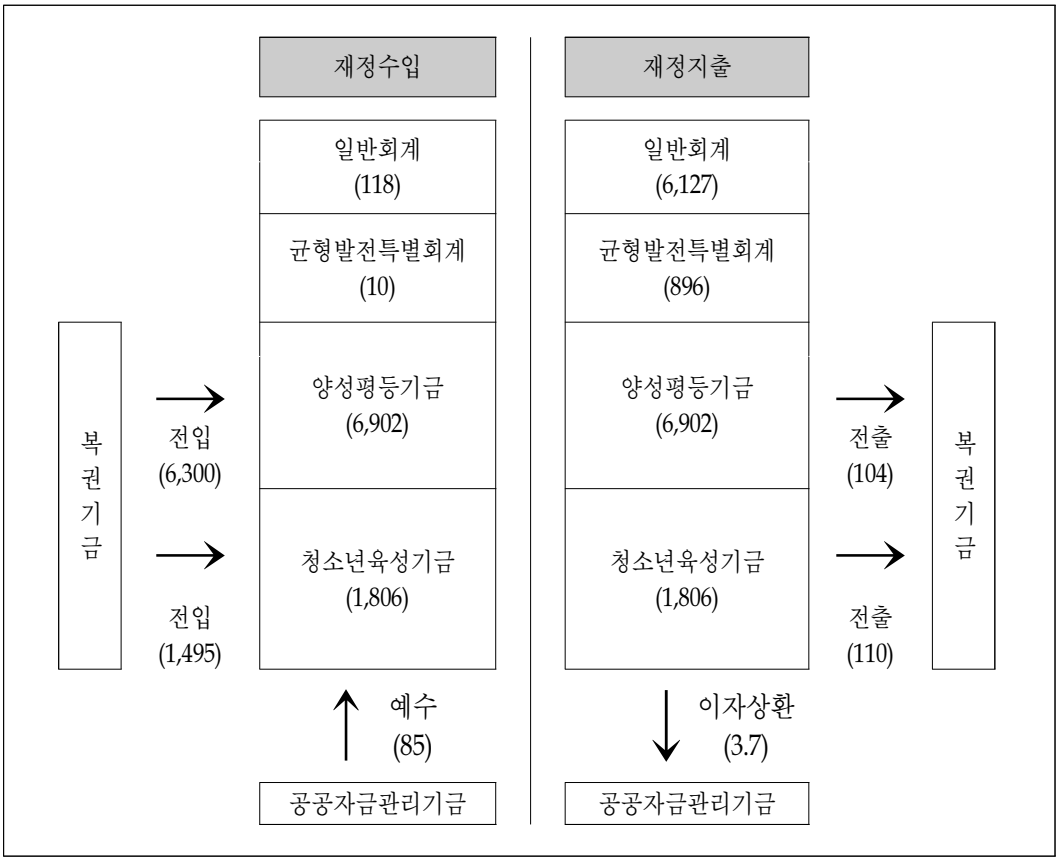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에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었음. 기금 간 거래에서 양성평등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6,300억원을 전입받고 104억원을 반환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495억원을 전입받고 110억원을 반환하였음.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5억원을 예수하고 이자 3억 7,400만원을 상환함.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여성가족부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2023년 업무보고의 목표로 제시하고, 6개의 프로그램, 70개의 세부사업에서 아이돌봄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돌봄수당 사업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수급 불일치 문제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수요저하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수를 과다추계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여성가족부는 예산 편성 시 통계데이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예산을 과다추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채권 회수율이 2023년 말 누계기준 15.36%에 불과하므로,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수입 직접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국고로 반납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사업출연금 잔액을 사업비로 활용하거나 결산잉여금으로 산입한 후 미사용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관한 관련 지침을 만든 후 국고로 반납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 보조사업 정산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190억 4,900만원 중 106억 9,500만원이 수납(수납률 56.1%)되고, 미수납액 83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음.[2)]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24,511	24,511	19,049	10,695	-	8,354	56.1	33,873

나. 검토의견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으로 인해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미수납된 사례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등에 대한 회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2~91.3%로 비교적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23년의 수납률은 56.1%에 그쳤음.

2023년 기준 여성가족부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83억 5,400만원의 상세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으로 인한 금액이 81억 6,200만

2)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원으로 대부분(97.7%)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0,124	10,124	-	10,124	32,819	29,569	292	90.1	3,250	-
2021	10,312	10,312	-	10,312	49,726	40,765	395	82.0	8,961	-
2022	12,425	12,425	-	12,425	32,665	29,820	240.0	91.3	2,845	-
2023	24,511	24,511	-	24,511	19,049	10,695	43.6	56.1	8,354	-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여성가족부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납부자(단체)	발생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개 지방자치단체	2008~2019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5	-	95
	지방자치단체	2020~2021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12	-	1,112
	지방자치단체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955	-	6,955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개 민간단체	2014~2018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0	-	150
	민간단체	2020~2022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9	-	39
소송비용 환수	2인	소송비용 환수	3	-	3
합계					8,354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발생의 주된 사유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 및 추경 미편성 등에 따른 납부지연을 들고 있음. 지자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다음 해 3월까지 정산을 완료한 후 확정된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지자체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추후 지자체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예산과 대칭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데 지자체 추경편성이 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다는 것임.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3)]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22년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2020년 이전에 징수결정하여 상당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납되지 못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에 대한 회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세 출>

2. 돌봄수당 사업: 시간제 돌봄서비스 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집행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돌봄수당’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18억 7,400만원이 전액 집행(100%)되었음.[4)]

[2023년 돌봄수당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아이돌봄지원	354,613	354,613	-	-	354,613	354,509	-	104	467,866
돌봄수당	281,874	281,874	-	-	281,874	281,874	-	-	348,222

나. 검토의견

‘돌봄수당’ 사업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수급 불일치 문제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수요저하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돌봄수당’은 ① 0~2세 영아에 대한 ‘영아종일제 지원’과 ②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에 대한 ‘시간제 지원’으로 구분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유형을 (가)형부터 (라)형까지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차등하고 있음.

4) 일반회계-아이돌봄 지원(2334-341)(청소년가족정책실)

2023년 돌봄수당 예산은 2022년 대비 시간당 기준단가 인상(10,550원→11,080원), 지원시간 확대(연 840→960시간, 일 3.5→4시간)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집행률은 82.3%에 그쳐 전년 대비 13.3%p 하락하였음.

[2019~2023년 돌봄수당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 액	불용 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8	85,472	85,472	85,472	85,472	-	85,472	80,517	-	4,955	94.2
2019	169,133	169,133	169,133	169,133	-	169,133	135,521	-	33,612	80.1
2020	173,342	173,342	177,685	177,685	-	177,685	173,852	-	3,833	97.8
2021	180,158	180,158	184,338	184,338	-	184,338	182,451	-	1,887	99.0
2022	202,031	202,031	204,912	204,912	-	204,912	195,935	-	8,977	95.6
2023	281,874	281,874	281,874	281,874	-	281,874	231,883	-	49,991	82.3

자료: 여성가족부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 기준으로 살펴봐도, 2023년도 예산은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유형(가, 나, 다형)을 대상으로 85,000가구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지만, 실제 지원된 가구 수는 72,457가구에 불과하였음.

[2018~2023년도 돌봄수당 사업 이용가구 수]

(단위 : 가구)

연도	이용가구										
	총계	시간제					영아종일제				
		소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소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18	65,248	60,710	20,872	7,789	6,587	25,462	4,538	1,812	783	561	1,382
2019	70,485	66,783	29,907	13,351	3,381	20,144	3,702	1,953	870	120	759
2020	59,663	56,525	28,650	12,000	2,781	13,094	3,138	1,843	812	67	416
2021	71,789	69,172	34,584	15,179	3,434	15,975	2,617	1,630	666	50	271
2022	78,212	75,452	40,315	17,933	3,804	13,400	2,760	1,779	708	56	217
2023	86,100	84,210	45,394	21,134	4,222	13,460	1,890	1,231	440	36	183

주) 시간제에 시간제기본형, 시간제종합형, 질병감염서비스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돌봄수당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수급 불일치 문제와 영아종일제 수요 부족으로 보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수요는 출 · 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반면, 동 시간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수에 한계가 있어 돌봄서비스 수요과 공급 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임. 참고로 돌봄서비스 대기자 수는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를 합하여 2023년 13,031가구에 달하고 있음.

[2020~2023년도 돌봄수당 사업 대기가구 수]

(단위 : 가구)

연도	대기가구				
	총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20	2,623	539	554	141	1,389
2021	6,842	1,357	1,421	481	3,583
2022	14,807	3,333	3,268	1,112	7,094
2023	13,031	2,881	3,068	996	6,086

주)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가구 수가 2018년 4,538가구에서 2023년 1,890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아동인구 수의 감소,[5] 육아휴직 활성화 등으로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간제 서비스 대비 안전사고 및 돌봄활동의 부담이 커서 수요가 낮은 편이라는 설명임.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수요를 제고하고, 시간제 돌봄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돌봄서비스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 (0~2세 인구수): 2018년도 1,163,234명, 2020년도 960,714명, 2022년도 826,845명, 2023년도 774,949명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

가. 개 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억 9,4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3.9%)되고 2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및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524	524	70	-	594	320	-	274	291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217	217	-	-	217	-	-	217	-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 운영	44	44	-	-	44	-	-	44	-

내역사업인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사업은 인신매매 신고접수, 현장 출동·조사, 응급조치 및 지원시설 입소 등 통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곳을 지역권익보호기관으로 선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1,7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내역사업인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정서 지원,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4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6) 일반회계-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2136-319)(권익증진국)

나. 검토의견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사업과 동 사업과 연계된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업참여자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여성가족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실제 사업수행자의 사업추진 유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권익보호기관은「인신매매방지법」제1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속한 식별·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피해자 확인서 발급, 응급조치 및 지원시설 입소 등의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임.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지자체 경상보조 1억 7,200만원과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전제로 여성가족부에서 법률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으로 구성됨.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은 지역권익보호기관에서 발굴된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접수된 피해자의 심리치료·생활 및 자립 등을 지원함.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역권익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므로,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구조임.

여성가족부는 2022년 7월에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전라남도에서 OO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신청하였으나, 2022년 10월경 참여 의사를 취소하였음.

이후 2023년 2월에 시·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결국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사업 및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사업 모두 전액 불용되었음.

참여부진 사유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참여희망 기관이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성매매·성착취 및 노동력 착취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즉, 두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도 순회 설명회 개최, 시·도 수요조사 공문발송 및 개별 접촉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예산이 불용된 것은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동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목적·사업집행절차 및 사업성과 등 충분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사업수행자의 사업추진 유인 유무를 점검하는 등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2~2023년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추진 경과]

내용	추진일정
○ 광역시·도 순회 설명회 개최	'22. 2월
○ 광역시·도 수요조사 공문 시행 * 여성가족부 전담직원 파견 등 인센티브 제공 포함	'22. 7월 2회, '23. 2월
○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차관 및 광역시·도 부단체장 참석) 상정 협조요청	'23. 2. 13., 3. 15.
○ 여성가족부-광역시·도국장회의 상정 협조요청	'23. 4. 7.
○ 시·도 개별접촉 협의(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	'23. 4 ~ 5월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수행기관 공모	'23. 5. 16 ~ 6. 16.

자료: 여성가족부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과다한 불용 방지 필요

가. 개 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 도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6억원 중 18억원이 집행(집행률 50.0%)되고 18억원이 불용되었음.[7)]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가족역량강화 지원		11,533	11,533	-	-	11,533	9,698	-	1,835	2,76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600	3,600	-	-	3,600	1,800	-	1,800	2,250

나. 검토의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수를 과다추계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여성가족부는 예산 편성 시 통계데이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예산을 과다추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됨.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액 36억원 중 18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18억원은 불용하였음. 지자체는 교부받은 예산액에서 12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70.7%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7) 일반회계-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① 청소년(만9세~24세)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로서, ②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규 모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 이내
예 산	국비 36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액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광역자치단체별 집행내역(2023년)]

(단위: 백만원, %, 개, 명)

구분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지원가구수	지원아동수
서울	121	93	76.9	85	112
부산	88	58	65.9	78	95
대구	40	22	55.0	59	63
인천	106	98	92.5	83	113
광주	77	60	77.9	56	66
대전	40	28	70.0	29	34
울산	41	26	63.4	20	25
경기	446	338	75.8	286	395
강원	78	58	74.4	48	65
충북	96	75	78.1	43	94
충남	131	86	65.6	79	104
전북	92	56	60.9	50	71
전남	125	88	70.4	82	111
경북	128	67	52.3	71	87
경남	132	88	66.7	81	98
제주	59	31	52.5	28	36
계	1,800	1,272	70.7	1,178	1,569

자료: 여성가족부

이는 편성 기준 지원대상과 실제 지원아동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원아동 수 3,000명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원아동수는 1,569명에 그친 것임.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역별 아동수당 대상자를 조회하고 지역유관기관을 통한 자체 발굴 방식의 지자체 수요조사(2022년 4월)를 통해 지원대상을 3,00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이후 2022년 9월 통계청의 협조를 얻어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서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수를 추출하였고, 2024년도 예산안부터는 이 통계를 활용하여 계획인원을 1,500명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8)]

그런데 통계청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2021년부터 구축되어 있고,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구 수에 대한 추출이 가능하였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이 자료를 사용하여 2023년도 사업수요를 추정하였더라면 당초부터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9)]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향후 신규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수요 조사 시 적절한 통계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부모 가구 수 :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단위: 가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구 수	6,188	4,900	3,760	2,969	2,350

자료: 여성가족부

8) 연도별 계획인원: 2022년 3,000명(6개월), 2023년 3,000명(12개월), 2024년 1,500명(12개월)

9) 통계데이터센터 사이트(https://data.kostat.go.kr/sbchome/intro.do)에서 확인 가능함.

5.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금의 국고환수 조치 필요 등

가. 개 요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하여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충족자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3개월 연장가능)간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6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0)]

[2023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지원	24,990	24,990	-	-	24,990	24,990	-	-	24,513
양육비이행 지원사업	3,898	3,898	-	-	3,898	3,898	-	-	3,898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1,601	1,601	-	-	1,601	1,601	-	-	1,601

나. 검토의견

첫째,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2023년 말 누계기준 15.36%에 불과하므로,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위기상황 지속 시 3개월 연장)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 예산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8.16.)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2019년 3억원에서 2023년 16억 100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원 실적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11)]

10) 일반회계-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청소년가족정책실)

[2019~2023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300	300	300	300	-	300	262	-	38	87.3
2020	300	300	300	300	-	300	282	-	18	94.0
2021	300	300	300	300	-	300	261	-	39	87.0
2022	1,601	1,601	1,601	1,601	-	1,601	1,590	-	11	99.3
2023	1,601	1,601	1,601	1,601	-	1,601	1,601	-	-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9~2023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실적]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지원건수	148	148	296	468	588	1,648
지원자녀수	265	245	510	778	953	2,751
지원금액	215	269	246	1,560	1,547	3,837

주) 지원자녀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지원결정된 자녀수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및 체납처분 강제징수 실적을 보면, 최근 7년간 누적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2023년 12월 말 기준 누적 회수율은 여전히 15.36%에 불과함.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2022.8.16., 개정 2022.8.16.>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2. 8. 16.>

[구상권 행사 및 체납처분 강제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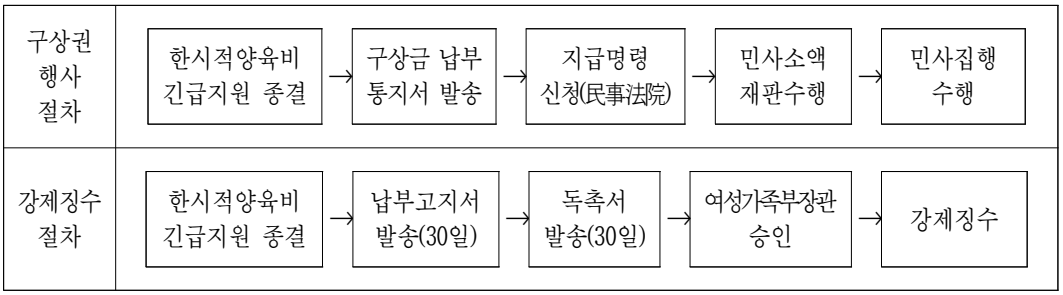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당해 청구금액(A)	95	74	105	122	239	552	772	1,959
당해 회수금액(B)	0	2	1	17	39	92	150	301
누적 회수율(B/A)	-	1.18	1.09	5.05	9.29	12.72	15.36	15.36

주) 체납처분 강제징수는 2021.6.10.이후 지원 결정된 사건의 지원이 종료된 2022.7.부터 시행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하여 한시적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지급된 한시적양육비 등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데, 긴급지원 실적 증가와 함께 구상권 행사 및 강제징수 청구액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회수 실적은 청구금액 증가속도 대비 저조함에 따른 것임.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12]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르면 양육비 국비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청구금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체납된 양육비 청구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시적 양육비 구상권 행사 및 강제징수 절차]



자료: 여성가족부

12)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사후 징수하는 제도

다만, 여성가족부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2020.6.9. 개정)[13] 종전처럼 구상권행사 및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의 소요기간(약 5년) 대비 3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으로 설립(2024.3.26. 개정)[14] 되어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점 등에 따라 회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둘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금을 자체수입에 계상하고 있으나,「국고금 관리법」제7조의 수입 직접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국고로 반납조치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15]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2023년 12월말 기준 누적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금(이하 “회수금”)은 3억 100만원으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0.6.9.) 이후부터 구상권행사 및 강제징수 청구액 증가와 함께 회수금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1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6. 9.>

1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2024.9.27., 개정 2024.3.26.>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③ (생략)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 ⑥ (생략)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6. 9.>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① 2021년까지 회수된 회수금의 경우 결산잉여금으로 산입하여 사업비로 집행하여왔고, ② 2022년 및 2023년의 회수금은 자체수입(기타수익)에 계상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을 중지하고 보관 중임. 2024. 6. 30일 현재 회수금 계좌 잔액은 3억 2,500만원임.

그런데 「국고금 관리법」 제7조[1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한시적양육비를 긴급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 회수된 양육비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양육비지원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일 뿐 양육비 회수금을 직접 자체수입으로 사용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향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하여금 한시적양육비 계정을 별도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회수된 양육비를 국고에 반납 조치하도록 하는 등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기해야 할 것임.

셋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사업출연금 잔액을 여타 사업비로 활용하거나 결산잉여금으로 산입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관한 관련 지침을 만든 후 국고로 반납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127억 6,000만원과 사업출연금(350-02목) 122억 3,000만원 등 총 249억 9,000만원을 출연받았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은 기관 세입으로 계상하되 필요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반면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을 따르고,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시 주무부처의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17]

16)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입 및 지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자체수입	9,987	11,021	8,322	8,926	9,216	10,200	8,927	9,574
	- 수탁사업	6,200	6,102	5,391	5,391	6,882	6,882	7,264	7,216
	- 기타수입	441	516	1,110	1,219	1,200	1,365	387	799
	- 전기이월금	3,346	4,403	1,821	2,316	1,134	1,953	1,276	1,559
	정부출연금	19,071	19,071	20,113	20,113	27,855	27,855	24,990	24,990
총계(수입, 지출)		29,058	30,092	28,435	29,039	37,071	38,055	33,917	34,564
지출	인건비	6,440	6,304	8,459	8,407	8,676	8,676	8,889	8,889
	경상운영비	2,311	2,274	2,105	2,088	6,131	6,025	3,871	3,860
	사업비	20,307	18,912	17,436	16,080	21,829	20,816	20,957	20,609
	예비비	-	-	435	-	435	435	200	200
	기타지출	-	2,602	-	2,464	-	2,103	-	1,006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는 집행잔액을 여타 사업비로 활용하였고, 2022년 및 2023년에는 사업출연금 잔액을 결산잉여금으로 산입하고 있음.

[연도별 사업출연금 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출연금 잔액	140	390	507	248	205	11	1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을 그 동안 결산잉여금에 산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관 중인 이유로 집행지침상 기관운영출연금 집행잔액에 준하여 집행하였다고 함.

---

1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ㅇ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 혁신법’ 에 따라 처리하되, 非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지침상에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은 구분되는 예산과목으로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기관운영출연금 집행잔액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사업출연금은 특정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추진 절차이고, 유사사례로 연구개발 출연금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18]에서도 과제가 종료된 때 연구개발비를 정산 ·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사업출연금 집행잔액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6. 가족센터 건립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교부 필요

가. 개 요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한부모가족·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알맞은 가족교육·상담·자녀돌봄 등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46억 6,000만원이 전액 집행(100%)되었음.[19]

[2023년 가족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가족센터 건립	14,660	14,660	-	-	14,660	14,660	-	-	9,050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기본형 10억원 이하, 확장형 15억원 이하 정액보조)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교부하여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가족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임.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62개소, 2021년 26개소, 2022년 12개소 건립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2021년 신규건립 13개소(3차년도)와 2022년 신규건립 12개소(2차년도) 건립을 지원하였음.[20] 지방자치단체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0년 27.2%, 2021년 42.6%, 2022년 52.3%. 2023년 53.6%로 매년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모두 60% 이하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임.

---

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가족센터 건립(2333-334)(청소년가족정책실)

20) 2020년부터 기본형 10억원 이하, 확장형 15억원 이하를 보조함.

[2020~2023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0	36,545	36,545	37,034	37,034	11,989	49,023	13,370	35,653	-	27.2
2021	45,178	45,178	42,398	42,398	35,653	78,051	33,215	44,704	-	42.6
2022	48,166	48,166	51,857	51,857	44,404	96,261	50,355	43,979	1,927	52.3
2023	14,660	14,660	14,660	14,660	43,979	58,639	31,413	23,356	3,870	53.6

자료: 여성가족부

특히 2023년 서울 금천구·전남 순천시·부산 영도구 및 경기 고양시 등 4곳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모두 이월하고 실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2023년 기준 실집행률 30% 미만 보조사업자]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지방자치단체)						
	예산		이월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광주 동구	-	-	-	-	-	1,000	1,000	83	917		8.3
서울 금천구	750	750	-	750	750	550	1,300	-	1,300	-	0.0
인천 중구	750	750	-	750	750	449	1,199	1	1,198	-	0.1
대전 서구	750	750	-	750	750	306	1,056	40	1,016	-	3.9
강원 양구군	750	750	-	750	750	331	1,081	239	515	-	22.1
충남 계룡시	750	750	-	750	750	680	1,430	238	1,192	-	16.6
전북 군산시	750	750	-	750	750	667	1,417	217	1,200	-	15.3
전남 순천시	750	750	-	750	750	450	1,200	-	1,200	-	0.0
서울 송파구	550	550	-	550	550	150	700	139	561		19.9
부산 영도구	450	450	-	450	450	300	750	-	750	-	0.0
대전 동구	450	450	-	450	450	153	603	163	440	-	27.0
경기 고양시	450	450	-	450	450	300	750	-	750	-	0.0
강원 인제군	450	450	-	450	450	300	750	188	562	-	25.1
충북 제천시	450	450	-	450	450	202	652	120	532	-	18.4
경남 고성군	450	450	-	450	450	266	716	33	450	267	4.6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공공건축사업의 경우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등과 같은 행정절차,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설계나 사업부지 변경, 생활SOC 복합화사업[21] 추진 등으로 지연된다는 설명임.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4년 연속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을 94%에서 100%까지 교부하여 왔고, 이로 인해 매년 교부현액 대비 평균 54.3%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음. 이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한 보조금만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 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22]

21)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

22) 다만, 여성가족부 설명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연내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연 3회 점검을 통하여 집행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양성평등기금】

<지 출>

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 필요

가. 개 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959억원 중 4,452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8%)되고 506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95,900	495,900	-	-	495,900	445,293	-	50,607	535,59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495,857	495,857	-	-	495,857	445,265	-	50,592	535,552
아동양육비	475,264	475,264	-	-	475,264	426,774	-	48,490	514,101
추가아동양육비	19,739	19,739	-	-	19,739	17,725	-	2,014	20,564

내내역사업인 ‘아동양육비’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서울 50%, 지방 80%)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752억 6,400만원 중 4,267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8%)되었음.

내내역사업인 ‘추가아동양육비’ 사업은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 · 부의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월 5만원,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월 5~10만원을 지원(서울 50%, 지방 80%)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97억 3,900만원 중 177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8%)되었음.

23) 양성평등기금-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청소년가족정책실)

나. 검토의견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에 대한 환수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 환수결정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음.[24]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받도록 하고 있음.

연도별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재산이 증가하거나 인적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은 2019년 3억 6,900만원에 비하여 2023년 5억 3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실제 환수액은 줄어들어 환수율은 2019년 70.4%에서 2023년 42.8%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사유	2019	2020	2021	2022	2023
환수결정 건수	계	721	769	966	770	666
	소득재산 증가	540	576	676	485	370
	인적 변동	35	79	104	155	201
	기타	146	114	186	130	95
환수결정 금액(A)		369	399	559	442	503
환수 금액(국고+지방비)(B)		260	224	389	287	215
환수율(B/A)		70.4	56.3	69.6	65.0	42.8

주 1) ‘소득재산 증가’는 근로·사업소득 증가, 신규재산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된 경우임
2) ‘인적 변동’은 혼인관계 변동, 가구원수 변동 등의 사유임
3) ‘기타’는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 및 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유형을 분류하지 않은 것을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아동양육비
③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 환수결정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25]

25) 다만, 여성가족부에서는 납부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등의 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환수결정 이후 환수금액은 점차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23년 환수결정 금액 대비 환수금액 비율은 조사 시점에 따라 점차 제고된다고 설명하고 있음.